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교보투신운용	교보파워인덱스파생상품 1-B	1.5	0	0.05	0.05
교보투신운용	교보TomorrowTWOSTAR파생상품K- 2	3	23	0.6	0.12
교보투신운용	Hi-Korea적립식멀티주식k-1 e	2.6	5	0.3	0.1
교보투신운용	교보파워인덱스파생상품 1-E	1.5	1.4	0.05	0.05
신영투신운용	신영장기공사채 1- 7	1.5	6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장기공사채 1-39	1.5	6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단기공사채 4-18	2	8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엠브렐러MMF 1	1	0.5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엠브렐러공사채 1	1	0.5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단기Green공사채 1	1.5	3.5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엠브렐러국공채 1	1	0.5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주식1- LG1	4	16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HIT주식 1	4	16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주식1- G1	4	16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주식1- K1	6	14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주식1- G2	4	16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주식1- K2	6	14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SUPER CHIP주식1- 4	3.7	14.8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주식1- G3	4	16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피데스솔로몬주식1- 2	10	15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주식1- LG3	4	16	0.5	0
신영투신운용	iBest주식 1	8	16.5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엠브렐러코스닥주식 1	8	2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엠브렐러중소형주식 1	8	2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엠브렐러대형주주식 1	8	2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비과세추가형국공채1- 2	3	7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혼합3	4.5	10.5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비과세추가형국공채1- 3	3	7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신증개입연금채권 1	2.1	4.9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신증MMF 4-14	1.8	4.2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혼합5	3	7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연금채권 1	2.1	4.9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연금혼합 1	3.9	9.1	0.4	0
신영투신운용	신영신증MMF 4-18	2.1	4.9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혼합3- 3	4.5	10.5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주식2	5.4	12.6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혼합3- 5	4.5	10.5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마라톤주식(A형)	4.6	10.6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채권12	1.5	3.5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신증MMF 4-25	0.1	1.7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신증MMF 4-26	1	1.7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신증 MMF 4-27	0.62	1.23	0.1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엠브렐러혼합 1	8	2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밸류고배당주식형 1	3.9	9.1	0.3	0.2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혼합 5- 4	2	8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혼합5- 6	2.6	10.4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신증MMF 4-35	1	1.7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마라톤주식 3- 1	6.5	18.5	0.4	0
신영투신운용	신영고배당혼합	3.7	9.3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고배당주식(A형)	6.6	15.4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고배당혼합 2	3.7	9.3	0.3	0
신영투신운용	프라임배당주식	7.5	17.5	0.3	0
신영투신운용	프라임배당혼합	5.4	12.6	0.3	0
신영투신운용	오딧세이혼합5- 7	2.6	10.4	0.3	0
신영투신운용	신증개입연금혼합 1	3.9	9.1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혼합H-2	3	12	0.3	0
신영투신운용	프라임배당적립식주식	7.5	17.5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혼합T- 1	3.6	14.4	0.3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혼합5- 8	2	9.1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업종우량주혼합 1	4.5	10.5	0.3	0
신영투신운용	오딧세이분기배당 1	5	20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VIP밸류혼합 1 Class A	6	11	0.3	0.2
신영투신운용	주니어경제박사주식	3	20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VIP밸류혼합 1 Class B	6	7	0.3	0.2
신영투신운용	신영NEW ELS채권 1	1.44	3.36	0.2	0
신영투신운용	코리아밸류혼합	4.5	10.5	0.3	0
신영투신운용	더블플러스채권혼합CLASSA	2.5	7.5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징검다리채권혼합8월 1	4.1	12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징검다리채권혼합9월 1	4.1	12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징검다리주식혼합9월 1	4.85	14.25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마라톤주식혼합A1	4.6	14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징검다리채권혼합10월 1	4.1	12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징검다리주식혼합10월 1	4.85	14.25	0.3	0
신영투신운용	징검다리고편입주식11월 1	6.4	18.7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징검다리주식혼합11월 1	4.85	14.25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징검다리채권혼합11월 1	4.1	12	0.3	0
신영투신운용	프라임장기주택마련주식혼합	4.5	10.5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마라톤주식(W형)	4.6	0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고배당주식(W형)	6.6	0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마라톤주식F1	6.5	9	0.5	0
신영투신운용	신영마라톤주식혼합F1	5.5	7	0.5	0
신영투신운용	더블플러스채권혼합W형	2.5	0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마라톤주식A1	6.7	11	0.3	0
신영투신운용	징검다리고편입주식12월 1	6.4	18.7	0.3	0
신영투신운용	징검다리채권혼합12월 1	4.1	12	0.3	0
신영투신운용	징검다리주식혼합12월 1	4.85	14.25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모)	0	0	0	0
신영투신운용	신영퇴직연금채권(모)	0	0	0	0
신영투신운용	신영퇴직연금가치채권혼합(자)	2.3	5.35	0.2	0.15
신영투신운용	징검다리채권혼합 1월 1	4.1	12	0.3	0
신영투신운용	징검다리주식혼합 1월 1	4.85	14.25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모)	0	0	0	0
신영투신운용	신영퇴직연금채권혼합20(자)	2.3	5.35	0.2	0.15
신영투신운용	신영퇴직연금채권혼합40자	2.3	5.35	0.2	0.15
신영투신운용	신영퇴직연금배당채권혼합자	2.3	5.35	0.2	0.15
신영투신운용	신영퇴직연금채권자	1.7	3.95	0.2	0.15
신영투신운용	신영마라톤30혼합	4	6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퇴직연금그로스주식(모)	0	0	0	0
신영투신운용	신영퇴직연금그로스채권혼합(자)	2.3	5.35	0.2	0.15
신영투신운용	신영마라톤주식K- 1(C)	4.6	10.6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채권혼합SM- 1	3.8	8.9	0.3	0
신한BNP파리바	신한특별장기공사채L- 6	1.5	6	0.5	0
신한BNP파리바	신한특별중기공사채A- 6	1.5	6	0.5	0
신한BNP파리바	신한특별중기공사채G- 3	1.5	6	0.5	0
신한BNP파리바	신한특별중기공사채S-14	0.1	6	0.5	0
신한BNP파리바	신한신단기공사채22	0.1	0.1	0.4	0
신한BNP파리바	신한특별단기공사채N- 2	1.5	6	0.5	0
신한BNP파리바	신한특별단기공사채W- 4	1.5	6	0.5	0
신한BNP파리바	신한특별중기공사채E- 4	1.5	6	0.5	0
신한BNP파리바	G1신한특별단기공사채H- 3	1.5	6	0.5	0
신한BNP파리바	G 신한특별장기공사채A- 2	1.5	6	0.5	0
신한BNP파리바	R 신한특별단기공사채K- 1	1.5	6	0.5	0
신한BNP파리바	신한디지탈주식 1	6	14	0.5	0
신한BNP파리바	D신한특별장기주식A- 3	1.5	6	0.5	0
신한BNP파리바	D신한특별중기주식H- 4	1.5	6	0.5	0
신한BNP파리바	신한디지탈주식 2	9	21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신한BNP파리바	참신한하이일드증기 3	7.5	17.5	0.5	0
신한BNP파리바	참신한하이일드PC1J- 1	1	0	0.5	0
신한BNP파리바	법인용미래로 α 신종MMF J- 6	1.9	4.3	0.3	0
신한BNP파리바	개인용신한클린MMF 1	1.8	4.2	0.3	0
신한BNP파리바	신한국공채단기채권SH- 1	2	0.5	0.5	0
신한BNP파리바	신한국공채단기채권SH- 2	2	0.5	0.5	0
신한BNP파리바	개인용신한신종MMF SH- 2	1.9	4.3	0.3	0
신한BNP파리바	신한국공채장기채권SH- 1	3	0.5	0.5	0
신한BNP파리바	신한모델인덱스장기주식 1	8	0.5	0.5	0
신한BNP파리바	신한포트폴리오플러스단기주식SH- 1	6	14	0.5	0
신한BNP파리바	신한Safe Saving주식 1	6	14	0.5	0
신한BNP파리바	신한위저드자산배분형단기혼합 2	4.5	10.5	0.5	0
신한BNP파리바	신한인컴플러스장기채권 1	1.8	4.2	0.3	0
신한BNP파리바	법인용신한신종MMF A- 1	0.9	1	0.2	0
신한BNP파리바	신한분리파세ELS100채권 1	2.2	5.3	0.3	0
신한BNP파리바	신한BNP Add Value혼합 1	3.6	8.5	0.4	0
신한BNP파리바	신한미래설계적립식주식 1	5.95	18	0.45	0.1
신한BNP파리바	프레스티지고배당주식 1	7.2	16.8	0.5	0
신한BNP파리바	봉쥬르차이나주식 1	7.8	18.2	0.5	0.2
신한BNP파리바	프레스티지적립식안정형혼합 1	4.5	10.5	0.3	0
신한BNP파리바	봉쥬르인터내셔널재간접 1	4.5	10.5	0.6	0.25
신한BNP파리바	봉쥬르글로벌타이탄혼합 1	3	7	0.4	0.15
신한BNP파리바	봉쥬르글로벌타이탄혼합 2	2.25	5.2	0.4	0.15
신한BNP파리바	봉쥬르유럽배당주식 1	7.2	16.8	0.6	0.25
신한BNP파리바	프레스티지가치주적립식주식 1	7.5	17.5	0.4	0.15
신한BNP파리바	프레스티지가치주주식 2	7.5	17.5	0.4	0.15
신한BNP파리바	프레스티지코리아테크적립식주식 1	7.5	17.5	0.4	0.15
신한BNP파리바	프레스티지코리아테크주식 2	7.5	5	0.4	0.15
신한BNP파리바	업앤다운ELS혼합10	1.75	4.2	0.3	0.15
신한BNP파리바	프레스티지가치주안정형혼합 1	4.5	10.5	0.3	0.15
신한BNP파리바	업앤다운ELS혼합11	2.05	4.7	0.3	0.15
신한BNP파리바	업앤다운ELS혼합12	2.05	4.7	0.3	0.15
신한BNP파리바	업앤다운ELS혼합13	2.15	5	0.3	0.15
신한BNP파리바	업앤다운ELS혼합14	2.35	5.6	0.3	0.15
신한BNP파리바	업앤다운ELS혼합15	1.97	4.58	0.3	0.15
신한BNP파리바	업앤다운ELS혼합16	2.15	4.9	0.3	0.15
신한BNP파리바	업앤다운ELS혼합17	1.95	4.6	0.3	0.15
신한BNP파리바	신한탐스실버퇴직연금가치주식모	0	0	0	0
신한BNP파리바	신한탐스실버퇴직연금국공채모채권	0	0	0	0
신한BNP파리바	신한탐스실버퇴직연금회사채모채권	0	0	0	0
신한BNP파리바	신한탐스실버퇴직연금중기채권모채권	0	0	0	0
신한BNP파리바	신한탐스실버퇴직연금혼합자	2.5	4	0.3	0.15
신한BNP파리바	신한탐스실버퇴직연금2005혼합자	2.5	4	0.3	0.15
신한BNP파리바	신한탐스실버퇴직연금2015자혼합	2.5	4	0.3	0.15
신한BNP파리바	프레스티지성장적립식주식 1	7.5	17.5	0.4	0.15
신한BNP파리바	프레스티지성장주식 2	7.5	5	0.4	0.15
신한BNP파리바	탐스일본주식재간접 1	6.4	5	0.6	0.25
신한BNP파리바	신한브릭스주식재간접 1	6.4	5	0.6	0.25
신한BNP파리바	신한니케이퍼닉스파생상품 1	1.1	0.1	0.4	0.15
신한BNP파리바	신한니케이퍼닉스파생상품 2	4	0.1	0.4	0.15
신한BNP파리바	신한프레스티지주가연계채권 1	1.45	4	0.3	0.15
신한BNP파리바	봉쥬르니케이혼합 6	3	7	0.4	0.15
신한BNP파리바	신한탐스실버퇴직연금주식모	0	0	0	0
신한BNP파리바	신한탐스실버퇴직연금2010자혼합	2.5	4	0.3	0.15
신한BNP파리바	봉쥬르차이나주식 2종류A	7.8	7.5	0.5	0.2
신한BNP파리바	탐스글로벌밸런스혼합 1	7	5	0.6	0.25
신한BNP파리바	탐스글로벌리츠재간접 1A	9	9	0.6	0.25
신한BNP파리바	신한BNPP글로벌멀티에셋재간접 1A	6.4	5	0.6	0.25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신한BNP파리비	신한BNPP이머징마켓채권간접 1A	5.7	8.3	0.6	0.25
신한BNP파리비	신한BNPP뉴투스타파생상품 1	0.8	0	0.5	0.3
신한BNP파리비	신한BNPP뉴투스타파생상품 2	6.5	0	0.8	0.4
랜드마크자산운	국은빅맨신종MMF 1	0.1	0.5	0.5	0
랜드마크자산운	빅맨클린MMF 2	0.1	0.5	0.5	0
랜드마크자산운	국은빅맨신종MMF 2	0.1	0.5	0.5	0
랜드마크자산운	인베스티움애니원국은주식 2	6.25	18.75	0.5	0
랜드마크자산운	빅맨리커버혼합주식 1	5.5	1	0.5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법인S MMF 1	0.6	0.4	0.15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신종개인MMFA- 1	1	5	0.5	0
랜드마크자산운	국민한마음중기형채권 1	2	6	0.5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신개인우량MMF 3	1.7	4.5	0.4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베스트파생상품03- 1	4.5	10.5	0.4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1억만들기주식 1	6.25	18.75	0.4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신종법인MMF 3	0.7	0.7	0.2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주가지수연동채권A- 1	1	4.5	0.3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1억만들기주식 2Class A	7.3	17.7	0.4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국공채신종개인MMF 1	1.2	3.5	0.3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Target주식 1	7.5	0	0.3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신종개인MMF 5	1.1	2.7	0.2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맞춤채권06- 2	1.2	2.8	0.2	0
랜드마크자산운	MS30주식	4.5	0	0.3	0
랜드마크자산운	MS30주식혼합	4.5	0	0.3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맞춤채권S- 1	1.2	2.8	0.2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1억만들기고배당혼합 1	5	12	0.2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맞춤안정우량채권k- 1	1.2	2.1	0.2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미래만들기배당안정혼합근로자 1	5.4	12.6	0.3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미래만들기배당안정혼합일반 2	5.4	12.6	0.3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미래만들기주식일반 2	7.5	17.5	0.4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미래만들기주식근로자 1	7.5	17.5	0.4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미래만들기채권 1	2.1	4.9	0.3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미래만들기주식 5	7.5	17.5	0.4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미래만들기주식 4	7.5	17.5	0.4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미래만들기주식국민 3	7.5	20	0.4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미래만들기주식 6	7.5	17.5	0.4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미래만들기배당안정혼합 3	5.4	12.6	0.3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매일매일부자주식 1	4.5	10.5	0.3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매일매일부자혼합 1	4.5	10.5	0.3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미래만들기주식투자퇴직플랜 7	5.6	12.6	0.3	0
랜드마크자산운	LM미래만들기배당안정혼합퇴직플랜 4	5.6	12.6	0.3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미래만들기주식투자퇴직플랜7- 1	5.6	12.6	0.3	0
랜드마크자산운	LM미래만들기배당안정혼합퇴직플랜4- 1	5.6	12.6	0.3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프리미엄채권 2	1.2	3	0.2	0.13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일본리츠연동채권Y- 1	1.7	5	0.2	0.1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ALL BEST파생상품 3- 1	3.6	12.7	0.3	0.1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밸류인컴주식 1	7.33	17.5	0.4	0.17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밸류인컴주식혼합 1	5.85	14	0.4	0.1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코아성장주주식 1	6.5	9	0.3	0.17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코아성장주혼합 1	5.5	7	0.3	0.1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투스타파생상품HP- 3	0.1	0.1	0.2	0.1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투스타파생상품HP- 4	0.1	0.1	0.2	0.1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신지수연동채권W- 3	1.5	4	0.2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투스타파생상품WP- 2	0.01	0.01	0.1	0.1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연금우량채권자 1	1.7	3.95	0.2	0.1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연금밸류안정혼합40자 1	2.3	5.35	0.2	0.1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연금밸류주식혼합(자) 1	2.9	6.75	0.2	0.1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연금밸류주식(모)	0	0	0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연금국공채채권(모)	0	0	0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연금우량채권(모)	0	0	0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지수연계파생상품K- 9	2	4.4	0.2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투스파생상품LK II- 2	0.01	0.01	0.1	0.1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MultiAsset파생상품 1	2.2	5.4	0.3	0.1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코아성장주30혼합 1	5	6	0.3	0.12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신지수연동채권K- 9	1.1	2.7	0.2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지수연계파생상품K-10	7.9	18.2	0.2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연금그로쓰안정혼합40(자)1	2.3	5.35	0.2	0.1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연금그로쓰주식(모)	0	0	0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ECF단기유동성혼합 2Class A	1.1	2.1	0.2	0.1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연금우량주식(모)	0	0	0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연금라이프싸이클안정혼합40(자) 1	2.3	5.35	0.2	0.1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투스파생상품HH II- 1	7.8	18.4	0.5	0.3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5스타파생상품 1	2.58	6.02	0.25	0.1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투스파생상품HH- 1	5.5	21	0.5	0.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이머징스타FOF재간접(모)	0	0	0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이머징스타FOF주식(자)	5.7	13.3	0.5	0.2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연금라이프싸이클안정혼합20(자) 1	2.3	5.35	0.2	0.1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투스파생SH IV- 1	6.5	20	0.5	0.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1억만들기주식 2Class I	7.3	0	0.4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투스파생상품HS III- 1	6.5	20	0.5	0.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우량주델타플러스주식혼합 2class A	4.5	13	0.3	0.1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투스파생상품SP- 2	6	20.5	0.5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투스파생HP II- 2	6.5	20	0.5	0.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지수연계파생상품KN- 1	6.5	20	0.5	0.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투스파생상품KP- 2	6.5	20	0.5	0.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신지수연동채권N-13	1.67	6	0.2	0.13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우량주델타플러스주식혼합60- 1	4.5	13	0.3	0.1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투스파생상품HP II- 3	5	19	0.5	0.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지수연계파생상품K-11	6.5	20	0.5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투스파생상품PH- 1	6.5	20	0.5	0.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지수연계파생상품K-12	6	20	0.5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투스파생상품GS- 1	0.01	0.03	0.1	0.01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투스파생상품KP- 3	6	0	0.5	0.5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인덱스프리미엄파생상품 1	4.37	10.2	0.3	0.13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ECF단기유동성혼합 3ClassA	0.8	2	0.1	0.1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투스파생상품GS- 2	0.01	0.03	0.01	0.01
한화투신운용	한화단기플러스알파 2	2.5	10	0.5	0
한화투신운용	G2한화단기플러스32	2.5	10	0.5	0
한화투신운용	한화채스혼합 1	4.05	9.45	0.5	0
한화투신운용	한화하이프로신종MMF 2	1.5	3.5	0.5	0
한화투신운용	한화레드마운틴혼합 3	3.5	1	0.3	0
한화투신운용	이글스뉴하이일드D추가형채권혼합 3	4	11	0.5	0
한화투신운용	이글스뉴하이일드D추가형채권혼합 7	1.5	10.2	0.5	0
한화투신운용	한화신종MMF 4	0.37	3.33	0.3	0
한화투신운용	한화팝콘채권 1	1.25	3.75	0.3	0
한화투신운용	레드마운틴Auto-Change60혼합 1	2	18	0.3	0
한화투신운용	한화팝콘주식 1	2	0	0.3	0
한화투신운용	한화신종MMF W12	0.6	1.4	0.2	0
한화투신운용	한화EZ-System혼합 1	6	14	0.5	0
한화투신운용	골드KOSPI50Select주식 1	5	12	0.4	0
한화투신운용	Japan REITs재간접 1	5.5	10	0.5	0
한화투신운용	한화Two-Star II조기상환형파생상품 2	0.1	0.1	0.3	0
한화투신운용	한화Two-Star II조기상환형파생상품 3	0.1	0.1	0.3	0
한화투신운용	한화KRX100블루오션채권혼합 1	4.5	10.5	0.4	0
한화투신운용	한화EZ-System30 채권혼합 1	5.7	13.3	0.4	0
한화투신운용	한화TwoStar IX 조기상환형파생상품 2	0.01	0.01	0.1	0
한화투신운용	한화EZ-System가치주혼합 1(A)	4	13	0.4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한화투신운용	한화TwoStockVII조기상환형파생 1	5.2	29.6	0.3	0
한화투신운용	한화EZ-System가치주혼합 1W	4	0	0.4	0
한화투신운용	한화Nikkei225 6Chance조기상환형파생 투자	10	23.5	1	0
한화투신운용	한화꿈에그린주식 1(A)	4.5	15	0.2	0
한화투신운용	한화꿈에그린주식 1(B)	4.5	5	0.2	0
한화투신운용	한화라살글로벌리츠재간접 1(B)	9	5	0.6	0.4
한화투신운용	한화라살글로벌리츠재간접 1(C)	9	12	0.6	0.4
한화투신운용	한화듀얼코어조기상환형파생상품 1	5.6	24	0.3	0
한화투신운용	한화듀얼코어조기상환형파생상품 2	6.4	20	0.3	0
서울자산운용	장기공사채 2- 9	0	0	0	0
서울자산운용	신바람공사채 1	2.25	5.25	0.5	0
서울자산운용	신바람공사채 4	2.25	5.25	0.5	0
서울자산운용	단기공사채 2-36	3.75	8.75	0.5	0
서울자산운용	한일단기공사채 24	3.13	9.38	0.5	0
서울자산운용	한일중기공사채 22	0	0	0	0
서울자산운용	한일단기공사채 44	3.75	8.75	0.5	0
서울자산운용	한일중기공사채 D- 3	2.4	9.6	0.5	0
서울자산운용	한일단기공사채 D- 6	2.5	10	0.5	0
서울자산운용	한일단기공사채 62	3.75	8.75	0.5	0
서울자산운용	한일장기공사채 G- 1	2.4	5.6	0.5	0
서울자산운용	뉴MMF 7	3.75	8.75	0.5	0
서울자산운용	한일신종MMF 2	3	7	0.5	0
서울자산운용	한일신종MMF D- 1	2	8	0.5	0
서울자산운용	한일신종MMF14	1	2.1	0.1	0
서울자산운용	한일신종MMF15	3	7	0.5	0
서울자산운용	G 한일장기공사채 K- 1	0.4	1	0.1	0
서울자산운용	한일SAT중기공사채 2	3	7	0.5	0
서울자산운용	점프업주식 2	5.85	13.65	0.5	0
서울자산운용	애니원한일주식 A1	7.5	17.5	0.5	0
서울자산운용	머큐리점프업주식 G 1	5.85	13.65	0.5	0
서울자산운용	IT2000주식	8.5	19.5	0.5	0
서울자산운용	한일공모주하이일드 1	6	14	0.5	0
서울자산운용	한일공모주하이일드 2	0	0	0	0
서울자산운용	한일공모주하이일드 4	0	0	0	0
서울자산운용	한일18M하이일드주식 L- 1	0	0	0.2	0
서울자산운용	한일24M하이일드주식 L- 1	0	0	0.2	0
서울자산운용	한일세이프6M하이일드 A- 1	0	0	0	0
서울자산운용	SAVE주식 A- 1	0.4	2.5	0.1	0
서울자산운용	한일세이프6M하이일드 A- 2	0	0	0	0
서울자산운용	메가테크혼합 1	3.5	1	0.4	0
서울자산운용	한일신종MMF D- 3	3	7	0.5	0
서울자산운용	한일신종MMF PK- 1	3	7	0.5	0
서울자산운용	한일 6M뉴하이일드추가혼합 D- 3	0	0	0	0
서울자산운용	한일신종MMF DW- 1	3	7	0.5	0
서울자산운용	한일신종세금우대채권 G- 1	3	7	0.5	0
서울자산운용	한일SAT퇴직국공채 D- 1	1.2	10.8	0.5	0.2
서울자산운용	한일장기증권주식 S- 1	5	10	0.5	0.2
서울자산운용	한일6M뉴하이일드 D추가혼합 A1	0	0	0	0
서울자산운용	한일클린MMF U- 1	2	3	0.3	0
서울자산운용	서울TRUE VALUE주식 1	6.7	15.8	0.4	0
서울자산운용	서울TRUE VALUE혼합 1	5	10	0.4	0
서울자산운용	서울HIT신종MMF S- 1	0.6	1.3	0.1	0
서울자산운용	서울신종국공채 MMF WS- 1	0.8	1.8	0.2	0
서울자산운용	서울HIT신종MMF H- 1	0.55	1.3	0.1	0
서울자산운용	서울HIT신종MMFS- 8	0.7	1.4	0.1	0
서울자산운용	한일클린MMF공사채 P- 1	0.7	1.4	0.1	0
서울자산운용	서울HIT신종MMF A- 2	0.9	1.5	0.1	0
서울자산운용	서울HIT신종MMF A- 8	1	2	0.1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서울자산운용	서울클린MMF B- 2	0.6	0.8	0.3	0
서울자산운용	한일DS해운대부동산 1	5.2	9.1	0.6	0
서울자산운용	서울6MHIT채권 1	1.1	1.1	0.2	0.1
서울자산운용	일하는사람들의포도송이적립식주식 1	13.7	5	0.3	0
서울자산운용	한일골든리부동산 2	3.5	9	0.7	0
서울자산운용	한일BESTPLAN채권혼합 1	6	9.1	0.3	0
서울자산운용	한일DualStar파생상품KC- 1	8.4	19.4	0.3	0
서울자산운용	서울KOSPI200인덱스알파파생상품 1	4	5	0.5	0
서울자산운용	서울DualStar파생상품S- 1	8.1	19	0.6	0
서울자산운용	서울퇴직연금성장주식(모)	0	0	0	0
서울자산운용	서울퇴직연금성장혼합(자)	2.5	5	0.3	0
서울자산운용	서울퇴직연금국공채채권(모)	0	0	0	0
서울자산운용	서울Index알파파생상품 1	6	16	0.5	0
서울자산운용	서울StepTwoStar파생상품H- 1	8.5	19.4	0.4	0
서울자산운용	서울DualStar파생상품P- 1	6	19.4	0.3	0
서울자산운용	서울PrimeIndex파생상품2Y- 1	8.4	19.6	0.3	0
미래에셋맵스지	OK후순위채C 1	6	14	0.5	0
미래에셋맵스지	OK후순위채주식D1- 1	0.15	0.35	0.5	0
미래에셋맵스지	OK후순위채주식D1- 2	0.1	0.9	0.5	0
미래에셋맵스지	OK후순위채주식D1- 3	0.1	0.9	0.5	0
미래에셋맵스지	OK후순위채주식D2- 1	0.1	0.9	0.5	0
미래에셋맵스지	OK후순위채C 2	0.1	0.9	0.5	0
미래에셋맵스지	OK뉴하이일드D혼합 C1- 2	5.8	14	0.5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퍼블릭혼합A 1	4.4	10.5	0.5	0.1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국공채전용MMF A 1	0.2	1.3	0.2	0.1
동부투신운용	동부해오름단기공사채15	3.75	8.75	0.5	0
동부투신운용	애니원주식동부 1	5	20	0.5	0
동부투신운용	동부해오름뉴하이일드(D-b)추가3	0.25	0	0.5	0
동부투신운용	동부해오름뉴하이일드(D-b)추가4	0.25	0	0.5	0
동부투신운용	동부해오름뉴하이일드(D-a)추가3	0.25	0	0.5	0
동부투신운용	동부해오름뉴하이일드(D-a)추가4	2.1	4.9	0.5	0
동부투신운용	동부해오름뉴하이일드(D-a)추가5	0.25	0	0.5	0
동부투신운용	동부해오름뉴하이일드(D-a)추가6	2.1	4.9	0.5	0
동부투신운용	동부해오름뉴하이일드(D-b)추가6	0	0	0	0
동부투신운용	동부해오름뉴하이일드(D-b)추가8	0	0	0	0
동부투신운용	동부해오름뉴하이일드(D-b)추가11	0	0	0	0
동부투신운용	동부해오름신종MMF23	2.1	4.9	0.5	0
동부투신운용	NEW해오름신종MMF 3	0.8	2	0.3	0.2
동부투신운용	동부Macro파생 1	2	5	0.33	0.18
동부투신운용	동부아인슈타인주식 1	2.44	16.96	0.4	0.2
동부투신운용	동부한사람채권혼합 1	4.53	10	0.3	0.18
동부투신운용	동부인베스티움주식1-A	0	0	0	0
동부투신운용	동부THECLASSIC주식 1	5.03	14.5	0.3	0.18
동부투신운용	동부다같이MMF(법인용)	0.6	1	0.2	0.13
동부투신운용	동부차이나주식 1	9.13	7.5	0.5	0.18
동부투신운용	동부TheClassic진주찾기주식 1	7.33	17.2	0.3	0.18
프랭클린템플턴	SantaClaus장기공사채 4	1.35	3.15	0.5	0
프랭클린템플턴	SantaClaus장기공사채 5	1.35	3.15	0.5	0
프랭클린템플턴	Santa Claus98단기공사채 1	3.75	8.75	0.5	0
프랭클린템플턴	Santa Claus신장기공사채 1	3	7	0.5	0
PCA투신운용	굿모닝98단기공사채 3	0.05	0	0.1	0.18
PCA투신운용	굿모닝신단기공사채 3	0.05	0	0.1	0.18
PCA투신운용	굿모닝단기공사채A- 5	0.05	0	0.1	0.18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다이아몬드채권 1	3	7	0.4	0
프랭클린템플턴	G1Santa Claus98단기공사채 1	3.75	8.75	0.5	0
PCA투신운용	PCA클린MMF 3	0.05	0	0.1	0.18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골드국공채 1	2	4.7	0.3	0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 Growth비과세장기주식 1	5.55	12.95	0.3	0.2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 Growth주식 5	7.5	7.5	0.5	0.2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주식 1	5.55	12.95	0.5	0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 Growth주식 1	7.52	13.98	0.4	0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 Growth주식 4	7.5	17.5	0.5	0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 Balanced주식혼합 1	6	14	0.4	0
프랭클린템플턴	SantaClaus맞춤형법인채권 1	1.25	0	0.5	0
프랭클린템플턴	SantaClaus뉴하이일드D추가혼합12- 1	4.25	0	0.5	0
프랭클린템플턴	SantaClaus뉴하이일드D추가혼합 6- 1	8.5	3	0.5	0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신종분리과세국공채B- 1	3	7	0.5	0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신종분리과세국공채B- 2	3.6	8.4	0.5	0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골드적립채권B 1	3	7	0.5	0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골드적립식혼합B- 1	4.5	10.5	0.5	0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베스트국공채A- 1	2	4.7	0.3	0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신종분리과세국공채B- 4	3.6	8.4	0.5	0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골드Growth주식	7.65	17.85	0.5	0
프랭클린템플턴	FT신종분리과세혼합 1	4.65	10.85	0.5	0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 Growth주식 2	7.65	17.85	0.4	0
프랭클린템플턴	FTChinaSafe신종분리과세전환A-1	3	7	0.5	0.2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 Growth주식 3	7.65	17.85	0.5	0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혼합 1	4.65	10.85	0.5	0.2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신종분리과세혼합A- 2	5.5	9.5	0.4	0.2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 Balanced30혼합 1	5.5	9.5	0.4	0.2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신종분리과세국공채B- 5	3.6	8.4	0.5	0.2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 Balanced50주식혼합 2	6	14	0.5	0.2
프랭클린템플턴	FT신종분리과세혼합 2	4.65	10.85	0.5	0.2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 Balanced20채권혼합 1	4.8	11.2	0.4	0.2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골드적립식주식	7.02	16.38	0.4	0.2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 Growth주식 6	8.25	19.25	0.4	0.2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장기주택마련혼합 1	4.65	10.85	0.4	0.2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신종분리과세혼합A- 3	5.5	9.5	0.4	0.2
프랭클린템플턴	Templeton신종분리과세국공채B- 6	3.6	8.4	0.3	0.2
프랭클린템플턴	FranklinTempleton신종분리과세혼합 3	4.65	10.85	0.4	0.2
프랭클린템플턴	Franklin Automatic Rebalancing주식	8.1	18.9	0.3	0.3
프랭클린템플턴	Franklin Templeton Income혼합 1	6.3	14.7	0.4	0.3
프랭클린템플턴	프랭클린템플턴글로벌주식재간접	3	11	0.5	0.3
프랭클린템플턴	프랭클린템플턴글로벌밸런스재간접(운용)	3	11	0.5	0.3
프랭클린템플턴	프랭클린템플턴재팬주식형모	0	0	0	0
프랭클린템플턴	프랭클린템플턴재팬주식형자(A)	9	12	0.5	0.2
프랭클린템플턴	템플턴골드채권B- 1종류 A	3	7	0.5	0
프랭클린템플턴	템플턴글로벌주식형-모	0	0	0	0
프랭클린템플턴	템플턴글로벌주식형-자(A)	9	12	0.5	0.2
프랭클린템플턴	프랭클린템플턴재팬주식형자펀드 (I)	9	1	0.5	0.2
삼성투신운용	삼성베스트공사채 1	1.95	4.5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베스트공사채 2	1.95	4.5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명품장기공사채 5	0.15	0.35	0.1	0
삼성투신운용	진품단기공사채A-401	3	7	0.5	0
삼성투신운용	진품단기공사채C-501	3	7	0.5	0
삼성투신운용	명품신중기공사채501	2.85	6.65	0.5	0
삼성투신운용	명품신중기공사채301	2.85	6.65	0.5	0
삼성투신운용	진품단기공사채A-403	3	7	0.5	0
삼성투신운용	명품신중기공사채302	2.85	6.65	0.5	0
삼성투신운용	명품장기공사채301	2.25	5.25	0.5	0
삼성투신운용	명품신중기공사채502	2.85	6.65	0.5	0
삼성투신운용	진품단기공사채C-503	3	7	0.5	0
삼성투신운용	명품신중기공사채101	2.85	6.6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신종MMF A-501	3	7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신종MMF D- 2	1.41	3.29	0.3	0
삼성투신운용	G1진품단기공사채A-401	3	7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삼성투신운용	G2진품단기공사채A-401	3	7	0.5	0
삼성투신운용	G 명품신중기공사채501	2.85	6.65	0.5	0
삼성투신운용	R 명품장기공사채301	2.25	5.2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미래니엄주식A- 1	5.85	13.6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에버그린주식 1	8.5	13.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미래니엄주식A-502	5.85	13.6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신명품알파주식C- 2	4.95	11.55	0.5	0
삼성투신운용	D삼성진품단기주식A-401	3	7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미래니엄주식C-503	5.85	13.6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신명품알파주식A- 3	4.95	11.55	0.5	0
SH자산운용	한바구니CH중기공사채C- 7	0.5	7.6	0.5	0
SH자산운용	BEST신종MMF A- 3(개인용)	1.83	4.27	0.3	0
SH자산운용	조흥12M공사채B- 1	0.1	0.1	0.1	0
SH자산운용	G한바구니CH중기공사채C- 7	0.5	7.6	0.5	0
SH자산운용	G한바구니CH중기공사채 6	0.5	7.6	0.5	0
SH자산운용	G1한바구니CH장기공사채C- 4	0.5	6	0.5	0
SH자산운용	G2한바구니CH장기공사채C- 4	0.5	6	0.5	0
SH자산운용	G 한바구니CH장기공사채C- 5	0.5	6	0.5	0
SH자산운용	G1한바구니장기공사채C- 6	0.5	6	0.5	0
SH자산운용	G4한바구니CH장기공사채C- 6	0.5	6	0.5	0
SH자산운용	G1한바구니CH장기공사채C- 7	0.5	6	0.5	0
SH자산운용	광수생각주식C- 1	3.9	15.6	0.5	0
SH자산운용	체인지15주식C- 2	3.9	15.6	0.5	0
SH자산운용	D뉴점프중기주식B- 4	0	0	0	0
SH자산운용	D뉴점프중기주식B- 11	0	0	0	0
SH자산운용	조흥뉴하이일드단위12M001	0	5	0.3	0
SH자산운용	MERIT-UP (단위)주식B- 1	0	0	0.3	0
SH자산운용	BEST실크로드주식 1	0.5	0.8	0.2	0
SH자산운용	BEST클로버하이일드주식C- 1	0	0	0.3	0
SH자산운용	BEST뉴하이일드D II추가혼합B- 1	0	0	0.3	0
SH자산운용	BEST신종MMF C- 3	0.5	7	0.5	0
SH자산운용	BEST CHOICE비과세국공채CH- 1	3	7	0.5	0
SH자산운용	BEST옵티맥스중기채권III H- 1	0	0	0.3	0
SH자산운용	BEST신종MMF II 1(법인용)	1.71	3.99	0.3	0
SH자산운용	BEST신종MMF 1(개인용)	1.71	3.99	0.3	0
SH자산운용	BEST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C- 1	3	7	0.5	0.1
SH자산운용	BEST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CH-1	3	7	0.5	0.1
SH자산운용	BEST안정장기증권 2	4.7	14.5	0.4	0.1
SH자산운용	BEST CHOICE단기채권 4	1.5	3.5	0.3	0
SH자산운용	BEST신종분리과세국공채 1	2.1	5.9	0.5	0
SH자산운용	BEST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CH-2	2.7	7.3	0.5	0.1
SH자산운용	BEST신종분리과세국공채 2	2.1	5.9	0.5	0
SH자산운용	BEST모아모아적립식주식 1	4.5	10.5	0.5	0
SH자산운용	S BEST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CH- 1	0	0	0	0
SH자산운용	S BEST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CH- 2	0	0	0	0
SH자산운용	S BEST GUARD중기채권 1	0	0	0	0
SH자산운용	BEST신종MMF 4(개인용)	1.5	3.5	0.3	0
SH자산운용	BEST국공채신종MMF 5(법인용)	1.2	3.4	0.4	0
SH자산운용	BEST국공채신종MMF 8(법인용)	1.5	3.5	0.3	0
SH자산운용	BEST신종MMF공사채GS- 1(법인용)	0.6	1	0.2	0
SH자산운용	BEST신종MMF공사채GS- 2(법인용)	0.6	0.7	0.2	0
SH자산운용	BEST국공채신종MMF S- 7(1442)(법인용)	0.5	1	0.2	0
SH자산운용	BEST국공채신종MMF HN-7(1442)(개인용)	0.5	2.8	0.3	0
SH자산운용	조흥국공채신종MMF공사채II 5(개인용)	1	3	0.3	0
SH자산운용	BEST국공채신종MMF CH- 4(법인용)	0.5	0.8	0.2	0
SH자산운용	BEST알부자적립식혼합 1	5.9	13.8	0.3	0
SH자산운용	미래튼적립식주식 1	6.7	18	0.3	0
SH자산운용	BEST장기주택마련혼합 1	3	10	0.4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SH자산운용	Tops Easy Trading시스템혼합 1	6	14	0.3	0
SH자산운용	Tops적립식채권 1	2.1	4.9	0.3	0
SH자산운용	BEST인덱스플러스알파파생상품 1	5.4	0	0.3	0
SH자산운용	Tops적립식혼합 1	4.5	10.5	0.3	0
SH자산운용	Tops국공채채권 1	2.1	4.9	0.3	0
SH자산운용	Tops국공채중기채권 1	1.8	4.2	0.3	0
SH자산운용	Tops채권 1법인용	1.5	3.5	0.3	0
SH자산운용	Tops Value주식 1	6.7	18	0.3	0
SH자산운용	Tops채권 1(법인용)	1.5	3.5	0.3	0
SH자산운용	Tops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주식 1	6.9	16.1	0.3	0
SH자산운용	Tops Multi-Asset 1	1.5	0	0.4	0
SH자산운용	TOPS그랜드포트특별자산 1	0.1	0.1	0.4	0.2
SH자산운용	Tops e주식 1	4.8	4.8	0.3	0
SH자산운용	Tops ELS채권10	1.8	4.2	0.3	0
SH자산운용	Tops일본리츠지수연계파생 3	1.8	4.2	0.3	0
SH자산운용	Tops씨리업적립식배당혼합 1	5.4	12.6	0.3	0
SH자산운용	TopsTurnAround종류형채권 1-A	2.1	4.9	0.3	0
SH자산운용	Tops노블레스종류형주식 1-A	7.5	7.8	0.3	0
SH자산운용	Tops노블레스종류형주식 1-B	7.5	7.5	0.3	0
SH자산운용	Tops안정플러스채권 1	1	1	0.2	0
SH자산운용	Tops아시아자산배분재간접 1	6.5	5	0.5	0
SH자산운용	Tops아름다운종류형주식 1-A	7.9	10.1	0.3	0
SH자산운용	TOPS삼립원부동산 1	6.3	8	0.5	0.2
SH자산운용	BEST Twin-Power파생상품SH- 2	0.02	0	0.1	0
SH자산운용	Tops ELS채권11	1.8	4.2	0.3	0
SH자산운용	Tops아름다운종류형주식 1-B	7.9	8.1	0.3	0
SH자산운용	Tops프리미엄주식 1	6.9	16.1	0.3	0
SH자산운용	BEST Twin-Power파생상품SH- 3	0.02	0	0.1	0
SH자산운용	Tops ELS채권12	1.8	4.2	0.3	0
SH자산운용	Tops 2 STAR파생상품HS- 3	0.1	0	0.04	0
SH자산운용	SHTopsLife퇴직연금성장주식-모	0	0	0	0
SH자산운용	SHTopsLife퇴직연금국공채-모	0	0	0	0
SH자산운용	SHTopsLife퇴직연금40채권혼합-자1	2.7	4	0.3	0
SH자산운용	SHTopsLife퇴직연금채권-모	0	0	0	0
SH자산운용	SHTopsLife퇴직연금채권-자 1	2.2	2	0.3	0
SH자산운용	BEST CHOICE파생상품SS-27	0.1	0	0.04	0
SH자산운용	BEST Twin-Power파생상품SH- 4	0.02	0	0.1	0
SH자산운용	Tops ELS채권13	1.8	4.2	0.3	0
SH자산운용	Tops 2 STAR파생상품PH- 3	0.1	0	0.04	0
SH자산운용	BEST CHOICE파생상품SS-28	0.1	0	0.04	0
SH자산운용	BEST Twin-Power파생상품SH- 5	0.02	0	0.1	0
SH자산운용	SHTopsLife퇴직연금채권-자 4	2.2	2	0.3	0
SH자산운용	Tops JAPAN재간접 1	6.5	5	0.5	0
SH자산운용	Tops ELS채권14	1.8	4.2	0.3	0
SH자산운용	Tops New 2STAR파생상품SS- 1	0.1	0	0.04	0
SH자산운용	Tops New2STAR파생상품PH- 1	0.1	0	0.04	0
SH자산운용	Tops New2STAR파생상품HS(3Y)- 1	0.1	0	0.04	0
SH자산운용	Tops New 2STAR파생상품SS- 2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 2STAR파생상품HS(3Y)- 2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 Multi-Asset 파생상품 1	2.2	1	0.4	0
SH자산운용	Tops New 2STAR파생상품SS- 3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 2STAR파생상품PS- 1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 2STAR파생SS(3Y)- 1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 2STAR파생SP- 1	8	0	1	0
SH자산운용	Tops ELS채권15	1.8	4.2	0.3	0
SH자산운용	Tops New 2STAR파생SP- 2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 Multi-Asset파생상품 2	2.2	1	0.4	0
SH자산운용	Tops New 2STAR파생SePo(3Y)- 1	8	0	1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SH자산운용	Tops ELS 채권16	1.8	4.2	0.3	0
SH자산운용	Tops New2STAR파생상품SP(3Y)- 1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2STAR파생상품SS(3Y)- 2	8	0	1	0
SH자산운용	Tops Multi Commodity파생 1	5.4	3	0.4	0
SH자산운용	Tops New2STAR파생상품SS(3Y)- 3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 KO-NI파생상품 1	8	0	1	0
SH자산운용	SH TopsLife퇴직연금국공채-자 1	1.5	2.7	0.3	0
SH자산운용	Tops New2STAR파생상품SePo- 1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2STAR파생상품SP(3Y)- 2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2STAR파생상품SP- 3	8	0	1	0
SH자산운용	Tops 3 Commodity파생상품 1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2STAR 파생상품SP(3Y)- 3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2STAR 파생상품SP- 4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2STAR파생상품SS(3Y)- 4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2STAR 파생상품SP- 5	8	0	1	0
SH자산운용	Tops금리스프레드파생상품 1	8	0	1	0
SH자산운용	TopsNew2Star파생상품Sepo(3Y) 2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2Star파생상품KP- 1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2STAR파생상품SP(3Y)- 4	8	0	1	0
SH자산운용	TOPS법인용국공채 1C2 Class	1.6	0.1	0.2	0.1
SH자산운용	Tops New 2STAR파생상품HS(3Y)- 3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2STAR파생상품SS(3Y)- 5	8	0	1	0
SH자산운용	Tops New2Star파생상품SP(3Y)- 5	8	0	1	0
우리크레디트스	한아름장기공사채51	0	0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아름골드중기공사채 3	0.1	0	0.2	0
우리크레디트스	한아름골드단기공사채51	0	0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아름골드단기공사채52	0	0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아름골드단기공사채54	0	0	0.5	0
우리크레디트스	뉴MMF I- 1	3.13	9.38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아름단기공사채T- 4	3.75	8.75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아름중기공사채D- 2	2.38	7.13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아름단기공사채T- 7	3.75	8.75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아름재테크중기F- 1	11.9	5.1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아름단기공사채HI- 6	0	0	0.1	0
우리크레디트스	한아름중기공사채W- 4	6.65	2.85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아름골드장기공사채HI- 5	0	0	0.3	0
우리크레디트스	한아름단기공사채DW- 4	0	0	0.3	0
우리크레디트스	한빛신중MMF HI- 1	2.4	5.6	0.4	0
우리크레디트스	한빛신중MMF L- 5	1.5	4.5	0.3	0
우리크레디트스	한빛신중MMF H- 5	1	1.3	0.2	0
우리크레디트스	G 한아름골드단기공사채54	0	0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빛중기공사채SK- 1	9.1	3.9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빛실버2000주식Hi- 1	4.05	9.45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빛브론즈2000주식W- 1	3	0.3	0.3	0
우리크레디트스	G 한아름장기주식 3	6	1.5	0.5	0
우리크레디트스	G 한아름재테크단기주식K- 1	13.65	5.85	0.5	0
우리크레디트스	G 한아름골드단기주식H- 2	2.6	10.4	0.5	0
우리크레디트스	G 한아름골드단기주식H- 4	2.6	10.4	0.5	0
우리크레디트스	G 한아름골드단기주식H-11	2.6	10.4	0.5	0
우리크레디트스	G 한아름단기주식 3	2.5	10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빛 6M형하이일드HI- 1	0	0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빛브론즈2000주식TW- 1	0	0	0.1	0
우리크레디트스	한빛추가형하이일드HV- 1	6	12.5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빛1.5Y하이일드주식L- 1	0	0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빛2Y하이일드주식L- 1	0	0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빛C0형하이일드SU- 1	0	0	0.1	0
우리크레디트스	해피투게더밀레니엄주식H- 2	7.5	17.5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해피투게더밀레니엄주식S- 3	3	2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우리크레디트스	해피투게더밀레니엄주식S- 4	7.5	17.5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해피투게더밀레니엄주식S- 5	3	2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빛기관전용ABS채권	2	0.5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빛수락산중기채권S- 1	4	15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빛신종MMF HI- 6	3	7	0.5	0
우리크레디트스	한빛신종MMF HV- 1	0.5	5	0.3	0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국공채MMF 1(개인)	1	4	0.3	0
우리크레디트스	한빛신종분리과세채권HV- 1	1.5	4	0.3	0
우리크레디트스	신종분리과세혼합HT- 1	4.5	10.5	0.5	0
우리크레디트스	뉴재테크플러스중기채권HV- 1	2.4	5.6	0.5	0
우리크레디트스	로알프로텍트혼합HV 1	3.9	9.1	0.5	0.2
우리크레디트스	로알프로텍트혼합HV-2	3.9	9.1	0.5	0.2
우리크레디트스	우리인덱스프리혼합wr- 1	5.4	12.6	0.5	0.2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신종MMF 1(법인)	0.6	0.4	0.15	0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국공채MMF 3(법인)	0.5	1.8	0.2	0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신종MMF 2(법인)	0.8	1	0.2	0
우리크레디트스	WEALTHUP가치배당혼합 1	4.4	10.3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가치배당혼합 2	2.9	11.8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frontier채권1-C	1.5	0.1	0.2	0.1
랜드마크자산운	YES국공채T- G	3.15	7.35	0.5	0
랜드마크자산운	인베스티움애니원주식외환 1	7.5	17.5	0.5	0
랜드마크자산운	YES비과세추가형채권1- 1	3	7	0.5	0
랜드마크자산운	YES비과세추가형국공채1- 1	3	7	0.5	0
랜드마크자산운	YES혼합 1	4.5	10.5	0.5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스타신종MMF 1	0.45	0.4	0.15	0
랜드마크자산운	외환프로클린MMF 1	0.64	2.16	0.2	0
랜드마크자산운	외환프로신종MMF 4	1	2	0.3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스타신종MMF 3	0.8	1.3	0.2	0
랜드마크자산운	VarSystem 6M채권 1	1.5	3.5	0.4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스타신종MMF 5	0.9	3	0.3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스타신종MMF 4	0.8	1	0.2	0
랜드마크자산운	외환국공채신종MMF 4	0.93	3.07	0.2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스타신종MMF법인 2	0.8	0.8	0.3	0
KB자산운용	주은단기공사채 1	0	0	0.1	0
KB자산운용	주은파워중기공사채 7	0	0	0.1	0
KB자산운용	KB신종MMF102	0	0	0	0
KB자산운용	KB클린MMF101	0	0	0	0
KB자산운용	KB클린MMF103	0	0	0	0
KB자산운용	주은뉴하이일드A2혼합 1	0	0	0	0
KB자산운용	주은뉴하이일드A2혼합 2	0	0	0	0
KB자산운용	뉴에이스국공채 6-101	3	7	0.5	0
KB자산운용	주은비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 1	3	7	0.5	0.2
KB자산운용	주은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 1	3	7	0.5	0.2
KB자산운용	베스트클릭혼합 1	5	8	0.5	0
KB자산운용	베스트클릭 90혼합101	5	8	0.5	0
KB자산운용	베스트클릭 80혼합101	5	8	0.5	0
KB자산운용	베스트전환혼합 2	0	7	0.5	0
KB자산운용	베스트로알주식 1	7.6	17.9	0.5	0
KB자산운용	온국민파이팅!코리아	4.1	8.6	0.3	0
KB자산운용	주은신종분리과세국공채 3	3	7	0.5	0
KB자산운용	본드플러스채권 1	4	1	0.5	0
KB자산운용	베스트전환혼합 3	3	7	0.5	0
KB자산운용	본드플러스채권101	4	8.3	0.7	0
KB자산운용	KB클린MMF104	0	0	0	0
KB자산운용	국민알찬단기채권201	2.1	4.9	0.5	0
KB자산운용	국민알찬단기채권102	2.4	5.6	0.5	0
KB자산운용	국민디자인장기채권 1	2.1	5	0.4	0
KB자산운용	국민디자인단기채권 1	2.1	5	0.4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KB자산운용	KB베스트신종MMF 1	2	2	0.3	0
KB자산운용	국민알찬단기채권103	2.4	5.6	0.5	0
KB자산운용	KB기업신종MMF 1	0	0	0	0
KB자산운용	KB국공채단기채권 1	2.4	5.6	0.5	0
KB자산운용	KB스타그린채권 1	2	4.7	0.3	0
KB자산운용	KB스타클린MMF 1	0	0	0	0
KB자산운용	KB스타레드성장주식 1	7.7	18	0.3	0
KB자산운용	KB스타블루안정혼합 1	4	9.2	0.3	0
KB자산운용	KB스타적립식주식 1	7.7	18	0.3	0
KB자산운용	KB스타적립식혼합 1	4	9.2	0.3	0
KB자산운용	KB장기주택마련채권 1	2	8	0.3	0
KB자산운용	KB장기주택마련혼합 1	2.7	10.5	0.3	0
KB자산운용	KB국공채MMF개인용P- 1	1	4	0.3	0
KB자산운용	KB국공채클린MMF50	1	4	0.3	0
KB자산운용	KB스타국공채MMF개인용P-101	1.8	4.2	0.4	0
KB자산운용	KB스타국공채MMF법인용I-101	1.7	4	0.3	0
KB자산운용	스텝업 주가지수연동 채권 1	1.2	5	0.3	0
KB자산운용	KB사과나무채권 1	2.7	10.5	0.3	0
KB자산운용	스텝업비과세장기주식 1	7.7	18	0.3	0
KB자산운용	KB국공채MMF법인용I- 1	0.6	1.1	0.2	0.1
KB자산운용	KB국공채인덱스알파장기채권	1.8	5	0.3	0.15
KB자산운용	KB막강국공채적립	2.15	4.9	0.3	0.15
KB자산운용	KB스타업종대표주적립식주식 1	6.1	18.45	0.3	0.15
KB자산운용	KB스타뉴리더적립혼합	4.95	11.6	0.3	0.15
KB자산운용	KB스타글로벌고배당주식 1	7.5	17.65	0.7	0.15
KB자산운용	KB스타다가치성장주적립식주식 1	7.05	17.5	0.3	0.15
KB자산운용	KB스타글로벌고배당주식 2	7.5	17.65	0.7	0.15
KB자산운용	KB편안한부동산 1	7	7	0.5	0.3
KB자산운용	KB국공채MMF법인용I- 2	0.6	1.1	0.2	0.1
KB자산운용	KB사과나무주식 1	7.05	17.5	0.3	0.15
KB자산운용	광개토주식	7.35	17.2	0.3	0.15
KB자산운용	자수성가장기주택마련혼합	4	9.2	0.3	0.15
KB자산운용	뉴스타주가지수연동채권 5	1.3	3	0.2	0.15
KB자산운용	광개토일석이조주식	7.35	17.2	0.3	0.15
KB자산운용	KB웰리안부동산 7	12	12	0.7	0.3
KB자산운용	KB퇴직연금주식형자	3.5	8.15	0.2	0.15
KB자산운용	KB퇴직연금주식혼합형자	2.9	6.75	0.2	0.15
KB자산운용	KB퇴직연금채권혼합형(자)	2.3	5.35	0.2	0.15
KB자산운용	KB퇴직연금국내채권형(자)	1.7	3.95	0.2	0.15
KB자산운용	KB퇴직연금배당주식형(모)	0	0	0	0
KB자산운용	KB퇴직연금국내채권형(모)	0	0	0	0
KB자산운용	KB퇴직연금성장주식형모	0	0	0	0
KB자산운용	KB퇴직연금채권혼합형K- 1자	2.3	5.35	0.2	0.15
KB자산운용	KB e-무궁화인덱스파생상품	2.55	6	0.3	0.15
KB자산운용	KB신광개토선취형주식	6.45	5.1	0.3	0.15
KB자산운용	KB웰리안부동산 8	9	9	0.7	0.3
KB자산운용	KB Double Jump개별주식연동파생상품	7.5	17.45	0.2	0.15
KB자산운용	KB갯거루적립식주식	5.85	13.7	0.3	0.15
KB자산운용	KB 금-은연동 파생상품	7.5	17.45	0.2	0.15
KB자산운용	KB광개토주식N- 1 Class A	7.35	17.2	0.3	0.15
KB자산운용	KB코리아인덱스파생상품	4.35	10.2	0.3	0.15
한국투신운용	태광빌드업혼합2	4.5	10	0.5	0
한국투신운용	태광신종분리과세혼합	3	7	0.5	0
한국투신운용	태광SHOPPING업브렐러안정혼합 1	4.3	10	0.5	0.2
한국투신운용	태광업선채권혼합 2	3.5	12.5	0.3	0.18
한국투신운용	태광네오신종분리과세혼합 1	4.5	10	0.5	0
한국투신운용	태광네오신종분리과세혼합 2	4.3	10.2	0.5	0
한국투신운용	태광네오신종분리과세혼합 3	4.3	10.2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한국투자신포	태광네오신중MMF 2	0.42	1.1	0.2	0.13
한국투자신포	태광네오신중분리과세혼합 5	4	12	0.5	0
한국투자신포	태광네오신중MMF 3	1.5	6	0.2	0.13
한국투자신포	태광업선채권혼합 4	2.9	11.6	0.5	0
한국투자신포	태광제3세대채권혼합 1	3	12	0.32	0.18
한국투자신포	한국플렉스채권 1	1.35	0.2	0.15	0.1
한국투자신포	태광3채권혼합 2	3	12	0.32	0.18
한국투자신포	태광하이클래스채권혼합A- 1	1.57	3.65	0.3	0.18
한국투자신포	태광주식형T- 1class W	4	0	0.3	0.2
한국투자신포	태광네오신중MMF A1	0.42	0.82	0.15	0.11
한국투자신포	태광마켓리더스주식형 1	7.35	17.15	0.3	0.2
한국투자신포	한국Two-Star파생상품1- 1	2.47	22.27	0.15	0.11
한국투자신포	한국Two-Star파생상품2- 1	2.81	25.32	0.2	0.17
한국투자신포	한국멀티플레이채권 2	1.1	2.56	0.2	0.15
한국투자신포	한국주가지수연계파생상품1- 1	2.63	21	0.2	0.17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KBI주식 1	1.46	3.64	0.3	0.1
미래에셋맵스지	맵스베타-컨트롤혼합 1	0.1	0.1	0.4	0.3
미래에셋맵스지	맵스프런티어부동산 4	3.39	5.44	1	0.4
미래에셋맵스지	맵스프런티어부동산 5	6	7	1	0.4
미래에셋맵스지	맵스프런티어부동산 7	3	12.4	1	0.4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IT섹터주식G 1(CLASS-A)	7.3	17	0.4	0.3
미래에셋맵스지	맵스프런티어부동산10	5	8	0.8	0.3
미래에셋맵스지	맵스프런티어부동산12	3.6	1.6	0.6	0.3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플러스배당주식 1 (CLASS-A)	6	18.2	0.5	0.3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KBI플러스주식 1(CLASS-A)	6.03	18.37	0.5	0.1
미래에셋맵스지	맵스프런티어부동산13	3.5	3	0.6	0.3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법안전용MMF 1	0.5	1.2	0.2	0.1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노블레스KRX100인덱스파생상품	3	3.5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컨슈머주식형G- 1(CLASS-A)	7.3	6	0.4	0.3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노블레스미드캡인덱스주식형 10	3	3.5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노블레스Star30인덱스주식형 10	3	3.5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4	2.5	3.5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2	1.5	2.5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퇴직플랜KRX100인덱스주식형5	0	0	0	0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퇴직플랜채권형모	0	0	0	0
미래에셋맵스지	맵스네오RCF파생상품 1	3.75	8.75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지수연동채권형 1	0.3	0.3	0.2	0.1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네오RCF파생상품 2	3.75	8.75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AP부동산리츠하이브리드재간접	7.5	10.7	0.6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e-오션KOSPI200인덱스파생상품	3	4.5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오퍼튜니티코리아재팬주식형 10	5	5	0.4	0.3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오퍼튜니티재팬인덱스파생상품	5	5	0.4	0.3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네오RCF파생상품 3	3.75	8.75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3	2	3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네오RCF파생상품 4	3.75	8.75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셀렉트Q주식형 1(CLASS-A)	7	5.65	0.6	0.25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오퍼튜니티재팬인덱스파생상품	5	0.4	0.4	0.3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퇴직플랜KRX100인덱스혼합형저	3	4.5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저	2.5	3.5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네오RCF파생상품 5	3.75	8.75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슈퍼오일지수연계파생상품PB-	7.8	18.2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네오RCF파생상품 6	3.75	8.75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네오RCF파생상품 7	3.75	8.75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TIGER KRX100상장지수	3	1	0.3	0.3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TIGER SEMICON상장지수	3	1	0.3	0.3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TIGER BANKS상장지수	3	1	0.3	0.3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네오RCF파생상품 8	3.75	8.75	0.3	0.2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1	1.5	2.5	0.3	0.2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미래에셋캡스	미래에셋캡스로저스Commodity인덱스파생	5.4	12.6	0.3	0.2
미래에셋캡스	미래에셋캡스로저스Commodity인덱스파생	5.4	7.6	0.3	0.2
미래에셋캡스	미래에셋캡스네오RCF파생상품 9	3.75	8.75	0.3	0.2
아이투신운용	아이러브핸디캡12C주식혼합 1	4.05	9.45	0.4	0
아이투신운용	현대히어로한국공채06- 1	1.37	3.19	0.3	0.15
아이투신운용	현대히어로한국공채12- 1	1.37	3.19	0.3	0.15
아이투신운용	아이리치퐁년혼합 1	4.65	10.6	0.3	0.15
아이투신운용	YOU&I국공채개인가입용MMF 1	0.8	1.88	0.2	0.12
아이투신운용	YOU&I성장주식 1	5.84	13.63	0.3	0.22
아이투신운용	아이국공채법인가입용MMF W- 3	0.6	0.8	0.2	0.12
아이투신운용	아이장기성장주식 1	5	1	0.3	0.22
아이투신운용	현대히어로알짜배당주식	4.48	15	0.3	0.22
아이투신운용	아이StepByStep파생상품 1	1	7.63	0.2	0.15
아이투신운용	아이2Star6Chance파생상품 1	7.6	17.9	0.3	0.2
아이투신운용	아이2StarStepDown파생상품 1	7	20	0.3	0.2
아이투신운용	아이2StarStepDown파생상품WM- 1	7	20	0.3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신종MMF 1	1.85	4.9	0.4	0.25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MIT안정혼합 1	5.2	13	0.5	0.3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근로자주식	5.5	13	0.5	0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배당주+안정혼합 1	5.4	13.3	0.5	0.3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MIT주식 1	7.05	17.15	0.5	0.3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솔로몬성장주식 1	7.49	17.71	0.5	0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올마이트성장주식 1	9.2	10	0.5	0.3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솔로몬주식 1	9.3	0	0.4	0.3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개인전용솔로몬신종MMF 1	1.1	5	0.3	0.1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연금혼합 1	4.5	10.5	0.5	0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혼합 1	4.4	10.4	0.4	0.3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개인전용솔로몬국공채MMF 2	1.5	4.5	0.3	0.1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개인전용국공채신종MMF 1	1.1	3.4	0.3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국공채클린MMF 1	0.95	3	0.2	0.15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FINE국공채신종MMF 1	0.9	3.1	0.3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신종MMF A- 4(법인)	0.5	1.16	0.2	0.15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국공채신종MMF 2(법인)	1.1	2.6	0.2	0.1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솔로몬채권혼합K- 1	4.92	11.48	0.4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솔로몬롱숏주식 1	3	7	0.2	0.15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ARF혼합 1	4	7.3	0.4	0.3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 3억만들기좋은기업주식K- 1	6.08	18.23	0.4	0.3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솔로몬가치주주식G 1CLASSA	7.3	17	0.4	0.3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우리아이적립형주식G K- 1	6	14	0.4	0.3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베이직단기채권형 1CLASS-A	0.4	0.2	0.15	0.15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뉴RCF파생상품 2	3.75	8.75	0.3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뉴RCF파생상품 3	3.75	8.75	0.3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뉴RCF파생상품 4	3.75	8.75	0.3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차이나솔로몬법인주 1ClassA	7.55	6.6	0.6	0.25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차이나솔로몬법인주 1ClassI	7.55	0.05	0.6	0.25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솔로몬나이스주식형 1	0.2	0.2	0.3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주식형G- 1CLASS-A	6.1	18.2	0.4	0.3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솔로몬컨슈머주식형G- 1(CLASS_A)	7.3	6	0.4	0.3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솔로몬중소형주주식형G- 1CLASS-	7.2	6	0.4	0.3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퇴직연금안정형G40자 1	3	4.5	0.3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퇴직연금안정형G20자 1	3	4.5	0.3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퇴직연금주식형모	0	0	0	0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퇴직연금채권형모	0	0	0	0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퇴직연금안정형G10자 1	3	4.5	0.3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인디아솔로몬주식 1종류A	10.15	7.5	0.6	0.25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퇴직연금혼합형G자 1	3.5	6	0.3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퇴직연금안정형G30자 1	3	4.5	0.3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차이나솔로몬주식 1종류A	10.15	7.5	0.6	0.25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트직연금주식형G자 1	4	7.5	0.3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트로몬주식 1종류I	10.15	0.05	0.6	0.25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트브렐러주식형G- 1(C-I)	4	1.5	0.3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트브렐러가치주식형G- 1(C-I)	4	1.5	0.3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트브렐러배당주식형G- 1(CLASS-	4	1.5	0.3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트브렐러채권형G- 1(C-I)	1.5	0.5	0.2	0.1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트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주식 1(C-	9.6	8	0.6	0.3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트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주식 1(C-	9.6	15	0.6	0.3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트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주식 1(C-	9.6	0.3	0.6	0.3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트솔로몬국공채1(CLASS-A)	1.5	4.5	0.3	0.2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트3억만들기솔로몬주식 1(C-A)	6.1	18.2	0.4	0.3
미래에셋투신운	미래에셋트3억만들기배당주식 1(CLASS-A)	6	18.2	0.5	0.3
알리안츠글로벌	AGI-Best of Korea혼합B- 1	4.4	10.5	0.5	0.1
알리안츠글로벌	AGI-Best Research주식B- 1(Class A)	6.5	15.4	0.5	0.1
알리안츠글로벌	Best중소형주식A- 1CLASSB	6.5	0.7	0.3	0.15
알리안츠글로벌	AGI-KOSPI200Plus알파파생상품B- 1	4.9	0	0.5	0.1
알리안츠글로벌	AGI-신종분리과세TotalReturn 1	2.5	5.5	0.3	0
알리안츠글로벌	AGI-신종분리과세TotalReturn 2	2.5	5.5	0.3	0
알리안츠글로벌	AGI-신종분리과세TotalReturn 3	2.5	5.5	0.3	0
알리안츠글로벌	AGI-분리과세TotalReturn 4	2.1	4.9	0.3	0
알리안츠글로벌	AGI-Safe신종MMF G- 1	0.85	3	0.2	0.15
알리안츠글로벌	AGI-GlobalSelect II혼합H- 1	2.85	7	0.3	0.15
알리안츠글로벌	AGI-GlobalSelect II혼합H- 2	3.45	8.4	0.3	0.15
알리안츠글로벌	브릭스30혼합채권간접(Class C)	4.35	10.5	0.3	0.15
알리안츠글로벌	AGI-Best국공채B- 1	1.7	4	0.3	0.1
알리안츠글로벌	AGI-TotalReturn채권H- 5	2.35	3.8	0.3	0.15
알리안츠글로벌	AGI-KoreaLeaders주식B- 1	6.5	15.4	0.5	0.1
알리안츠글로벌	AGI-신종MMF B-14	0.7	2.2	0.2	0.1
알리안츠글로벌	AGI-GlobalSelectII혼합H- 4	4.35	10.5	0.3	0.15
알리안츠글로벌	AGI-해피엔드파생상품G- 1	0.03	0.07	0.2	0.15
알리안츠글로벌	AGI-해피엔드2파생상품G- 1	0.03	0.07	0.2	0.15
알리안츠글로벌	AGI-고배당주식G- 1(Class A)	6.45	15.4	0.5	0.15
알리안츠글로벌	AGI-아래로파생상품G- 1	0.03	0.07	0.3	0.15
알리안츠글로벌	AGI-Best국공채G- 2	1.45	3.5	0.3	0.15
알리안츠글로벌	AGI-TotalReturn채권H- 6	1.95	3.5	0.3	0.15
알리안츠글로벌	AGI-PowerEmergingMarket채권채권간접E- 1	3.45	8.4	0.5	0.15
알리안츠글로벌	AGI-2StockVII파생상품G- 1	0.03	0.07	0.3	0.15
알리안츠글로벌	DynamicCPIAllocatoin파생상품E- 1	4.15	11.5	0.5	0.15
알리안츠글로벌	BestResearch주식B-1Class I	6.5	0	0.5	0.1
알리안츠글로벌	고배당주식G- 1Class I	6.45	0	0.5	0.15
알리안츠글로벌	Best중소형주식A- 1ClassA	6.5	15.4	0.3	0.15
알리안츠글로벌	Best중소형주식A- 1ClassI	6.5	0	0.3	0.15
알리안츠글로벌	브릭스30혼합채권간접(Class A)	4.35	5	0.3	0.15
알리안츠글로벌	기업가치향상장기주식G- 1(C/I)	8.55	0.5	0.35	0.15
알리안츠글로벌	기업가치향상장기주식G- 1(C/A)	8.55	11.95	0.35	0.15
알리안츠글로벌	기업가치향상장기G- 1(C/C)	8.55	19.95	0.35	0.15
PCA투신운용	PCA베스트인컴 3M혼합A- 1	5.33	12.5	0.5	0.18
PCA투신운용	PCA슈퍼500신종분리혼합J- 1	5.5	12.5	0.5	0
PCA투신운용	PCA베스트시스템중기채권A- 1	2	5	0.5	0
PCA투신운용	굿모닝베스트인컴 3M혼합A- 8	5.5	12.5	0.5	0
PCA투신운용	PCA업종일등혼합D- 1	5.1	3.4	0.3	0.15
PCA투신운용	PCA신종MMF A- 2	0.05	0	0.1	0.18
PCA투신운용	PCA국공채신종MMF A- 6	0.93	2.6	0.3	0.15
PCA투신운용	PCA국공채신종MMF A- R1	0.93	2.6	0.3	0.15
PCA투신운용	PCA국공채신종MMF A- 2	0.93	2.6	0.3	0.15
PCA투신운용	PCA KODI주식D- 1	4.33	10.5	0.3	0.18
PCA투신운용	PCA대표기업지수주식A- 1	2.83	0	0.3	0.18
PCA투신운용	PCA스탠다드플러스채권I-34	2	0.4	0.2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PCA투신운용	PCA베스트그로쓰주식I- 4	4	0.4	0.2	0
PCA투신운용	PCA대표기업지수시장중립주식A- 2	2.53	0	0.3	0.18
PCA투신운용	PCA대표기업지수채권혼합A- 1	2.53	0	0.3	0.18
PCA투신운용	PCAGreaterChina지수연동채권I- 1	2.63	6.5	0.5	0.18
PCA투신운용	PCAGreaterChina지수연동채권I 2	2	4.68	0.33	0.18
PCA투신운용	PCA차이나그로쓰파생상품I- 1	3.1	7.3	0.33	0.18
PCA투신운용	PCA업종일등적립식주식K- 1	7.2	16.8	0.4	0.15
PCA투신운용	PCA업종일등적립식주식A- 2	7.5	17.5	0.4	0.15
PCA투신운용	PCA뉴실크로드재간접I- 1	5.7	13.3	0.55	0.15
PCA투신운용	PCA베스트그로쓰주식A1클래스A	6.45	15.4	0.5	0.15
PCA투신운용	PCA베스트그로쓰주식A1클래스F	6.45	0.3	0.5	0.15
PCA투신운용	PCA뉴실크로드재간접I- 2	5.7	13.3	0.55	0.15
PCA투신운용	PCA더블에어백파생상품I- 1	1.95	4.55	0.35	0.15
PCA투신운용	PCAGlobalElite파생상품I- 1	0.1	0.1	0.35	0.15
PCA투신운용	PCA업종일등주식D- 1클래스A	7	6	0.3	0.15
PCA투신운용	PCA업종일등주식D-1클래스F	7	0.3	0.3	0.15
PCA투신운용	PCA아시안홀런파생I- 1	7.2	16.9	0.35	0.15
PCA투신운용	PCA아시아시너지파생상품I- 1	6.9	16.2	0.35	0.15
PCA투신운용	PCA친디아포커스파생I- 1	2.66	6.84	0.35	0.15
PCA투신운용	PCA친디아포커스파생I- 2	2.66	6.84	0.35	0.15
PCA투신운용	PCA하이파이브한중인덱스파생I- 1	6.9	6.2	0.35	0.15
PCA투신운용	PCA업종일등주식D-1클래스W	7	0	0.3	0.15
PCA투신운용	아시아파워일본인도대표파생I- 1	6.9	16.2	0.35	0.15
PCA투신운용	PCA아시아시너지파생상품I- 2	8.7	5.4	0.35	0.15
PCA투신운용	PCA퇴직연금코리아국공채모A- 1	0	0	0	0
PCA투신운용	PCA퇴직연금인컴+40채권혼합자A- 1	2.3	5.35	0.2	0.15
PCA투신운용	PCA퇴직연금코리아주식모A- 1	0	0	0	0
PCA투신운용	PCA1조클럽주식C- 1	6.5	9	0.35	0.15
PCA투신운용	PCAKoreanPowerIndex파생I- 1	10.8	25.2	0.35	0.15
PCA투신운용	PCA뉴실크로드재간접I- 3종류A	5.7	13.3	0.55	0.15
PCA투신운용	PCA하이파이브한일인덱스+파생I- 1	13.8	12.2	0.35	0.15
PCA투신운용	PCA퇴직연금업종일등주식자A- 1	3.5	8.15	0.2	0.15
PCA투신운용	PCA재팬블러섬파생상품I- 1	8.1	20	0.35	0.15
PCA투신운용	PCA오일블러섬파생I- 1	8.1	20	0.35	0.15
PCA투신운용	PCANew지수연동채권A-10	1.55	3.63	0.2	0.12
PCA투신운용	PCA1조클럽주식C- 2	6.5	9	0.35	0.15
PCA투신운용	PCA뉴실크로드재간접I3종류C	5.7	8	0.55	0.15
PCA투신운용	PCA재팬블러섬파생상품I- 2	8.1	20	0.35	0.12
PCA투신운용	PCA더블파워원자재파생I- 1	13.2	11	0.35	0.12
PCA투신운용	PCA뉴실크로드재간접I3종류I	5.7	2.5	0.55	0.15
PCA투신운용	PCAKoreanPowerIndex파생I- 2	9.5	22.2	0.35	0.12
PCA투신운용	PCA코리아리더스주식P- 1	6.5	10	0.38	0.13
PCA투신운용	PCA아시아블러섬파생I- 3	8.1	20	0.35	0.13
PCA투신운용	PCAAsianPower한국중국대표지수파생I- 1	13.65	31.85	0.35	0.13
PCA투신운용	PCA배당주식혼합종류H- 1A	5	12	0.33	0.13
PCA투신운용	PCA메탈블러섬파생I- 1	8.1	20	0.35	0.13
PCA투신운용	PCA글로벌리더스주식형모I-1	0	0	0	0
PCA투신운용	PCA글로벌리더스주식자I1클래스A	8.4	19.6	0.58	0.13
PCA투신운용	PCA유라시아더블리츠파생I- 1	26.43	1.67	0.35	0.13
PCA투신운용	PCAAsianPower중국일본대표지수파생I- 1	11.2	26.95	0.35	0.13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프로텍티브분리과세혼합	5	5	0.5	0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차이나분리과세혼합	7	8	0.5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코리아채권-자(E)	2.2	5.1	0.4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코리아혼합-자(E)	5.1	11.9	0.4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코리아알파주식-자(E)	8.1	18.9	0.4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S&P베스트셀렉션혼합재간접 1	6.3	9	0.5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차이나밸런스드분리과세 2	7.5	10.5	0.4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그레이터차이나채권혼합	7.5	10.5	0.4	0.2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S&P아시안셀렉션혼합재간접	7	9	0.5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SP글로벌베스트30적립식재간접	6.3	13	0.5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SP글로벌베스트50적립식재간접	6.3	13	0.5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SP글로벌베스트70적립식재간접	6.3	13	0.5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올인원안정형재간접	7.5	10	0.5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올인원안정성장형재간접	9	12	0.5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올인원성장형재간접	10	14	0.5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코리아채권형모	0	0	0	0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브릭스주식형자(A)	9	12	0.5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브릭스혼합형자(A)	7.5	11.5	0.45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브릭스주식형모	0	0	0	0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코리아알파주식형-자(A)	7.5	11.5	0.4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코리아알파주식형모	0	0	0	0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브릭스주식형자(E)	9	17	0.5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브릭스주식형자(E-1)	9	1	0.5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브릭스혼합형자(E-1)	7.5	1	0.45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브릭스주식형자A-1	9	12	0.5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베스트리턴파생상품2-1	18	27	0.45	0.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베스트리턴파생상품3-1	18	27	0.45	0.2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자백스50혼합안정성장형 1	5.9	14	0.4	0.3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자백스30혼합안정형 1	5.15	12.25	0.4	0.3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뉴코리아주식1-1	8.35	20	0.3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니케이30인덱스혼합 1	4	4	0.6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글로벌토탈리턴재간접 1	3	11.15	0.6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글로벌올에셋재간접 1	5	12.15	0.6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4Star Commodity파생상품 1	0	0	0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글로벌올에셋재간접 2	5	12.15	0.6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글로벌배당주혼합재간접 1	4.15	15	0.6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코리아채권1-1ClassA	1.5	5.15	0.3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코리아채권1-1ClassI	1.5	0	0.3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Asia 4 stock파생상품G-1	8	18.7	1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브릭스플러스재간접 1	5.75	13.4	0.6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브릭스플러스재간접U-1	5.75	3.4	0.6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 2 stock XV파생상품G-1	0.01	0.01	0.1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 2 stock XVI 파생상품P-1	10.5	20	1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2stock XV파생상품G-2	2.5	22.5	1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 2 stock XVI 파생상품P-2	10.5	20	1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 2stock XV 파생상품G-3	12	20	1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 2stock IX 파생상품G-1	10.5	20	1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글로벌커머더티주식재간접	5	15	0.6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PowerAsset 파생상품P-1	9	20	1	0.2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2 Index I파생상품P-1	3	17.5	1	0.2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2 Index I파생상품P-2	10.5	20	1	0.2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글로벌배당주재간접 1CLASS U	4.15	5	0.6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글로벌배당주재간접 1CLASS A	4.15	15	0.6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코리아채권1-1ClassU	1.5	2	0.3	0.25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2stock XVIII파생상품P-1	7	20	1	0.2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3 Index I파생상품P-1	8	18	1	0.2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중기채권 1	2.17	5.4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개인신중MMF 1	1.22	2.9	0.3	0.08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혼합30-1	4.45	10.5	0.3	0.15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개인국공채MMF 1	1.22	2.9	0.3	0.08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중기채권 2	1.47	3.6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법인MMF 5	0.7	1.02	0.2	0.08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법인국공채MMF 1	1.22	2.9	0.3	0.08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마켓리더주식 1	7.23	17.3	0.3	0.17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중기채권 3 ClassA	1.47	3.6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혼합주식I 1	12.35	12.5	0.3	0.15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법인MMF 8	0.08	0.12	0.2	0.08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법인MMF 4	0.64	1.48	0.1	0.08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법인신종MMF 1	1.22	2.9	0.3	0.08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종자돈적립고배당혼합 1	6.17	14.39	0.45	0.15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메르시글로벌재간접2- 1	6.3	7	0.6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메르시글로벌재간접2- 2	6.3	8	0.6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올스타적립식주식 1	7.36	17.17	0.3	0.17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종자돈적립채권 1	1.52	3.55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메르시글로벌적립식재간접 1	6.3	7	0.6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원원고배당적립혼합 1	3	7	0.3	0.15
농협CA투신운용	원원고배당배타헤징혼합 1	3	7	0.3	0.15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아이사랑적립주식 1	6	14	0.3	0.17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굿찬스파생상품A- 1	0	0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고배당시장중립혼합 1	4.49	10.47	0.3	0.15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학교사랑적립혼합 1	6.21	14.49	0.3	0.15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일본부동산지수연계채권 1	1.6	3.54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일본부동산지수연계채권 2	1.6	3.54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코리아재팬올스타주식 1ClassA	9.69	14.54	0.6	0.17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고배당주식자 1	4	7.55	0.3	0.15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시장중립주식자 1	4	7.55	0.3	0.15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업종대표주식자 1	4	7.55	0.3	0.15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밸류주식혼합자 1	3.5	6.05	0.3	0.15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고배당혼합자 1	3.02	4.55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시장중립혼합자 1	3.02	4.55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중소형주혼합자 1	3.02	4.55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업종대표혼합자 1	3.02	4.55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2030혼합자 1	3.02	4.55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4050혼합자 1	3.02	4.55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5060혼합자 1	3.02	4.55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6090채권자 1	1.77	3.8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장기채권자 1	1.77	3.8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중기채권자 1	1.77	3.8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고배당주식모 1	0	0	0	0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시장중립주식모 1	0	0	0	0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중소형주주식모 1	0	0	0	0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업종대표주식모 1	0	0	0	0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장기채권모 1	0	0	0	0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퇴직연금중기채권모 1	0	0	0	0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코리아재팬올스타주식 1ClassC	9.69	4.54	0.6	0.17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코리아차이나올스타주식 1ClassA(자)	9.69	14.54	0.6	0.17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코리아차이나올스타주식 1ClassD	9.69	0.54	0.6	0.17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플러스SW6Chance파생상품 1	9.5	19	0.3	0.13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뉴아너스SRI주식 1CLASS A	6	13.53	0.3	0.17
농협CA투신운용	농협CA뉴아너스SRI주식 1CLASS B	6	3.53	0.3	0.17
농협CA투신운용	코리아재팬올스타혼합자6- 1	6.17	14.39	0.45	0.15
농협CA투신운용	코리아재팬올스타주식모 1	0	0	0	0
농협CA투신운용	코리아올스타채권모 1	0	0	0	0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하베스트적립식주식 1ClassA	6.54	9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채권인덱스 1	1.64	0.6	0.2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배당주적립식혼합 1ClassA	4.54	7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배당주적립식혼합 1ClassK	4.54	10.6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하베스트적립식주식 1ClassK	6.54	15.3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국공채MMF법인 1	0.5	1.07	0.15	0.13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하베스트적립식주식 1ClassA1	6.54	8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하베스트적립식주식 1ClassC2	6.54	2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배당주적립식혼합 1ClassC2	4.54	2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배당주적립식혼합 1ClassA1	4.54	6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하베스트적립주식1ClassC3	6.54	1.5	0.3	0.16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배당주적립식혼합 1ClassC3	4.54	1.5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하베스트적립주식1ClassA 2	6.54	7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배당주적립식혼합 1ClassB3	4.54	4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하베스트적립주식1ClassI	6.54	0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배당주적립식혼합 1ClassA2	4.54	5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하베스트적립주식 1ClassB3	6.54	6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하베스트멀티주식 1C-A	7.4	17.1	0.34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하베스트멀티주식 1C-B	7.4	7.1	0.34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네오하베스트적립식주식 1	6.54	11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하베스트멀티주식1C-C	7.4	7.1	0.34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하베스트적립주식1ClassA3	6.54	5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다이나믹시스템적립식혼합 1	4.54	10.6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배당주적립식혼합 1ClassA3	4.54	3	0.3	0.1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네오하베스트채권 1	1.3	0.34	0.2	0.16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국공채 1 A클래스	2	4.1	0.3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국공채 1 C클래스	2	3.6	0.3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포커스주식 1 A클래스	8	17	0.4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포커스주식 1 C클래스	8	14	0.4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국공채MMF개인 1	1.3	2.4	0.2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국공채MMF법인 1	0.6	1.1	0.2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인덱스알파파생상품 1CLASS A	6.5	14	0.4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인덱스알파파생상품 1CLASS C	6.5	11.5	0.4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밸런스30혼합 1 A클래스	4.7	10.3	0.4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밸런스30혼합 1 C클래스	4.7	8.8	0.4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셀렉트미국배당지수연계파생상품	5.25	9.75	0.4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골든벨주가연계파생상품 4	0.04	0.07	0.2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포커스배당주식 1A클래스	8	17	0.4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포커스배당주식 1C클래스	8	14	0.4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골든벨주가연계파생 5	0.04	0.07	0.2	0.1
기은SG자산운용	기은SG아시아사다리파생상품	8	10	0.5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골든벨주가연계파생상품 8	0.04	0.07	0.2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뉴스타혼합	3.6	8.4	0.4	0.1
기은SG자산운용	SG연금플랜장기채권모	0	0	0	0
기은SG자산운용	SG연금플랜인덱스혼합40자	4	2.6	0.3	0.1
기은SG자산운용	SG연금플랜중기채권모	0	0	0	0
기은SG자산운용	SG연금플랜인덱스파생상품모	0	0	0	0
기은SG자산운용	SG연금플랜주식모	0	0	0	0
기은SG자산운용	SG연금플랜주식혼합20자	4	2.6	0.3	0.1
기은SG자산운용	SG연금플랜채권자	2.2	1.5	0.2	0.1
기은SG자산운용	SG연금플랜주식혼합40자	4	2.6	0.3	0.1
기은SG자산운용	SG연금플랜인덱스혼합20자	4	2.6	0.3	0.1
기은SG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리츠재간접	10	10	0.5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셀렉트일본재간접클래스 A	7.5	7.5	0.7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셀렉트일본재간접클래스 C	7.5	5.5	0.7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골든벨주가연계파생상품 9	9.35	17.35	0.2	0.1
기은SG자산운용	기은SG그랑프리포커스금융주식	7.5	17.5	0.4	0.1
기은SG자산운용	기은SG노라마골든벨주가연계파생 5	4.5	25	0.2	0.1
기은SG자산운용	SG연금플랜주식혼합30자	4	2.6	0.3	0.1
기은SG자산운용	기은SG 2006 Korea-Germany 2Star주가파생	8.01	18.69	0.2	0.1
기은SG자산운용	SG연금플랜주식혼합50자	4	2.6	0.3	0.1
기은SG자산운용	SG연금플랜채권혼합모	0	0	0	0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한국대표주식A	7.5	7.5	0.4	0.1
기은SG자산운용	그랑프리한국대표주식E	7.5	1.5	0.4	0.1
피델리티자산운	FK-글로벌채권형모신탁	0	0	0	0
피델리티자산운	FK-글로벌채권형자(A)	5	4	0.4	0.28
피델리티자산운	FK-글로벌채권형자신탁(E)	5	7	0.4	0.28
피델리티자산운	FK-스타만들기글로벌채권형자	5	7	0.4	0.28
피델리티자산운	FK-코리아주식형모신탁	0	0	0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피델리티자산운	FK-코리아주식형자(A)	8	10	0.4	0.28
피델리티자산운	FK-코리아주식형자(E)	8	18	0.4	0.28
피델리티자산운	FK-적립식코리아주식형자	8	18	0.4	0.28
피델리티자산운	FK-글로벌안정혼합자(E)	4.9	7.6	0.4	0.28
피델리티자산운	FK-스타만들기글로벌안정혼합자	4.9	7.6	0.4	0.28
피델리티자산운	FK-글로벌주식형모재간접	0	0	0	0
피델리티자산운	FK-글로벌주식형자(E)	3	11	0.4	0.28
피델리티자산운	FK-스타만들기글로벌주식형자	3	11	0.4	0.28
피델리티자산운	FK-글로벌주식형자(A)	3	6	0.4	0.28
피델리티자산운	FK-글로벌채권형자(I)	5	1	0.4	0.28
피델리티자산운	FK-글로벌주식형자(I)	3	1	0.4	0.28
피델리티자산운	FK-코리아주식형자(I)	8	1	0.4	0.28
한국밸류자산운	한국밸류10년투자주식 1	7.6	20.4	0.3	0.14
한국밸류자산운	한국밸류10년투자채권혼합 1	4.8	11.2	0.3	0.14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플래티늄배당주식 1	4.5	0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 2	7.3	17	0.4	0.3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주식K- 1	7.5	17.5	0.4	0.3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주식 1ClassA	10	7.5	0.7	0.3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APT배당주식 1ClassA	8	6	0.7	0.3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AP법인전용스타주식C- A	7.5	6.6	0.6	0.3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주식G 1	6	14	0.4	0.3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가치주주식G 1CLASSA	7.3	17	0.4	0.3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개인연금혼합 1	4.5	10.5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주식 1ClassA	10.15	7.5	0.6	0.25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플래티늄배당주식 1CLASS-A	7.5	10	0.4	0.3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플래티늄배당주식 1CLASS-W	7.5	0	0.4	0.3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나이스주식 1	0.2	0.2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마에스트로주식형모	0	0	0	0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마에스트로채권형모	0	0	0	0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주식형자 1	7.5	17.5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혼합형자 1	6	14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혼합형자 1	4.5	10.5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혼합형자 1	4.5	10.5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90연금채권형자 1	1.5	3.5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주식 1ClassA	10.15	7.5	0.6	0.25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법인주식 1ClassA	7.55	6.6	0.6	0.25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법인주식 1ClassI	7.55	0.05	0.6	0.25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AP법인전용스타주식C- I	7.5	0	0.6	0.3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디스커버리혼합형 1	7	6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G- 1CLASS-A	8	5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형G- 1CLASS-A	7.3	17	0.4	0.3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안정형40자 1	3	4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안정형30자 1	3	4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안정형20자 1	3	4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안정형G40자 1	3	5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채권형자 1	1.5	2	0.2	0.1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주식형모	0	0	0	0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채권형모	0	0	0	0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주식형자 1	4	5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채권형모	0	0	0	0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안정형G30자 1	3	5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 3CLASS-A	8	7.5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안정형G20자 1	3	5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채권형자 1	1.5	2	0.2	0.1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주식 1ClassI	10.15	0.05	0.6	0.25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주식 1ClassI	10.15	0.05	0.6	0.25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 3CLASS-I	8	0.3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안정형10자 1	3	3.5	0.3	0.2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디스크버리한아름30혼합형G- 1(C-	6	6	0.4	0.3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주식형G자 1	4	6.5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혼합형G자 1	3.5	5.5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안정형G자 1	3	5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차이나디스크버리법인주식 1종류A	7.55	6.6	0.6	0.25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안정형자 1	3	4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안정형G10자 1	3	4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퇴직플랜혼합형자 1	3.5	4.5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차이나블루칩주식형모	0	0	0	0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친디아블루칩주식형자 1	9.65	10	0.6	0.25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친디아블루칩리치플랜주식형자 1	9.65	15	0.6	0.25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인디아블루칩주식형모	0	0	0	0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개인연금채권 1	1.5	3.5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 3(CLASS-A)	7.3	17	0.4	0.3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3억만들기중소형주식 1(ClassA)	7.29	17.1	0.4	0.3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디스크버리주식 2(CLASS-A)	9.5	7	0.3	0.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APT배당주식 1ClassI	8	0	0.7	0.3
SE에셋코리아	세이수익마련주식	7	15	0.5	0.16
SE에셋코리아	에듀케어학자금주식	7.36	17.18	0.3	0.16
SE에셋코리아	세이하나로채권	2	0.1	0.2	0.16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블루칩배당주식 C	6.5	10	0.3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블루칩배당혼합 C	5.5	9.5	0.3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백년대계적립식주식	8.5	16.5	0.4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일본리츠지수연계파생상품 1	1.6	3.5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블루칩배당주식W-A	6.5	16	0.5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블루칩배당주식W-I	6.5	0	0.5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two-star ELS 파생상품PH- 1	0.05	0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블루칩배당주식 1	6.5	9	0.3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블루칩배당혼합 1	5.5	7	0.3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two-star ELS파생상품PH- 2	0.05	0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퇴직연금채권모	0	0	0	0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퇴직연금배당주식모	0	0	0	0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퇴직연금배당40혼합자 1	3	7	0.3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통런채권모	0	0	0	0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베스트트리오주식	6.5	10	0.3	0.2
마이다스에셋지	일본대표지수연계채권 2	0.7	1.5	0.1	0.1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통런채권자 1-D	1.5	1.1	0.2	0.2
마이다스에셋지	일본대표지수연계채권 1	1.4	4.2	0.2	0.2
마이다스에셋지	일본대표지수연계채권 3	1.4	4.2	0.2	0.2
마이다스에셋지	일본대표지수연계채권 4	1.4	4.2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New 2Star파생상품SS- 1	6	20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New 2Star파생상품SS- 2	6	20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New 2Star파생상품SS- 4	6	20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New2Star파생상품SS- 3	6	20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New 2Star파생상품ST- 1	6	20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New주가지수연계파생상품 1	5.4	18.6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New 2Star파생상품SH- 1	6	20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New 2Star파생상품SE- 1	6	20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New 2Star파생상품SE- 2	4	22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New 2Star파생상품SK- 1	6	20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New 2Star파생상품PD- 1	2	18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New 2Star파생상품KS- 1	6	20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New 2Inex파생상품KN- 1	6	20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New 2Star파생상품KW- 1	2.4	16	0.2	0.2
마이다스에셋지	마이다스New 2Star파생상품WH- 1	7.2	20	0.2	0.2
굿앤리치자산운	코리아니프티프티주식혼합N 1	4	20	0.4	0.25
굿앤리치자산운	골드넷채권혼합 1	5.38	12	0.4	0.22
KTBank자산운용	KTBank오륙도특별자산	3	7.5	0.3	0.17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KTB자산운용	KTB온누리혼합	4.53	10	0.3	0.17
KTB자산운용	KTB플러스알파혼합 3	2.63	7	0.2	0.17
KTB자산운용	에듀케어학자금주식혼합	6.83	16	0.3	0.17
KTB자산운용	에듀케어학자금채권혼합	5.13	14	0.3	0.17
KTB자산운용	KTB실크로드특별자산 3	4.03	6.5	0.3	0.17
KTB자산운용	KTB실크로드특별자산 5	4.23	6.3	0.3	0.17
KTB자산운용	미래터전KTB부동산 2	4	10	1	0.3
KTB자산운용	KTB웰빙MMF(법인)	0.5	0.7	0.2	0.1
KTB자산운용	KTB울트라채권ELS2- 1	1.23	2.9	0.2	0.17
KTB자산운용	KTB마켓스타주식_A	6.73	15.8	0.3	0.17
KTB자산운용	KTB온누리혼합 2	3.53	10	0.3	0.17
KTB자산운용	KTB 2 STOCK파생상품10- 1	6.53	20	0.2	0.17
KTB자산운용	KTB 2 STOCK파생상품12- 1	2.65	23.88	0.2	0.17
유리자산운용	유리스몰뷰티주식	7.62	11.4	0.3	0.18
유리자산운용	유리Growth&Income주식	7.32	17.3	0.2	0.18
유리자산운용	유리스몰뷰티플러스주식	6.46	5.06	0.3	0.18
유리자산운용	유리투스파생상품 1	3	29	0.15	0.18
유리자산운용	유리위너파생상품 1	6	0	0.2	0.18
유리자산운용	유리투스파생상품 2	2.59	23.33	0.2	0.17
유리자산운용	유리투스파생상품 3	2.59	23.33	0.2	0.17
유리자산운용	유리투스파생상품 4	2.7	24.3	0.2	0.17
유리자산운용	유리KOSPI200인덱스파생상품	4.33	10.2	0.3	0.17
피닉스자산운용	PAM부동산 3	3	6	0.5	0.3
골든브릿지자산	골든브릿지특별자산 8	5	0.5	0.5	0.1
골든브릿지자산	GB메리트특별자산 1	6.1	10	0.8	0.5
골든브릿지자산	GB원스텝밸류주식형 1	5	11.9	0.4	0.2
골든브릿지자산	골든브릿지특별자산13	2	6.3	0.5	0.2
골든브릿지자산	골든브릿지특별자산17	4	8	0.5	0.2
마이애셋자산운	마이애셋부동산 9	3	7	0.7	0.2
마이애셋자산운	마이애셋Wellness주식형 1	7	15	0.3	0.2
마이애셋자산운	마이애셋징기스칸주식형	7	14.5	0.3	0.2
플러스자산운용	PlusGoodLife안정혼합 1	5	12	0.3	0.2
플러스자산운용	PlusLong-Run주식A- 2	7.3	17.1	0.3	0.2
플러스자산운용	Plus신종MMF 1(법인용)	0.3	1.93	0.13	0.13
플러스자산운용	플러스리베로성장주식 2	6.9	16.1	0.25	0.25
맥쿼리IMM자산	맥쿼리IMM글로벌리츠재간접클래스A	9	9	0.6	0.4
맥쿼리IMM자산	맥쿼리IMM글로벌리츠재간접클래스 I	9	7	0.6	0.4
맥쿼리IMM자산	맥쿼리IMM지수연동채권 1	1.3	3.2	0.15	0.15
맥쿼리IMM자산	맥쿼리IMM21세기거북선주식 2	4.5	1	0.2	0.15
맥쿼리IMM자산	맥쿼리IMM아시안리츠재간접ClassA	5.5	4.75	0.5	0.25
맥쿼리IMM자산	맥쿼리IMM아시안리츠재간접ClassB	5.5	12.75	0.5	0.25
맥쿼리IMM자산	맥쿼리IMM프라임주식	6	6	0.3	0.2
맥쿼리IMM자산	맥쿼리IMM아시안리츠재간접ClassC	5.5	3.65	0.5	0.25
현대와이즈자산	현대HR30주식 1	2.5	0	0.5	0.25
현대와이즈자산	현대HR30주식혼합 1	2.5	0	0.5	0.25
현대와이즈자산	현대HR30채권혼합 1	2.5	0	0.5	0.25
현대와이즈자산	와이즈Premier12채권 1	1.35	3.15	0.3	0.2
현대와이즈자산	와이즈프리미엄MMF 2	0.4	1.1	0.2	0.1
현대와이즈자산	현대히어로-영웅시대주식 1	4.5	15	0.3	0.2
현대와이즈자산	현대히어로-영웅시대채권혼합 1	4.5	10	0.3	0.2
현대와이즈자산	현대히어로-생로병사주식	4.5	15	0.3	0.2
현대와이즈자산	테마4-한류열풍주식	4.5	5	0.3	0.2
현대와이즈자산	현대히어로-한류열풍주식	5.5	14	0.3	0.2
현대와이즈자산	현대히어로-노블레스주식	5.5	14	0.3	0.2
현대와이즈자산	테마5-노블레스주식	4.5	5	0.3	0.2
현대와이즈자산	와이즈더블스타주식 1	7.1	7.5	0.2	0.2
현대와이즈자산	와이즈더블스타채권혼합 1	4.1	3.5	0.2	0.2
현대와이즈자산	현대와이즈테마VI-로얄실버주식혼합	7	1.5	0.3	0.2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현대와이즈자산	현대와이즈WIN채권혼합 1	7	1.5	0.3	0.2
현대와이즈자산	현대하이로-노블레스주식 2	7.5	12	0.3	0.2
현대와이즈자산	현대하이로-알렉산더주식	7.5	12	0.3	0.2
현대와이즈자산	현대하이로-모차르트채권혼합	5.5	9	0.3	0.2
현대와이즈자산	현대하이로-로알실버주식혼합	6.7	10.8	0.3	0.2
현대와이즈자산	현대와이즈부동산 1	1.5	7.5	0.6	0.3
현대와이즈자산	현대하이로-토박이주식	7.5	12	0.3	0.2
현대와이즈자산	현대와이즈퇴직연금국공채모	0	0	0	0
현대와이즈자산	현대와이즈퇴직연금채권혼합자	2.4	5.2	0.2	0.2
현대와이즈자산	현대와이즈테마VIII Re-Start주식	7.5	2	0.3	0.2
현대와이즈자산	현대와이즈FedFundRate채권	1.2	1.4	0.2	0.2
현대와이즈자산	와이즈리치플랜채권혼합 1	4.5	10	0.3	0.2
알파에셋자산운	알파에셋법인MMF	0.5	1.22	0.18	0.1
알파에셋자산운	알파에셋뱅크플러스혼합형 1	3	7	0.2	0.2
알파에셋자산운	알파에셋셀렉트주식형투자신탁1호	7.4	17.1	0.3	0.2
한불종합금융	장기공사채신탁12월	2.9	6.6	0.5	0
한불종합금융	장기공사채신탁11월	2.9	6.6	0.5	0
한불종합금융	소액우대공사채 9월	2.9	6.6	0.5	0
한불종합금융	단기공사채 1	3.8	8.7	0.5	0
한불종합금융	소액우대공사채 1	2.9	6.6	0.5	0
한불종합금융	장기공사채 1	2.9	6.6	0.5	0
한불종합금융	장기공사채 2	2.9	6.6	0.5	0
한불종합금융	장기공사채10	2.9	6.6	0.5	0
한불종합금융	가계장기공사채 1	2	4.5	0.5	0
한불종합금융	장기우대공사채 6	2.3	5.2	0.5	0
한불종합금융	장기우대공사채 7	2.3	5.2	0.5	0
한불종합금융	장기우대공사채 8	2.3	5.2	0.5	0
한불종합금융	신중MMF 1	1.2	2.8	0.5	0
한불종합금융	신중MMF 2	2.5	3.5	0.5	0
한불종합금융	한불분리과세채권 2	2.9	6.6	0.5	0
한불종합금융	SOGEKO안정혼합 1	4	8	0.5	0.2
한불종합금융	한불안심국공채MMF 1	1.2	1.8	0.27	0.14
한불종합금융	한불안심국공채MMF 2	1.1	2.4	0.3	0.2
한불종합금융	한불세이프밸런스혼합 1	4	9	0.5	0.2
한불종합금융	한불MMF 3	0.5	1.1	0.25	0.12
한불종합금융	한불Vintage2004적립식주식	7.4	17	0.4	0.2
한불종합금융	한불배당플러스주식 1	7.4	17	0.4	0.2
한불종합금융	한불배당플러스혼합 1	4.4	10	0.4	0.2
한불종합금융	한불2StarStepDown파생상품 1	2.5	31.5	0.5	0.4
한불종합금융	e-일등기업주식 1	2.5	2.5	0.25	0.19
한불종합금융	한불Step Down단위파생상품 2	2.5	25.5	0.5	0.4
한불종합금융	한불Step Down단위파생상품 3	7	20	0.3	0.2
한불종합금융	한불Step Down단위파생상품 4	2.5	25.5	0.5	0.4
한불종합금융	한불Step Down단위파생상품 5	6	22	0.5	0.4
SH&C생명보험	구조화펀드2(SF6)	NULL	NULL	NULL	NULL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공모플러스안정혼합A- 1	1.5	13.5	0.3	0.4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안정혼합A- 1	1.5	13.5	0.3	0.4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안정혼합A- 2	1.5	13.5	0.3	0.4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2안정혼합G- 1	1.28	11.52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안정혼합G- 3	1.5	13.5	0.3	0.4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2안정혼합G- 2	1.35	12.1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2안정혼합G- 3	1.35	12.1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안정혼합G- 4	1.5	13.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안정혼합G- 5	1.5	13.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안정혼합A- 6	1.5	13.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안정혼합A- 7	1.5	13.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안정혼합A- 8	1.5	13.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안정혼합A- 9	1.5	13.5	0.3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2안정혼합A- 4	1.35	12.1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2안정혼합A- 5	1.35	12.1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안정혼합A-10	1.5	13.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안정혼합A-11	1.5	13.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골드배당플러스안정혼합A- 1	1.5	13.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골드액티브플러스안정혼합A- 1	1.5	13.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2안정혼합A- 6	1.35	12.1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2안정혼합A- 7	1.35	12.1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골드플러스안정혼합A- 1	2.1	11.9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골드플러스2안정혼합A- 1	1.95	11.0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골드플러스안정혼합A- 2	2.1	11.9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Long&Short혼합A- 1	3.46	13.84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골드플러스안정혼합A- 3	2.1	11.9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골드플러스2안정혼합A- 2	1.95	11.0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골드플러스안정혼합A- 4	2.1	11.9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안정혼합A-12	2.25	12.7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안정혼합A-13	2.25	12.7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안정혼합A-14	2.25	12.7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안정혼합A-15	2.25	12.7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플러스안정혼합A-16	2.25	12.7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 K- 1	2.27	12.88	0.25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 K- 2	2.27	12.88	0.25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 K- 3	2.27	12.88	0.25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 K- 4	2.27	12.88	0.25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 5	2.27	12.88	0.25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 6	2.27	12.88	0.25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 7	2.27	12.88	0.25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 8	2.27	12.88	0.25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 9	2.27	12.88	0.25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10	2.27	12.88	0.25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38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39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40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12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13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14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15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16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11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18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19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20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W-21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17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W-22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W-23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W-24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W-25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W-26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W-27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W-28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W-29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W-30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W-31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32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33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34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35	2.28	12.92	0.2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36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후순위채장기혼합K-37	2.28	12.92	0.2	0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액티브플러스안정혼합A-2호	3	12	0.3	0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액티브플러스안혼A-3	3	12	0.3	0
대한투신운용	인Best플러스채권혼합형	3.59	8.37	0.4	0.18
대한투신운용	인Best플러스채권혼합형 2	3.59	8.37	0.4	0.18
대한투신운용	인Best플러스채권혼합형 3	3.59	8.37	0.4	0.18
대한투신운용	인Best플러스채권혼합형 5	3.59	8.37	0.4	0.18
대한투신운용	인Best플러스채권혼합형 6	3.59	8.37	0.4	0.18
대한투신운용	인Best플러스채권혼합형 7	3.59	8.37	0.4	0.18
대한투신운용	인Best플러스채권혼합형 8	3.59	8.37	0.4	0.18
대한투신운용	인Best플러스채권혼합형 9	3.59	8.37	0.4	0.18
대한투신운용	인Best플러스채권혼합형10	3.59	8.37	0.4	0.18
대한투신운용	인Best플러스채권혼합형11	3.59	8.37	0.4	0.18
대한투신운용	인Best플러스채권혼합형12	3.59	8.37	0.4	0.18
대한투신운용	인Best플러스채권혼합형13	3.59	8.37	0.4	0.18
대한투신운용	인Best플러스채권혼합형14	3.59	8.37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배당플러스채권혼합	3.59	8.37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배당플러스채권혼합 2	3.59	8.37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오토시스템플러스채권혼합	3.73	8.69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오토시스템플러스채권혼합 2	3.73	8.69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채권혼합투자	3.59	8.37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오토시스템채권혼합	3.59	8.37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채권혼합 2	3	7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Japan코어+채권혼합 1	4.17	9.73	0.6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아름다운미래로채권혼합1	3.59	8.37	0.4	0.18
푸르덴셜자산운	Pru공모플러스안정혼합 1	1.3	11.7	0.3	0.3
푸르덴셜자산운	Pru프리미엄30혼합 1	1.3	11.7	0.3	0.3
푸르덴셜자산운	Pru프리미엄안정혼합 1	1.3	11.7	0.3	0.3
푸르덴셜자산운	Pru아시아프리미엄혼합 1	1.4	12.6	0.35	0.3
푸르덴셜자산운	Pru아시아프리미엄혼합 2	1.4	12.6	0.35	0.3
푸르덴셜자산운	Pru아시아프리미엄혼합 3	1.4	12.6	0.35	0.3
푸르덴셜자산운	Pru아시아프리미엄혼합 4	1.4	12.6	0.35	0.3
푸르덴셜자산운	Pru프리미엄안정혼합 2	3.9	9.1	0.3	0.3
푸르덴셜자산운	Pru프리미엄안정혼합 3	3.9	9.1	0.3	0.3
푸르덴셜자산운	Pru프리미엄안정혼합 4	3.9	9.1	0.3	0.3
푸르덴셜자산운	Pru프리미엄채권혼합 1	4.5	10.5	0.3	0.4
푸르덴셜자산운	Pru프리미엄바운더리혼합 1	4.5	10.5	0.3	0.4
푸르덴셜자산운	Pru프리미엄안정혼합3-1	3.9	9.1	0.3	0.3
CJ자산운용	CJ루키채권혼합형 1	1.22	10.98	0.3	0.5
CJ자산운용	CJ루키채권혼합형 2	0.82	7.38	0.3	0.5
CJ자산운용	CJ루키채권혼합형 3	0.73	6.57	0.3	0.4
CJ자산운용	CJ루키채권혼합형 4	0.72	6.48	0.3	0.5
CJ자산운용	CJ루키채권혼합형 5	0.72	6.48	0.3	0.5
CJ자산운용	CJ루키혼합형 1	1.45	13.05	0.3	0.5
삼성투신운용	삼성인덱스프리미엄파생상품	5	0	0.4	0.6
삼성투신운용	삼성인덱스프리미엄30혼합	5	0	0.3	0.7
삼성투신운용	삼성티파워90주식형	10	0	0.3	0.7
동양투신운용	동양Bank Plus안정혼합 1	2.3	7	0.3	0.4
동양투신운용	동양Bank Plus안정혼합 3	2.3	7	0.3	0
동양투신운용	동양배당Plus안정혼합 1	2.3	6	0.3	0.4
동양투신운용	동양배당Plus안정혼합 2	3.3	9	0.3	0.4
동양투신운용	동양High Plus안정혼합 1	1.5	3.8	0.3	0.4
동양투신운용	동양 High Plus안정혼합 2	1.5	3.8	0.3	0.4
동양투신운용	동양High Plus안정혼합 3	1.5	3.8	0.3	0.4
동양투신운용	동양High Plus안정혼합투자 4	1.5	3.8	0.3	0.4
동양투신운용	동양Bank Plus안정혼합 5	2.8	6.5	0.3	0.4
동양투신운용	동양Bank Plus안정혼합 6	2.5	6	0.3	0.4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동양투신운용	동양모아드림안정혼합 1	2.6	7	0.3	0.4
동양투신운용	동양모아드림안정혼합 2	2.6	7	0.3	0.4
동양투신운용	동양모아드림안정혼합 3	2.6	7	0.3	0.4
동양투신운용	동양모아드림안정혼합 5	1.5	3	0.3	0.4
동양투신운용	동양모아드림안정혼합 4	2	4.8	0.3	0.4
대신투신운용	대신배당플러스혼합제B- 1	3.8	10	0.3	0.4
산은자산운용	산은안정혼합 1ClassA	4.3	10	0.4	0.3
산은자산운용	산은안정혼합투자 2	4.3	10	0.4	0.3
우리크레디트스	드림혼합투자회사	4.5	10.5	0.4	0.6
우리크레디트스	드림혼합 2	4.5	10.5	0.4	0.6
우리크레디트스	우리플러스혼합 1	4.1	9.6	0.3	0.7
교보투신운용	Tomorrow안정혼합D 1	3	7	0.3	0.4
신영투신운용	신영플러스안정형	3.7	8.9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플러스안정형 3	3.7	8.9	0.3	0.4
신영투신운용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 1	3.5	9.1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플러스안정형	3	12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 2	3.6	10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플러스안정형 5	3.5	9.1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 3증권투자	2.6	10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 4	3.6	10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안정형증권	2	2.5	0.2	0
신영투신운용	신영플러스안정형 6증권	3.5	9.1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 5증권	3.6	10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6호증권투자	3.6	10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플러스안정형 7	3.6	9.2	0.2	0
신영투신운용	신영오딧세이플러스안정형 2	3.7	12	0.3	0
신영투신운용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 7	3.1	10.7	0.2	0
신영투신운용	신영플러스안정형 9	3.6	9.2	0.2	0
신영투신운용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8	3.1	10.7	0.2	0
신영투신운용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 9	3.1	10.7	0.2	0
신영투신운용	신영플러스안정형10	3.6	9.2	0.2	0
신영투신운용	신영플러스안정형11호증권	3.6	9.2	0.2	0
신영투신운용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10	3.1	10.7	0.2	0
신영투신운용	신영프리미엄찬스안정형	3.3	7.7	0.2	0
신영투신운용	신영프리미엄안정형	2.6	6.3	0.2	0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프리미엄채권혼합증권	3.3	7.7	0.3	0.4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프리미엄채권혼합 2증권	3.3	7.7	0.3	0.4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밸류인컴채권혼합 1증권	3	10	0.3	0.4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밸류인컴채권혼합 2	3	10	0.3	0.4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밸류인컴채권혼합 4	3	10	0.3	0.4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밸류인컴채권혼합10-3증권	3	10	0.3	0.4
랜드마크자산운	랜드파워루키채권혼합10- 1	3.1	7.7	0.3	0.4
랜드마크자산운	랜드마크밸류인컴채권혼합10- 5	3	10	0.3	0.4
한화투신운용	코리아채스증권 1	2.73	6.37	0.3	0.6
한화투신운용	코리아채스증권 2	2.73	6.37	0.3	0.6
한화투신운용	코리아채스플러스 1	3.9	9	0.3	0.6
서울자산운용	서울아름모아안정혼합형	3.2	9	0.2	0.1
서울자산운용	서울모아모아채권혼합	3	10	0.3	0.4
서울자산운용	서울모아모아채권혼합 2	3.3	10	0.3	0.4
서울자산운용	서울모아모아채권혼합 3	3.3	10	0.3	0.4
서울자산운용	서울아름모아채권혼합형 4	2.8	6	0.3	0.4
동부투신운용	동부해오름채권혼합 1	4.5	10.5	0.3	0.4
동부투신운용	동부해오름채권혼합 2	4.5	10.5	0.3	0.4
동부투신운용	동부해오름채권혼합 5	1.9	2.5	0.2	0.4
동부투신운용	동부해오름채권혼합 6	4.5	10.5	0.3	0.4
SH자산운용	BEST JEWELRY혼합형	3	7.2	0.3	0.5
SH자산운용	BEST JEWELRY혼합형 2	3	7.2	0.3	0.5
SH자산운용	TOPS JEWELRY혼합형 1	3	7.2	0.3	0.5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SH자산운용	BEST JEWELRY혼합형 3	3	7.2	0.3	0.5
SH자산운용	TOPS JEWELRY혼합형 2	3	7.2	0.3	0.5
한국투신운용	태광업그레이드혼합형	2.73	6.37	0.3	0
한국투신운용	태광하이클래스채권혼합	3	12	0.3	0
한국투신운용	태광하이클래스채권혼합 1	3	12	0.3	0
한국투신운용	태광하이클래스채권혼합 3	3	12	0.3	0.4
한국투신운용	태광하이클래스채권혼합 4	3.78	8.82	0.3	0
한국투신운용	태광하이클래스채권혼합 5	3.78	8.82	0.3	0
한국투신운용	태광하이클래스채권혼합 6	3	12	0.3	0
한국투신운용	태광하이클래스채권혼합 7	4.5	10.5	0.3	0
한국투신운용	태광제3세대채권혼합B- 1	3	12	0.3	0
한국투신운용	태광하이클래스채권혼합T- 1	3	12	0.3	0
한국투신운용	태광하이클래스채권혼합T- 3	3	12	0.3	0
한국투신운용	태광하이클래스채권혼합T- 4	3	6.3	0.3	0
한국투신운용	태광하이클래스채권혼합T- 6	4.5	10.5	0.3	0
한국투신운용	태광하이클래스채권혼합T- 7	3	12	0.3	0
한국투신운용	태광마켓리더스채권혼합 1	3	12	0.3	0
한국투신운용	태광하이클래스채권혼합T- 8	4.5	10.5	0.3	0
한국투신운용	태광하이클래스채권혼합T- 9	2.8	6.5	0.3	0
한국투신운용	태광하이클래스채권혼합T-11호	4.5	10.5	0.3	0.4
미래에셋맵스지	맵스스마트채권혼합형 5	2.8	6.31	0.4	0.4
미래에셋맵스지	맵스스마트채권혼합형 6	3.8	9	0.4	0.6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스마트채권혼합형 7	2.01	4.69	0.3	0.5
미래에셋맵스지	미래에셋맵스스마트채권혼합형 8	4.26	9.94	0.3	0.5
아이투신운용	아이탐스채권혼합증권투자	3	12	0.3	0
아이투신운용	아이리치명품채권혼합 1	3.4	8	0.3	0
아이투신운용	허어로뉴페이스채권혼합	4.4	10	0.3	0.3
아이투신운용	아이고배당밸류채권혼합 1	6.3	13	0.3	0.3
아이투신운용	아이리치명품채권혼합 3	4.3	10.1	0.3	0.3
아이투신운용	아이멀티파워채권혼합 1	4.4	10	0.3	0.3
아이투신운용	아이허어로뉴페이스채권혼합 2	2.9	8.5	0.3	0.3
아이투신운용	아이리치명품채권혼합 6	3.4	8	0.3	0.3
미래에셋자산운	굿라이프혼합자녀10- 1	7	13.9	0.5	0.6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인디펜던스혼합형	7.2	16.7	0.5	0.6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형 1	7.2	16.7	0.5	0.6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혼합	5.5	12.9	0.4	0.8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	9.6	0	0.5	0.8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인디펜던스50채권혼합	6.9	16.1	0.4	0.8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콜럼버스혼합형 1	2.1	4.9	0.3	0.22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디스커버한아름 1	6.8	6.5	0.4	0.8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드림타겟주식형	10	4	0.4	0.6
미래에셋자산운	미래에셋롱숏주식형	7	4	0.4	0.6
SEI에셋코리아	세이한가족주식형	7.8	14.04	0.3	0.14
SEI에셋코리아	세이고배당장기주식형	6	14	0.3	0.16
SEI에셋코리아	세이리딩스톡혼합형	4.8	11.2	0.4	0.16
SEI에셋코리아	세이고배당주식형	7	11	0.4	0.16
SEI에셋코리아	세이고배당혼합형	5.5	9	0.4	0.16
SEI에셋코리아	세이고배당밸런스드60주식혼합형	7	10	0.4	0.16
마이다스에셋자	마이다스액티브주식	7.75	19.4	0.3	0.35
마이다스에셋자	마이다스코스닥스타인덱스	2.6	0	0.3	0.6
마이다스에셋자	마이다스오피엄장기증권주식	7.2	16.8	0.3	0.6
마이다스에셋자	마이다스플러스장기증권저축	5	20	0.3	0.6
마이다스에셋자	마이다스블루칩배당30채권혼합형	4.6	10.6	0.3	0.4
마이다스에셋자	마이다스커버드콜주식	6.5	5	0.3	0.6
마이다스에셋자	마이다스블루칩배당주식형	6.5	5	0.2	0.4
마이다스에셋자	마이다스절대수익안정형펀드	4.5	5.5	0.2	0.5
굿앤리치자산운	골드넷뉴스타트채권혼합 1	5.2	12	0.4	0.4
굿앤리치자산운	굿앤리치부동산공공매 1	14	14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굿앤리치자산운	굿앤리치뉴스타채권혼합 1	4.2	10	0.4	0.4
굿앤리치자산운	굿앤리치부동산공경매 2	16	12	0.5	0
굿앤리치자산운	굿앤리치골드넷채권혼합 2	5.2	12	0.4	0.4
굿앤리치자산운	굿앤리치뉴스타채권혼합 2	4.2	10	0.4	0.4
KTB자산운용	KTB 혼합형	5	14	0.4	0.5
KTB자산운용	KTB 에버스타혼합형펀드	4.5	10.5	0.4	0.5
KTB자산운용	KTB 글로벌스타주식형펀드	5	12	0.4	0.5
KTB자산운용	KTB마이스타혼합형펀드	5	20	0.3	0.4
KTB자산운용	KTB하이스타혼합형	4.5	10.5	0.3	0.5
KTB자산운용	KTB웰빙안정형	4.5	10.5	0.3	0.4
KTB자산운용	KTB플러스찬스채권혼합형 3	3.8	8.7	0.2	0.3
KTB자산운용	KTB플러스채권혼합형 5	2.5	8	0.2	0.3
KTB자산운용	KTB웰빙혼합형펀드	3	12	0.3	0.4
KTB자산운용	KTB드림스타주식혼합	4.95	11.55	0.3	0.2
유리자산운용	유리코스닥인덱스50주식파생상품	4	0	0.4	0.6
유리자산운용	유리골드채권혼합형	4.6	10.6	0.2	0.4
유리자산운용	유리골드채권혼합형 3	4.6	10.6	0.25	0.35
유리자산운용	유리인덱스200주식파생상품투자B	5	0	0.4	0.6
유리자산운용	유리Growth&Income혼합 1	2.89	11.56	0.2	0.35
유리자산운용	유리Growth&Income혼합 2	2.89	11.56	0.2	0.35
유리자산운용	유리Growth&Income혼합 3	2.89	11.56	0.2	0.35
유리자산운용	유리Growth&Income혼합 4	2.84	11.56	0.25	0.35
피닉스자산운용	글로벌크라운투혼합형	4.6	10.6	0.2	0
피닉스자산운용	글로벌크라운쓰리혼합형	3	12	0.2	0.3
피닉스자산운용	글로벌카이저혼합형	3	12	0.2	0.3
피닉스자산운용	글로벌타이쿤혼합형 2	4.7	10.6	0.2	0.3
피닉스자산운용	글로벌카이저혼합형 2	3	12	0.2	0.3
피닉스자산운용	글로벌카이저혼합형 3	3	12	0.2	0.3
피닉스자산운용	글로벌타이쿤혼합형	4.5	10.5	0.2	0.3
피닉스자산운용	글로벌타이쿤혼합형투자 3	4.5	10.5	0.2	0
피닉스자산운용	글로벌타이쿤혼합형 4	4.7	10.6	0.2	0.3
피닉스자산운용	글로벌타이쿤혼합형 6	4.7	10.6	0.2	0.3
골든브릿지자산	골든브릿지Wm경매부동산 1	10.5	16.5	0.5	0
골든브릿지자산	골든브릿지블루오션채권혼합 1	7	8.3	0.3	0
골든브릿지자산	골든브릿지블루오션채권 2	7	8.3	0.3	0
골든브릿지자산	골든브릿지블루오션채권혼합 3	2.4	7	0.3	0
골든브릿지자산	GB골드넷채권혼합 1호증권	5	12	0.3	0
골든브릿지자산	골든브릿지블루오션채권혼합 4	4	9.4	0.3	0
골든브릿지자산	골든브릿지블루오션채권혼합 5	4.5	10.5	0.3	0
골든브릿지자산	골든브릿지블루오션채권혼합 6	4.5	10.5	0.3	0
마이애셋자산운	트리플크라운혼합형 2	4.6	10.6	0.2	0.4
마이애셋자산운	트리플크라운혼합형 4	4.6	10.5	0.3	0.5
마이애셋자산운	트리플크라운혼합형 5	4.6	10.5	0.3	0.5
맥쿼리IMM자산	맥쿼리IMM중기채권혼합형	3	9.5	0.2	0.4
맥쿼리IMM자산	맥쿼리IMM마켓플러스채권혼합형 6	2.3	9	0.2	0.5
맥쿼리IMM자산	맥쿼리IMM마켓업채권혼합형	2.86	11.44	0.3	0.4
맥쿼리IMM자산	맥쿼리아이엠엠더블찬스채권혼합형	3.7	8.7	0.2	0.4
맥쿼리IMM자산	맥쿼리IMM프라임채권형ClassA	2.32	3.48	0.2	0
현대와이즈자산	와이즈에셋스톡와이즈주식형 1	7.8	13	0.4	0
현대와이즈자산	밸류파인더주식형펀드	6	16.8	0.4	0
현대와이즈자산	와이즈채권혼합형펀드 2	4	10.5	0.4	0
현대와이즈자산	현대경매부동산 1	5	11	0.5	0
알파에셋자산운	알파그로스주식형펀드	6.6	15.4	0.4	0.7
알파에셋자산운	알파안정채권혼합형펀드 8	2	8	0.3	0.3
알파에셋자산운	알파에셋StablePlus혼합형 1	2.4	7	0.3	0.3
알파에셋자산운	알파에셋뱅크플러스혼합형 1	2.8	7	0.2	0.4
라자드자산운용	한강구조조정기금	NULL	NULL	NULL	NULL
맥쿼리신한인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0	0	0.3	0.18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한국투신운용	장기공사채 2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세금우대공사채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SE세금우대공사채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근로자장기저축공사채 1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석류세금우대공사채 1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노후생활연금공사채 1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노후생활연금공사채 5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석류세금우대공사채 2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노후생활연금공사채 6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석류근로자장기저축 1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석류세금우대공사채 3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SE세금우대공사채 1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SE세금우대공사채 2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석류세금우대공사채 4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개인연금공사채 1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SE개인연금공사채 1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개인연금공사채 2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SE세금우대공사채 3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장기우대공사채23	7.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석류세금우대공사채 5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개인연금공사채 3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석류근로자장기저축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석류세금우대공사채 1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개인연금공사채 4	9.5	0	0.5	0

* 유의사항

- 1) 상기자료는 자산운용회사가 협회로 제출하는 상시일일보고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 상기자료는 사모펀드는 제외되었습니다.

17. 상호저축은행 5,000만원 이하 예금계좌 현황

“<불입_5천만원이하예금> 참고”

<불입_5천만원이하 예금>

상호저축은행 5천만원 이하 예금 현황

(단위 : 억원,좌)

저축은행명	예금액	예금계좌수
HK	17,305	188,949
푸른2	3,135	28,353
동부	4,558	44,084
스카이	1,607	18,824
솔로몬	19,396	134,514
프라임	6,478	48,670
민국	1,775	23,419
푸른	5,607	43,760
삼보	16	2,384
삼성	1,293	25,664
삼화	6,509	53,491
교원나라	2,119	21,732
서울	5,219	30,115
현대스위스이	4,472	64,223
신민	1,436	11,252
현대스위스	8,452	112,456
영풍	3,285	25,825
제일	16,406	144,546
신안	2,796	15,904
중앙부산	2,221	12,353
진흥	9,967	71,353
제이원	4,135	38,304
한국	6,818	106,016
대영	3,282	63,160
한신	3,255	20,640
부산고려	3,213	26,124
국제	837	9,098
부민	3,153	30,360
부산	13,001	91,823
동광	1,091	9,279
화승	1,485	11,998
부산2	12,014	90,924

저축은행명	예금액	예금계좌수
흥국	295	3,896
파라다이스	1,448	16,405
우리	3,646	44,683
인성	2,453	33,084
금화	1,522	22,436
인천	999	11,910
에이스	4,133	31,464
신한국	10,424	120,825
한서	4,845	69,363
대백	977	15,155
유니온	1,735	23,392
엠에스	2,490	34,969
안국	1,030	16,798
남양	1,862	16,747
경기	5,478	104,958
부림	1,549	19,806
삼신	2,171	26,731
삼성	831	11,885
평택	1,223	24,232
토마토	11,364	83,358
안양	1,301	22,884
영진	832	10,729
웅창	1,506	25,236
세람	1,956	38,466
좋은	5,640	35,994
늘푸른	967	11,926
한진	1,245	16,559
분당	2,585	26,746
새누리	4,498	34,004
강원	568	7,042
도민	2,337	34,030
대명	756	12,909
하나로	5,300	58,505
청주	638	11,727
중부	900	15,734

저축은행명	예금액	예금계좌수
한성	716	27,204
대전	7,818	75,963
서일	563	5,974
천안	1,848	38,755
아산	887	10,257
대성	1,366	15,344
한주	991	9,333
전북고려	1,723	68,758
전북	893	10,442
전일	8,255	97,675
스타	1,371	47,186
호남솔로몬	1,088	19,841
한일	1,864	21,746
현대	674	12,472
대한	1,122	18,821
동양	969	13,462
무등	443	6,642
센트럴	326	8,644
창업	2,147	39,001
한국투자	4,207	61,206
대운	2,394	49,030
보해	2,082	28,102
상업	2,975	44,646
흥익	6,120	64,820
구미	622	7,738
솔본	272	4,071
대아	738	16,144
삼일	871	21,552
대송	514	8,719
오성	564	10,618
경북	2,305	42,663
대원	206	5,099
에스앤티	146	4,529
경은	1,800	34,647
밀양	182	2,278

저축은행명	예금액	예금계좌수
경남제일	832	19,531
조흥	796	10,452
진주	1,254	21,138
으뜸	3,881	49,429
미래	9,708	87,446
부산솔로몬	8,831	75,092
예가람	1,450	20,303
파랑새	1,373	18,399

18.VK 처럼 유상증자 후 부도난 기업현황

※ 작성기준 : 2002년 이후 부도발생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의 부도발생일 기준
최근 1년간 최근시점 공모 유상증자 현황(소액공모 제외)

☐ 부도발생일 기준 최근 1년간 최근시점 공모 유상증자 현황

(단위 : 사)

구분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2월미만	계
유가증권시장	1	2	1	1	5
코스닥시장	4	4	4	2	14
계	5	6	5	3	19

☐ 부도기업 유상증자 세부현황 : 붙임

(붙임)

부도기업의 유상증자 세부현황

구분	기업명	부도발생일	신고서 제출일	납입일	비고*
유가증권 시장	중앙제지	2004. 12. 20.	2003. 12. 6.	2003. 12. 23.	④
	영창악기제조	2004. 9. 20.	-	-	
	금강화섬	2004. 6. 22.	-	-	
	동아정기	2004. 1. 16.	2003. 10. 13.	2003. 10. 21.	②
	대호	2004. 1. 12.	2003. 11. 21.	2003. 12. 1.	①
	KNC	2003. 12. 24.	2003. 7. 22.	2003. 7. 30.	②
	서통	2003. 8. 19.	-	-	
	계몽사	2003. 4. 28.	2002. 9. 4.	2002. 9. 19.	③
코스닥 시장	KTC텔레콤	2005. 7. 28.	2004. 10. 26.	2004. 12. 17.	③
	넥스텔	2005. 3. 24.	2004. 4. 3.	2004. 4. 12.	④
	대경테크노스	2005. 1. 7.	2004. 4. 1.	2004. 4. 20.	③
	아이텍스필	2005. 5. 2.	-	-	
	알루코	2005. 9. 27.	-	-	
	현대멀티캡	2005. 1. 4.	-	-	
	현주컴퓨터	2005. 4. 25.	2004. 5. 28.	2004. 6. 17.	④
	대흥멀티통신	2004. 4. 23.	2003. 10. 24.	2003. 11. 5.	②
	모닷텔	2004. 4. 13.	2003. 12. 12.	2004. 2. 17.	①
	테크메이트	2004. 10. 1.	2004. 4. 29.	2004. 5. 18.	②
	텔슨전자	2004. 7. 26.	2004. 4. 28.	2004. 6. 24.	①
	호성	2004. 5. 28.	-	-	
	다산씨엔아이	2003. 6. 3.	-	-	
	시스컴	2003. 3. 14.	-	-	
	이론테크	2003. 4. 15.	2003. 3. 6.	2003. 3. 20.	①
	코리아링크	2003. 4. 1.	-	-	
	화림모드	2003. 10. 1.	2003. 7. 11.	2003. 7. 28.	①
	화인썬트로닉스	2003. 2. 20.	-	-	
	디지털	2002. 5. 28.	-	-	
	삼한콘트롤스	2002. 3. 18.	2001. 8. 16.	2001. 8. 24.	③
	소프트윈	2002. 10. 29.	-	-	
	심스밸리	2002. 10. 17.	-	-	
	아이씨캠	2002. 9. 3.	2001. 12. 7.	2002. 2. 1.	③
	유니씨엔티	2002. 9. 17.	2002. 6. 3.	2002. 6. 12.	②
	코닉스	2002. 10. 11.	2002. 3. 12.	2002. 5. 3.	②

* 부도일부터 납입일까지 기간 : ①3월미만, ②3월이상 6월미만, ③6월이상 9월미만, ④9월이상 12월미만

19. 생보사 상장관련 1999년 금감원 상장기준안

□ 1999년 당시 금감원은 상장기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음

※ 1999년에는 금융연구원에서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붙임> 금융연구원 자료

1.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1차 공청회
2.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2차 공청회

1차 공청회 자료

이 자료는 8월 21일 조건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 이익배분을 중심으로 -

1999. 8. 20



韓國金融研究院

Korea Institute of Finance

<p>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방안 공청회</p>	
<p>일 시 : 1999. 8. 20(金) 14:00~17:00</p>	
<p>장 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p>	
<p>주 제 :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 이익배분을 중심으로 -</p>	
<p>사 회 : 국찬표 (서강대 교수, 한국재무학회 회장(차기))</p>	
<p>발표자 : 최홍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p>	
<p>토론자 : 권영준 (경희대 교수)</p>	
<p>김상조 (한성대 교수,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p>	
<p>김제우 (교보생명 대표이사)</p>	
<p>김주영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 변호사)</p>	
<p>나동민 (KDI 연구위원)</p>	
<p>신장섭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p>	
<p>이근창 (영남대 교수)</p>	
<p>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 소장)</p>	
<p>(가나다 순)</p>	

— 목 차 —

I. 논의의 배경

1. 생보사 기업공개 문제 대두
2. 현황

II. 국내 생보업계 현황

1. 생보업계 구조
2. 국내 생보사 경영행태

III. 생보사 기업공개 효과

1. 기업공개 요건 및 상장 가능 생보사
2. 생보사 기업공개 효과

IV. 생보사 기업공개상의 과제

1. 생보사 기업공개시 쟁점사항
2.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3. 계약자간 이익배분

V. 향후 과제

1. 이익배분기준 개선
2. 분리계정의 도입
3. 생보사 지배구조 개선
4. 기타 검토사항

<별첨> 생보사 순자산가치평가

— 표 목 차 —

<표 I-1> 1980년대 생보업계 당기순이익 추이

<표 I-2> 교보·삼성생명 자산재평가

<표 I-3> 자산재평가적립금 처분내역

<표 I-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조항 개정 추이

<표 I-5> 삼성·교보생명 기업공개 시한

<표 I-6> 5대 생보사 주주 현황 및 구성비

<표 I-7> 삼성·교보생명 주주 현황

<표 II-1> 생보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표 II-2> 생보사 구조조정 추이

<표 II-3> 생보사 1차 구조조정 현황

<표 II-4> 총자산대비 자본금 비율

<표 II-5> 금융권별 자기자본비율 ...

<표 II-6> 삼성·교보생명의 계열사 자금 지원 현황

<표 II-7> 삼성생명 부당내부거래 사례

<표 II-8> 보험계약 실효·해약을 추이

<표 II-9> 국내 생보사 경영행태에 따른 계약자 피해

<표 III-1> 상장요건

<표 III-2> 5대 생보사 상장요건 분석

- <표Ⅳ-1> 배당·무배당상품 판매비중
- <표Ⅳ-2> 현행 계약자·주주간 이익배분비율
- <표Ⅳ-3> 계약자·주주간 이익배분시 검토사항
- <표Ⅳ-4>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에 관한 Belth학설
- <표Ⅳ-5> 계약자·주주간 적정 이익배분을
- <표Ⅳ-6> 과거 주주·계약자간 이익배분 기준
- <표Ⅳ-7> 삼성·교보생명 자기자본 현황
- <표Ⅳ-8> 삼성·교보생명 자본금 추이
- <표Ⅳ-9> 삼성·교보생명 자본금 조정
- <표Ⅳ-10> 삼성·교보생명의 자본금 및 주주지분을 변동

<별 첨>

- <표 1> 삼성생명 자산재평가 내역
- <표 2> 교보생명 자산재평가 내역
- <표 3> 삼성·교보생명의 주당 순자산가치

I. 논의의 배경

- 지난 6월 30일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해 삼성생명 상장문제를 공론화시킴으로써 국내생보사 기업공개 문제가 생보 업계내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음.
- 더욱이 '89년과 '90년에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법인세 납부 유예기한이 각각 2000. 3. 31과 2001. 1. 31로 다가옴에 따라 생보사 기업공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임.

1. 생보사 기업공개 문제 대두

- 생보사 기업공개는 지난 '87년 생보사 경영수지가 개선되면서 일부 생보사가 상장요건을 충족하게 됨에 따라 거론되기 시작함.
 - '86년에 이르러 생보사는 주식 및 부동산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투자영업이익을 실현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88년 4월부터는 이익금 범위내에서 계약자 이익배당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등 경영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하였음.

<표 I-1> 1980년대 생보업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82	83	84	85	86	87	88	89
업계 전체	△480	△496	△573	△692	16	1,102	1,733	466
삼성생명	△91	△44	54	45	35	20	356	310
교보생명	△55	84	13	16	48	202	745	200

주: 사업년도 기준

출처: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 '88년 9월 당시 재무부는 생보사 기업공개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공개요건을 갖추는 경우 기업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 '88년 9월 대한생명이 경영성과의 분배를 통한 국민기업의 육성과 종업원지주제 도입으로 노사관계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한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재무부에 질의함으로써 동 사안이 처음 공식적으로 거론됨.
- 이어 '89년 3월 교보생명의 질의에 대해 재무부는 재무상태와 경영실적 등 제반여건이 증권거래법 등에 저촉되지 않으면 기업공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음.
- 이러한 당국의 긍정적 견해 표명에 힘입어 '89년 4월 교보생명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기업공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고, 삼성생명도 그 이듬해인 '90년 2월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음.

<표 I-2>

교보·삼성생명 자산재평가

(단위: 억원)

구 분	재평가일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세	재평가적립금
교보생명	89. 4. 1	3,361	1,096	68	2,197
삼성생명	90. 2. 1	5,152	2,135	90	2,927

출처: 재정부

- 한편 당시 재무부는 생보사 기업공개에 수반되는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익배분문제에 대해 '89년 10월 「生命保險社 剩餘金 및 再評價積立金 處理 指針」을 마련하고 보험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90년 8월 동 기준을 각 생보사에 시달하였음.
- 동 이익배분기준에 의거해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재평가적립금을 처분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I-3>

자산재평가적립금 처분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재평가 적립금	계약자지분				주주지분 ⁴⁾	내부유보 ⁵⁾
			공익기금 ¹⁾	특별배당 ²⁾	장래배당 ³⁾	소계		
교보생명	금액	2,197	300	289.5	289.5	879	656	662
	비율	(100.0)	(13.6)	(13.2)	(13.2)	(40.0)	(29.9)	(30.1)
삼성생명	금액	2,927	391	391	391	1,173	876	878
	비율	(100.0)	(13.4)	(13.3)	(13.3)	(40.0)	(29.9)	(30.1)

주: 1) 공익사업 출연기금으로 3개년 자산운용수익률로 산출한 이자출연

2) 재평가특별배당으로 개별계약자에게 할당

3)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감독원장 승인하에 계약자배당재원 및 결손보전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

4) 자본으로 전입

5) 자본잉여금으로 처리(감독원장 승인하에 계약자배당재원 및 결손보전으로 사용 가능)

출처: 재정부

— 그러나 '90년 동 사안에 대한 당국의 견해 변경으로 생보사 기업공개 시도는 무산되었음.

○ 당시 재무부는 생보사 기업공개시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기존주주에 대한 특혜시비 등 생보사 기업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여론을 감안해 동 사안을 유보시켰음.

— 이후 당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4차례 개정하면서 생보사 기업공개를 연기시켜 왔음.

○ 동 법은 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재평가에 관한 법인세 유예기간내에 기업을 상장할 경우 해당 법인세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에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1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I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조항 개정 추이

90.12.31	93.12.31	96.12.31	98.12.31
2년→5년	5년→8년	8년→10년	10년→11년

출처: 재경부

2. 현황

- 지난 6월 30일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해 삼성생명 상장 문제를 공론화시킴으로써 생보사 기업공개 문제가 다시금 생보업계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였음.
 - 또한 최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우그룹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교보생명 지분 35%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도 교보생명의 기업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음.
- 더욱이 지난 '89년과 '90년에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최종 기업공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생보사 상장을 이루어 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 납부 유예기간이 재개정되지 않는 한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기업공개 시한은 각각 2000년 3월 31일과 2001년 1월 31일임.

<표 I -5>

삼성·교보생명 기업공개 시한

구 분	주간사 선정	증권위 기업등록	기업공개시한	당초시한
교보생명	1992. 10. 5 (쌍용, 동원증권)	1993. 5. 6	2000. 3. 31	1991. 3. 31
삼성생명	1993. 2. 9 (동양, 고려증권)	1993. 4. 9	2001. 1. 31	1992. 1. 31

출처: 재경부

- 이 같은 움직임은 그 동안 꾸준히 기업공개 의지를 보여왔던 양대 생보사가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증권시장이 활황세에 접어든 현 시기를 생보사 기업공개를 성사시킬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양대 생보사는 기업공개를 통한 풍부한 자금조달로 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생보업계 구조조정도 촉진할 수 있다는 명분 등을 내세워 기업공개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음.
 -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 처리에 있어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이라는 방법으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 놓음으로써 삼성자동차 정리와 삼성생명 상장을 연계시키고 있음.
 - 교보생명 지분 11%를 소유하고 있는 김우중 회장이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교보생명 주식 150만주를 출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임.
- 한편 생보사 내부적으로는 생보업의 대내외 개방에 따른 국내 보험시장의 판도 변화에 대응해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경영전략 차원도 고려해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생보사는 기업공개를 통해 자사에 대한 계약자들의 인지도와 공신력을 제고시켜 영업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불특정다수의 주주를 새로운 계약자로 유인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시장 확대가 용이함.
- 또한 [은행=관치금융], [보험사=재벌금융]이라는 사회적 비판 여론을 희석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조성도 생보사 기업공개를 촉진한 배경으로 분석됨.
 - 생보사의 주주는 소수 개인 대주주와 이들 소유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생보사는 모기업 및 계열사들의 자금조달 창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표 I-6>

5대 생보사 주주 현황 및 구성비

(단위: 수, %)

	주주 수		주식보유현황	
	개 인	법 인	개 인	법 인
삼 성	48	4	12,495,600 (66.7)	6,224,400 (33.3)
교 보	7	1	10,427,200 (76.0)	3,292,800 (24.0)
대 한	18	5	3,528,088 (58.9)	2,471,912 (41.1)
흥 국	3	1	1,536,000 (96.0)	64,000 (4.0)
제 일	11	1	548,400 (71.6)	217,200 (28.4)

주: '98년 3월말 기준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표 I-7>

삼성·교보생명 주주 현황

(단위: %)

		삼 성 생 명	교 보 생 명
발 행 주 식 수		18,720,000주	13,720,000주
최 대 주 주		이건희(4,867,200주)	신창재(6,174,000주)
대 주 주	개 인	이건희(26.00), 이종기(5.00) 이수빈(4.00), 강진구(3.00) 이해규(1.67), 홍종만(1.67) 김현출(1.50), 현명관(1.50) 이형도 등(3.96)	신창재(45.00) 김우중(11.00) 신인재(8.00) 신용호(6.23) 신용희(5.27)
	법 인	삼성에버랜드(20.70) 신세계(14.50) 제일제당(11.50) 삼성문화재단(5.00)	(주)대우(24.00)

주: '99년 3월말 현재

출처: 재경부

II. 국내 생보업계 현황

■ 국내 생보사는 그 동안 무분별한 외형적 성장위주의 경영행태와 폐쇄적 지배구조에 따른 소수 대주주의 전횡 등으로 인해 경영부실화가 초래되는 등 질적성장 노력을 게을리해 왔음.

■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부실화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생보사는 자체적 경영개선을 소홀히 하였고 당국도 이를 방치해 온 결과 경영손실이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1. 생보업계 구조

1) 생보사 현황

— '98년 8월 11일 4개 생보사(국제, BYC, 태양, 고려생명)가 퇴출되어 현재 29개 생보사가 영업중이며, 설립기준에 따라 기존사(6개사), 전국사(6개사), 지방사(6개사), 합작사(6개사), 외국사(5개사)로 분류됨.

○ 그 동안 국내 생보사는 보험모집인의 집착적인 연고판매로 계약고가 증가하고 정부의 생보업 보호 육성정책에 힘입어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음.

○ '87년 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으로 신설 생보사와 외국 생보사가 대거 생보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시장경쟁이 격화되었음.

— 생보사 경쟁구도는 대형생보사에 의한 과점으로 인해 중소생보사의 영업력이 위축되는 등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99년 3월말 현재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2.1%(삼성 35.4%, 교보 19.3%, 대한 17.4%)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생보사는 대개 1% 미만에 불과한 실정임.

<표 II-1>

생보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구 분	기존사	전국사	지방사	합작사	외국사
시장점유율	81.7	9.3	4.5	4.1	0.5

주: '99년 3월말 현재 수입보험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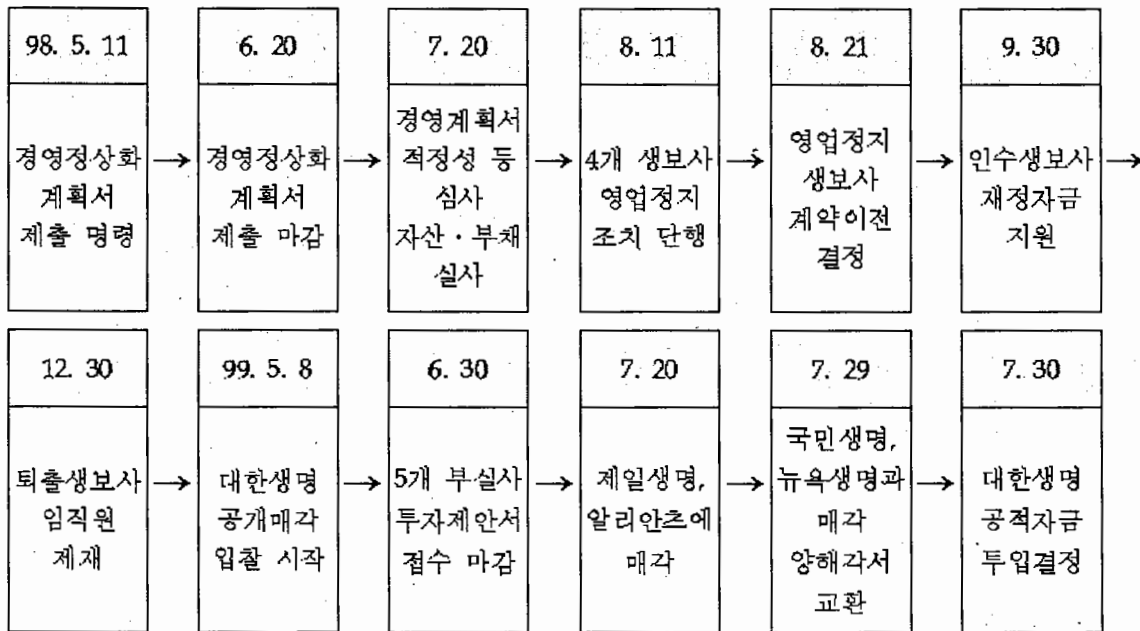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 생보업계 구조조정 현황

- 지난해 8월 생보사 1차 구조조정으로 4개사가 퇴출되었고 현재는 대한생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결정과 아울러 동아, 태평양, 한덕, 조선, 두원생명 등 5개 부실생보사에 대한 정리작업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대한생명 매각을 위한 3차 입찰을 유찰시키고 공적자금 투입후 재매각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 5개 부실생보사에 대한 정리작업은 CLSA(Credit Lyonnais Securities Asia)와 태평양법무법인을 각각 매각협상 및 법률자문사로 선정해 매각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임.

<표 II-2>

생보사 구조조정 추이



<표 II-3>

생보사 1차 구조조정 현황('98년 8월 11일)

구 분	해 당 사	지급여력 부족비율
영업정지 및 퇴출	국제, BYC, 태양, 고려 (4개사)	20% 초과
경영개선 이행계획서 제출	조선, 동아, 국민, 한국, 한덕 태평양, 두원 (7개사)	10~20% 미만
경영개선 이행각서 제출	한일, 신한, 한성, 대신, 동양 SK, 금호 (7개사)	0~10% 미만

2. 국내 생보사 경영행태

1) 외형위주의 영업관행

— 지난 30여년간 국내 생보사는 양적 성장을 거듭해 '98사업년도 수입 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6위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그간 외형위주의 경영행태와 소수 대주주의 전횡으로 인해 경영부실화가 심화되는 등 생보산업의 질적성장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였음.

— 또한 소수 대주주가 소액의 자본금만으로 막대한 자산의 생보사 경영권을 지배하면서 증자를 통한 지급여력 확충에 적극 나서지 않은 데다 영업손실 발생시 주주의 자본출자를 통한 손실보전없이 계약자에게 손실을 전가하여 왔음.

○ '99년 3월말 현재 생보업계의 총자산대비 자본금 비율은 1.54%에 불과한 실정임.

○ 생보업계의 자기자본비율은 '99년 3월말 현재 △5.33%로 국내 타 금융권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형편임.

<표 II-4>

총자산대비 자본금 비율

(단위: 억원, %)

구 분	80년	85년	90년	95년	96년	97년	98년
자 본 금	38	113	4,671	7,879	10,412	11,879	14,250
총 자 산	9,887	69,215	310,016	696,767	832,887	909,209	922,984
생 보 업 계	0.38	0.16	1.51	1.13	1.25	1.31	1.54
삼성생명	0.28	0.12	0.85	0.39	0.32	0.28	0.26
교보생명	0.97	0.14	0.89	0.49	0.40	0.35	0.33

주: 사업년도 기준

출처: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표 II-5>

금융권별 자기자본비율

(단위: 10억원, %)

구 분	총 자 산	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
은 행	487,688	28,147	5.77
중 권	33,691	7,675	22.78
생 보	92,298	△4,919	△5.33
삼성생명	36,376	589	1.62
교보생명	20,677	530	2.56
총 금	50,079	3,005	6.00
투 신	257,725	△979	△0.38
미국 10대 생보사	1,190,491	48,675	4.09

주: 2) 생보업계의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인 것은 주로 대한생명과 신설생보사 등의

주: 3) '99년 3월말 현재 자기자본이 잠식되지 않은 생보사는 삼성, 교보, 흥국생명 등 기존사 3개사와 메트라이프, 삼신, 영풍생명 등 합작사 3개사, 푸르덴셜, ING, 프랑스, 아메리카생명 등 외국사 4개사임.

2) 폐쇄적 지배구조

— 국내 생보사는 소수 대주주에 의한 지배구조가 고착되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 국내 생보사는 대개 소수 개인 대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주주라 하더라도 대주주 소유의 계열사로서 소수 대주주가 경영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임.

— 개인 대주주의 독단적 지배와 경영권 행사는 생보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여 경영부실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계약자의 이익보다는 사주의 영리를 우선한 경영행태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았음.

○ 대한생명의 부실화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 및 회사 자산 불법 해외유출 등 대주주인 최순영씨의 독단적 경영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단지 대한생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타 생보사에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대한생명 최순영회장의 경우 그룹 계열사에 1조 2,000여억원을 불법대출하고 대한생명 공금 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음.

○ 또한 지난 8월 3일 금감원은 한일생명 회장이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20억원의 대출을 받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한바 있음.

— 이러한 생보사의 폐쇄적 지배구조는 그 동안 생보사가 소유주의 사적 금고로서의 역할 수행을 가능케 한데다 소유주의 독단적 경영권 행사에 따른 경영 부실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3) 계열사 불법자금 지원

— 국내 생보사는 자사 소속 계열사에 대한 불법 자금지원과 부당내부거래로 당국으로부터 빈번한 제재를 받아온 데다 이에 따른 투자손실발생으로 계약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태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기울리 하였음.

○ 이는 신용불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이 자금 확보가 수월한 자사 계열 생보사를 자금조달처로 이용하였고 생보사 역시 계열사에 대해 자금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데 기인함.

<표 II-6> 삼성·교보생명의 계열사 자금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동일인 대출	자기계열집단 대출
삼 성 생 명	5,400	7,192
교 보 생 명	3,000	2,967

주: '99년 4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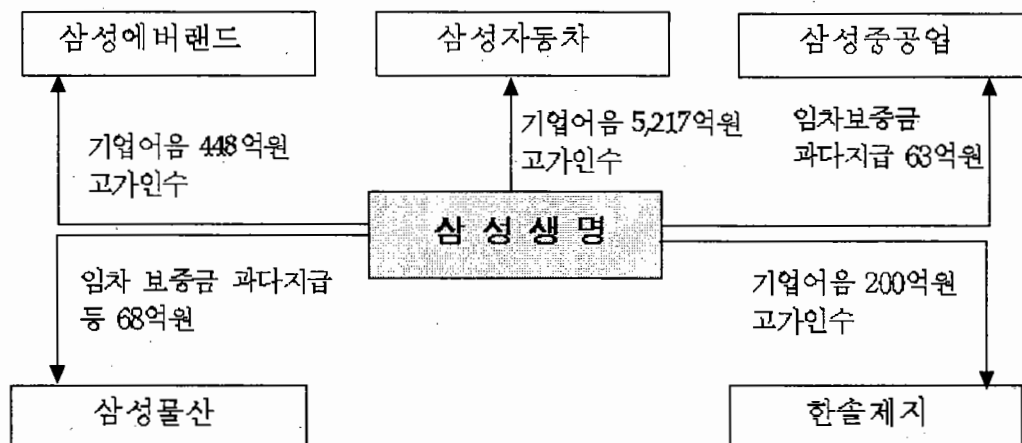
출처: 금융감독원

— 생보사의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계약자 피해는 삼성생명의 몇가지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삼성생명은 '97년말부터 '98년초에 걸쳐 시중은행에 총 2,000억원을 후순위대출해 준 뒤 동 은행으로 하여금 삼성계열사가 발행한 저리의 사모사채를 인수토록 하여 계열사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음.
- 또한 삼성생명은 지난 4월 계열사인 삼성자동차가 대우자동차와 빅딜협상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자동차에 대해 1,5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5,400억원을 대출해 주는 등 계약자의 자산을 아무런 제재없이 부실계열사 지원에 유용한바 있음.
- 삼성자동차의 대출금 상환능력을 의심한 여타 금융기관은 삼성자동차 대출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 비해 삼성생명은 오히려 동 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림으로써 자산운용을 위탁하고 있는 계약자에게 손실을 입혔음.
- 또한 '98년 7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삼성에버랜드, 삼성중공업 등 그룹계열사의 기업어음을 고가로 인수하거나 임차보증금 등을 과다지급하는 등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으로 70억 8,700만원을 부과한바 있음.

<표 II-7>

삼성생명 부당내부거래 사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러한 무분별한 국내 생보사의 대출관행에 대해 급기야 IMF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IMF는 생보사 자산운용중 대출부분에 있어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만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간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계열사에게無理하게 자금지원을 해온 생보사의 대출행태가 마침내 일반 대출자의 정상적인 대출거래에까지 영향으로 미치게 되었음.

4) 경영상의 도덕적 해이

— 생보업계는 외형경쟁 심화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부실생보사 양산과 보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함.

○ 계약고를 높이기 위해 보장성보험 판매를 도의시하고 고액 저축성 보험 판매에만 치중하는 기형적 영업행태가 고착됨.

○ 이에 당국은 '97년 4월 그간 생보사가 公稱을 통해 신계약액과 보유계약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이를 실적조작 수단으로 사용함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유계약액 산정기준을 보험증권상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음.

* 공칭은 보험계약시 주계약외에 각종 특약을 모두 포함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험금액임.

— 소모적 외형경쟁에 따른 경쟁적 초과사업비 지출로 신설생보사는 만성적 누적적자 상태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음.

○ 더욱이 생보사 사업비를 5년간 이연처리토록 규정한 보험업법 제 96조는 결과적으로 생보사의 과당경쟁을 방치하고 초과사업비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한편 비전문적인 보험모집인과 연고판매에 의존한 국내 생보사의 영업방식은 중도해약을 만연시켜 경영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한 데다 생명보험 가입에 대한 소비자 인식까지 흐려 놓는 결과를 낳았음.
- 생보사의 무차별적인 보험모집인 선발과 위촉으로 인한 모집인의 대량모집·대량탈락의 악순환은 보험계약 유지율의 하락과 사업비의 증가를 야기시켰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이어져 결국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쳤음.

<표 II-8>

보험계약 실효·해약율 추이

(단위: %)

구 분	88	90	92	94	96	97	평균
한 국	28.6	27.8	30.5	26.1	26.6	28.1	27.5
미국방식	23.1	18.7	22.1	21.5	21.4	20.3	20.8
일본방식	38.9	47.2	51.6	43.3	38.8	41.1	44.1
미 국	9.3	8.7	8.3	7.1	6.8	6.1	7.9
일 본	7.6	7.0	8.0	8.3	8.9	10.8	8.1

주: 1) 각국의 실효·해약율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음.

한국: $[\text{실효해약액} \div (\text{연초보유계약액} + \text{신계약액})] \times 100$

미국: $\text{실효해약건수} \div \text{평균보유계약건수} \times 100$

주: 2) 개인보험의 실효·해약율임. 단체보험의 경우 거의 1%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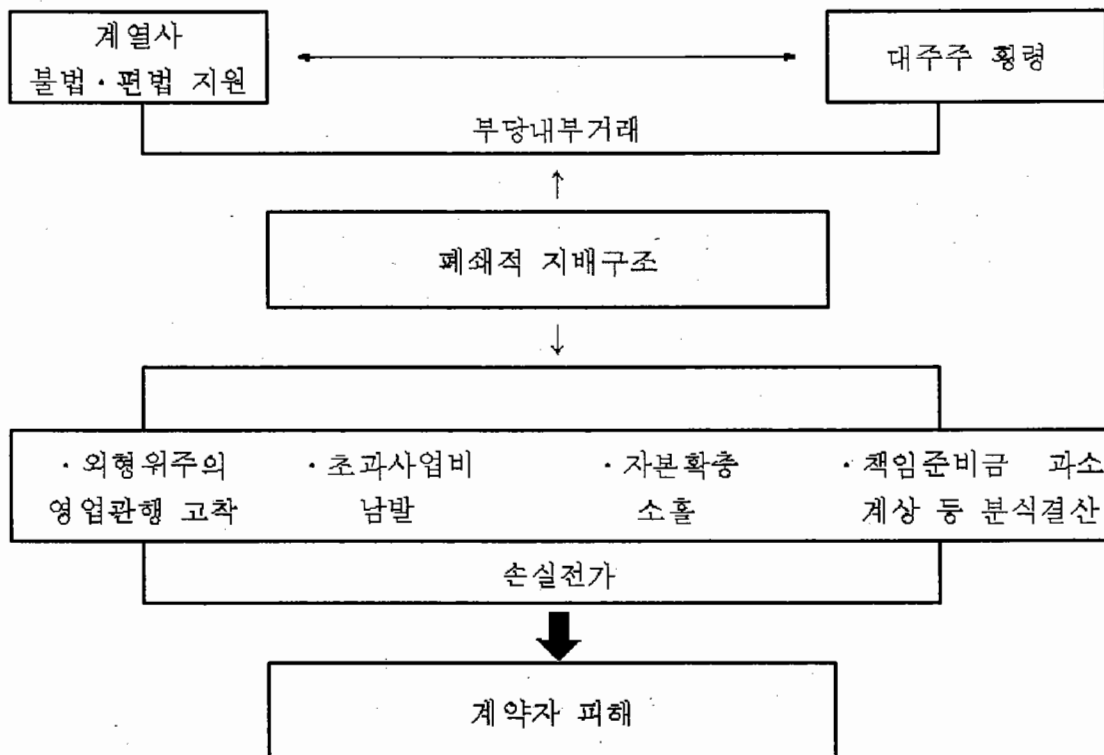
출처: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 *Life Fact Book*,

출처: 日本 保険研究所, 「生命保険統計號」

- 또한 그 동안 국내 생보사는 회사 소속의 대표보험계리인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경영진의 의한 자의적 분식결산 등의 부당행위가 대표계리인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자행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음.

- 최근 금감원은 대한생명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동사가 '95~'97회 계년도중 책임준비금을 3,800억원이나 과소 적립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음.
- 또한 지난 96년 동아생명은 '95사업년도중 발생한 당기순손실 60억원을 '94년이전의 손실로 처리하고 '95사업년도 결손규모를 축소 발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음.

<표 II-9> 국내 생보사 경영행태에 따른 계약자 피해



—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부실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생보사는 자체 경영진단을 거부했고 당국도 이를 방치한 결과 급기야 '98년 8월 4개 생보사가 퇴출된 데 이어 현재 대한생명을 포함한 6개 부실생보사의 강제매각이 추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현재 국내 생보사가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는 계열사 부당내부거래와 생보사 상호간 출혈경쟁 등으로 인해 과거부터 내재해 왔던 문제가 현실화된 것으로 이는 단지 IMF사태 발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 그 동안 국내 생보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한 해결을 외면한 결과 막대한 재정자금 투입과 이에 따른 계약자 손해를 초래함.

○ 지난해 퇴출된 4개 퇴출보험사(국제, 고려, BYC, 태양)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총 1조 1,535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되었고, 앞으로도 대한생명과 5개 부실생보사(동아, 한덕, 태평양, 조선, 두원) 처리에 4조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으로 있음.

— 이상과 같이 국내 생보사는 그 동안 소수대주주의 독단적 전횡,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무모한 외형경쟁 등 경영과실에 따른 모든 손실을 계약자에게 전가하는 비도덕적인 경영행태를 견지해 왔음.

— 결론적으로 생보사의 불법적인 영업관행과 독단적인 경영행태는 계약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었음.

○ 생보사의 전략적인 영업팽창 정책은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 등을 외형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전용하는 사태를 초래했음.

— 또한 그 동안 계약자보다는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수립된 보험정책과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계약자의 이익은 정책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했음.

○ 그간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진 반면 국내 생보사는 종전 경험생명표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사차익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차배당률의 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음.

- 한편 삼성과 교보생명의 경우 '97사업년도에만 비차익이 각각 1,636억원과 1,402억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들은 비차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음.
 - 비차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생보사가 비차손을 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생보사가 비차배당을 실시할 경우 나머지 회사에게 보험영업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임.
- 따라서 생보사 기업공개에 따른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시 그간 주주의 몫으로 부당하게 간주되어 온 이익분을 계약자에게 정당하게 배분해야 할 것임.

III. 생보사 기업공개 효과

- 현재 유가증권상장규정(제15조 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상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뿐임.
- 생보사의 기업공개는 소수과점 주주형태를 탈피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주주와 계약자간 이해상충에 따라 선의의 계약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음.

1. 기업공개 요건 및 상장 가능 생보사

- 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유가증권상장규정(제15조 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과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20조 인수대상 주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단,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기업공개가 불가능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년 4월 정부는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라도 증권거래소의 실질상장 심사를 거쳐 기업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상장심사제도를 도입하였음.
- 현재 유가증권상장규정(제15조 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상의 상장요건을 충족해 기업공개가 가능한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뿐인 것으로 파악됨.

<표Ⅲ-1>

상장요건

요 건	내 용
설립후 경과년수	5년 이상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매출액	최근 3년 평균 150억원 이상이고 최근년도 200억원 이상
자산가치	액면가의 3배 초과
수익가치	액면가의 2배 초과
경영상태	최근 3사업년도 각각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이 있을 것
최근 3개년 납입자본이익률	최근 사업년도 납입자본이익율이 25% 이상 최근 3사업년도 납입자본이익율 합계가 50% 이상
최근사업년도 부채비율	상장법인 동일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미만
무상증자제한 (기타잉여금)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소급한 1년간의 자본전입총액(주식배당포함)이 2년전 사업년도말 자본금의 30% 이하
무상증자제한 (재평가적립금)	1.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소급한 2년간의 자본전입총액이 3년 전 사업년도말 자본금의 30% 이하 2. 자기자본이 자본전입후 자본금의 200% 이상 3. 자본전입총액이 신고서 제출일 2년전일의 재평가적립금과 그 이후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0% 이하
유상증자제한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소급한 1년간의 유상증자(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증자 포함) 총액이 2년전 사업년도말 자본금의 40%이하
소송 및 부도발생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 분쟁이 없을 것
부도발생	신고서 제출일 1년전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것
감사의견	최근 3사업년도 적정 또는 한정
합 병	합병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 당해사업년도 결산확정(단, 합병 및 영업 양·수도일 이후 결산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일 경우 차기결산 확정)
주식소유비율 변동금지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소급한 1년간 주식소유비율 변동금지
사업의 성격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투자자보호에 지장이 없는 법인

출처: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5조, 유가증권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 제20조

<표Ⅲ-2>

5대 생보사 상장요건 분석

(단위: 억원, %)

구 분	삼 성	교 보	대 한	흥 국	제 일
회 사 개 요	· 1957년 설립 · 수권자본금: 960억원 · 발행주식수: 1,872만주 · 대표이사: 이수빈	· 1958년 설립 · 수권자본금: 1,000억원 · 발행주식수: 1,372만주 · 대표이사: 신창재	· 1946년 설립 · 수권자본금: 800억원 · 발행주식수: 600만주 · 대표이사: 최순영	· 1958년 설립 · 수권자본금: 320억원 · 발행주식수: 600만주 · 대표이사: 심성우	· 1954년 설립 · 수권자본금: 70억원 · 발행주식수: 76만5,600주 · 대표이사: 이태식
자 본 금	936	686	300	80	38
자 기 자 본	5,894	5,300	△26,569	228	△281
매출액	98	164,415	89,426	80,919	13,837
	97	159,597	91,615	77,782	14,730
	96	113,422	67,081	63,374	13,355
영업이익	98	3,529	3,059	△26,149	△1,402
	97	858	1,119	△693	△2,187
	96	393	391	234	37
경상이익	98	1,489	2,382	△27,331	△1,565
	97	720	1,083	85	20
	96	258	516	53	33
당기순이익	98	956	512	△27,237	26
	97	626	1,031	109	20
	96	420	302	329	10
납입자본금 이익률('98)	102.1	74.6	△9,079	32.5	57.8

주:

주: 3) 삼성생명: '99년 5월 28일 수권자본금을 3,000억원, 납입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제일생명은 '99년 7월 20일 독일 알리안츠에 매각되었음.

출처: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2. 생보사 기업공개의 효과

- 생보사의 기업공개는 현재 소수과점 주주형태를 국민 다수가 주주로 참여하도록 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국내 보험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생보사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반면 일부 대형생보사의 기업공개는 동 사의 시장선점 기반이 커져 현재의 시장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데다 주주와 계약자간 이해상충에 따른 선의의 계약자 피해가 우려됨.

1) 긍정적 효과

- 기업공개 생보사는 직접금융을 통해 필요자금의 조달이 가능함으로써 담보력 확충과 투자자금 확보가 용이함.
 - 대주주의 독자적인 증자와 타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장을 통한 신규자금 유치가 수월해 짐.
- 기업공개를 통해 그간 소수의 대주주가 군림해 온 지배행태 등이 청산돼 생보사 지배구조의 개선과 생보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책임경영체제 확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 또한 우리사주조합 결성을 통해 직원들에게 자사주식을 분배해 줌으로써 노사관계의 개선은 물론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로 생산성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음.
- 한편 공공성이 강한 생보사의 경영성과를 기업공개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배분함으로써 이익을 공유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평가에 따른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음.

○ 생보사는 여타 기업들보다 회사 이미지가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사 홍보에 절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바, 기업공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회사 인지도를 제고시킴은 물론 공신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음.

— 기업공개 생보사는 종전 소수 대주주, 경영자, 종업원 등으로 구성된 생보사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s)를 대폭 확대할 수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으로 보험수요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음.

— 이밖에 기업공개에 부수적인 혜택으로 생보사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음.

2) 부정적 효과

— 생보사 자산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계약자 자산으로 생보사 기업공개 거론 자체가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소수 대주주를 위한 생보사 기업공개가 강행될 경우 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됨.

—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 자체가 합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생보사 기업공개시 다방면에서 선의의 계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큼.

○ 특히, 기업공개 후 경제적으로 강자인 주주들의 주주배당압력으로 계약자배당이 감소할 경우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소지가 있음.

— 일부 대형생보사의 기업공개는 보험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국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5.4%, 19.3%로, 향후 양사가 상장될 경우 국내 생보시장은 이들 양사에 의해 독과점화될 가능성이 있음.
- 생보업은 동질의 위험을 다수가 분담하는 상호회사적 성격이 짙으므로 수지상등의 원칙하에 정상적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태여 기업공개로 통해 신규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는 명분도 약함.
 - 현실적으로 현재 기업공개로 통해 자금조달이 필요한 생보사는 대주주의 증자여력이 이미 바닥이 난 중소형 신설생보사임.
 -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현재 지급여력을 상대적으로 충분히 쌓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생보사 경영만을 위한 추가 신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따름.
- 또한 현재 국내 생보사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권 남발 등으로 볼 때 향후에 어떤 상황 변화에도 경영권만은 계속 유지하려고 집착할 것이므로 기업공개로 통한 생보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 효과가 실제 가능할지 의문시됨.
 - 대한생명 최순영 회장은 회사공금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차 경영권을 독단적으로 계속해 행사함으로써 당국의 대한생명 매각에 차질을 빚게 한 일련의 행태는 국내 생보사 소유주들의 경영권 집착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음.
 - 따라서 생보사 지배구조 문제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공개에 따른 주주분산보다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의견

- 생보사 기업공개를 통해 신규 자금조달과 국내외 대외경쟁력 제고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점과 현 시대적 금융환경 변화에 생보사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생보사의 기업공개는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현재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생보사 기업공개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바, 생보사 기업공개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이루어져야 할 것임.

IV. 생보사 기업공개상의 과제

- 생보사 기업공개상의 최대 쟁점사항은 자산재평가차익, 배당부상품의 배당지분, 기존 재평가적립금 처리유보액 등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 문제임.
-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에 관한 현행 규정은 양자의 이익배분 비율을 제도적으로 구분한 데 의미가 있으나, 주주와 계약자 지분배분 근거가 미약한 데다 이익 창출의 기여도와의 상관관계도 논리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음.

1. 생보사 기업공개시 쟁점사항

1) 쟁점사항

- 생보사 기업공개상의 최대 쟁점사항은 자산재평가차익, 배당부상품의 배당지분, 기존 재평가적립금 처리유보액 등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 문제임.
 - 배당부상품의 이익에 대해 계약자의 기여도와 주주의 공헌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분해 이를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에 관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음.
 - 또한 생보사 상장시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본이득이 전적으로 주주의 몫인지 아니면 계약자와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양 이해관계자간의 주장이 맞서고 있음.

— 이러한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해갈등의 발생근원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내 생보사가 그 동안 상호회사에 적합한 배당부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해 온 데서 출발함.

○ '92년 국내에 무배당상품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국내 생보사의 취급상품은 100% 배당부상품이었고, 무배당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현재에도 배당부상품의 판매비중이 '98사업년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86.4%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표Ⅳ-1> 배당·무배당상품 판매비중(FY'98)

(단위: 억원, %)

구 분	수입보험료	구성비	FY'97 구성비
배당부상품:			
생보전체	400,813	86.4	89.8
삼 성	146,355	89.0	95.4
교 보	77,961	87.2	94.7
무배당상품:			
생보전체	63,091	13.6	10.2
삼 성	18,060	11.0	4.6
교 보	11,465	12.8	5.3

출처: 금융감독원

— 국내 생보사가 배당부보험을 취급하게 된 것은 생명보험의 국내 도입 과정에서 상호회사가 대부분인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의 산물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예정요율(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의 산정능력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생보사가 사전 보험료를 보수적으로 높게 책정한 후 계약자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보험가격을 사후 재조정하여 재무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배당부상품을 선호한 데 기인함.

- 외국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의 생보사가 배당부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보험료 산정상의 위험을 완충시키거나 계약자에게 배당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상호회사 형태의 생보사와 시장경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생보사가 배당부상품을 취급한 경위와는 큰 차이가 있음.

2) 현행 규정

- 현행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익배분 규정은 '89년 10월에 마련된 「生命保險社 剩餘金 및 再評價積立金 處理 指針」을 모태로 하고 있음.

- 그간 K을 수준에 따라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비율이 정해졌으나, '99사업년도부터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이 순보험료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99년 3월 12일자로 이익배분 기준이 지급여력비율로 개정되었음.

<표Ⅳ-2> 현행 주주·계약자간 이익배분비율

지급여력비율	주주지분	계약자지분
8% 이상	15% 이하	85% 이상
4%~8% 미만	12.5% 이하	87.5% 이상
4% 미만	10% 이하	90% 이상

출처: 보험감독규정 제78조(계약자배당전잉여금 처리), 제81조(재평가적립금 처리방법)

- 현행 이익잉여금과 자산재평가이익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규정은 주주와 계약자간 배분비율을 논리적으로 산출해 내지 못하고 단지 배분기준만을 변경하여 그대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음.

- 한편 기타 미처분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이익배분 기준은 현행 이익잉여금배분 기준에 따름.

3) 이익배분시 검토과제

가. 신규 자산재평가차익에 관한 배분

- 기업공개를 위한 생보사의 순자산가치(총자산 - 총부채) 산정시 고정자산의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재평가차익은 새로운 이익배분율에 따라 주주와 계약자에게 배분함. (별첨 참조)
 - 계약자 이익배분 방법은 현행규정에 따라 현금배당,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계약자이익지분을 부채계정에 계상하여 일정기간내에 계약자에게 배분함.

나. 유가증권평가익의 배분

- 유가증권평가익은 기업공개를 위한 자산재평가 시점에서 평가해 새로운 배분율에 따라 주주와 계약자에게 이익을 배분함. (별첨 참조)
 - 현행 규정상 유가증권평가익은 사업년도말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자본조정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상토록 되어 있음.

다. 부채초과적립이익 배분

-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이 혼합비례방식(K율)에서 순보험료식으로 통일된 반면 신계약비를 이연상각 처리토록 허용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약환급금식에 따라 준비금을 산출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종전 순보험료식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던 삼성 및 교보생명 은 생보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특별이익(사업비 이연상각분)이 발생하게 되었음.

—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의 경우 동 특별이익을 유가증권평가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회계기준 변경으로 발생한 특별이익으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보전한 것은 계약자의 권리를 고려치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비 이연으로 발생한 특별이익의 원천은 책임준비금인바,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실질적인 책임준비금 차액은 부채계정으로 유지함. (별첨 참조)

라. 기존 재평가적립금의 처리

—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시행되는 자산재평가는 생보사의 기업공개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89년과 '90년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각각 실시했던 자산재평가 처분내역중 처리유보금액으로 계상되어 자본계정으로 산입된 금액은 결손보전이나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되도록 보험감독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84년 이후 양대 생보사는 당기순이익을 실현해 왔기 때문에 처리유보금액을 손실보전으로 사용할 기회가 없이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동 금액을 자본계정에 방치하여 마치 모두 주주의 몫인 것처럼 간주해 왔음.

- 설사 결손보전의 경우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주주지분으로 결손을 보전한 후에 처리유보 금액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금액은 실질적으로 전액 계약자 몫이며 생보사 기업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자에게 환원되어야 할 부분임.

<표Ⅳ-3> 계약자·주주간 이익배분시 검토사항

검 토 사 항	의 건
고정자산 재평가차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차익금은 새로운 배분율에 따라 주주와 계약자에게 배분 ○ 단, 계약자지분은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부채계정에 계상하여 일정기간내에 계약자에게 배분
유가증권평가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재평가시 보유 유가증권도 함께 평가해 새로운 배분율에 따라 배분 ○ 계약자지분은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부채계정에 계상하여 일정기간내에 계약자에게 배분
부채초과적립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준비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책임준비금 차액은 부채계정으로 유지
기존 재평가적립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자산재평가시 발생한 재평가차익중 처리유보금으로 자본계정에 산입된 이익금은 전액 계약자 몫으로 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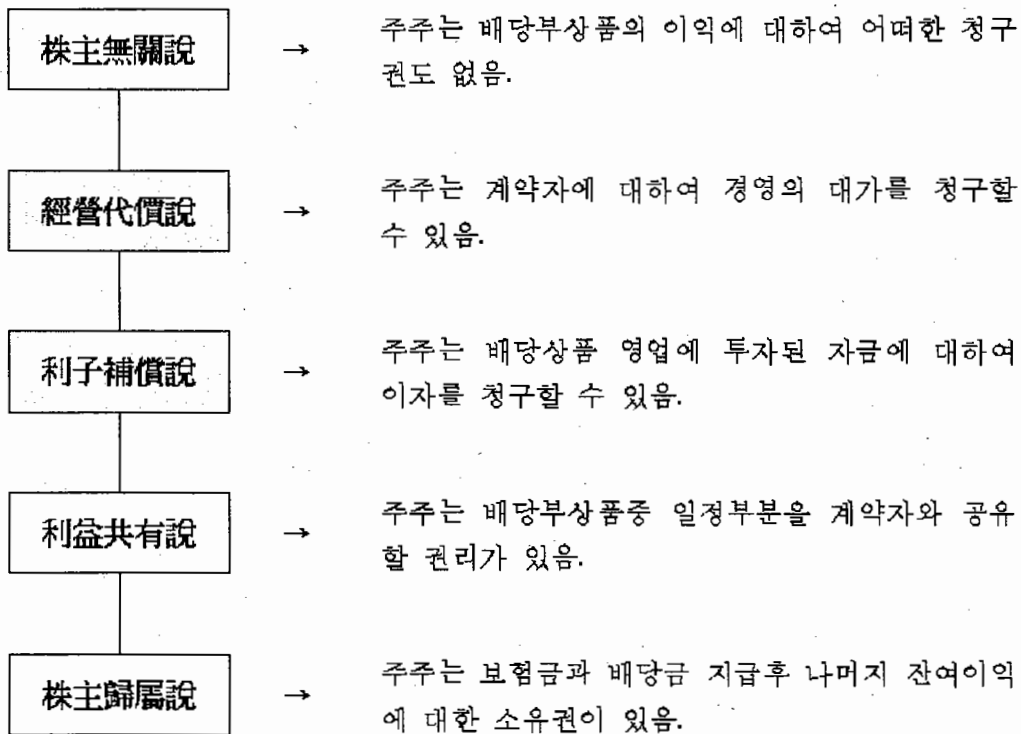
2.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1) 이론적 고찰

- 주식회사 형태의 생보사가 배당부보험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와 관련해 주주의 이익지분에 대한 대표적인 학설로 Belth가 주장한 이론을 들 수 있음.

- Belth는 배당부상품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에 대해 주주무관설, 경영대가설, 이익공유설, 이자보상설, 주주귀속설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Participating life insurance sold by stock companies, 1964)

<표IV-4>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에 관한 Belth 학설



- Belth의 이론 중 주주의 배당부상품에 대한 이익의 배분청구권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주주무관설은 미국 법정에서 받아들여진 사례(Royal Trust Co. vs Equitable Life Assuranc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1917)가 있으나, 주주의 생보사 경영에 대한 기회비용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경영대가설은 주주가 생보업 영위에 따른 경영위험을 부담한 만큼 대가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주주의 몫에 대한 성격을 가장 유용하게 설명하고 있음.

○ 동 이론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해 발생한 이익중의 일부를 주주에게 경영의 대가로서 배분하고 나머지는 계약자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음.

○ 뉴욕주의 경우 생보사 주주는 보험계약액 \$1,000당 50센트를 경영 대가로서 인정하는 규정(50cents per year per \$1,000 of participating business)은 동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음.

○ 동 이론은 주식회사 형태의 생보사가 배당부상품만을 취급하거나 주주의 추가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배당부상품과 함께 무배당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주주의 이익참여 형태를 설명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이론을 적용해 주주의 이익참여의 성격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임.

— 이자보상설은 생보사가 계약자를 대상으로 배당부상품 영업을 하기 위해 주주가 투자한 자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론임.

○ 동 이론은 배당부보험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가 주로 부담한 경우에 주주에게는 오히려 보유지분에 대한 적절한 이자취득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상기의 경영대가설과 함께 주주의 이익지분 참여 근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함.

— 한편 이익공유설은 생보사 주주와 배당부상품을 구입한 계약자는 일종의 Joint Venture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해 배당부상품의 경영성과를 양자가 함께 공유하는 동시에 경영위험 역시 공동 부담하고 있다는 논리임.

- 동 이론은 투자성과가 양호한 기간동안 발생한 이익뿐만 아니라 제반 투자여건의 악화로 자산운용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주주와 계약자가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의 일리노이주와 뉴멕시코주 및 캐나다에서 이 이론에 근거한 주주의 이익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뉴욕주(유배당상품 수익의 10%; 10% of gains on such policies)와 위스콘신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 '80년대초 생보사가 파산상태에 이르렀을 때 경영과실을 행한 생보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파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아래 파산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던 사례 등으로 볼 때 국내 생보사 주주는 거의 경영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주주귀속설은 계약자에게 보험금과 배당금을 지급한 후의 나머지 잔여액을 전액 주주가 수취한다는 설로 계약자는 보험계약상 받을 수 있는 제지급금 외에는 어떠한 이익도 인정하지 않고 계약자의 회사 기여도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이론적 타당성이 결여됨.

-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보험상품을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의 계약이 아닌 상품(product)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따라 상품에 하자가 있어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보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즉 Product Liability)를 인정하는 추세임.

— 생보사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의 몫으로 정확히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이론적 근거는 없으나, 최소한 배당부상품의 판매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주주의 이익지분은 Belth의 경영대가설과 이자보상설로써 설명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주주의 이익지분은 생보사 경영에 대한 대가와 생보업 영위를 위해 주주가 투입한 자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음.

2) 적정 이익배분율

- 앞의 논의에 입각하여 주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경영에 대한 대가와 자본금에 대한 보상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주주의 회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몫을 계산하기 위한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① 자본금에 대한 적정 대가

- 이는 주주가 순수하게 투입한 금액과 재평가적립금으로부터 자본전입된 금액(삼성 936억원, 교보 878억원)에 대한 적정보상을 의미함.
 - 이론적으로는 주주가 순수하게 투입한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삼성 39억 7,500만원, 교보 2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과거 이익배분기준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금액은 자본금의 일부로 인정하여 보상금액을 계산하였음.
 - 자본금에 대한 적정 대가는 회사 창립 이후 투하된 자본금을 회사 채 유통수익률 등으로 복리 계산하였음.

② 경영에 대한 적정 대가

- 주주에 대한 적절한 경영 대가를 산출하는 정형화된 방식은 없으나, 현재 미국 뉴욕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상기준을 준거하였음.

- 경영에 대한 적정 대가는 뉴욕주 방식과 동일하게 연도말 보유계약액의 0.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으로 복리 계산하였음.

③ 주주에 대한 총대가

- 앞에서 계산된 자본금 및 경영에 대한 대가를 합산하게 되면 회사에 대한 주주의 몫을 산출할 수 있음.
- 따라서 주주에 대한 적정 이익배분율은 [주주 총대가/(책임준비금 + 주주 총대가)]로 산출이 가능하며, 향후의 이익배분기준은 동 이익배분율을 토대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 회사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는 책임준비금으로 대별되는바, 주주와 계약자간 적정 이익배분율은 주주에 대한 총대와 책임준비금의 구성비로 산출이 가능함.
- 이에 따라 산출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주주와 계약자간 적정배분율은 다음과 같음.

<표Ⅳ-5>

계약자 · 주주간 적정 이익배분율

(단위:%)

구 분	계약자	주주
삼 성 생 명	95.2	4.8
교 보 생 명	94.9	5.1

3) 기존 재평가적립금 처리 방안

-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89년과 '90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발생한 재평가차익중 주주에게는 최대 이익지분(30%)를, 계약자에게는 최저 지분(40%)만을 배분한 후 나머지 30%(교보 662억원, 삼성 878억원)는 처리유보시켜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음.
 - 보험감독규정상 동 처리유보액은 손실보전이나 계약자배당재원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사는 자산재평가 실시 이후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
 - 따라서 양사는 동 처리유보액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했어야 하나, 이 또한 실시하지 않았음.
- 과거 자산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주주·계약자간 이익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Ⅳ-6> 과거 주주·계약자간 이익배분 기준

K율	주주지분	계약자지분
100% 이상	30% 이하	40% ~ 70%
50% ~ 100% 미만	20% 이하	40% ~ 80%
50% 미만	10% 이하	40% ~ 90%

- 한편 '99년 3월말 현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기자본 내역과 자본금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음.
 - 자본잉여금은 삼성생명의 경우 전액 재평가적립금이며, 교보생명은 재평가적립금 664억원과 자본준비금 16억원을 포함하고 있음.

<표 IV-7>

삼성·교보생명 자기자본 현황

(단위: 억원)

	자 기 자 본				합 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삼성생명	936	939	4,131	△111	5,894
교보생명	686	680	4,020	△86	5,300

주: 2) 자본조정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임.

출처: 금융감독원

<표 IV-8>

삼성·교보생명 자본금 추이

(단위: 억원)

삼 성 생 명		교 보 생 명	
10	'82 이전	20	'83 이전
30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83)	30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84)
60	유상증자('88)	686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90)
936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90)		

— 따라서 양 사의 자본잉여금중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자본금으로 전입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금은 계약자의 몫으로 환원되어야 마땅한바, 동 처리유보액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가 필요함.

— 생명보험의 장기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본의 사회유출은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처리유보액은 마땅히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 동 처리유보액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1안	① 기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② 보통주(또는 우선주)를 발행한 후 ③ 계약자에게 전액 무상증여
----	--

— 기존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 방안으로 우선 과거 자산재평가지 처리유보되어 자본잉여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후 이를 주주가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에 따르면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세 납부, 자본전입, 이월결손금 보전에 한하여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적립금의 자본전입은 하등의 법적인 하자가 없음.

○ 또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그 처리를 둘러싼 번거로운 법적 절차도 요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조정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본금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Ⅳ-9>

삼성·교보생명 자본금 조정

(단위: 억원)

구 분	조정전 자본금	자본전입		조정후 자본금
		주주	계약자	
삼성생명	936	61	878	1,875
교보생명	686	18	662	1,366

주: '99년 3월말 기준

- 자본금중 기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증액된 부분은 계약자에게 배분되어야 하며, 발행되는 주식의 형태는 생보사 소유구조 개선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보통주(common stock)를 발행해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현 주주의 경영권을 참작해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preferred stock) 발행을 통한 계약자 배분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경우 우선주의 최저 금리 보장과 아울러 당해년도에 약정된 만금의 주주배당을 못하였을 경우 차기년도 배당시 전기에 발생한 미지급배당분을 추가해 배당해 주는 누적적 우선주의 발행을 원칙으로 해야 함.
 - 또한 초과이익 발생시 우선주 소유주주의 참여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계약자 몫에 대하여 보통주 또는 우선주를 발행하였을 경우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후 생보사 경영권에 대한 현행 대주주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음.

<표Ⅳ-10>

삼성·교보생명의 자본금 및 주주지분율 변동

(단위: 억원, %)

구 분		이익 배분후 자본금 내역		보통주식 지분율 (기존주주 : 계약자)
		기존주주 몫	계약자 몫	
삼 성	보통주 발행	997	878	53.2 : 46.8
	우선주 발행	-	878	100 : 0
교 보	보통주 발행	704	662	51.5 : 48.5
	우선주 발행	-	662	100 : 0

- 그러나 1안은 계약자에 대한 무상증여시 반드시 주주들의 개별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의 2안을 고려할 수 있음.

2안	① 기존 재평가적립금을 계약자에게 현금배당한 후 ②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되, ③ 낮은 가격으로 신주발행
----	--

- 2안은 기존 재평가적립금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배당한 후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낮은 가격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안임.
 - 동 방안은 1안과는 달리 계약자가 신주를 현금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신주참여에 따른 기존 주주와 마찰을 피할 수 있는데다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2안의 경우 생보사 기업공개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계약자에 한하여 청약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신주발행 가격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바, 양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행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3. 계약자간 이익배분

- 생보사 상장시 발생하는 계약자 몫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과거계약자와 현재계약자에게만 귀속되어야 하며, 자산형성 과정에서 현재계약자보다 공헌도가 큰 과거계약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할당되어야 할 것임.

- 현재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자별 계약경과년수, 보험료적립금 규모, 납입보험료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것이 타당함.
 - 이익배당 방법은 현금배당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가 원할 경우 보험료 감액이나 보험금 증액 등의 계약자배당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과거계약자에게 할당된 부분은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과거계약자의 복지나 공공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 종전 생보사의 공익사업은 대개 자사 이미지 관리나 미래 계약 창출을 위한 영업지원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등 본래 사업운영의 목적이 변질되었음.
 - 따라서 생보사 이익창출에 공헌을 한 과거계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생보사 경영진에 의한 자의적인 공공사업 선택이나 운영상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동 사업의 관리는 비영리단체 등 공공성을 띤 외부 중립기관에게 위탁해야 할 것임.

V. 향후 과제

- 현행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기준은 논리적 검증력이 결여되어 있는 데다 이익창출 기여도 등과도 무관한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책정되어 있어 향후 합리적인 이익배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주주와 계약자간 이해 상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분리계정 제도의 도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생보사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1. 이익배분기준 개선

- 현행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기준은 논리적 검증이나 이익창출 기여도 등과 무관한 방식으로 책정되어 있는바, 앞서 제시한 적정 이익배분율을 토대로 하여 향후 합리적인 이익배분기준이 새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주주와 계약자간 적정 이익배분기준은 그간 국내 생보사의 영업행태와 생보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새롭게 책정되어야 함.
 - 배당부보험을 주력해서 판매해 온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영업행태를 감안할 때 회사에 대한 주주의 공헌도와 계약자의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한 이익배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2. 분리계정의 도입

— 생보사 기업공개후 야기되는 주주와 계약자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리계정의 도입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분리계정은 특정 보험종목 및 상품에 속하는 자산, 부채, 손익 등을 다른 보험종목과 구분해서 회계처리하는 계정으로 법적 보호 및 사업비 배분 등에 있어 상품별 손익을 일반계정내에서 구별 운영하는 구분계리와는 차이가 있음.

— 현재 국내 생보사는 분리계정으로 운영할 경우 보험상품간 상호 내부 공조가 차단되어 일부종목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할 수 없어 전체 경영개선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분리계정의 도입에 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생보사의 태도는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생보사의 신상품 개발을 제약하고 상품구조 개선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임.

— 따라서 분리계정의 도입을 통해 보험상품별 리스크 관리로 사업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종목별 자산관리를 통한 수익력 증대와 가격결정의 공정성 유지 및 배당 등의 이익환원시 보험종목별 형평성 제고를 꾀하여야 할 것임.

3. 생보사 지배구조 개선

— 현재 국내 생보사는 소수 대주주에 의한 지배구조가 고착되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소수 대주주에 의한 경영권 장악이 보편화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지배구조의 형성은 보험사가 그간 정부의 강력한 보호 아래 육성된 데다 소수 대주주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보전을 당국이 묵인해 온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국내 보험사 지배구조상의 최대 난점은 소유주가 통상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면서 이사추천을 좌우하여 이사회를 장악하는 동시에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감사 역시 실권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내부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보험사의 폐쇄적 지배구조는 그 동안 보험사가 소유주의 자금고로서의 역할 수행을 가능케 하고 소유주의 독단적 경영권 행사에 따른 경영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따라서 향후 국내 보험사의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 대주주와 임직원, 소액주주와 보험가입자 등 보험산업 이해관계자간의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4. 기타 검토사항

1) 계약자배당제도 개선

- 향후 계약자배당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제 규정을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차손익, 이차손익, 비차손익 등 利源別로 구분되어 배당하는 계약자배당방식을 계약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자산할당방식(Asset Share 방식) 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배당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자산할당방식은 2000년 4월로 예정된 보험가격 완전자유화에 대비해 생보사가 보험료 산출의 기초율과 계약자배당을 등 보험가격결정요소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해 생보사의 적정 보험료 산출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계약자배당 예시제 도입 등으로 계약자배당의 안정성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독립보험계리인제도 도입

- 독립보험계리인(Independent Actuary or Appointed Actuary)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사위원회 등 여타 위원회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보험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독립보험계리인에게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행태를 견제하고 이사회 의 자문과 조언을 충실히 수행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경우 보험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더불어 국내 생보사의 질적 성장을 위해 현행 보험계리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리인제도의 개선은 보험계리인의 자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정예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와 더불어 시험제도 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험계리인 양성과 이를 통한 보험경영의 건전성 확립을 목적으로 함.

<별첨> 생보사 순자산가치 평가

1. 삼성생명 순자산가치

— 삼성생명은 기업공개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기업의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삼성생명 자산재평가 내역

(단위: 억원)

자산계정	장부가액	평가차액	평가후
현금·예치금	24,583	-	24,583
주식	24,562	17,611	42,173
출자금	400	43	443
채권	35,577	1,408	36,985
수익증권	61,279	801	62,080
해외유가증권	13,303	590	13,893
기타유가증권	1,200	-	1,200
대출채권	145,326	-	145,326
부동산	36,473	6,910	43,383
비운용자산	21,106	-	21,106
자산계	363,764	27,363	391,127

주: 1)

주: 2) 평가기준 :

- 주식 '99년 6월 16일 종가
- 채권 '99년 6월 16일 현재 증권업협회 제공 채권시가평가기준 수익률에 의한 평가액
- 출자금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상속세법상)
- 수익증권 '99년 5월 31일 기준가격
- 해외유가증권 해외 관계사 주식의 98년말 결산기준 순자산가액의 '99년 6월 15일자 환평가
- 부동산 삼성화재의 '99년 1월 재평가시 공시지가대비 재평가액 비율(1.2배) 적용

출처: 삼성증권

— 동 산정내역을 기초로 하여 삼성생명의 순자산가치(총자산 - 총부채)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총자산증가분(고정자산평가익: 6,910억원, 유가증권평가익: 20,453억원)중 새로운 이익배분기준(95.2% : 4.8%)에 따라 계약자의 몫을 제외하고 나면 순자산가치 증가분은 1,313억원임.
- 따라서 자산재평가후 삼성생명의 순자산가치는 현재 장부상의 자산가치액 5,894억원과 순자산가치 증가분 1,313억원의 합계액인 총 7,2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삼성생명의 총발행주식수는 18,720,000주로 기업공개시 주당 순자산가치액은 약 38,499원으로 추정됨. (삼성생명 자체 평가액: 280,960원)

- 삼성생명의 경우 자산재평가차익(고정자산 및 유가증권) 전부를 주주의 몫으로 간주하였으나, 이는 현행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기준 조차 무시한 것임.
- 또한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초과적립이익(사업비 이연상각 부분)도 모두 주주의 몫으로 간주하였음.
- 삼성생명은 종전 순보험료식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 평가시 순보험료식보다 훨씬 적은 해약환급금식을 사용했다는 것은 부채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무리한 처사임.
- 사업비 이연상각 인정은 그간 해약환급금식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 온 신설생보사의 재무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표 3>

삼성·교보생명의 주당 순자산가치

구 분	장부상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 증가분	기업공개시 순자산가치	기업공개시 주당 순자산가치
삼성생명	5,894억원	1,313억원	7,207억원	38,499원
교보생명	5,300억원	536억원	5,836억원	42,536원

주: 2) 주당순자산가치는 기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이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이 승 회 의 원

1. 현재, 금융권(은행, 증권)의 수수료 현황

☐ 세부 내역

“붙임 참조”

□ 국내은행 수수료별 수입총액 [억원, 업무보고서 기준]

수수료수입 항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上	2006. 1/4분기	
					1/4분기	2/4분기
1. 원화수입수수료	26,195	30,880	37,136	20,634	10,309	10,325
① 송금수수료	2,640	2,419	2,212	951	516	435
② 추심수수료	392	334	342	136	72	64
③ 대리사무취급수수료	2,745	3,980	5,644	3,590	1,764	1,826
④ 보호예수및대여금고	11	25	106	57	33	24
⑤ 증권대행수수료	516	839	701	414	273	141
⑥ 기타원화수입수수료	19,892	23,282	28,132	15,485	7,651	7,834
2. 외환수입수수료	8,518	8,421	8,293	3,979	2,000	1,979
3. 신용카드관련수수료※	9,134	16,126	3,076	1,872	745	1,127
4. 전 체	43,847	55,427	48,505	26,485	13,054	13,431

※ '05년부터 이자성격을 갖는 현금서비스이자, 신용판매대금이자 등을 제외

□ 증권회사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수수료 세부내역	2006. 3월~6월
수탁수수료	12,032
인수및주선수수수료	632
사채모집수탁수수료	2
수익증권취급수수료	1,905
어음지급보증료	2
자산관리수수료	101
자문수수료	199
신종증권판매수수료	825
기타수수료수익	795
수수료 수익 총계	16,492

2.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절차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각 금융권역별 법규를 따르는 외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재정부의 신고수리 절차가 필요

- 은행 : 일반은행의 해외점포 신설시 금감위 사전협의 필요
(은행법 제13조)
- 증권 : 모든 점포는 신설후 금감위에 사후보고 필요
(증권거래법 제36조)
- 보험 : 지점·사무소의 신설은 사후보고 대상이며, 현지법인인은 신고(동종업종) 또는 승인(이종업종) 필요
(보험업법 제115조 및 제130조)

구 분	금 융 업 법		외국환거래법
	지점·사무소	현지법인 설립	
은행	사전 협의	사전 협의	재 경 부 신고수리
증권	사후 보고	사후 보고	
보험	사후 보고	신고(승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관련 금융권역별 법령

<은행법>

제13조 (지점의 신설·이전등) [전문개정 2000.1.21] 금융기관이 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외국에 신설하거나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신설 또는 이전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

제36조 (보고사항)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1.~4의2.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1조 (보고사항) ①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5.15, 1994.4.30, 1997.3.22, 1998.2.24, 1999.5.27, 2002.2.9, 2005.1.27, 2005.3.28>

1.~10. (생략)

11.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영업소 기타 사무소를 설치한 때

12.~13. (생략)

<보험업법>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130조 (보고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그 밖에 당해 보험회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보험업법시행령>

제59조 (자회사의 소유) ① 법 제1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중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12. (생략)

13. 외국에서 영위하는 보험업 또는 자산운용업

14. (생략)

② 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5.3.31]

1.~6. (생략)

7. 외국에서 영위하는 보험업 또는 자산운용업외의 사업

8. (생략)

제72조 (보고사항) ① (생략)

② 법 제1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5.3.31]

1.~4. (생략)

5.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때

6. (생략)

<외국환거래법>

제9-10조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①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략)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제9-26조 (설치신고 등) ①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9-5호 서식의 금융기관 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3. 개인신용정보 유통·활용 체계

4.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금융정보의 종류 및 세부내역

1. 개인신용정보 유통·활용 체계

-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생보·손보협회, 정보통신산업협회) 및 신용조회업자(Credit Bureau : CB) 등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함(신용정보법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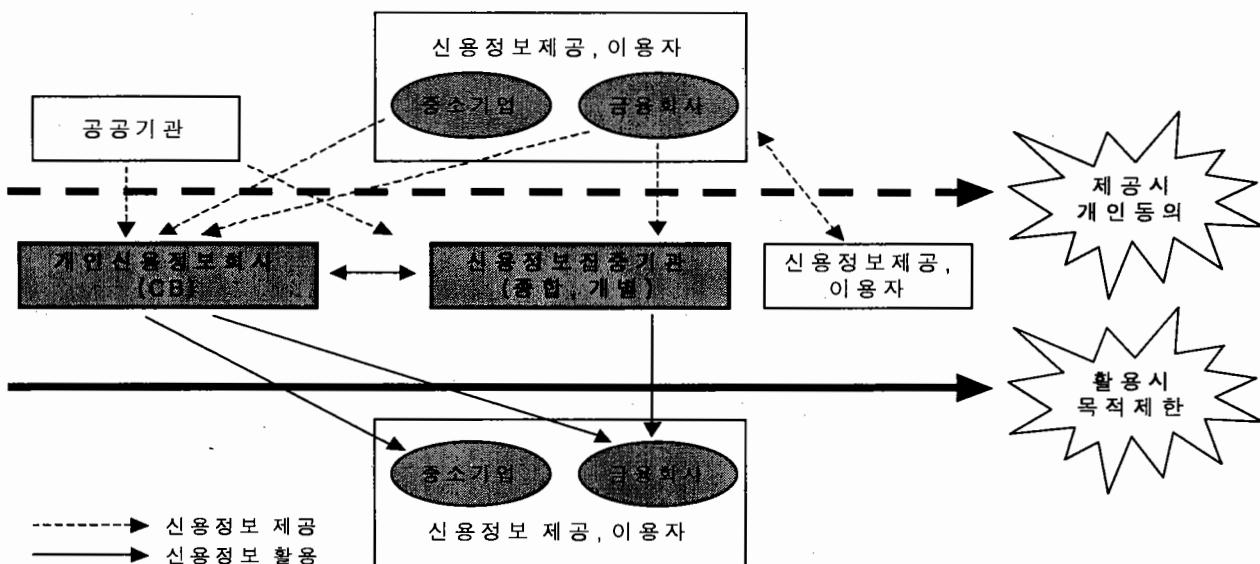
*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중소기업 등이 해당(신용정보법 §2 VI) 이하에서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본 내용을 설명

**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금융거래 내역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능력정보(소득 등 신용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

- ☐ 한편 CB사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개인신용평점 등을 산출하며 이와 같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와 산출된 개인신용평점 등을 금융회사에 제공함

- 또한 개별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신용정보와 외부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 CB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고객신용정보를 종합, 가공, 분석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상거래 개시여부(대출실행, 신용카드 발급 등), 상거래조건(금리, 한도 등)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 한편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신용정보법 §24①),
 - 고객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상거래 설정·유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고객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할 수 있음(동법 §24①)
 - 고객신용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고객 동의없이 상거래 설정·유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 제공·이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인신용정보 유통·활용 체계



2.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금융정보의 종류 및 세부내역은 <붙임1>
과 같음

(붙임1)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금융정보의 종류 및 세부내역

1. 식별정보

구 분		항 목	내 용
식별 정보	개 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우선하되, 동 번호가 없는 경우 <별표 2>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여권번호 조합)를 사용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정보 집중(주민등록초본에 의한 확인) • 점포코드, 성명, 변경전·후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직 업	-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경우 제외
	개 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신용거래정보의 등록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함
		- 기업체명	
		- 대표자명	
		- 업 종	
	법 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기업체명	
		- 대표자명	
		- 업 종	

2. 신용거래정보

1) 개설·발급정보

구 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지 코드	집중시기	비 고
개설·발급 정 보	당해 개인	가계당좌예금 개 설 및 해지사실	0011	0012	사유발생일로부터 10 일 이내(단,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20 일 이내)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0081	0082		
		신용체크카드 발 급 및 해지사실	0083	0084		
	개인기업 및 법인	가계당좌 개설 및 해지사실	0011	0012	사유발생일로부터 10 일 이내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0021	0022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0081	0082		

2) 개인대출정보 등

구 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지 코드	집중시기	비 고
대출현황	당해 개인	대출거래사실	0031	0032	사유발생일로부터 10 일 이내(단, 산림조 합, 새마을금고, 신협 은 20일 이내)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 여 부 포함
카드론현황		카드론 거래사실	0037	0038	사유발생일로부터 10 일 이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정 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거래사실	0041		매월1일, 11일, 21일 (휴일일 경우 익영업 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3) 개인채무보증정보

구 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지 코드	집중시기	비 고
개인채무 보증정보	당해 개인	채무보증사실	0033	0034	사유발생일로부터 10 일 이내(단, 산림조 합, 새마을금고, 신협 은 20일 이내)	

4) 기업신용공여정보

구 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지 코드	집중시기	비 고
대출·지급보 증 등 신용공 여(담보, 한도 거래 및 신용 공여기간 포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기업 및 법인 -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주채무계열 기업군 소속 기업체 -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서 지정하는 기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개인기업 및 법인의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업권별 신용공여조사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시기 · 일일집중(신용공여):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 · 월집중(신용공여, 담보 현황, 한도 거래상황): 익월 6영업일 이내(단, 「기업어음거래상황표」<별지 제6호 서식> 해당 정보는 제외) 	단, 「기업어음거래상황표」<별지 제6호 서식> 해당 정보는 은행, 증권, 중금업권에서만 제공함

5) 연체정보

구 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집중시기	비고
대출금 연 체	1. 교육부 학자금대출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 출의 대출원금, 대출이 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단, 만 기 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0100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채무를 변제하지 아 니한 기간(최장1년)	사유발생일 로부터 10 일 이내(단, 산림조합, 새마을금 고, 신협은 20일 이내)	
	2. 대출원금, 이자 등 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1	"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1천 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시 : 해제와 동 시삭제		
	3. 분할상환방식의 개 인주택자금대출금을 9 개월 이상 연체한 거 래처(단, 만기 경과시 에는 3개월 이후 등록 한다)	0102	"			
	4. 5만원 이상의 카드 론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3	"	- 채무를 변제하지 아 니한 기간(최장1년)		
신용 카드 대 연 체	5. 5만원 이상의 신용 카드대금을 3개월 이 상 연체한 거래처	0104	"	- 등록사유발생일로부 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시 : 해제와 동시삭제		
할부 금 대 연 체	6. 5만원 이상의 할부 금융대금을 3개월 이 상 연체한 거래처	0105	"			

구 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집중시기	비고
매입 외환 연체	7. 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 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추심후지급 부도 포함)	0106	해당 연체사 유가 해소된 때			
외환 관련 연체	8. 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 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 업일을 가산한 날로부 터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0107	"	- 채무를 변제하지 아 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사유발생일로부 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제 시 : 해제와 동시삭제	사유발생일 로부터 10 일 이내(단,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20 일 이내)	
해외 대출금 연체	9. 해외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8	"			
기일 경과 어음 미결제	10. 만기일 경과 어음 을 1개월 이상 미결제 한 거래처	0109	해당 기일경 과 어음을 결 제한 때			종금사 및 은행 종금계정 CP에 한함
무보증 회사채 상환 불이행	11. 만기도래하여 지급 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거래 처	0110	해당 만기도래 지급제시 무 보증 회사채 를 상환한 때			
무담보 미수 채권	12. 무담보미수채권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 래처	0111	해당 무담보 미수채권을 상환한 때	- 해제와 동시에 삭제 - 기간경과해제시 : 1 년		증권사에 한함
부실 채권 인수	1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0112	해당 등록사 유가 해소된 때	- 채무를 변제하지 아 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시 :		
부실 채권 차주	14. 정리금융공사가 인 수한 부실채권차주	0113		해제와 동시 삭제		

6)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구 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집중시기	비고
지 급 보 증 대 지 급 · 대 위 변 제	1.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보증보험사의 이행성 보증(신용)보험 대위변제금 포함]	0201	해당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정리한 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 1년)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단,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20일 이내)	
	2.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보증보험사의 금융성(신용)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 주택금융신용보증대지급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대지급금 포함]	0202	해당 신용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3. 자체대손보전 관련 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거래처	0203	해당 대위변제금을 정리한 때			
해외 지급보증 대지급금	4.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0204	해당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시 : 해제와 동시삭제		
소 구 · 구 상 불 능	5. 구상채무발생일로부터 구상불능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소구불능 수출어음보험금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않은 수출업체(단, 선적전금융은 대위변제후 1개월로 할 수 있다)	0205	해당 소구·구상불능채무를 정리한 때			
공 단 신 용 보 증 대 지 급	6.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0206	해당 채무액을 완납한 때	- 해제와 동시에 삭제 - 기간경과 해제시 : 1년		
	7.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케한 자	0207	"			

7) 부도정보

구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집중시기	비고
어 음 · 수 표 부 도 사 실	1. 어음·수표 부도사 실이 있는 거래처 - 어음교환업무규약 에서 정하는 거래정지 처분사유로 인한 부도 사실거래처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부도 일 익영업일로 함	0404	등록사유가 발생한때	- 1년		정 보 등 록 업 권 에 만 제 공 함 을 원 칙
가 계 수 표 최 종 부 도	2. 가계수표 거래정지 처분거래처 - 어음교환업무규약 에서 정하는 거래정지 처분 대상거래처를 말 하며, 등록사유발생일 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0401	부도수표를 회수한 때	- 1년		
당 좌 수 표 최 종 부 도	3. 당좌수표 거래정지 처분거래처 - 어음교환업무규약 에서 정하는 거래정지 처분 대상거래처를 말 하며, 등록사유발생일 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0402	부도수표를 회수한 때	- 1년	사유발생일 로부터 10 일 이내	
약 속 어 음 최 종 부 도	4. 약속어음 거래정지 처분거래처 - 어음교환업무규약 에서 정하는 거래정지 처분 대상거래처를 말 하며, 등록사유발생일 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0403	- 부도어음을 회수한 때 - 기간경과 해제 없 음. 단, 2001. 1. 2.전 에 등록사유가 발생 한 어음부도거래정보 는 등록사유발생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10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 제사유발생일로 봄	- 1년		

8) 관련인 정보

구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비 고
관련인	<p>전 5)~7) 각호의 거래처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p> <p>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대출자자인 자</p> <p>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감사 또는 이사</p> <p>다. 당해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대출자자인 자</p> <p>라. 당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p>	<p>각 등록 코드 앞에 '9' 표시</p>	<p>관련 거래처의 신용거래정보 등록사유가 해소되는 때 또는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부담액을 정리한 때</p>	<p>- 관련 거래처의 해제시 : 동시삭제</p> <p>- 관련 거래처의 기관경과 해제시 : 관련 거래처의 기록보존기간을 따름</p>	<p>- 과점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경우 등록여부의 판단은 당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p> <p>- 특수채권 관련인은 각 등록코드 앞 "8" 표시</p>

3. 금융질서문란정보

구 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 보존기간	집중시기	비고
금 거 래 관 련 부 당 행위자	1. 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법원 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기 소증지자 포함)	0901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 5년	사유발생일 로부터 10 일 이내(단, 산림조합, 새마을금 고, 신협은 20일 이내)	
	2. 사기,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약정 등을 체결한 거래처	0902	"			개인이 동일 인한도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
	3.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 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및 고의·중과실 에 의한 분식회계가 확인된 거 래처	0903	"			
	4. 대출금을 약정용도외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0904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한 때			
	5. 대여시설물(리스물건 포함) 불법처분 또는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거래처	0905	계약사항의 원상 회복 또는 해당 채무를 정리한 때			
	6. 양도담보물을 금융기관의 승 인없이 임대 또는 처분한 거래 처	0906	해당채무를 정리 한 때			
	7. 여신관련 명의대여 및 차명거 래 등의 사유로 해당 금융기관과 의 약정사항을 부인하는 자	0907	"			
가 계 당 좌 불 량	1. 가계수표를 할인한 거래처	0911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2. 타인 수표용지를 사용하여 가 계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에게 가계수표용지를 제공한 거래처	0912	"			
외국환 거래법 위반자	1. 계약파기 등으로 대외신용을 추락시키거나 외화를 유용, 도피 하거나 허위보고한 자	0922	해당 금융기관(한 국은행 포함)이 해제를 요청한 때			
수 출 보 험 사 고	1. 수출보험사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래처	0923	"			

구 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 보존기간	집중시기	비고
신 용 카 드 관 련 부 당 행위자	1. 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 및 분실신고를 한 거래처	0931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 5년	사유발생일로 부터 10일 이 내(단, 산림조 합, 새마을금 고, 신탁은 20 일 이내)	
	2. 타인의 신용카드(도난, 분실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0932	"			
	3. 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영통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0933	"			
	4. 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영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과 대표자 및 관련자	0934	"			
	5.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거래처 또는 이를 사용한 거래처	0935	"			
	6.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유통시키거나 허위작성(위·변조 포함) 또는 이중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0936	"			
	7. 1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자기매출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0937	"			
	8. 사기·타인의 명의도용(차명 포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가맹점개설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거래처	0938	"			
	9.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한 가맹점 및 대표자	0939	"			
	10. 신용카드를 양도, 수수, 차용, 대여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자	0940	"			
신 용 회 복 지 원 관 련 자	1. 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0950	해당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해제를 요청한 때			
	2.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0951	"			

구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비 고
관련인	<p>전 각호의 거래처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감사 또는 이사 다. 당해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당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p>	각 등록 코드 앞에 '9' 표시	<p>관련 거래처의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사유가 해소되는 때 또는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부담액을 정리한 때</p>	<p>- 관련 거래처의 해제시 : 동시삭제 - 관련 거래처의 기관경과 해제시 : 관련 거래처의 기록보존기간을 따름 (5년)</p>	<p>- 과점주주-및 최다출자자의 경우 등록여부의 판단은 당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p>

4. 공공기록 정보

구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비 고
국세 체납	1. 국세체납일 발생일 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인 자	0601	- 해당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 등록사유발생일 로부터 7년이 경과 한 경우 동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로 봄	- 해제와 동시에 삭제	
	2.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02			
	3. 국세 체납 결손처분 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03			
지방세 체납	4. 지방세 체납발생일 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인 자	0604			
	5.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05			
	6. 지방세 체납 결손처 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06			
관세 체납	7. 관세등 체납발생일 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인 자	0701			
	8. 1년에 3회 이상 관 세 등을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인 자	0702			
	9. 관세등 체납 결손처 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703			
채무 불이행자	10. 법원의 판결에 의 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0801			

5. 신용능력정보

구 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등록항목)		등록코드	집중시기	비 고			
일 반 정 보	외부감사 실시기업	차 주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종업원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정보등록기관에만 제공			
		주 소	본사(자택)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우 편 번 호	우편번호						
		전 화 번 호	본사(자택) 전화번호 및 사업장 전화번호						
		업 종	업종, 산업분류코드(세분류)						
		설 립 일 자	설립일자						
		경 영 방 식	창업자(소유주), 창업2세, 동업, 전문경영인, 기타						
재 무 정 보		기 업 규 모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재 무 상 태	결산일자, 총자산, 자본총계, 총차입금,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자본금						
		재 무 비 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영업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총자산회전율						
비재무 정 보		상 장 유 무	코스닥등록, 거래소시장, 제3시장 거래여부 등						
		공인회계사 감 사 의 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6. 특수기록정보

구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해제 코드	기록 보존기간	비고
특수 기록 정보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그 관련인	1001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77	해제와 동시에 삭 제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및 그 관련인	1002	”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 및 그 관련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명령이 있는 때	1003	”			
	4. 금융기관 임의관리기업체 및 그 관련인	1004	”			
	5.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1005	”			
	6.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체 및 그 관련인	1006	”			
	7.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1101	확정된 내용대로 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내용이 효력을 상실하여 ‘연체 등’ 또는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등록
	8.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1201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때			
	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제계획인가일	1301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또는 5년이 경과한 때			법원에서 통보하여 등록
	10.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신고확인서상 신고자 - 해외이주비 환전용 해외이주 신고확인서에 의거 해외이주비를 환전(또는 송금)하는 날	1401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또는 국외이주포기신고서에 의해 국외이주를 포기한 때			동의서를 징구받은 고객에 대해서만 등록함
	1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1501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때 또는 확정된 내용대로 변제를 완료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등록

이 원 영 의 원

1.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휴면보험료 현황, 시효기간별
발생 및 소멸액(연도별)

☐ 세부 내역

“붙임 참조”

은행의 휴면예금* 발생 현황 ('04년 이후)

(단위 : 억원)

은행	'04년중	'05년중	'06.1~8월	누 계
경 남	10	9	—	19
광 주	—	10	—	10
국 민	262	296	29	587
기 업	65	53	—	118
농 협	70	397	—	468
대 구	59	20	—	79
부 산	8	30	—	37
산 업	4	4	—	8
수 협	6	5	6	17
신 한	98	138	—	236
외 환	98	84	—	182
우 리	92	106	68	266
전 북	36	10	7	54
하 나	83	95	2	180
씨 티	15	18	—	33
제 일	112	78	51	240
전 체	1,018	1,354	163	2,534

출 처 : 전국은행연합회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

※ 고객 청구권 소멸시효(5년)가 경과하여 은행이 잡이익으로 처리한 예금

(붙임)

증권회사 휴면계좌 및 지급 현황

(단위:백만원)

금융기관명	2002.3월말(*)		2003.3월말(*)		2004.3월말(*)		2005.3월말(*)		2005.6월말(**)		2006.6월말(**)	
	발생	지급	발생	지급	발생	지급	발생	지급	발생	지급(05.3)	발생	지급(06.3)
교보	390	-	444	0.13	414	0.95	421	0.16	1,347	0.16	1,646	0.07
굿모닝 신한	1,314	4.69	1,315	8.19	3,084	0.34	2,351	1.29	1,133	1.29	2,511	1.84
대신	3,464	1.13	3,595	0.21	3,839	5.09	4,106	5.09	19,930	5.09	18,652	2.91
대우	5,087	8.17	6,120	2.20	5,616	1.11	5,438	51.20	730	51.20	932	2.47
신영	507	-	392	4.41	473	-	66	0.63	-	0.63	-	6.36
서울	563	-	536	-	542	5.08	500	4.00	2,056	4.00	866	1.17
한양	385	0.30	280	0.20	279	0.30	374	1.12	585	1.12	809	5.58
메리츠	330	0.44	320	-	542	0.03	514	-	1,428	-	1,661	-
우리투자	2,213	3.08	4,336	4.10	5,062	4.24	5,720	5.38	25,635	5.38	27,402	3.7
부국	366	-	440	-	506	-	533	-	1,412	-	1,330	-
브릿지	-	0.01	478	0.00	918	0.12	207	0.29	254	0.29	1,940	-
하나	380	0.16	394	0.35	412	0.24	392	0.62	487	0.62	272	9.8
현대	256	0.18	1,273	0.14	4,151	0.20	3,930	0.22	11,700	0.22	18,449	0.28
한화	1,819	0.72	1,485	1.15	1,302	1.45	1,194	1.52	1,239	1.52	1,105	2.56
신흥	225	0.06	254	0.17	297	0.54	249	0.26	354	0.26	404	0.6

유화	-	-	-	410	-	468	-	474	0.08	408	0.08	714	-
동양증권	1,600	-	-	1,580	-	1,565	-	1,553	-	6,118	-	8,696	-
SK	1,242	-	-	1,967	-	1,564	-	1,626	-	2,442	-	1,059	-
KGI	206	0.01	0.04	198	0.04	203	0.03	17	0.07	101	0.07	107	0.19
NH투자증권	974	-	-	1,201	-	1,266	-	2,265	-	152	-	309	-
삼성	1,162	-	-	1,162	-	1,301	-	4,282	0.23	10,452	0.23	25	0.03
동부	168	0.24	0.30	193	0.30	219	0.45	267	0.14	228	0.14	296	0.76
한누리투자	-	-	-	-	-	0	-	0	-	0	-	41	-
씨티그룹	2	-	-	2	-	2	-	2	-	8	-	2	-
푸르덴셜	2,688	-	-	2,915	-	4,822	-	2,632	-	43	-	3	-
CJ 투자	32	-	-	42	-	130	-	30	-	167	-	94	-
미래에셋	-	-	-	-	-	-	-	-	-	-	-	218	-
키움닷컴	-	-	-	-	-	-	-	-	-	2	-	4	-
한국투자	2,669	-	-	2,950	-	4,835	-	5,252	-	1,175	-	11,190	-
대한투자	3,001	-	-	2,892	-	2,762	-	2,576	-	49	-	18	-
동양오리온	2	-	-	2	-	0	-	47	-	-	-	-	-
이트레이드	0	-	-	0	-	25	-	24	-	0	-	3	-
코리아 RB	4	-	-	5	-	7	-	8	-	1	-	6	-

리딩투자	1	-	-	2	-	4	-	5	-	0	-	-
비엔지	1	-	-	1	-	0	-	1	-	1	-	-
피데스	-	-	-	-	-	0	-	0	-	0	-	-
도이치	-	-	-	-	-	-	-	-	-	-	-	-
BNP	-	-	-	-	-	-	-	-	-	-	-	-
CLSA	-	-	-	-	-	-	-	-	-	-	-	-
모이증권	1	-	-	2	-	-	-	-	-	-	-	-
합계	31,051	19	37,186	22	46,613	20	47,057	72	89,638	72	100,765	38.32

주1 (*) 통합계좌로 작성(2002.3월말~2005.3월말)

통합계좌는 증권업협회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규정(구, 개정전)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보유잔액·잔량이 다음에 해당하고, 최근 6월간 매매거래 및 인출 등이 중단되어 통합관리되고 있는 고객계좌를 의미

- 10만원 이하의 고객 예수금
- 상장 및 코스닥상장폐지된 주권의 평가금액
- 평가금액 10만원 이하 수익증권

가. 현대증권 : 계좌 통합작업을 수행하지 않다가 2003년 3월 통합작업 수행

나. LG투자증권 : 2003년 3월 저축계좌 통합작업을 최초로 시행

다. 한투, 대투, 푸르덴셜투자증권 : 휴면계좌 수 및 잔액의 경우, 통합관리되고 있지 않는 6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10만원 이하 수익증권 계좌 포함

라. 동부증권 : 합병('04년 5월)에 따라 갯모어증권 휴면계좌 현황 포함

마. 동원증권 : 2003년 3월까지 휴면계좌 통합관리 안함

바. 브릿지증권 : 2002년 3월 자료는 합병('02년 1.21일)에 의한 전산 통합으로 파악 불가

사. BNP, CLSA 코리아의 경우 휴면계좌 통합작업을 시행하지 않음

아. 유화증권 : 2002년 3월 이전자료는 자료파악 불가

자. 모아증권종개 : 2004년 6월 21일 증권업 폐지

차. 한국투자신탁의 경우 파업으로 인하여 05.3월자료는 2004년 12월자료를 대체하여 사용

주2 (**) 휴면계좌로 작성(2005.6월말~2006.6월말)

가. '휴면계좌'는 2005.6.30 및 2006.6.30 기준으로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최근 5년간(2000(1).7.1 ~ 2005(6).6.30 기간동안) '금융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함.

나. 최근 5년간 금융거래가 없는 계좌에 현금 없고 유가증권만 잔고로 있는 경우 휴면계좌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금융거래가 없는 계좌'란 최근 5년간 유가증권의 매도 또는 매수, 고객예탁금의 입/출금, 유가증권의 입/출고 등과 같이 계좌주(대리인 포함)의 의사에 따른 금융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휴면계좌를 말함

라. '다'번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계약의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 보유 수익증권에 대한 분배금, 보유채권에 대한 이자, 보유 예수금에 대한 이용료 등의 입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주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금융거래로 보아 '금융거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면계좌 산정대상으로 함.

※ 엘지투자증권과 우리증권은 2005.3.31자로, 한국투자신탁과 동원증권은 2005.6.1자로, 동양증권증권과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은 2005.9.30자로 각각 합병
주3) 지급금액은 증권회사가 잔수익으로 처리한 이후 고객에 의뢰에 따라 접수익으로 처리한 계좌의 보유잔액 또는 유가증권 보유잔액을 환급하는 경우 접수실로 처리한 '총금액'을 말함(회계연도 결산은 3월말)

□ 상호저축은행 휴면예금 등 현황(자산상위 10개사 기준)

(단위: 백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말 현재 잔액
발생*	소멸**	발생	소멸	발생	소멸	발생	소멸	
149	11	285	12.6	409	17.7	446	64.0	467

* 각 연도별 12월말 현재 휴면예금 금액

** 각 회계연도중 휴면계좌의 잠익 처리 현황

(2002년의 경우 '02년 7월~'03년 6월이 회계연도임)

□ 신탁 휴면예금 현황 ('06.6.말 현재)

(단위: 백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말 현재 잔액
발생*	소멸**	발생	소멸	발생	소멸	발생	소멸	
n.a.	n.a.	n.a.	n.a.	16,868	11	17,351	80	20,772

* 각 연도별 12월말 현재 휴면예금 잔액

** 각 회계연도중 휴면계좌의 잡이익 처리 현황

유연보합금 현황

금융회사명	2002.3월말				2002.4 ~ 2003.3				2003.3월말				2003.4 ~ 2004.3				2004.3월말				2004.4 ~ 2005.3				2005.3월말				2005.4 ~ 2006.3				2006.3월말			
	발생		지급		발생		지급		발생		지급		발생		지급		발생		지급		발생		지급		발생		지급		발생		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한생명	1,640	508	147	275	69	204	1,718	579	309	569	307	576	1,720	571	134	844	191	734	1,663	681	137	890	153	782	1,647	789										
우리인조	575	137	108	66	34	78	648	125	122	86	86	88	684	123	115	105	67	74	732	154	104	135	42	68	794	221										
삼성생명	1,227	320	345	519	292	462	1,279	377	384	819	357	720	1,306	477	331	2,418	349	1,839	1,289	1,055	398	3,605	345	3,709	1,341	951										
한국생명	453	30	87	62	24	34	516	58	55	59	33	45	538	72	44	71	13	23	569	120	77	129	30	106	615	143										
교보생명	1,558	379	486	366	202	266	1,842	480	229	354	347	427	1,723	407	283	961	243	803	1,763	565	406	1,290	206	1,282	1,962	572										
대신생명	112	43	6	12	3	12	115	42	-	-	-	-	-	-	-	-	-	-	-	-	-	-	-	-	-	-										
농협생명	-	-	-	-	-	-	-	-	4	13	0	2	4	11	6	14	2	11	8	13	7	19	3	14	12	19										
신한생명	716	76	106	44	31	37	793	86	89	52	360	44	522	94	95	65	37	22	580	137	119	120	55	53	644	205										
국민생명	81	17	6	6	2	5	87	17	6	5	2	5	89	17	4	6	2	4	91	19	18	18	2	5	106	32										
금호생명	286	76	62	28	30	35	318	70	45	31	22	25	341	76	38	52	27	36	353	92	27	43	25	30	354	105										
미래에셋	640	153	76	45	20	36	695	169	63	51	39	63	719	157	60	65	41	61	739	161	62	71	24	33	777	199										
한일생명	47	9	8	5	2	2	54	12	2	2	2	2	54	12	-	-	-	-	-	-	-	-	-	-	-	-										
KB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부생명	155	35	15	15	6	9	163	42	67	11	9	19	222	34	4	11	16	6	209	38	5	16	33	8	182	50										
동양생명	450	96	38	30	16	42	472	83	37	26	13	24	496	85	61	36	11	17	546	104	78	63	16	29	608	137										
메트라이프	151	30	6	13	4	16	153	24	7	27	9	36	151	16	9	40	7	17	153	39	13	36	7	28	159	46										
PCA생명	4	1	1	0	0	1	5	1	2	1	1	1	5	2	2	1	0	1	7	2	3	2	1	1	9	3										
뉴욕생명	13	1	1	1	0	1	13	2	1	1	1	1	14	2	1	1	0	1	14	2	2	3	1	2	15	4										
푸르덴셜	15	2	5	2	1	0	19	4	6	3	4	3	21	5	8	5	3	3	25	7	11	23	9	20	28	11										
ING생명	19	6	6	7	1	4	23	9	10	14	4	8	30	15	15	27	8	19	37	23	25	50	14	32	48	40										
하나생명	30	2	1	1	0	0	30	3	30	3	1	1	29	1	0	0	14	0	15	1	0	0	0	0	15	1										
라이나생명	33	7	5	3	1	1	38	9	20	5	3	2	54	13	72	20	2	2	124	30	116	38	4	4	236	65										
AIG생명	19	9	3	4	2	3	20	10	6	2	1	1	26	12	27	13	2	2	50	23	41	33	11	13	80	43										
합계	8,224	1,939	1,617	1,505	741	1,248	9,002	2,202	1,492	2,136	1,600	2,094	8,747	2,200	1,314	4,756	1,034	3,876	8,073	3,269	1,649	5,687	987	6,221	9,636	3,840										
동양화재	36	29	15	23	9	16	42	36	14	27	8	20	48	42	15	31	6	12	57	62	15	55	6	19	66	98										
신동아화재	26	29	7	20	3	15	30	34	7	17	3	13	34	38	5	12	4	13	36	38	5	17	2	6	38	49										
대한화재	13	23	6	15	1	4	20	37	5	13	4	10	20	40	4	14	1	5	23	48	4	15	5	23	22	40										
그린화재	11	9	6	9	2	4	14	13	4	7	3	7	15	13	3	8	2	3	16	17	3	6	2	2	16	20										
쌍용화재	37	29	8	11	6	10	36	29	9	11	1	5	44	35	13	14	3	9	54	41	16	19	3	9	65	44										
제일화재	36	24	8	14	3	5	41	33	11	23	7	18	45	38	12	25	3	11	54	52	12	30	4	11	60	68										
상생화재	97	120	53	134	35	134	117	124	66	143	49	114	134	153	83	218	61	176	156	194	98	314	48	243	206	266										
현대해상	55	47	23	53	14	44	64	56	26	64	27	67	63	53	26	83	27	66	63	70	26	99	24	82	65	87										
LG화재	49	52	26	47	14	36	61	63	20	48	15	37	66	74	21	64	14	43	74	95	20	80	15	63	77	105										
동부화재	81	59	29	47	10	27	100	79	25	43	25	46	100	75	32	65	12	26	119	115	27	79	11	35	134	159										
교보자동차	-	-	-	-	-	-	-	-	-	-	-	-	-	-	-	0	0	-	0	0	-	-	-	-	0	0										
합계	440	421	182	372	96	294	525	504	187	395	143	339	569	561	214	633	131	364	652	731	225	715	119	492	760	935										

주요보험회사는 유연보합금 현황을 반기마다 보고하고 있는 바, '06.6월말 기준으로 산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 현황

☐ “붙임” 참조

(붙임)

주요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 현황

소관검사국	금융회사명	수수료 금액(건당)
은행검사1국	우리은행	2,000원(전산) 3,000원(수기)
은행검사1국	신한은행	2,000원(전산) 3,000원(수기)
은행검사1국	외환은행	2,000원
은행검사1국	SC제일은행	2,000원
은행검사1국	부산은행	3,000원
은행검사2국	국민은행	2,000원
은행검사2국	농협중앙회	2,000원
비은행검사1국	솔로몬상호저축은행	3,000원(개인회생용) 10,000원(파산·면책용)
비은행검사1국	제일상호저축은행	2,000원
비은행검사1국	HK상호저축은행	2,000원
비은행검사1국	한국상호저축은행	5,000원(본인) 7,000원(대리인)
비은행검사1국	부산상호저축은행	2,000원
비은행검사1국	부산2상호저축은행	2,000원
비은행검사1국	토마토상호저축은행	2,000원
비은행검사1국	경기상호저축은행	1,000원
비은행검사1국	진흥상호저축은행	7,000원
비은행검사1국	미래상호저축은행	5,000원
비은행검사1국	한국신용평가정보	2,000원

* 자산관리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아니며, 신용정보회사 중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자산관리대행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동 업무와 관련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이 재 오 의 원

1.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 1) 06년 이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의사록 일체
- 2) 06년 7월 개최된 생보사 상장관련 공청회 자료사본
- 3) 06년 이후, 현재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목록 일체
- 3) 내부유보분, 배당적정성, 상장 전제조건 등에 대한 금감위의 입장

1) 06년 이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의사록 일체

- ☐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금감위는 상장자문위원회의 의사록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 수 없으나
 - 약 30번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간 상장의 주요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난 7.13일 발표한 공청회(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06년 7월 개최된 생보사 상장관련 공청회 자료사본

< 별첨2 > 상장자문위원회 공청회 자료

3) 06년 이후, 현재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목록 일체

- ☐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은 없음

4) 내부유보분, 배당적정성, 상장 전제조건 등에 대한 금감위의 입장

☐ 지난 2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각계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자문위원회는 내부유보분, 배당적정성 등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 현행 법체제, 그간 상장논의 및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토대로 거래소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면, 정부는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생명보험회사 상장

2006. 7. 13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 목 차 >

I. 생보사 상장 개요

II. 국내 생보사의 성격

1. 논의 배경
2. 법적 형태
3. 실질적 운영 방식
4. 종합의견

III.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쟁점사항

1. 내부유보액의 처리
2.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3.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 여부

I. 생보사 상장 개요

1. 논의경과

- ☐ 생보사들이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80년대 중반부터 생보사 상장에 관해 수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나, 생보사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상장 유보
 - 교보('89)와 삼성('90)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90년말 증시침체 등 여건악화로 상장 추진 보류
 - 삼성자동차 처리('99) 및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한 도래('03)에 따라 생보사의 상장문제가 재논의되었으나,
 - 생보사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상장방안 결정 유보
- ☐ '06.1월, 정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거래소 산하에 「생명보험사·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을 근거로 생보사 상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35조):**

거래소는 법인의 주권상장이 공익과 투자자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2) 이익배분 등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 ☐ '06.2월에 구성된 상장자문위원회*는 현행 법체계, 과거의 논의 내용,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적·실증적 분석 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상장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시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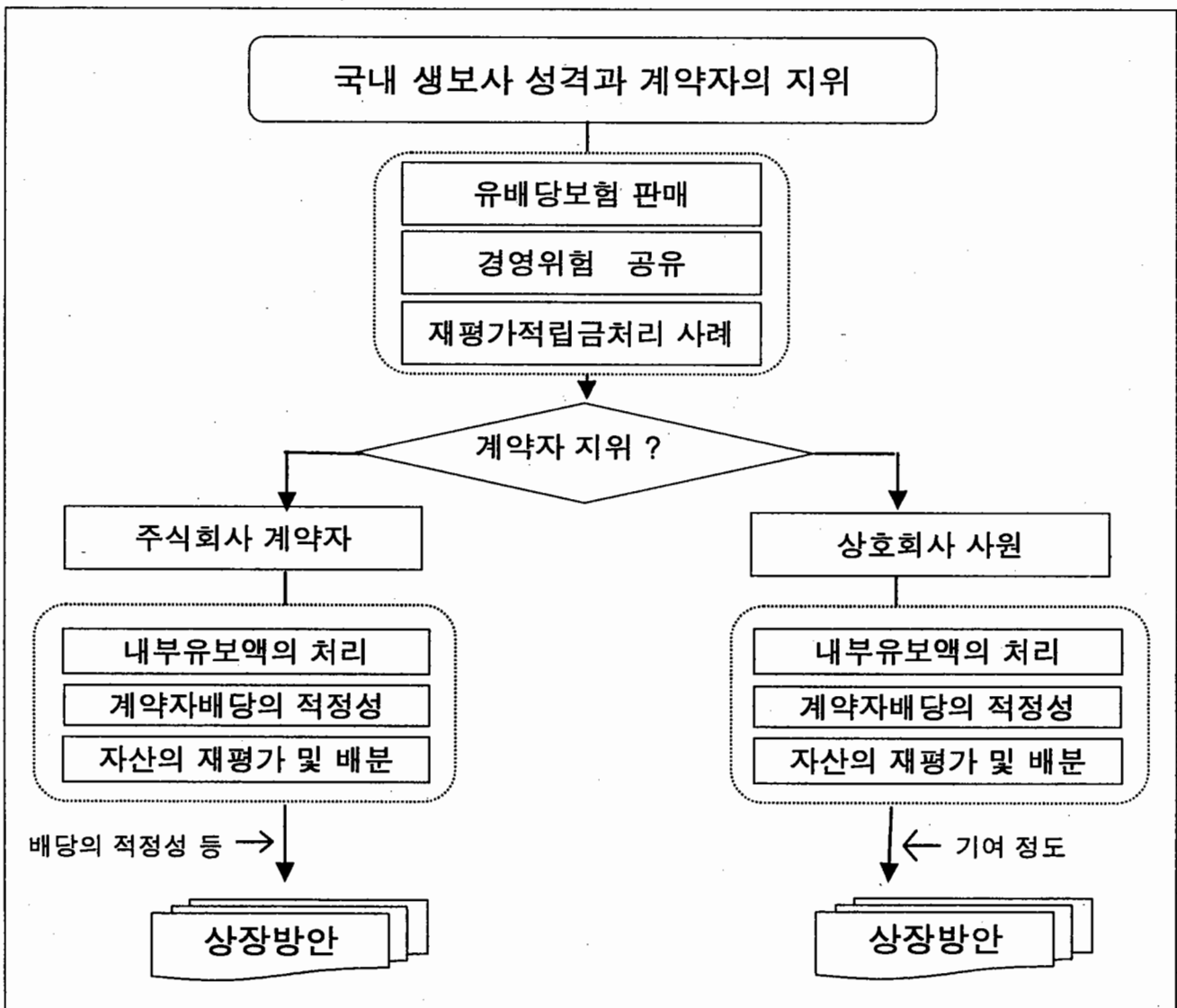
※ 법률, 보험, 재무, 회계·계리, 유가증권상장 분야 전문가로 구성

2.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검토 방향

□ 상장자문위원회는 과거 상장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토대로 국내 생보사의 성격과 그에 따른 계약자 지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 내부유보액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그림 1 > 생보사 상장관련 검토 방향



II. 국내 생보사의 성격

1. 논의 배경

□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지만 상호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어, 국내 생보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과거의 보험관련 법규 및 감독정책, 국내 생보사의 운영방식, 외국의 사례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

2. 법적 형태

□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형태면에서 살펴보면, 상법 및 보험업법에 의하여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 국내 생보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주금을 납입한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이며, 업무집행기관 또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
- 반면, 보험업법상 상호회사는 보험계약자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업무집행기관 또한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

□ 계약자의 권리·의무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는 상호회사의 사원과 같은 의결권이 없고, 주주로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상호회사의 사원과는 차이가 존재

- 또한,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는 청산시 여타 채권에 비해 보험금 등의 선취권이 인정되고, 주주는 법률에 의한 주식의 무상소각·파산으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 위험을 지게 됨

- 반면, 보험업법상 상호회사 사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의 잔여재산 청구권을 가짐

□ 따라서,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및 출자관계, 의사결정기구,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상법 및 보험업법상 주식회사가 아님을 인정하기 어려움

< 표 1 >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간 차이점 비교

구 분		주 식 회 사	상 호 회 사
법인의 성격		상법에 의거 설립된 영리법인	보험업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
설립시의 출자관계		회사구성원인 주주가 출자한 자본 (자기자본)	기금각출자에 의해 각출된 기금 (추후 동일한 금액의 적립을 조건으로 기금상각 가능)
구성원		주주	사원(= 보험계약자)
최고 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업무집행기관		이사회	이사회
회계감사기관		감사	감사
계약자 권리	의결권	없음	사원당 1표(정관으로 별도 규정 가능)
	청산시 잔여재산 청구권 순위	일반채무보다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 순위가 선행순위	일반채무보다 사원의 보험금 청구권 순위가 후순위
계약자 의무	채권자에 대한 의무	없음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책임
	회사 지급불능시	여타 채권에 비해 보험금 등의 선취권은 보유하나, 회사재산이 보험금지급 등에 부족시 일부 삭감 발생 가능	원칙적으로 보험금 등의 삭감 가능

3. 실질적 운영 방식

가. 유배당보험 위주의 판매

- '92.8월 이전까지 유배당보험의 판매만이 허용
 - '92.8월부터 보장성보험 및 양로보험에 한하여 무배당보험이 허용되었으며, '00.4월 이후 모든 상품으로 확대
- 과거에 주식회사인 생보사가 유배당보험 위주로 판매한 것은 당시의 환경과 제도에 기인
 -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초기에 보험료를 산출에 필요한 통계가 부족하고 금리변동성이 높은 등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유배당보험 판매만을 허용
- 유배당보험은 이익을 계약자에게 환원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당검증비용(Verification Cost)[※]이 발생

※ 이익의 원천과 규모 등을 검증하는 비용

- 이에 따라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배분문제가 발생하는 주식회사 보다는 상호회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경쟁심화, 위험의 불확실성 증가 등 보험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험사의 설립형태와 관계없이 생보사의 경영정책에 의하여 유·무배당보험을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국내의 보험시장 환경 및 외국의 생보사 설립형태별 판매 상품을 감안할 때,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의 설립형태와는 무관

< 표 2 > 외국생보사(주식/상호회사)의 판매상품 현황

(단위 : %)

구 분		회 사	설립연도	판매상품 비중	
				유배당	무배당
미국	주식회사	Nationalwide Life Ins. Co.	1929	44	56
		State Farm Life Ins. Co.	1929	100	0
		Canada Life Ins. Co.(N.Y)	1971	93	7
		Hartford Life Ins. Co.	1902	73	27
		Lincoln Life Ins. Co.	1905	1	99
	상호회사	Metlife	1868	89	11
일본	주식회사	협영생명	1945	100	0
영국	주식회사	Prudential Ass.	1848	85	15
대만	주식회사	國泰人壽	1962	100	0

주) 판매상품 비중은 '96~'97 신계약 기준

나. 계약자가 주주지위로서의 경영위험 부담 여부

(1) 자본금 및 자기자본

□ '90년이전 기존 생보사의 자본금*은 자산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

※ 자본금의 상당부분은 자산재평가를 통해 충당

○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특정기간에 자기자본이 잠식된 상태

< 표 3 > 기존 생보사 자기자본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A사	1.8	1.5	1.0	△3.9	△11.2	△12.4	△13.6	△14.6	△15.3	△15.8
B사	0.4	0.1	0.3	0.3	0.2	0.2	5.0	5.0	10.0	63.2
C사	1.5	2.0	5.0	5.0	5.0	5.0	5.0	5.0	△27.9	△28.3
D사	5.0	5.0	5.2	5.0	5.0	5.0	5.0	3.8	4.4	7.1
구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A사	△16	△40	△332	△667	△1,184	△1,170	△566	△225	△116	△17
B사	84	0.1	91	146	191	225	245	631	935	2,906
C사	△27	△20	△71	△128	△142	△142	△33	15	17	11
D사	49	△7	77	53	66	110	321	1,052	3,460	2,687

□ 그러나 계약자는 생보사의 파산과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채권자로서의 위험만을 부담하고, 사후적으로도 경영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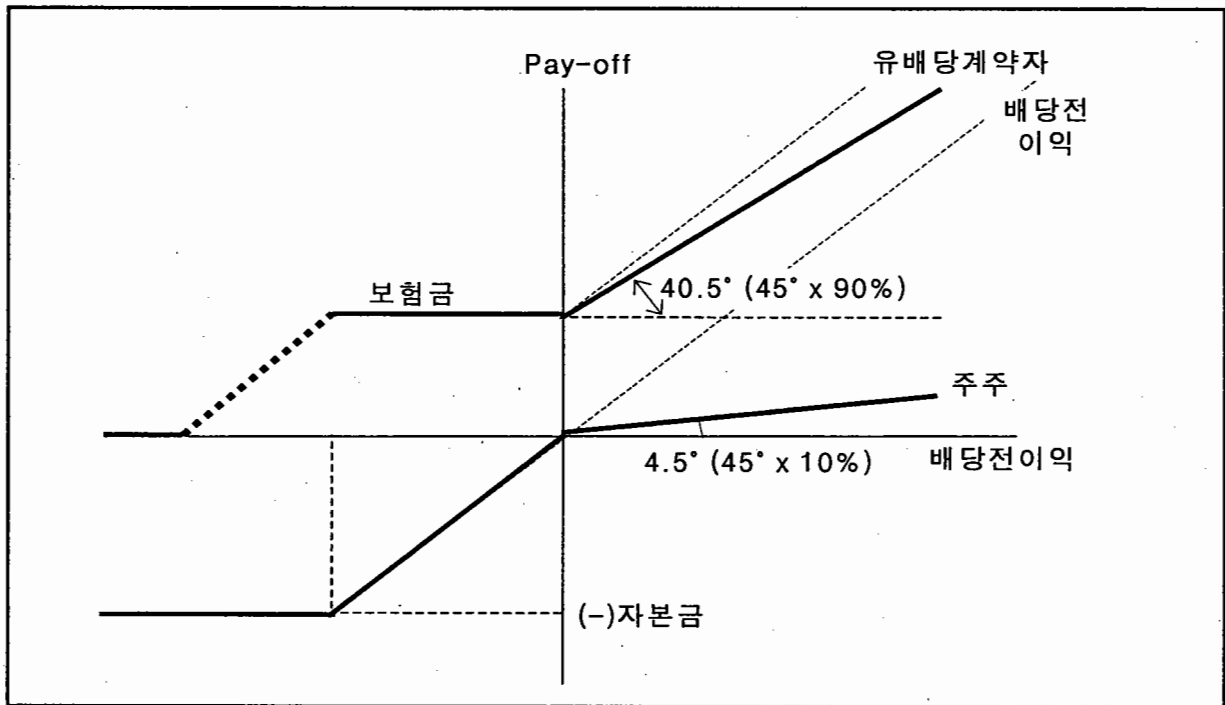
① 사전적으로 계약자는 채권자로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보험금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유

○ 생보사의 파산시 계약자가 보험금액의 삭감 등 위험을 부담할 경우에도, 이는 채권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주주로서의 위험부담*과는 상이

※ 주주는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위험을 부담

- 아울러, 계약자보호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의 위험 부담도 상당부분 경감

< 그림 2 > 주주와 계약자의 이론적 Pay-off Structure



- ② 사후적 관점에서 외환위기 당시 생보사 파산사례를 보더라도 계약자는 보험금 삭감이나 보험료 증액 등의 채권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태평양 등 5개 생보사 계약자의 경우 계약이전방식으로 보호됨

- 반면 주주는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으며, 파산시 주식을 무상소각 당하는 등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위험을 부담※

※ 제일생명 : 조양상선그룹이 인수('73, 2억→5억으로 증자)

흥국생명 : 태광그룹이 인수('73, 2억→5억으로 증자)

(舊)고려생명 : 자산과 부채를 동해생명으로 포괄이전후 청산('73)

□ 한편, '90년 이전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생보사를 운영할 경우, 자발적 증자의 유인이 약함

○ 재무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자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생보사에게 증자 명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증자명령을 하지 않음

□ 타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자본잠식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주식회사의 속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는 없음

※ A손해보험사는 '82~'95년, B은행 '83~'84년, C리스사 '89~'03년 자본잠식 상태

□ 상기 사항을 감안할 때, 생보사의 자기자본 잠식 사례를 이유로 계약자가 주주로서의 경영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일부 보험사는 장기간 자본잠식이 지속됨으로써 투자수익이 감소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배당재원을 이용한 결손보전

- ☐ 계약자배당은 보험상품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계약자배당은 장래손익 전망 등을 기초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특정기간에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미래에 손실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유배당보험에서 누적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에 발생하는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
- ☐ 외국의 경우에도 유배당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배당보험 이익을 미할당잉여금 형태로 유보하는 것이 일반적
 - 유배당보험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미할당잉여금을 사용

< 참조 1 > : 감독회계상 주식회사의 유배당보험 손익처리(캐나다, 미국)

-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을 '계약자지분 계정(policyholder's equity 또는 participating surplus fund)'과 '주주지분 계정(stockholder's equity 또는 stockholder's fund)'으로 양분하고,
- '계약자지분 계정'내에 누적손실(이익)을 계상하여 추후에 발생하는 이익으로(손실을) 보전
- '주주지분 계정'에는 유배당보험 이익 중 주주지분(예:10%)이 계상되며, 계약자지분 계정에 누적결손이 있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년도에는 주주지분을 확보

- ☐ 따라서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한 점을 경영위험 공유로 보기 어려움
 - 다만, 국내 생보사가 과거 손익과 비교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계약자보호제도의 불비

- ☐ 이론적으로 볼 때, 계약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시 금융소비자(채권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치※

※ 계약자보호제도가 있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위험부담 감소

- 생보사에 있어서도 계약자보호제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계약자의 지위가 변경(계약자 → 주주)되는 것은 아님
- ☐ 외환위기 당시 생보사의 파산시에도 계약자는 보험금 삭감 또는 보험료 증액 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반면, 부실 생보사 주주는 주식을 무상 소각당하는 경영위험을 부담
- ☐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는 타금융권에 앞서 계약자보호제도※가 도입

※ '62년 공탁금제도('77년 폐지, 다만 재경부장관의 예탁명령권 및 예탁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유지), '88년 계약자보호예탁금제도, '89년에는 보험보증기금제도 및 보호예탁금제도가 도입

※ 은행권은 '96년부터, 상호신용금고 등 단기금융회사는 '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 ☐ 계약자보호제도는 소비자보호제도로서 계약자의 경영위험 부담 논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재평가적립금 처리

- 교보('89)와 삼성('90)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
- 당시 재무부는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계약자와 주주간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위해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90.8월)」(이하 '재평가처리지침'이라 함)을 제정
 - 보험업법(§97 ③)에서는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 계약자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 구체적 배분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

< 표 4 > 재평가적립금의 배분기준(재평가처리지침, '90.8)

K을	주 주	계약자	내부유보
100%	0~30%	40% 이상	잔여분
50~100% 미만	0~20%	50% 이상	"
50% 미만	0~10%	60% 이상	"

- 당시 재무부는 '주식회사 형태인 생보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계약자는 회사에 대하여 시설이용, 보험금청구 등 채권자의 위치에 있다'*는 입장

※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90.3월, 재무부) : “재평가적립금 및 당기 이익의 계약자·주주간 배분기준” 마련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견해들을 수렴하여 발표된 자료

- '90년 당시 부동산 재평가적립금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부동산 재평가지 장부가액(book value)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 계약자에게 재평가적립금을 배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계약자 몫이 줄어들기 때문
 - 즉, 재평가적립금의 주주·계약자 배분도 통상의 경상이익 배분과 동일하게 이루어 짐

< 표 5 > 재평가적립금 배분여부에 따른 계약자 몫 비교(예시)

	매입가	재평가 후			처분시			계약자 몫의 합 (A+B)
		장부가	평가의	계약자몫 (A)	처분가	처분의	계약자몫 (B)	
배분시	100	150	50	35	200	50	35	70
미배분시	100	150	50	0	200	50	35	35

주) 계약자 몫의 투자손익 비율을 70%로 가정

< 참조 2 > 재평가적립금 배분이유(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 재무부, '90.3)

- 재평가차익도 경상이익과 같이 자본금의 투자수익, 계약자의 기여 및 주주·경영자의 경영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 그 배분도 주주와 계약자 그리고 회사의 경영안정성을 위한 사내 유보방법으로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함

- 따라서 “재평가처리지침”에서 재평가적립금중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일종의 경상이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으로서, 생보사의 주식 회사적 성격을 부인한 사례로 보기 어려움

4. 종합의견

□ 국내 생보사 성격에 대하여 형식적·실질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 주식회사 계약자와 상호회사 사원은 권리와 의무에 차이가 있음
-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의 설립형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유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유배당보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
- 생보사의 자본잠식 및 계약자보호제도의 불비가 계약자와 주주의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님
- 재평가처리지침 제정 과정에서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계약자 배당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도 경상이익 배분기준에 준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다만, 과거 생보사의 자본잠식, 배당재원을 이용한 결손보전 등으로 인하여 배당이 부족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 과거 계약자배당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여타 요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Ⅲ.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쟁점사항

1. 내부유보액의 처리

가. 논의 배경

- ☐ 생보사 상장과 관련, '90년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적립된 내부유보액의 성격 및 처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 ☐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평가처리지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당시의 정부 입장 등을 검토하여 그 성격과 역할에 부합하는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내부유보액 현황

- ☐ 교보와 삼성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중 일부(삼성 878억, 교보 662억)를 내부에 유보
- ☐ 재평가처리지침에서는 내부유보액의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참조 3 > 내부유보액의 처리방법(재평가처리지침, '90.8)

- ① 내부유보액은 자본계정에 계리(지침§14①)
- ② 내부유보액은 유가증권 분석 등의 경우에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지침§14①)
- ③ 대차대조표 주식사항으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임을 명시(지침§14①)
- ④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계약자배당 실시 가능(지침§14②)
- ⑤ 결손보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결손보전에 사용된 금액은 향후 발생하는 주주지분이익으로 우선 보충해야 함(지침§14③)

< 표 6 > 교보와 삼성의 재평가적립금 처리 내역

구분	교보('89)		삼성('90)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재평가차액	2,265	-	3,017	-
재평가세 등	(68)	-	(91)	-
재평가적립금	2,197	100.0	2,927	100.0
주주지분 배분	656	29.9	876	29.9
계약자지분 배분	879	40.0	1,173	40.0
공익사업출연	300	40×34.2	391	40×33.3
재평가특별배당	289	40×32.9	391	40×33.3
배당안정화준비금	289	40×32.9	391	40×33.3
내부유보	662	30.1	878	30.0

다. 내부유보액의 성격

- 재평가처리지침상 내부유보액은 재평가적립금중 계약자·주주 배당후 잔여분으로서 “회사의 준비금”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에 유보된 “계약자 몫”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 내부유보액은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 결손 보전에 사용되더라도 추후 주주가 다시 보충토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채적 성격을 부인하기 곤란
 - 특히, 결손보전후 주주가 다시 보충토록 한 것은 주주에게 한시적으로 credit-line 기능만을 제한적으로 부여한 것에 불과

□ 전술한 바와 같이 '유배당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은 유배당보험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유배당보험의 특성임을 감안할 때,

○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액이 결손보전에 사용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적 성격을 인정하기는 곤란

□ 아울러 내부유보액이 자본잉여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나, 재평가 처리지침상 통상적인 자본과 달리 대차대조표의 주석으로 자기자본에서 배제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자본"이라기 보다는 미국·캐나다 감독회계에서 나타나는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과 유사

※ 미국·캐나다의 경우,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계약자에 대한 미래 배당재원으로 사용 : 부채)을 감독회계에서 자본계정으로 처리

< 참조 4 > 내부유보 이유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 재무부, '90.3)

- 90년 부동산재평가차익은 미실현이익이므로 계약자 배당형태로 전액 사외유출할 경우, 회사의 계속성,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계약자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보험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사전체의 재무적 안전성(일정금액의 내부유보)을 우선 고려한 후 주주 또는 계약자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한편, 내부유보액은 지급여력금액 산정시 자기자본에 합산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지급여력금액에는 자기자본 이외에 “확정되지 않은 부채[※]”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계약자에 대한 부채인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은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지급여력금액에 가산(보험업감독규정 §7-1)

※ 미국의 경우, 특정계약자에 할당되지 않는 미할당잉여금은 청산시 잔여재산 청구 우선순위에서 주주의 청구권과 동일한 순위에 해당되며 지급여력 금액에 가산(뉴욕주 보험법 §7435(a))

□ 상기사항을 감안할 때 내부유보액은 계약자에 대한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며,

○ 관련기관의 해석을 구하여 현행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가. 논의 배경

-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당재원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등 과소배당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존재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은 보험상품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검토할 필요
- ☐ 따라서, 과거 생보사의 손익발생 추이 및 계약자배당 내역, 외국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당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함

나. 계약자배당 현황

- ☐ 계약자배당이 자유화되는 '90년대초 이전까지 회사의 이익규모와 관계없이 정부의 배당지침에 따라 배당을 실시
 - 계약자배당 자유화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이익이 부족한 생보사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생보사와 동일수준의 배당 실시
- ☐ 이에 따라 배당지침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시현한 생보사도 초과 이익금에 대하여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지 않음
 - ※ 배당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B사는 '77년~'78년 및 '80년~'81년, C사는 '78년~'81년 동안 확정배당 이외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음(□)
 - 반면, 일부 생보사는 배당전손실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누적된 경우에도 계약자배당을 실시
 - ※ B사는 '82년~'83년에, C사는 '82년에, A사 및 D사는 '85년까지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익규모를 초과하여 확정배당 등 계약자배당을 실시(▣)

< 표 7 > '77 ~ '83년 손익 및 계약자배당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77	'78	'79	'80	'81	'82	'83
A사	확정배당전손익	△1	△6	5	35	47	△76	△244
	계약자배당	0	1	6	35	47	16	20(7)
	확정배당후손익	△1	△7	△1	△0	0	△92	△264
B사	확정배당전손익	2	1	6	103	156	△78	△17
	계약자배당	0	0	6	50	135	6	27
	확정배당후손익	2	1	0	53	21	△84	△44
C사	확정배당전손익	0	7	40	142	223	△7	143
	계약자배당	0	6	34	135	203	46	39(16)
	확정배당후손익	0	1	6	7	20	△53	104
D사	확정배당전손익	△1	0	1	6	14	2	△37
	계약자배당	0	0	1	6	14	27	10
	확정배당후손익	△1	△0	△0	△0	0	△25	△47

주) 계약자배당은 확정배당과 사차배당의 합이고, 괄호 내는 사차배당

□ '90년 주주·계약자간 이익배분기준이 마련되면서 누적결손이 발생할 경우 주주지분으로 결손을 우선 보전한 후, 잔여결손에 대하여 계약자지분으로 보전

- 기존 생보사의 경우에는 부실규모가 큰 일부회사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지분을 결손보전에 사용하지 않음
- '80년대말 신설된 생보사의 경우에는 설립 후 상당기간 동안 적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배당전이익을 결손보전에 사용

< 표 8 > 계약자지분을 이용한 결손보전 등의 현황(이익배분기준 마련후)
(단위: 억원)

구 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총계	
기 존 생 보 사	A사	결손보전																0	
		추가배당			49				603	344								996	
	B사	결손보전	32	110	73									2,100	872			3,187	
		추가배당				44	24	32	30	93	137		131	658				1,149	
	C사	결손보전																	0
		추가배당			54	63	51	37	6	25	44			32		2	3		317
신 설 생 보 사	D사	결손보전												292	118	55	66	531	
		추가배당	1	7	7	11	11	17	19	14	27	34	12	30					189
	E사	결손보전											414						414
		추가배당			2	12	2	31	34	26	49	78		62	41	10	18	25	390
	F사	결손보전														111	130	97	338
		추가배당		3	6	9	5	6	9	7	22	48	27	63					205

주) 결손보전 : 계약자지분의 결손보전액, 추가배당 : 결손시 배당액 + 이익배분기준 초과배당액

□ 외국에서는 유배당보험의 결손을 미할당잉여금에 계상토록 한 후
향후 발생하는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

※ 우리나라는 '90년 이후 누적결손을 주주가 우선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누적
결손을 전액 계약자가 보전하는 외국에 비해 계약자에게 유리

< 참조 5 >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익배분방식 비교

① 미국 뉴욕주(감독회계기준)

- 유배당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90%는 계약자 몫 10%는 주주 몫
- 유배당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계약자가 부담

< 예시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배당전손익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약자 몫	900	△1,000	△1,000	900	900
주주 몫	100	-	-	100	100
계약자잉여금 ^(주)	900	△100	△1,100	△200	700
주주잉여금	100	100	100	200	300
비 고	9:1 배분	당기손실 계약자부담	당기손실 계약자부담	9:1 배분	9:1 배분

주) 손실을 차기로 이월하며, 장래손익전망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배당률을 자율적으로 결정

② 우리나라('90년 이후)

- 유배당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 누적결손이 없는 경우 : 계약자 몫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활용
 - 누적결손이 있는 경우 : 주주 몫으로 누적결손을 우선 보전하고도 잔여 결
손이 있는 경우 계약자 몫으로 잔여누적결손을 보전

< 예시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배당전손익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약자 몫	900	-	-	900	900
주주 몫	100	△1,000	△1,000	100	100
계약자잉여금 ^(주)	900	900	900	900	1,000
주주잉여금	100	△900	△1,900	△900	-
비 고	9:1 배분	당기손실 주주부담	당기손실 주주 부담	주주부담(100)후 계약자부담(900)	주주부담(100)후 계약자부담(800)

주) 계약자잉여금은 누적결손 보전에 사용할 수 없고, 5년 이내 계약자배당으로 사용

□ '90년 이전에는 초기 보험시장 형성과정과 외형성장 위주의 영업 정책으로 인하여 초과사업비가 발생

- 특히, '80년대에는 '82년 금리인하조치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예정사업비율을 인하함으로써 사업비차 손실이 확대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생보사의 사업비율은 일본에 비해 '80년 이전 까지 높았으나, 예정사업비 인하 이후에는 낮은 수준으로 하락

< 표 9 > 한국과 일본의 사업비율 추이 비교

(단위 : %)

구 분	'70	'75	'80	'85	'90	'95	'00
한 국	32.0	31.2	24.0	13.8	11.7	18.2	14.9
일 본	25.9	27.8	23.8	17.9	15.4	13.8	14.1

주)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자료) 한국은 보험통계연감, 일본은 생명보험사업개황으로부터 작성

□ 보험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비율이 정상화되면서, '90년 이후에는 사업비차이익이 발생

- 다만, 신설사는 설립 후 10년 이내에서 대부분 초과사업비가 발생

□ 한편, 투자수익률[※]과 관련하여서는 계열사 지원 등으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생보사도 있는 반면, 계열사의 주가 상승으로 계약자의 이익을 증진시킨 경우도 존재

※ 생보사의 대출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은행의 대출수익률 보다 1~2%p 높은 수준

□ 따라서, 상기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유배당보험 손익과 계약자배당액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의 계약자배당율을 산출할 경우, 대부분의 생보사가 90% 수준을 상회하는 배당을 실시
-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분석은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고 있는 재무·계리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

< 표 10 > 계약자배당률의 추정(회사설립 ~ '05.12)

(단위 : %)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배당율	89%	100% ↑	88%	114%	100% ↑	100% ↑	100% ↑

주1) 계약자배당률 = 계약자배당액 현재가치 ÷ 유배당보험 손익의 현재가치

2) 100% ↑는 유배당보험 손익의 현재가치가 (-)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배당을 실시한 것을 의미

다. 배당의 적정성 검토

◇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금흐름분석을 이용한 자산할당 (Asset Share)방법과 옵션모형을 이용한 유·무배당보험상품 비교를 통하여 배당의 적정성을 검토

(1)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을 이용한 배당의 적정성 검토

□ 분석대상

- 기존 생보사와 신설 생보사로 구분하여 7개 회사를 선별

□ 자산할당(Asset Share, 이하 'AS'라 함) 방법

- AS란, 과거의 순현금흐름과 투자이익을 합산하여 누적한 금액
- AS는 분석대상회사의 회사 설립당시부터 '05.12까지 이원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 투자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흐름은 유배당보험 현금흐름, 무배당보험 현금흐름 및 자본 현금흐름으로 직접 귀속이 가능하므로 각각에 직접 귀속
 - 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므로, 투자이익은 유배당/무배당/자본 계정별 AS에 회사 전체 투자이익률을 곱하여 산출
 - 자본이 완전잠식된 경우에는 자본계정의 투자이익이 (-)로 계산되고, 그 해당액만큼 유배당보험 계정의 투자이익이 증가

< 참조 6 > 자산할당(Asset Share)

-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은 일정한 전제하에 각 보험계약으로 할당한 자산액을 이용하여 생보사의 자산형성에 기여한 공헌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 자산할당(AS)이란, 전체 보험계약을 보험수리상 동질적인 보험계약집단으로 구분하고, 운용이율, 사망률, 사업비, 효력상실해약률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각 집단의 누적현금흐름을 산출한 것
- 즉, 각 보험계약(유배당보험, 무배당보험)의 AS는 과거의 순현금흐름과 이에 대한 총자산이익률 기준의 투자이익을 합산하여 누적한 금액으로 산출

예) 유배당보험 AS = $\sum(\text{수입보험료} + \text{투자이익} - \text{지급보험금} - \text{해약환급금} - \text{사업비} - \text{계약자배당금} - \text{주주귀속잉여})$
- Net Asset Share(혹은 Surplus)를 「Asset Share - 책임준비금」으로 정의하여, 각 계정의 공헌도를 측정가능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판단기준

- 보험사의 경영이 보험료 설정당시의 가정대로 이루어진다면 AS와 책임준비금 수준은 유사
 - 그러나 실현손익에 대해 배당수준이 과도하거나 과소할 경우 AS와 책임준비금간에는 차이가 발생
- ※ 사업비나 투자수익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보험사가 조정할 있는 요소는 계약자배당이라고 가정
- 즉, 「AS - 책임준비금」으로 정의된 Net AS가 음(-)이면 배당금이 경영실적과 비교하여 과다(혹은 적정) 지급된 것이며, Net AS가 양(+)이면 배당금이 과소 지급된 것으로 해석

< 참조 7 > 계약자배당 적정성 판단기준

과다(또는 적정) 배당	과소 배당
Asset Share < 책임준비금	Asset Share > 책임준비금

□ 분석결과 1 : 원가AS*와 현행 책임준비금

※ 원가 AS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은 AS

< 시나리오 1 > : 주주가 결손을 매년 보전하지 않는 경우

- 계약자의 자산형성 기여도인 AS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결손을 보전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합리적
- 분석결과,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나므로 평가손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과거 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표 11 > 주주의 결손보전이 없다는 가정하의 Net AS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1 + 초과사업비를 주주가 부담 >

- 초과사업비 사용으로 인한 배당재원의 감소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초과사업비를 주주가 부담한다고 가정
- 분석결과, D사를 제외한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나므로 평가손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업비 과다집행으로 인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표 12 > 초과사업비 주주 부담 가정하의 Net AS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시나리오 3 : 시나리오 1 + 계약자의 이익배분비율을 90%로 소급하여 적용 >

- 과거의 계약자 이익배분비율(70% 또는 85%)이 현재에 비해 낮았던 점을 고려하여, 회사설립 당시부터 현행수준(90%)의 이익배분이 이루어졌다고 가정
- 분석결과,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나므로 평가손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행수준의 이익배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과거 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표 13 > 현행 이익배분기준 가정하의 Net AS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참조 8 > 주주가 유배당결손을 부담하는 경우의 AS 분석

- Net AS가 음(-)인 A사·C사·F사의 경우 과거 배당이 적정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 Net AS가 양(+)인 B사·D사·E사·G사의 경우 논리적으로 과거 배당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주주의 결손보전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한 후 배당의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

< 주주에 의한 결손보전시 Net Asset Share >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즉, B사·D사·E사·G사의 경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1과 비교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 주주가 결손을 보전하게 되면 결손보전액만큼 유배당 AS가 커지게 되므로, 주주의 결손보전이 큰 경우 계약자배당을 적정하게 하였더라도 AS가 커져서 Net AS가 양(+)이 되는 현상이 발생

□ 분석결과 2 : 시가AS와 GPV※

※ GPV(Gross Premium Valuation, 영업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향후 금리, 위험률 및 사업비 등 현재시점의 최선의 기초율에 의거하여 평가시점에서 재산출한 책임준비금을 의미하며, 시가준비금으로 해석될 수 있음.

- AS를 계산할 때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포함(시가 AS)할 경우, 부채도 시가로 평가(GPV)하여 비교하는 것이 일관성의 원칙에 부합
- '시가AS - GPV'를 Net AS로 정의하며, Net AS로 미래를 포함한 전체 분석기간 동안의 배당의 적정성을 평가
 - Net AS가 음(-)이면 향후 배당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
- 분석결과,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남
 - 이는 기존 유배당보험에서 향후 결손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 배당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면 미래배당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

< 표 14 > 유배당보험의 배당재원 충분성 검토(할인률 5% 가정)

구 분	A	B	C	D	E	F	G
Net Asset Share	(-)	(-)	(-)	(-)	(-)	(-)	(-)

(2) 옵션모형을 이용한 적정성 검토

□ 분석대상

- 예정이율만 차이가 있고 급부가 동일한 유배당보험과 무배당 보험을 비교 분석

□ 분석방법

- '유·무배당보험간 예정이자율 차이*'와 계약자배당 청구권의 콜옵션가치를 비교하여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분석

※ 유배당보험(7.5%)과 무배당보험(8.5%)의 보장이율 차이(1%p)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계약자배당 청구권 구입을 위해 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에 해당

- 과거의 이자율차배당 실적을 바탕으로 사후적 옵션가치를 산출하여 사전적 옵션가치와 비교함으로써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분석

□ 적정성 판단기준

- 유배당 상품의 추가적인 보험료라고 볼 수 있는 γ 는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 예정이율의 차이로 일종의 콜옵션(call option)의 성격을 갖는 배당가치에 따라 결정됨*

※ 유배당보험 보험료 \approx 무배당보험 보험료 + 계약자배당 예상치(=콜옵션가치)

< 표 15 >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현금흐름

	유배당	무배당	차이
보험료	X_D	X_N	γ
보험금	C_t	C_t	0
약정 투자수익	$\sum r_D$	$\sum r_N$	$\sum (r_D - r_N)$
배당금	$r < r_D$ 일 때, $p \cdot \text{Max}[\sum_{t=1}^{\tau} (y_t - r_D), 0]$ $r > r_D$ 일 때, $p \cdot \text{Max}[\sum_{t=1}^{\tau} (y_t - r), 0]$	0	→ 유배당의 배당금과 동일

주) r : 정기예금 금리, r_D : 배당보험 예정이율, r_N : 무배당보험 예정이율,
 p : 계약자 이익배분율, y_t : 실제 수익률

- 따라서, 계약자가 지불한 추가보험료(γ)와 유배당보험에 내재된 콜옵션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판단 가능

< 표 16 >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 판단 기준

추가보험료 > 사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전적 콜옵션가치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보다 사전적 콜옵션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계약자가 비싼 보험료를 지불	적정한 가격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가 내재된 콜옵션의 가치보다 작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계약자는 저렴한 보험료를 지불
추가보험료 > 사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후적 콜옵션가치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가 사후적 콜옵션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계약자는 추가적인 이익배분 요구의 정당성 확보(이자배당 부족)	적정한 이차배당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가 사후적 콜옵션의 가치보다 작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익배분요구가 합리화되지 못함 (이자배당 충분)

□ 분석결과

- ① 사전적으로 유배당보험에 내재되어 있는 옵션가치가 예정이자율 차이의 가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배당보험의 사전적 옵션가치는 예정이자율 차이에 비해 75% 정도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② 사후적으로 볼 때, 계약자가 납입한 추가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배당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 유배당보험의 사후적 옵션가치는 예정이자율 차이의 가치에 비해 175%를 상회하는 높은 가치를 보임
 - 한편, 이러한 결과는 사전적 옵션가치가 보수적으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③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무배당보험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쌌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나, 생보사간 무배당보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무배당보험의 보험료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17> 현재 판매되는 무배당보험의 가격비교

(단위 : %, 원)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유배당보험비중	48.3	44.9	23.3	42.4	2.1
무배당보험 가격	219	224	219	208	218

주1) 유배당보험 비중 : 2006년 3월 현재 유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비율

2) 현재 판매중인 무배당종신보험 (남자 40세, 20년납, 가입금액 10만원)

(3) 검토의견

- ☐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과거 계약자에게 과소 배당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음

3.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

가. 논의배경

- 상장 전에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후,
 - 과거 '90년 생보사 상장 논의과정에서와 같이 자산형성에 기여한 계약자 및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검토

나. 상장 전 기존자산의 재평가

- '98년 시가회계제도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자산은 시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동산 등 일부의 경우만 장부가로 평가
 - 시가 평가로 인해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손익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를 통해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등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등

< 표 18 > 매도가능증권 등 평가손익('06.3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삼성	대한	교보	홍국	금호	신한	미래
계약자지분조정	30,630	1,733	101	100	225	56	-
자본조정	29,783	1,523	110	108	262	147	△29
매도가능증권 등 평가손익	60,413	3,256	211	208	487	203	△29

- 장부가로 계상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식가치 산정을 위해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그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은 불가[※]

※ 자산재평가법상 자산재평가제도가 폐지('00년)되어 동 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음

□ 만약, 회계기준 또는 법령을 변경하여 생보사 상장시 시가로 평가된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 타산업과의 형평성 및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계처리로 인해 국제적 정합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음

다. 부동산 등의 평가차익의 계약자 배분 가능성

□ 부동산 장부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증액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므로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로 인해 발생한 평가차익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 만약, 계약자 몫의 부동산평가차익 상당액을 주주 몫의 이익잉여금에서 배분할 경우,

- 향후 동 자산의 처분시 계약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 부동산의 미실현이익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어 지급여력금액에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면 재무건전성 악화가 야기될 수 있음

□ 과거 '90년 생보사 상장 논의 과정에서 재평가처리지침을 제정하여 계약자에게 평가차익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 자산 처분시 계약자배당 재원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배분한 것임

※ 자산 시가평가로 인한 장부가액 ↑ → 자산처분시 처분익 ↓ → 계약자배당 재원 ↓

< 표 19 > 자산 시가평가 여부에 따른 계약자 몫 비교(예시)

	매입가	시가 평가 후			처분시				계약자 몫 의 합 (A+B)
		장부가	평가의	계약자 몫 (A)	처분가	장부가	처분의	계약자 몫 (B)	
원가평가	100	100	0	0	200	100	100	70	70
시가평가	100	150	50	35	200	150	50	35	70

주) 계약자 몫의 투자손익 비율을 70%로 가정

□ 결국, 부동산 등 미실현이익의 계약자 몫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이익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관건

- 부동산 등의 처분은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다 최근 무배당보험 신규판매가 대부분인 상황이므로
- 현행 당기 준비금비율의 투자이익 배분기준에 의할 경우, 부동산 등의 투자이익 중 계약자 몫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현재 구분계리 T/F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향후 개선방안이 제시될 계획

2. 적기시정조치 관련

- 금융권역별 적기시정조치 상세 기준 및 최근 변동 내역

1) 금융권역별 적기시정조치 상세기준

구 분				적기시정조치 종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¹⁾
조 치 발 동 요 건	자 본 충 실 도	은행 ²⁾	BIS비율	8%미만	6%미만	2%미만
		증권 ³⁾	영업용순 자본비율 ⁴⁾	150%미만	120%미만	100%미만
		보험	지급 여력비율	100%미만	50%미만	0%미만
		저축 은행	BIS비율	5%미만	3%미만	1%미만
		여전	조정자기 자본비율	7%미만	4%미만	1%미만
		신용 카드	조정자기 자본비율	8%미만	6%미만	2%미만
	경 영 실 태 평 가	은행등 ⁵⁾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부문 4등급 이하	종합등급 4등급 이하	-
		여 전		종합등급 4등급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부문 3등급 이상	종합등급 4등급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부문 4등급이하	종합등급 5등급
		신용카드		종합등급 1~3등급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부문 4또는 5등급	종합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
	조치내용 (권역 공통)				조직·인력 운용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신규업무 진출제한 등	점포폐쇄 및 신설제한,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정지 등

- 1)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경영개선명령발동시 '자본충실도' 및 '경영실태평가'요건 외에 '부실금융기관지정'요건 포함
- 2) 종금·부동산신탁회사 포함
- 3)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업자 포함
- 4) 증권회사·선물업자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 자산운용사는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 5) 여신전문회사, 선물업자, 부동산신탁회사를 제외하고 각 권역공통

2) 최근 변동 내역('05년이후 각 금융권역 관련규정 개정내역)

- ☐ 적기시정조치 발동전 요건해소시 적기시정조치 유예대상에서 제외
 - 은행('05.6.29), 보험('05.6.15), 증권('05.6.29), 자산운용('05.10.7), 상호저축은행('05.12.29) 관련규정 개정
- ☐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계획 승인 행사주체를 감독원장에서 금감위로 변경(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여신전문, '06.8.31)
 - 적기시정조치시 당사자에 조치근거와 이유제시 및 경영개선계획 사전심의시 당사자에 의견진술권 부여(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금융지주·여신전문·종금·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06.8.31)

3. 최근 5년간 금융업권별 신용대출 금리 증감현황

-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할부금융사

☐ 세부 내역

“붙임 참조”

□ 최근 5년간 은행별 가계신용대출 금리 추이

(단위: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우리은행	7.92	6.51	5.50	4.96	5.68
SC제일은행	6.89	8.81	5.61	5.88	7.99
외환은행	7.53	6.46	5.91	5.70	6.09
국민은행	8.42	6.48	5.69	5.17	5.32
(구)신한은행	8.63	6.72	5.41	5.74	5.69
(구)조흥은행	7.89	7.68	6.01	6.51	6.32
한국씨티은행 ²⁾	8.75	8.64	8.97	8.79	9.34
하나은행	7.83	7.03	5.93	5.46	5.84
대구은행	9.53	7.51	6.62	6.03	6.22
부산은행	9.96	8.40	6.25	5.79	6.34
광주은행	9.84	8.30	7.49	7.33	7.30
제주은행	11.56	9.59	9.70	8.90	8.31
전북은행	8.10	7.80	7.02	6.49	6.83
경남은행	8.02	7.60	6.57	5.97	6.10
중소기업은행	10.28	9.45	8.30	7.15	7.49
농협중앙회	7.86	7.20	5.66	5.25	5.83
수협중앙회	9.04	6.72	6.35	6.11	6.64
HSBC은행 ³⁾		9.45	9.09	9.04	10.57

- 1) 월별 가계신용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대출금리의 단순평균 :
한국은행 금리보고 기준으로 작성
- 2) 한국씨티은행의 2002년도 구씨티분은 데이터 부재로 산출 불가
- 3) HSBC은행은 2003년도 4월부터 가계신용대출 취급

□ 최근 5년간 상호저축은행 할인어음 금리 현황

(단위: %)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 6월
신용대출금리	12.74	12.73	11.20	10.79	10.50

* 자료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신용카드사 신용대출 금리 현황

(단위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신용대출금리	20.3	17.5	9.8	9.4	10.7

주1) 6개 전업카드사 제출 자료 기준(단, 신한카드('02.6월) 및 롯데카드('04년)는 분사 및 출범 이후부터 포함)

주2) 대여금 중 신용대출과 카드자산 중 카드론을 대상으로 산출

주3) 관리자산 기준

주4) 2006년은 연율환산

□ 할부금융사 신용대출 금리 현황

(단위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신용대출금리	19.8	20.6	20.4	20.6	21.7

주1) 대차대조표상 여신성금융자산의 대여금 중 신용대출 대상

주2) 신용대출 신규 취급실적이 있는 할부금융사만을 대상으로 작성

주3) 2006년은 연율환산

□ 리스사 신용대출 금리 현황

(단위 :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신용대출금리	14.2	12.6	13.2	13.4	12.8

주1) 대차대조표상 여신성금융자산의 대여금 중 신용대출 대상

주2) 신용대출 신규 취급실적이 있는 리스사만을 대상으로 작성

주3) 2006년은 연율환산

4. 2006년 7월말 현재 기준, 각 은행별 여신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출범이후 은행별 전체여신, 가계여신, 중소기업여신

"붙임 참조"

(붙임)

은행별 원화대출금 등

(단위 : 억원)

금융회사명	대출구분	2003년12월	2004년12월	2005년12월	2006년06월
우리은행	원화대출금	612,973	642,263	749,829	897,243
	가계자금대출금	273,213	293,096	360,243	446,409
	중소기업대출금	287,236	293,326	319,707	370,100
SC제일은행	원화대출금	234,482	266,601	318,679	306,574
	가계자금대출금	159,161	185,547	242,760	232,713
	중소기업대출금	54,370	62,282	58,583	60,920
하나은행	원화대출금	465,490	487,339	518,929	593,679
	가계자금대출금	258,164	280,457	302,174	335,869
	중소기업대출금	168,168	172,589	178,260	221,832
한국외환은행	원화대출금	274,733	266,060	292,593	298,720
	가계자금대출금	117,563	121,602	136,007	137,750
	중소기업대출금	125,862	120,416	130,114	136,699
신한은행 ¹⁾	원화대출금	702,467	738,322	798,293	817,452
	가계자금대출금	339,112	365,551	413,933	442,310
	중소기업대출금	303,042	307,357	311,531	309,821
한국씨티은행	원화대출금	210,084	232,250	203,118	197,661
	가계자금대출금	98,524	129,685	118,071	111,994
	중소기업대출금	90,395	81,136	62,151	60,881
국민은행	원화대출금	1,241,905	1,230,838	1,188,935	1,201,959
	가계자금대출금	814,134	842,929	826,168	825,261
	중소기업대출금	384,671	352,201	320,797	336,709
대구은행	원화대출금	92,916	99,781	112,531	117,393
	가계자금대출금	30,393	30,924	33,231	34,556
	중소기업대출금	56,811	63,716	72,818	77,702
부산은행	원화대출금	84,180	99,541	110,294	118,008
	가계자금대출금	26,365	34,536	35,693	34,963
	중소기업대출금	52,385	59,677	66,759	75,448
광주은행	원화대출금	50,092	53,654	63,090	67,345
	가계자금대출금	15,469	16,374	20,360	21,551
	중소기업대출금	31,883	34,236	35,647	38,879

제주은행	원화대출금	12,343	12,276	13,479	14,412
	가계자금대출금	4,550	4,144	4,433	4,598
	중소기업대출금	7,618	7,843	8,335	9,342
전북은행	원화대출금	22,634	25,889	28,664	30,273
	가계자금대출금	7,393	9,362	10,846	11,149
	중소기업대출금	14,006	15,341	16,426	18,076
경남은행	원화대출금	58,750	67,180	78,311	84,848
	가계자금대출금	15,569	17,619	24,465	28,506
	중소기업대출금	40,278	45,915	49,821	53,139
한국산업은행	원화대출금	168,446	172,602	185,369	187,158
	가계자금대출금	517	575	626	587
	중소기업대출금	43,808	51,460	59,717	64,466
중소기업은행	원화대출금	435,220	484,458	577,825	654,835
	가계자금대출금	61,460	70,469	97,384	111,407
	중소기업대출금	354,071	398,925	466,069	529,479
한국수출입은행	원화대출금	14,180	17,985	24,772	30,555
	가계자금대출금	0	0	0	0
	중소기업대출금	3,213	4,627	7,214	9,05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화대출금	635,521	703,281	799,547	836,547
	가계자금대출금	249,650	307,560	367,449	388,720
	중소기업대출금	334,881	335,124	357,819	366,35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원화대출금	60,611	69,803	87,975	96,748
	가계자금대출금	18,127	20,999	23,808	24,464
	중소기업대출금	33,395	36,924	46,340	53,776
국내은행계	원화대출금	5,377,026	5,670,121	6,152,232	6,551,410
	가계자금대출금	2,489,366	2,731,428	3,017,651	3,192,807
	중소기업대출금	2,386,093	2,443,097	2,568,110	2,792,682

1) 신한은행은 (구)조흥은행과 (구)신한은행의 합계

5. 참여정부 출범 이후(2003~) 상호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중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 등
대출 종류별 연도별 증감현황
- 연도별 규모. 증감율. 전체여신대비 비율 기재
- 공적자금 투입 저축은행과 비투입 저축은행으로 권역 구분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 저축은행 없음

☐ 상호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등 고정이하여신 현황*(단위 : 억원, %)

	'03.6.말	'04.6.말	'05.6.말	'06.6.말
총여신(A)	200,321	249,518	298,065	371,350
고정이하여신(a)	21,365	28,064	36,322	39,769
고정이하여신비율(a/A)	10.7	11.2	12.2	10.7
개인신용대출(B)	33,115	35,208	29,666	27,501
개인신용대출 고정이하여신(b)	5,496	8,328	6,947	6,270
전년도 대비 개인신용대출 고정이하여신증감률	-	51.5**	-16.6	-9.7
개인신용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b/B)	16.6	23.7	23.4	22.8
개인신용대출 외 대출(C=A-B)	167,207	214,310	268,399	343,848
개인신용대출 외 대출의 고정이하여신(c=a-b)	15,869	19,736	29,375	33,499
개인신용대출 외 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c/C)	9.5	9.2	10.9	9.7

* 중소기업대출의 고정이하여신 자료 미보유

**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03.6.말 현재 관련 자료 미보유 사례가 있어 증감률이 다소 높게 계산됨

6.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대출과 관련하여.

- 연도별 규모. 증감율. 전체여신대비 비율 기재
- 연도별 고정이하 여신중 부동산대출의 규모. 증감율. 전체 고정이하여신 대비 비율 기재

☐ 상호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등 고정이하여신 현황(단위 : 억원, %)

	'03.6.말	'04.6.말	'05.6.말	'06.6.말
총여신(A)	200,321	249,518	298,065	371,350
고정이하여신(a)	21,365	28,064	36,322	39,769
고정이하여신비율(a/A)	10.7	11.2	12.2	10.7
주택담보대출(B)	14,234	29,416	38,850	46,868
주택담보대출 고정이하여신(b)	800	1,593	2,659	2,786
전년도 대비 주택담보대출 고정이하여신증감률	-	99.2 *	66.9	4.8
주택담보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b/B)	5.6	5.4	6.8	5.9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 (C=A-B)	186,087	220,102	259,215	324,481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의 고정이하여신(c=a-b)	20,565	26,471	33,662	36,983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c/C)	11.1	12.0	13.0	11.4

*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03.6.말 현재 관련 자료 미보유 사례가 있어 증감률이 다소 높게 계산됨

7.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하여.
- 연도별 규모. 증감율. 전제여신대비 비율 기재
 - 연도별 고정이하 여신중 부동산대출의 규모. 증감율. 전제 고정이하여신 대비 비율 기재

□ 상호저축은행 PF대출 등 고정이하여신 현황(단위 : 억원, %)

	'03.6.말	'04.6.말	'05.6.말	'06.6.말
총여신(A)	200,321	249,518	298,065	371,350
고정이하여신(a)	21,365	28,064	36,322	39,769
고정이하여신비율(a/A)	10.7	11.2	12.2	10.7
PF대출(B)	9,481	26,302	40,262	69,025
PF대출 고정이하여신(b)	331	2,305	2,769	2,131
전년도 대비 PF대출 고정이하여신증감률	-	596.2*	20.1	-23.0
PF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b/B)	3.5	8.8	6.9	3.1
PF대출 외 대출 (C=A-B)	190,841	223,216	257,802	302,325
PF대출외 대출의 고정이하여신(c=a-b)	21,034	25,760	33,553	37,638
PF대출외 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c/C)	11.0	11.5	13.0	12.4

*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03.6.말 현재 관련 자료 미보유 사례가 있어 증감률이 다소 높게 계산됨

8. 최근 3년간 전체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비율

□ 상호저축은행 개인대출 비중(월별)

(단위 : 억원, %)

구분	개인대출(A)	총대출(B)	개인대출 비중(A/B)
'04.6.말	86,218	262,303	32.9
'04.7.말	87,615	268,595	32.6
'04.8.말	88,811	274,386	32.4
'04.9.말	89,207	279,360	31.9
'04.10.말	90,109	285,572	31.6
'04.11.말	90,561	290,981	31.1
'04.12.말	92,371	301,630	30.6
'05.1.말	90,028	301,380	29.9
'05.2.말	90,140	303,566	29.7
'05.3.말	90,594	305,659	29.6
'05.4.말	91,135	308,212	29.6
'05.5.말	91,657	312,668	29.3
'05.6.말	89,872	312,124	28.8
'05.7.말	86,492	308,523	28.0
'05.8.말	86,234	319,108	27.0
'05.9.말	86,569	325,041	26.6
'05.10.말	86,189	333,561	25.8
'05.11.말	85,787	342,045	25.1
'05.12.말	85,831	353,962	24.2
'06.1.말	82,615	352,949	23.4
'06.2.말	82,799	359,509	23.0
'06.3.말	82,145	364,072	22.6
'06.4.말	82,316	372,042	22.1
'06.5.말	81,366	375,405	21.7
'06.6.말	76,251	368,748	20.7

9. 상호저축은행 관련하여

- '03년 이후 '06년 8월초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 전체의 신용대출 규모 증가 현황
- '03년 이후 '06년 8월초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 예금,대출 평균금리 변동 현황

☐ 상호저축은행 신용대출 현황

(단위 : 억원)

	'03.6월말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06.7월말
신용대출	97,045	101,497	106,337	100,271	98,338

☐ 상호저축은행 예금·대출금리 현황

(단위 : %)

	'03.6월말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06.7월말
예금금리*	5.54	5.64	5.00	5.34	5.32
대출금리**	12.08	11.30	11.06	10.50	10.57

* 한국은행 금리(상호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금리) 자료 참고

** 한국은행 금리(상호저축은행 할인어음금리) 자료 참고

10. 2003년 이후 2006년 7월말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분기별 증감내역. 현재 PF대출 여신잔액

□ 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취급 현황

(단위 : 억원)

'04.6.말	'04.9.말	'04.12.말	'05.3.말	'05.6.말	'05.9.말	'05.12.말	'06.3.말	'06.6.말
29,427	32,484	37,087	38,739	40,538	43,541	54,276	65,833	69,539

11. '06년 7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과 관련하여

- BIS비율 8%미만 상호저축은행들의 각각 총여신규모, 고정이하여신규모, PF여신 규모
- 고정이하 여신 15%이상 상호저축은행들의 각각 총여신 규모, 고정이하여신규모, PF여신 규모
- 전체 상호저축은행의 PF여신 규모

☐ 붙임 참고

□ BIS비율 8% 미만 저축은행의 여신 현황('06.6.말 현재)

(단위 : 억원)

지역	저축은행명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PF대출액
서울	1	17,350	3,766	1,132
서울	2	2,142	236	47
서울	3	17,606	1,680	3,305
서울 소계		37,098	5,682	4,484
부산	4	3,179	326	148
부산	5	1,497	1,194	0
부산 소계		4,676	1,520	148
인천	6	9,748	1,440	698
경기	7	4,733	2,309	100
강원	8	507	21	0
인천,경기,강원 소계		14,988	3,770	798
대전	9	7,151	1,267	645
충남	10	1,110	100	0
충남	11	936	86	0
대전,충남 소계		9,197	1,453	645
전북	12	1,818	355	0
전북	13	996	210	31
전북	14	8,298	739	838
전북	15	780	316	49
전북	16	1,874	248	0
전북	17	619	106	0
전북 소계		14,384	1,975	918
광주	18	1,796	326	190
전남	19	2,244	455	645
전남	20	5,957	583	958
제주	21	4,337	634	396
광주,전남,제주 소계		14,334	1,998	2,189
대구	22	1,998	194	0
경북	23	637	203	0
경북	24	856	232	0
경북	25	1,718	408	17
대구, 경북 소계		5,209	1,037	17

□ 고정이하여신비율 15%이상 저축은행의 여신 현황('06.6.말 현재)

(단위 : 억원)

지역	저축은행명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PF대출액
서울	1	17,350	3,766	1,132
서울	2	25	12	0
서울	3	1,517	296	177
서울	4	1,199	270	160
서울	5	9,682	1,635	4,885
서울	6	488	173	0
서울 소계		30,261	6,152	6,354
부산	7	3,106	632	92
부산	8	9,439	2,185	4,693
부산	9	1,497	1,194	0
부산 소계		14,041	4,011	4,785
인천	10	2,888	486	168
경기	11	1,081	169	0
경기	12	4,733	2,309	100
경기	13	4,623	872	1,056
강원	14	2,237	427	0
인천,경기,강원 소계		15,562	4,264	1,325
대전	15	7,151	1,267	645
전북	16	1,818	355	0
전북	17	996	210	31
전북	18	780	316	49
전북	19	619	106	0
전북 소계		4,212	987	80
광주	20	1,796	326	190
전남	21	2,244	455	645
전남	22	2,910	440	160
광주,전남 소계		6,950	1,221	995
경북	23	637	203	0
경북	24	856	232	0
경북	25	407	100	0
경북	26	1,718	408	17
경북	27	127	24	0
경북 소계		3,745	967	17

□ 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액('06.6.말 현재)

(단위 : 억원)

	PF대출액
상호저축은행 전체	69,539

12. 최근 3년간 상호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 각 건별 인수자(법인명, 대표자명). 인수조건. 인수금액, 인수기준. 인수과정

□ 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내역

(단위: 억원, %)

저축은행명	인수자	인수금액	지분율	금감위 승인일자
(경남)아림	김○○	11.9억원	78.1	2004.6.11
(서울)삼환	영조주택(주) (대표자 : 윤○○)	60억원	55.0	2004.9.10
(서울)중앙	대양이엔씨(주) (대표자 : 김○○)	120억원	100.0	2004.9.10
(전북)현대	김○○ 외 1인	41억원	41.0	2004.11.12
(경남)경은	안○○	30억원	83.42	2005.5.27
(경기)늘푸른 (舊 안산)	정○○ 외 3인	100억원	100.0	2005.7.22
(인천)에이스	김○○ 외 1인	121.4억원	63.0	2005.7.22
(부산)한마음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자 : 임○)	250억원	100.0	2005.7.22
(경남)아림 (서울)한중	예금보험공사	168억원	100.0	2005.8.26
(전남)홍익	오○○	11억원	48.88	2006.1.20
(부산)부민	SLS중공업 (대표자 : 최○○)	30억원	100.0	2006.3.24
(서울)중앙	부산저축은행 권소시업	125억원	100.0	2006.4.14
(전북)나라	솔로몬저축은행 (대표자 : 임○)	133억원	90.0	2006.4.28
(인천)신한국	홍○○	310억원	64.8	2006.5.12
(서울)예가람	고려저축은행 권소시업	323억원	76.4	2006.5.26
(부산)인베스트	조○○	120억원	100.0	2006.5.26
(경남)밀양	테크노세미켄 (대표자 : 정○○)	19.6억원	49.1	2006.8.25

13. 2005년 이후 2006년 7월말 현재까지 PF ABS 발행 상세 내역

☐ 부동산 PF ABS 발행 추이

(단위: 억원, 건)

'05년	2005년		'06년	2006년	
	1/4분기	2/4분기		1/4분기	2/4분기
48,760 (105)	10,855 (20)	9,527 (24)	41,741 (61)	16,185 (27)	25,556 (34)

☐ 부동산 PF ABS의 만기별 현황('06년 상반기)

(단위: 억원)

구 분	1년 이하	1~2년	2~3년	3~4년	4~5년	계
발행금액	16,384	20,050	4,263	1,043	1	41,741
비율	39.3%	48.0%	10.2%	2.5%	0.0%	100%

☐ 부동산 PF ABS의 신용등급별 현황('06년 상반기)

(단위: 억원)

구 분	AAA	AA	A	BBB+	BBB	BBB-	계
발행금액	2,767	2	3,644	973	7,711	23,554	38,651
비율	7.2%	0.0%	9.4%	2.5%	20.0%	60.9%	100%

* 공모발행 ABS 기준 ('06년 상반기 중 부동산PF ABS의 사모발행금액은 3,090억원임)

(붙임1)

건설회사별 부동산PF ABS 발행현황

(단위:억원)

건설회사(시공사)	신용등급 ¹⁾	2006년 상반기	2005년	합계
신동아건설	BBB-	5,500		5,500
우림건설,대우자판,롯데건설	BBB-	3,800		3,800
대우건설,금호산업	BBB-	3,500		3,500
임광토건	BBB	2,590	1,580	4,170
금호산업 ²⁾	AAA	1,830		1,830
월드건설	BBB-	1,780	4,235	6,015
두산중공업	BBB+	1,770	520	2,290
동일토건	BBB-	1,700		1,700
신성건설	BBB-	1,614	180	1,794
대림산업	A+	1,600	1,720	3,320
계룡건설산업	A-	1,550	140	1,690
동문건설	-	1,500	2,900	4,400
우림건설	BBB-	1,450	1,770	3,220
대우자동차판매	BBB	1,310	3,147	4,457
대주건설	BBB-	1,230	700	1,930
대성산업	A	1,095	365	1,460
한일건설 ³⁾	BBB	1,050		1,050
CJ개발	BBB	900	2,080	2,980
고려개발	A-	850	650	1,500
경남기업	BBB-	798	205	1,003
풍림산업	BBB-	690		690
한신공영,경남기업 ²⁾	AA+	609		609
코오롱건설	BBB	550	1,700	2,250
성원건설	BBB-	505	1,585	2,090
남양건설	BBB	400	500	900
남광토건	BBB-	350	200	550
중앙건설	BBB	290	660	950
동일하이빌	BBB-	250		250
롯데기공	BBB	200	390	590
신세계건설	-	180	1,100	1,280
기타		300	22,433	22,733
합 계		41,741	48,760	90,501

주 1) 시공사 보증으로 발행된 ABS의 신용등급(최근 등급 기준)

2) 은행의 신용공여로 AAA등급으로 발행됨

3) 한일유엔아이도시개발프로젝트(주)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발행됨

14. 2003년 이후, 2006년 7월말 현재까지 금감원, 금감위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현황 (연도별 정리)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 규정

□ 행정처분 현황 ('03~'06.7월말)

(단위 : 건)

구 분	거래정지	경 고	계
'03년	133	82	215
'04년	182	13	195
'05년	306	27	333
'06.7월	97	25	122
계	718	147	865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 규정

<외국환거래법>

○ 제19조(행정처분)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당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 제31조(행정처분)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경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3. 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착오 또는 과실에 따른 경우
나.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이나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출의무가 있는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4.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관련서류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
6. 허가사항·신고수리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최근 1년간 2회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 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15. 2003년 이후 2006년 7월말 현재까지 상장·등록사에 대한
금감원, 금감위 제재 현황(연도별 정리)

- 검사대상, 위규내용, 제재내용
- 제재관련 규정 및 지침

(공시 관련)

□ 2003. ~ 2006. 7. 제재 현황

(단위 : 건)

구 분	'03	'04	'05	'06.7.
과 징 금 ^{주1)}	73	33	48	8
과 태 료 ^{주2)}	1	5	2	—
수사기관통보 등 ^{주3)}	15	13	12	11
경고·주의 ^{주4)}	34	15	20	9
기타(유가증권발행제한 등) ^{주5)}	1	—	—	16
계	124	66	82	44

주1)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과징금)

주2) 증권거래법 제213조(과태료)

주3)~주5) 증권거래법 제193조(상장법인등에 대한 조치), 동법시행령 제84조의26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 공시유형별 제재 현황

○ 2003년

(단위 : 건)

구 분	발행공시 ^{주1)}	정기공시 ^{주2)}	특수공시 ^{주3)}	수시공시 ^{주4)}	계
과 징 금	33	2	—	38	73
과 태 료	1	—	—	—	1
수사기관통보 등	2	1	—	12	15
경고·주의	5	13	1	15	34
기타	—	—	—	1	1
계	41	16	1	66	124

주1) 유가증권발행인등록(증권거래법 제3조), 유가증권신고서(증권거래법 제8조) 등 발행공시 위반

주2) 사업보고서등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제186조의3) 위반

주3) 합병등(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특수공시 위반

주4)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등(증권거래법 제186조) 수시공시 위반

○ 2004년

(단위 : 건)

구 분	발행공시	정기공시	특수공시	수시공시	기타	계
과 징 금	6	—	—	27	—	33
과 태 료	5	—	—	—	—	5
수사기관통보 등	—	—	—	3	10*	13
경고·주의	6	2	1	6	—	15
기타	—	—	—	—	—	—
계	17	2	1	36	10	66

* 공시위반과는 무관한 것으로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혐의를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한 건임

○ 2005년

(단위 : 건)

구 분	발행공시	정기공시	특수공시	수시공시	기타	계
과 징 금	5	2	—	41	—	48
과 태 료	2	—	—	—	—	2
수사기관통보 등	—	—	—	—	12*	12
경고·주의	3	2	—	15	—	20
기타	—	—	—	—	—	—
계	10	4	—	56	12	82

* 공시위반과는 무관한 것으로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혐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제공 또는 수사기관통보한 건임

○ 2006. 7월

(단위 : 건)

구 분	발행공시	정기공시	특수공시	수시공시	기타	계
과 징 금	1	—	—	7	—	8
과 태 료	—	—	—	—	—	—
수사기관통보 등	—	—	—	—	11*	11
경고·주의	—	—	—	8	—	9
기타	—	10	—	6	—	16
계	1	10	—	21	11	44

* 공시위반과는 무관한 것으로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혐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제공 또는 수사기관통보한 건임

(불공정거래 관련)

- 감독당국은 증권거래법 제206조의3(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 동법 시행령 제90조의4(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등), 금감위 규정(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등에 따라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위반행위자를 조치함
- 2003년 이후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조치 받은 상장회사 추이는 다음과 같음

구분	조치대상 상장회사수*	위반내용			조치내용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기타	검찰 고발	수사 기관 통보	행정 조치
2003년	31	7	1	23	4	9	18
2004년	44	8	8	28	5	30	9
2005년	50	13	7	30	8	36	6
2006.7월	10	2	-	8	2	7	1
합계	135	30	16	89	19	82	34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모두 포함

16. 신용회복위원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지원실적

☐ 신용회복위원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명, 억원)

연도	상담자수	신청자수	신청자 채무금액	확정자수	채무조정후 채무금액
2002년	26,789	505	170	42	11
2003년	221,239	62,550	28,960	35,500	15,530
2004년	765,756	287,352	104,530	268,451	82,456
2005년	646,448	193,698	51,813	208,231	43,313
2006년1월~7월	198,254	54,926	13,173	56,504	9,568
합계	1,858,486	599,031	198,646	568,728	150,878

17. 대부업 및 사금융 관련하여

- 1) 최근 3년간 대부업체 수 증감 현황 및 대부업체 수신 규모 증감 현황
- 2) 최근 3년간 무등록 대부업체 적발 현황 및 상세 내역
- 3) 최근 3년간 유사수신행위 적발업체 및 실태 상세 내역
- 4) 최근 3년간 대부업, 사금융 관련하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현황, 유형, 처리결과

1) 최근 3년간 대부업체 수 증감 현황 및 대부업체 수신 규모 증감 현황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은 관할 시·도에 부여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대부업체 수 증감 현황* : <붙임1> 참조

* 서민금융이용자 보호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 시·도로부터 수집한 현황을 단순취합한 것임(현재 '06.5월말 현황까지 취합)

○ 대부업체 수신 규모 증감 현황

-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2) 최근 3년간 무등록 대부업체 적발 현황 및 상세 내역

- 무등록 대부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이에 대한 조사는 수사당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전체 무등록 대부업자 적발내역은 알 수 없음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만, 우리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담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 영위 등 불법 혐의 업체를 수사당국에 정보제공**하고 있음

** 불법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 현황 : <붙임2> 참조

3) 최근 3년간 유사수신행위 적발업체 및 실태 상세 내역

- 금융감독원은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감독 권한이 없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따라 수사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우리원에서는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적발 내역은 알 수 없음

- 다만, 우리원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방법 등으로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 이를 수사당국에 제공*함으로써 단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있음

* 유사수신행위 통보 현황 : <붙임2> 참조

4) 최근 3년간 대부업, 사금융 관련하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현황, 유형, 처리결과

- ☐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설치('01.4월)·운영**하는 한편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 혐의업체를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있음

*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는 관할 시·도가, 형사처벌은 사법기관이 담당

**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상담 현황 : <붙임3> 참조

(붙임1)

대부업 등록 및 취소현황

(단위: 개)

기간	등록(누적)	등록취소 (누적)	자진취소 (누적)	작권취소 (누적)	등록업체
			(누적)	(누적)	
03.12월	13,931	2,377(17.1%)	2,376	1	11,554
04.12월	18,395	6,855(37.3%)	5,731	1,124	11,540
05.12월	25,947	11,391(43.9%)	8,690	2,701	14,556
06.05월	28,987	12,943(44.7%)	10,119	2,824	16,044

(붙임2)

수사기관 통보현황

(단위 : 개)

기간	대부업법 위반				기타 ²⁾	유사수신
	이자율 위반	불법적 추심	무등록 대부업	중개수수료 ¹⁾		
'03년	106	32	12	-	136	133
'04년	241	28	13	-	79	181
'05년	73	5	70	-	123	166
'06.7월	11	5	91	1	70	102
총계	431	70	186	1	408	582

주1) 중개수수료 수취 : 대부업법 개정예 따라 '05.9월부터 금지

주2) 기타 : 대출사기, 금융기관 유사상호 사용, 알선수재, 사문서위조 등 기타 법령위반

* 두 개 이상의 위반이 있는 경우 1개의 대표행위 위반으로 취급

(붙임3)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상담 및 수사기관 통보현황

(단위 : 건)

기 간	상 담								수사기관 통보
	고금리	불법적 채권추심	대부광고 ¹⁾	대부중개	기타부당 ²⁾	대부업 등록 등 문의	단순상담 ³⁾	계	
'03년	1,126	760	-	51	240	151	856	3,184	206
'04년	872	551	-	9	410	7	1,049	2,898	359
'05년	479	374	62	73	484	421	1,334	3,227	148
'06.7월	250	222	27	48	373	203	1,275	2,398	23
총계	2,727	1,907	89	181	1,507	782	4,514	11,707	736

1) 대부광고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05.8월부터 새로 분류

2) 기타부당 : 대출사기, 부채증명서 발급거부, 부당수수료 부과 등

3) 단순상담 : 압류·경매,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신용조회 등

18. '01년 이후 연도별 '사금융피해' 신고 접수 처리현황

- 연도별 유형별 증감현황
- 연도별 처리 상세현황

사금융피해상담현황

(단위 : 건)

기간	고금리	불법적 채권추심	대부 ₁₎ 광고	대부 중개	기타 ₂₎ 부당	대부업 ₃₎ 등록등 문의	단순 ₃₎ 상담	계
'01년	949	187	-	31	350	214	1,534	3,265
'02년	889	489	-	114	405	505	1,220	3,622
'03년	1,126	760	-	51	240	151	856	3,184
'04년	872	551	-	9	410	7	1,049	2,898
'05년	479	374	62	73	484	421	1,334	3,227
'06.7월	250	222	27	48	373	203	1,275	2,398
총계	4,565	2,583	89	326	2,262	1,501	7,268	18,594

- 1) 대부광고 : 대부업법 개정예 따라 '05.8월부터 새로 분류
- 2) 기타부당 : 대출사기, 부채증명서 발급거부, 부당수수료 부과 등
- 3) 단순상담 : 압류·경매,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신용조회 등

19.대부업 관련

- 금감원의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실시현황

☐ 최근 3년간 지자체의 검사요구건수 및 금감원의 검사실적

- 2006년에 각 시·도지사는 16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였으며, 금감원은 요청대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단위 : 개수)

구 분	검사요구건수	검사실적	비 고
2003년	70	62	
2004년	202	33	
2005년	53	28	

☐ 최근 3년간 검사내역 및 통보내역 : 붙임 참조

☐ 검사결과 조치이행 감독 현황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권 및 검사결과 조치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붙임)

대부업자 검사 실시 현황

1. 2003년도 : 21개사 62개 영업점

회 사 명		지 적 사 항
그랜드 캐피탈	본점	- 부당채권 추심행위 - 불공정약관 사용 - 대부업 변경등록 미실시 - 영업장에 대부계약 주요내용 미게시
	부천	- 없음
	수원	- 없음
베스트크레디트(본점)		-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
산와	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대전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수원	- 없음
	안양	- 없음
	성남	- 없음
	대구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중앙캐피탈(본점)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 영업장에 대부계약 주요내용 미게시
파트너 크레디트	본점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창원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대전	- 불공정약관 사용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대구	- 없음
해피레이디	본점	- 없음
	대구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송내	- 없음
대호 크레디트	부산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진주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김해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청주	- 없음
	춘천	- 없음
	대전	- 없음
	대구	- 없음
	익산	- 없음
	전주	- 없음
	본점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수원	-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
	인천	-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

회 사 명		지 적 사 항
에이앤오 인터내셔널	창원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본점	- 부당채권 추심행위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대구	- 없음
	포항	- 없음
	대전	- 없음
	전주	- 없음
	성남	- 없음
	안양	- 없음
엠티엔인터내셔널(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여자 크레딧	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 대부업 변경등록 미실시
	대구	- 없음
에스캐피탈	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 대부업 변경등록 미실시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대구	- 없음
퍼스트머니	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 대부업 변경등록 미실시 - 보증인앞 대부계약서 미교부
	대구	- 없음
프로그래스	본점	- 부당채권 추심행위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대구달서	- 없음
	대전	- 없음
	대구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성남	- 없음
에이엔젤캐피탈(본점)		- 대부관련 광고표시 부적정
대세론(본점)		- 없음
엔젤 크레딧	본점	- 없음
	서울	- 없음
오렌지 소비자금융	본점	-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 - 불공정약관 사용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수원	-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
	안양	-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
원마이 인더스트리	본점	- 없음
	수원	- 없음
	역곡	- 없음
코알라코퍼레이션(본점)		- 없음
OK파이낸스(본점)		- 없음
센츄리서울(본점)		- 없음

2. 2004년도 : 27개사 33개 영업점

회 사 명		지 적 사 항
하나기업금융(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동양캐피탈(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기협기술금융(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그린씨엔에프(본점)		- 없음
현대기업금융(본점)		- 없음
씨앤씨캐피탈(본점)		- 없음
아세아파이낸스(본점)		- 없음
세흥크레디트(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 영업장에 대부계약 주요내용 미게시
티에스씨앤아이(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 영업장에 대부계약 주요내용 미게시 - 채무관련인알 대부계약서 미교부
미다스캐피탈(본점)		- 없음
부영파이낸스(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신안캐피탈(본점)		- 없음
요론닷컴(본점)		- 영업장에 대부계약 주요내용 미게시
명지캐피탈(본점)		- 없음
우성캐피탈(본점)		- 없음
동아캐피탈(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제일캐피탈그룹(본점)		- 영업장에 대부계약 주요내용 미게시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원마이더스인더스트리(수원)		- 없음
베스트크레디트(본점)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리드코프(대구)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 대부업 변경등록 미실시
삼진아이앤씨(청주)		- 없음
에이앤오인터내셔널(본점)		- 없음
프로 그래스	강남	- 없음
	부평	- 없음
	서면	- 불공정약관 사용
파트너크레디트(덕천)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개인정보 요구

회 사 명		지 적 사 항
산와	강남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 채무관련인앞 대부계약서 미교부
	부평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 채무관련인앞 대부계약서 미교부
	덕천	- 불공정약관 사용 - 채무관련인앞 대부계약서 미교부
	서면	- 불공정약관 사용 - 채무관련인앞 대부계약서 미교부
	광주	- 채무관련인앞 대부계약서 미교부
원캐싱(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아펙스서울(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3. 2005년도 : 21개사 28개 영업점

회 사 명		지 적 사 항
바로크레딧(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 차주의 예금계좌정보 관리 부적정
베르넷크레딧(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 불공정약관의 사용
미래크레딧(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룰루크레딧(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머니라이프(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센추리서울(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유아이크레딧(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스타크레딧(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위드캐피탈(본점)		- 없음
미래베스트(본점)		- 없음
동양파이낸셜(본점)		- 없음
오케이론코리아(본점)		- 없음
리드코프(광주)		- 없음
파트너크레딧(강남)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 차주의 예금계좌정보 관리 부적정
산와	노 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청량리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수 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대 전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퍼스트머니	본 점	- 채권양도담보 제공송낙서 작성 부적정
	신 촌	- 대부업 광고 부적정
해피레이디(본점)		- 없음
여자크레딧(본점)		- 없음
아네스트(본점)		- 없음
코알라코퍼레이션(본점)		- 없음
프로그레스	청량리	- 없음
	노 원	- 없음
	대 전	- 없음
	광 주	- 없음

(별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검사 등) ①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의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가 관할하는 영업소에 대한 검사(공동검사를 포함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당해 명령의 내용을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 금감원이 06년 실시한 엔터주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 2006년 중 엔터테인먼트주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조사를 완료한 종목 수는 7개 종목임

- 조치유형별로 검찰고발이 3종목, 수사기관 통보 2종목, 경고 1종목, 무혐의 1종목임
- 혐의유형별로 시세조종 2종목, 미공개정보이용 2종목,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2종목임

조치내용별		혐의별	
고발	3	시세조종	2
수사기관통보	2	미공개	2
경고	1	지분보고	2
무혐의	1	무혐의	1

21. 최근 3년간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 정상상장사와 우회상장사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혐의 등 불공정 행위 포착 내역
- 정상상장사와 우회상장사에 대한 금감위의 제재내역 비교

□ 2004년 이후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한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적발사항 및 조치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2004년	2005년	2006.6월
혐의 유형별	시세조종	103	106	39
	미공개정보이용	40	59	14
	유가증권신고서미제출	1	-	2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42	65	21
	단기매매차익취득	37	29	7
	기 타	3	-	2
	무혐의	21	18	13
계		247	277	98
조치 유형별	검찰고발	60	73	45
	검찰통보	106	113	25
	수사의뢰	-		
	과징금	3	3	-
	단기매매차익반환	51	56	8
	문책 등	6	14	7
	무혐의	21	18	13

□ 이 중 우회상장된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사가 완료된 종목수는 '06. 8월말 현재 12개 종목임

○ 혐의유형별로 시세조종 3종목, 미공개정보이용 5종목, 대량 보유보고의무위반 1종목임

○ 조치유형별로 검찰고발이 4종목, 수사기관 통보 4종목, 경고 1종목, 무혐의 3종목임

혐의유형별		조치내용별	
시세조종	3	고발	4
미공개	5	수사기관통보	4
지분보고	1	경고	1
무혐의	3	무혐의	3

이 종 구 의 원

1. 최근 자동차보험 수지악화 현황 분석 및 대책

(붙임) 참조

(붙임)

(단위: 천원)

지출차별	FY03('03.4월-'04.3월)			FY04('04.4월-'05.3월)			FY05('05.4월-'06.3월)			FY06('06.4월-'07.3월)			FY07('07.4월-'08.3월)			FY08('08.4월-'09.3월)		
	1. 발생액	2. 경과보충료	3. 보충영업손익	1. 발생액	2. 경과보충료	3. 보충영업손익	1. 발생액	2. 경과보충료	3. 보충영업손익	1. 발생액	2. 경과보충료	3. 보충영업손익	1. 발생액	2. 경과보충료	3. 보충영업손익	1. 발생액	2. 경과보충료	3. 보충영업손익
	399,715,087	504,949,594	-53,979,782	426,470,702	559,770,738	-43,813,402	419,916,218	559,340,124	-46,901,918	69,328,678	90,841,349	-8,631,102	31,579,561	38,462,458	-5,958,742	34,154,689	40,717,304	-5,054,123
	217,802,393	275,136,551	-31,258,772	202,317,972	272,870,921	-10,826,124	195,642,868	248,574,456	-27,850,266	31,579,561	38,462,458	-5,958,742	34,154,689	40,717,304	-5,054,123	34,154,689	40,717,304	-5,054,123
	164,393,851	212,972,046	-23,823,650	166,595,905	221,872,689	-15,205,206	186,966,783	227,527,515	-31,867,538	15,736,598	19,711,609	-5,864,939	15,736,598	19,711,609	-5,864,939	15,736,598	19,711,609	-5,864,939
	103,159,349	126,825,267	-22,646,439	92,525,188	115,364,608	-23,938,324	89,332,118	105,877,679	-38,138,345	40,624,470	49,126,893	-9,776,838	40,624,470	49,126,893	-9,776,838	40,624,470	49,126,893	-9,776,838
	280,706,862	358,062,154	-42,600,474	227,211,888	306,341,669	-21,222,786	220,747,708	283,544,244	-46,083,869	36,742,800	47,595,814	-4,240,878	36,742,800	47,595,814	-4,240,878	36,742,800	47,595,814	-4,240,878
	220,559,580	273,187,690	-40,536,635	209,857,221	281,869,448	-13,231,175	222,477,972	280,507,769	-35,870,356	292,597,956	387,983,023	-14,262,711	292,597,956	387,983,023	-14,262,711	292,597,956	387,983,023	-14,262,711
	1,719,328,656	2,259,349,176	-105,994,969	1,652,002,016	2,298,860,271	-64,000,553	1,783,943,185	2,351,831,669	-145,656,370	142,772,072	193,904,047	-7,790,227	142,772,072	193,904,047	-7,790,227	142,772,072	193,904,047	-7,790,227
	744,887,324	1,017,893,958	-81,500,151	726,013,925	1,028,736,595	-49,487,886	833,110,546	1,121,374,255	-85,528,410	138,597,499	169,510,949	-28,562,842	138,597,499	169,510,949	-28,562,842	138,597,499	169,510,949	-28,562,842
	683,117,354	888,944,060	-96,388,802	666,072,909	902,688,328	-67,067,699	764,922,834	965,621,453	-132,469,308	149,571,142	192,850,751	-10,864,885	149,571,142	192,850,751	-10,864,885	149,571,142	192,850,751	-10,864,885
	779,162,336	1,001,299,694	-69,801,748	728,284,087	1,015,501,087	-19,234,570	819,884,900	1,092,145,239	-47,345,758	24,405,102	30,208,015	1,089,850	24,405,102	30,208,015	1,089,850	24,405,102	30,208,015	1,089,850
	119,240,930	160,937,991	2,747,791	133,258,357	179,505,966	-1,738,566	156,974,282	197,722,914	-12,101,962	14,168,071	17,425,776	-980,688	14,168,071	17,425,776	-980,688	14,168,071	17,425,776	-980,688
	1,049,723	1,230,991	-5,812,762	23,085,784	32,807,888	-9,046,567	62,119,776	79,999,303	-7,105,639	8,155,335	9,905,949	-507,606	8,155,335	9,905,949	-507,606	8,155,335	9,905,949	-507,606
	648,812	320,310	-8,134,402	14,195,855	18,294,488	-15,106,362	36,231,959	45,574,492	-14,296,018	333,892	1,249,496	221,290	333,892	1,249,496	221,290	333,892	1,249,496	221,290
	12,537,961	17,438,786	-4,377,811	11,940,026	15,266,648	-2,938,296	6,794,686	8,098,926	-3,426,703	418,577	559,509	-4,401,849	418,577	559,509	-4,401,849	418,577	559,509	-4,401,849

주) 현대하이카는 '06.4월 영업개시하여 FY03-FY05 실적 없음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안

I. 추진배경 및 경과

- 전국민이 이용하는 자동차보험은 '00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원을 상회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 시현
 -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일부 중소형사의 부실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손해보험사의 경영악화 예상
 -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만성적자의 주요요인일 뿐 아니라 선량한 국민이 낸 보험료가 보험사기자에게 지급되어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상해·방화 등 중대범죄를 야기
 - 대통령께서도 이를 염려하시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미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06.4.18)
- ⇒ 감독당국은 각계 전문가들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특별대책단」을 구성('06.5.2)하여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

II. 경영정상화 종합대책

1. 보험업계의 자구노력방안 강구

-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험업계의 자구노력을 강화
 - 회사 자발적으로 사업비 감축, 분기별 사업비 사용실적 공시 및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 등 사업비 절감방안 마련

-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인상 및 회사별 보험료 비교공시 확대 등 시장의 자율감시기능 강화

2.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대책 마련

- 과속단속카메라 증설,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 및 사고다발지역 도로표지판·중앙분리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3. 보험요율 산출체계 합리화

-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 차량 모델별 위험도(손상정도 및 수리비)에 따라 적정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 현재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율이 과도하고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사고시 보험료 할인제도를 각 보험회사별로 자율 적용하도록 허용

4. 보험사기 방지방안 마련

- 금감위(원)에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자료요청권 신설, 부재환자 관리강화 등 효율적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제도적 지원

- 수사기관, 국민건강보험 및 유사보험 기관과의 보험사기 조사 협력체제 강화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전담조직 신설 등 인프라 구축, 금감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성능 개선 등 조사기능 강화

2.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조사 인력 및 전체 인력 중 비중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조사 인력 현황

(단위 : 명, %)

회사명		보험사기 조사인력(A)	전체인력(B)	비중(A/B)
생명보험	교보생명	24	4,498	0.53
	삼성생명	14	6,444	0.22
	대한생명	7	4,937	0.14
	알리안츠생명	4	1,696	0.24
	신한생명	3	882	0.34
	미래에셋생명	2	1,049	0.19
	금호생명	2	875	0.23
	흥국생명	2	487	0.41
	계(8개사)	58	20,868	0.28
손해보험	삼성화재	50	5,360	0.93
	현대해상	35	2,835	1.23
	LIG화재	24	2,742	0.88
	동부화재	23	3,074	0.75
	신동아화재	16	1,064	1.50
	메리츠화재	15	2,080	0.72
	제일화재	10	1,343	0.74
	쌍용화재	8	1,133	0.71
	교보자동차	9	1,134	0.79
	대한화재	8	976	0.82
	그린화재	7	911	0.77
	교원나라	1	354	0.28
	계(12개사)	206	23,006	0.90

※ 조사인력은 '06년 7월, 전체인력은 '06년 3월 기준임

(참고)

주요국의 보험사기 방지기구 현황

구분	법규	담당기관	대응책	DB 구축
미국	보험사기 방지법	- 보험사기국 - NICB(임의단체) - ISO(DB)	- 보험범죄에 관한 조사 협조 - 보험범죄정보관리 및 자료제공	- ISO중심 자료집적
영 국	- 없음	- 보험협회 산하 CFPB (Crime & Fraud Prevention Bureau, 1995) - IFB(Insurance Fraud Bureau, 2006)	- 경찰과 긴밀한 협조 - 관련 기관과 협조 - 연수, 세미나 개최 - newsletter 배포 - 신고센터(hot line) 운영	- 1995부터 DB구축 후 1996년 자동차보험 사기가 3.9%에서 3%, 가정종합 보험사기가 4.8%에서 4.2%로 하락
일본	- 없음	- 손해보험방범 대책협의회 (1979) - 비상설협의회	- 보험회사간에 정보교환 전산망 구축	- 자동차 및 인보험 사고 정보교환 시스템 운영
프랑스	- 없음	- 보험협회 산하 보험사기국 (ALFA)	- 보험회사간에 정보교환 전산망 구축 - 관련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경찰, 소방서 등)	- 1992부터 보험회사간에 전산망을 활용하여 자료 교환
독 일	- 없음	- 보험협회	-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간에 정보를 교환	- DB구축, 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코드 (code)화
벨기에	- 없음	- 보험협회 산하 사기위원회 (Fraud Committee)	- 1996부터 경찰청과 협회가 공동으로 경찰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사기사례」에 대한 교육실시	- 1996부터 보험사들이 생· 손보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상호 Data 교환 - DB 구축 논의중
스페인	- 없음	- 보험협회 산하 사기방지위원회 (Fraud Prevention Committee)	- 정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 향후 도난차량 관리 위해서 경찰과 네트워크 구축	-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도난 자동차 DB 구축, 관리
스위스	- 없음	- 보험협회	- 보험회사 상호 협조체제 구축 - 보험회사 자체 대응 - 협회의 홍보활동	- 자료 협조체제는 20년 넘게 구축되어 있으나, 보험회사의 비협조로 활발하지 않음
이탈리아	- 없음	- 보험사기방지 서비스(ASS)	-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	

미국의 보험사기 방지조직

□ 보험사기 방지조직

- 州보험청 보험사기방지국(IFB : Insurance Fraud Bureau)
 - 41개 州정부가 보험사기방지국(IFB)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보험청에 소속되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
 - 41개 州에 1,240명(州當 30명)의 인력이 보험사기방지국(IFB)에 근무하고 있고,
 - 보험사기 조사권 · 체포권 등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 · 경찰 등 사법기관 및 민간기관 보유 정보를 이용
- 全美 보험범죄방지협회
(NICB : 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
 - NICB는 1992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현재 약 1,000여개의 보험회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음.
 - 200여명의 전직 연방수사관(FBI) 및 경찰관을 고용하여 사법기관과 보험사기를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지원

미국 주요 주(州)의 보험사기국 현황

(단위 : 명, 백만달러)

주(州)	담당기관	직원수	조사자수	예산	경찰권
캘리포니아	보험청 보험사기국	286	156	34	있음
플로리다	보험청 보험사기국	171	90	11	있음
메사츄세츠	州소속 보험사기조사국	41	24	5.4	-
네바다	검찰청 산재사기국	31	13	2.2	있음
뉴저지	검찰청 범죄방지국	302	206	29.9	있음
뉴욕	보험청 보험사기국	62	48	미공개	있음
텍사스	보험청 보험사기국	31	17	1.6	있음
와싱턴	노동청 산재보험사기국	46	31	2.9	-

* 미국의 보험사기방지연합회(CAIF), "A Statistical Study of State Insurance Fraud Bureaus" 03.12 발표)

3. 신탁중앙회 지원시 예상되는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 감독당국은 신탁중앙회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신탁측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일부 재정지원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 구체적인 재정지원 규모 및 지원형식은 예산당국이 예산운용 계획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
- 감독당국은 정부 재정지원에 따른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신탁측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있는바
 - 현재 상환준비금 금리 추가 인하(2.5% → 2.0%),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 도입, 신탁의 중앙회 회비납부액 인상, 신탁중앙회 조직구조 개편 등 방안이 추진중이며
 - 아울러 손실재발방지를 위해 '04년부터 도입된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제도 등 내부통제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중에 있음

4. 신탁중앙회 측이 검토중인 자구노력 내용

□ 현재 신탁중앙회는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중인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앙회 재무실화의 원천방지를 위해 신용예탁금의 운용수익률에 따른 실적배당제 도입

- 중앙회 결손금 과다의 주원인은 과거 조합에 대한 확정 고금리 이자지급과 방만한 자산운용에 기인바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 결손금 보전을 위해 상환준비금 금리 추가 인하*

* 중앙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01.8.)을 통해 1차 인하(6.5%→2.5%)

○ 조합의 중앙회 회비납부액 인상

○ 중앙회의 지역본부 통폐합 등 조직체개 개편 등

□ 감독당국은 신탁중앙회가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 지도할 예정

5. 신탁 및 수탁의 연체율이 과도한데 대한 분석 및 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

- '06.6.말 현재 신탁 및 수탁의 연체율은 14.1% 및 9.6%로 '04.12.말 대비 각각 1.6%p 및 0.6%p 하락
 - '05.12.말에 비해서는 신탁이 소폭 상승(0.2%p)한 반면, 수탁은 소폭 하락(0.3%p)하였으나 그 변동 폭은 미미한 수준
 - 신탁 등은 신용도와 자금력이 낮은 서민, 영세상공인 등이 주된 고객이므로 상대적으로 은행 등에 비해서 연체율이 높고
 - 연체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기회복을 통한 영세서민 등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
 - 감독당국은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를 위해 부실채권의 조기 상각 독려, 모니터링시스템 확충 등 건전성 감독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각 중앙회를 통해 여신심사 강화를 위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도입*하도록 지도하는 등 리스크관리시스템 강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 신탁은 '06.1월부터 본격 시행중이며, 수탁은 과거 시스템을 개선하여 '06.6월부터 가동중

6. 바젤2에 따른 신BIS 관련,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선정기준
7. 바젤2에 따른 신BIS 관련, 해외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선정기준
8. 바젤2에 따른 신BIS 관련, 해외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선정사례
9. 바젤2에 따른 신BIS 관련,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의 선정 절차 및 향후 일정

“붙임 참조”

(붙임)

6. 바젤2에 따른 신BIS 관련,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선정기준

(가) 객관성

□ 정의

- 평가방법론은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과거 경험 데이터에 근거하여 검증되어야 함

□ 목적

- 피평가회사의 신용도에 대해 정확하고도 충분한 근거에 기초하여 등급 산출

□ 요건

- 신용평가기관은 자체 평가방법론이 피평가회사의 신용도 결정에 관련 있는 요소를 반영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신용평가기관은 상품군별로 평가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적용함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신청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엄격한 사후검증(Back testing)을 포함한 평가방법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음을 문서로 입증해야 함

* 다만, 신BIS협약 최초 시행시에 신청하는 신용평가기관의 경우에는 과거 1년간 운영으로 완화

- 평가방법론이 과거에 정확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였음을 통계적 자료*에 의해 증명해야 함

* (예시) 등급별 부도율, 등급변동 현황분석 등

- 사후검증(Back-testing)을 통해 드러난 체계적인 오류가 향후 신용평가방법론에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나) 독립성

□ 정의

- 평가방법론이 외부의 정치적 영향·제약,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 목적

- 적격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시 이해상충과 외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성 유지

□ 요건

- 신용평가기관은 독립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감독당국에 입증해야 함
 -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관리·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구비
 - 신용등급부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음
- 신용평가기관은 독립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감독당국에 제시해야 함

① 신용평가기관의 조직과 지배구조

- 경영진의 구성·책임범위, 외부 또는 그룹 관계자와의 관계
- 조직구조상 신용평가부문과 비신용평가부문의 분리를 위한 제도
- 내부감사조직의 구성과 기능
- 주요 주주 현황

② 신용평가기관의 재무 현황(financial resources)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재무건전성 입증자료

③ 신용평가기관의 직원 구성과 전문성

- 직원의 신용평가 경력과 기타 전문성 입증자료
- 연수 프로그램의 수준과 정기적 실시여부, 참여정도와 업무 연관성

(다) 일관성

□ 정의

- 평가방법론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재무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함

□ 목적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가 시간이 경과하고 시장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장

□ 요건

- 신용평가기관은 최소 1년에 한번 백테스팅(사후검증)을 실시해야 함
- 검토 과정의 정기성은 감독당국에 의해 모니터링되어야 함
- 신용평가기관은 피평가회사의 경영진과의 접촉 수준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함
- 신용평가기관은 신용평가방법론의 중요한 변화*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함

* 특정 시장영역에서 신용평가의 상당한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

(라) 투명성

□ 정의

- 신용평가기관은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평가방법론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신용평가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은 이해관계 은행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가능해야 함

□ 목적

- 신용평가기관이 채택한 평가방법론과 이에 따른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모든 잠재적 이용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함
- 적법한 이해관계 은행들이 신용등급을 동등한 조건*으로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정 경쟁 여건을 형성

- * 모든 은행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신용등급을 제공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서는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함을 의미

□ 요건

- 적격 신용평가기관은 평가방법론을 공개해야 하며,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되 잠재적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함

- 평가방법론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속히 공개해야 함
- 신용평가기관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함

* 예시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무상으로 배부되는 출판물

- 신용등급 제공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신용평가기관은 전체 신용등급 리스트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새로운 등급 부여·변경시 즉시 리스트를 갱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신용등급 제공시 이용료를 부과하는 신용평가기관은 이용료를 지불하는 모든 은행들이 전체 신용등급 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등급 부여·변경시 리스트를 즉시 갱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신용평가기관은 행동강령 또는 내부절차에 따라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주요 고객 또는 정보이용자에게 신용등급에 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함
- 신용등급 결정과정에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동 사항을 신용평가서에 포함

(마) 신뢰성

□ 정의

- 신용평가기관의 개별 신용평가가 시장에서 이용자들에게 신뢰성을 인정받아야 함

□ 목적

- 시장(은행)에서 규제자본 산출목적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사용

□ 주요 평가요소(요건)

- 신용평가기관의 시장점유율
- 신용평가기관의 수익, 일반적인 재무 현황
- 신용등급에 기초한 가격결정 여부

7. 바젤2에 따른 신BIS 관련, 해외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ECAI) 선정기준

<바젤위원회 기준>

(가) 객관성

- ☐ 신용평가방법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역사적 경험에 의해 검증되어야 함

(나) 독립성

- ☐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다) 국제적 이용가능성/투명성

- ☐ 신용평가방법론을 공개해야 하며, 국내외 모든기관이 동일한 조건으로 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라) 공 시

- ☐ 부도의 정의, 등급변동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함

(마) 평가인력 및 시스템

- ☐ 신용평가시 질적·양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해야 함

(바) 신뢰성

- ☐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수준을 투자자의 신용등급 이용실적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함

<영국 기준>

(가) 방법론의 객관성

- ☐ 감독기관은 신용평가 방법론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이며 과거 경험치에 기초하여 검증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함

(나) 방법론의 독립성

- ☐ 감독기관은 신용평가 방법론이 외부의 정치적인 요인이나 경제적인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해야 하며 신용평가기관은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직원의 전문성을 입증해야 함

(다) 신용평가 방법론의 지속적인 검토

- ☐ 감독기관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여부와 재무상황 변화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신용평가 방법론의 중요한 변화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

(라) 신용평가 방법론과 신용평가등급의 투명성 및 공시

- ☐ 신용평가기관은 모든 잠재적인 이용자들이 그들의 신용평가기법이나 신용평가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마) 신용평가등급의 신뢰성과 시장의 수용

- ☐ 감독기관은 신용평가기관의 개별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 인정여부를 확인해야 함

8. 바젤2에 따른 신BIS 관련, 해외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ECAI) 선정사례

☐ 캐나다

- '05.6월 4개 신용평가사(DBRS, Moody's, S&P, Fitch)를 (예비)지정

☐ 일 본

- '06.3월 국내 평가회사인 R&I, JCR와 일본에서 영업중인 국제 평가사인 S&P, Moody's, Fitch 등 총 5개사를 (예비)지정

☐ 영 국

- '05.1월 ECAI 지정기준(안)을 발표하고 '06년중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을 예비지정(shadow recognition)한 후, '06년말까지 본지정 예정

☐ 미 국

- SEC의 NRSRO(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로 5개 신용평가사(S&P, Moody's, Fitch, DBRS, A.M.Best)를 지정하여 ECAI로 활용 예정
- '05.9월 발표된 바젤 I A에 따르면 NRSRO로 지정된 5개 신용평가사의 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9. 바젤2에 따른 신BIS 관련,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의 선정 절차 및 향후 일정

<선정 절차>

- 금감원 실무심사반의 신청서 검토 결과 및 신청기관별 임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 내부인사와 외부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로 구성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결정

<향후 일정>

- 표준방법 목표은행의 원활한 준비와 내년부터 실시되는 병행산출에 대비하기 위해 '06년말까지 예비지정을 마무리할 예정
- ①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 신청 접수(8월말)
- ②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예비지정(4/4분기)
- ③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별 매핑기준 마련(4/4분기)
 -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신BIS협약상의 신용 등급별 위험가중치(S&P기준)와 연계하는 매핑기준 마련

10. 은행들의 금융채 발행 급증에 대한 분석 및 리스크 관리 방안

☐ 금융채 발행 현황

‘06.3말 기준 국내은행 금융채 발행잔액은 총 117.5조원으로
‘05년 4/4분기 이후 발행액이 급증하는 추세임

☐ 금융채 급증 요인

시중자금의 비은행권 상품 이동 등으로 은행예수금이 감소함에
따라 장기안정적 재원으로 금융채가 각광받고 있으며 향후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원가성 장기안정재원을
조기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융채 발행에 적극적

☐ 리스크 관리방안

은행이 금융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 은행의 안정
적인 영업기반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채 발행이
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은행의 자금수급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11. 일부 금융사의 강제적인 개인신용정보 활용동의 요구에
대한 공정위의 최근 시정조치와 관련, 금감원의 후속조치
내역 및 재발방지 대책

- 삼성·롯데카드, 농협 등 일부 카드사가 고객이 신용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불허하였으나,
 -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후 롯데카드 및 농협은 고객이 신용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회원가입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며,

삼성카드는 고객이 위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이 될 수 있는 카드상품을 개발중에 있음
 - 감독당국에서는 카드발급시 신용정보제공에 대한 고객의 동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음
- 또한 금융회사가 여신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을 할 때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종전의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양식에는
 - 고객 신용정보의 활용 목적 및 제공 대상기관 등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어 고객의 불만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금감원은 '05년 11월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이 동의할 내용, 정보 제공·활용 대상기관, 활용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동의서 양식을 개정토록 권고한 바 있으며
- 각 금융회사는 금년 5월부터 동의서 양식을 모범규준에 맞게 개정하여 사용중에 있음

12. 신용평가업과 신용조회업의 차이

□ 신용평가업과 신용조회업에 대해서는 현재 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바,

- 양 업무의 정의, 업무방법, 평가대상, 허가요건 등에 있어 차이 존재

☞ “붙임” 참조

신용평가업과 신용조회업의 차이

구분	신용평가업	신용조회업
정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특수채, 회사채, CP, ABS)에 대해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위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연체정보 등
업무방범	-신용평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사업실적 등 현재 상황 뿐 아니라 사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유가증권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신용등급으로 표시하고 이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자체 평가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가공·분석함으로써 데이터 자료, 신용평점, 등급 및 신용보고서 등을 산출하여 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
평가대상	-회사채, CP, ABS 등 유가증권 * 유가증권 평가시 발행기업 평가 병행	-차주로서의 개인 및 (중소)기업
영업허가시 전문인력요건	-CPA 5인 및 금융기관, 채권평가회사 또는 국내외 신용평가회사에서 유가증권분석평가업무 경력자 5인 이상을 포함한 20인 이상 상시고용인력 * 3개업종 이하 또는 ABS만 평가하는 경우 10인 이상	-CPA 또는 3년 이상 신용조사 업무 경력자 10인 이상
영위기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이상 4개사)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디앤비코리아, 한국개인신용(이상 7개사)

13. 최근 '안심클릭' 등 신용카드비밀번호 해킹사건에 대한 점검결과 및 대책

◆ 본 사건은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한 관계로 금융감독원에서
별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경찰청 주관 관련기관 대책회의 참석

□ 일시 : 2006. 7. 12. (14:30 - 16:00)

□ 장소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회의실(경찰청 15F)

□ 회의주제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 참석자 : 금융감독원(복합금융감독실) IT감독팀장 외 1명,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팀 이상규 주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해킹대응팀 성재모 팀장

□ 회의내용

- 인터넷신용카드 결제서비스(안심클릭, 안전결제) 비밀번호가 해킹에
의하여 도용된 사고에 대한 대책 협의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 3월부터 인터넷상에서 타인 명의의 신용
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수사 진행
- 동 수사결과 55개 카드가 중국범인들에게 도용되어 약 1억 8천만원
피해 발생

□ 범행수법

-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입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대부분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구글이라는 검색기능을 이용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여,
 - ① 인터넷 ID/비밀번호를 확보하고
 - ② 동 정보를 이용하여 쇼핑몰, 전자지불중계업체에서 카드번호 일부 확보
 - ③ 카드사에 접속하여 나머지 카드번호를 확보하여 이를 조합하여 카드번호를 생성한 후,
 - ④ 안전결제 인증서를 복사하여 인터넷 결제에 사용 (안심클릭도 유사한 방법으로 해킹)
- 현재 30만원 이상의 결제에 대하여는 공인인증서를 적용하고 있어 범죄를 예방하고 있으나, 금번 사고는 30만원 미만을 반복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

<참 고>

※ '04. 1월 우리원에서 30만원 이상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나 전자상거래 위축 등으로 '04. 8월 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간 협의에 따라 2년간 유예하였음

이러한 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빈번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30만원 이상의 결제에 대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30만원 이하의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여부도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 책

- 신용카드사에 지도공문 발송(2006.07.25.)

* 세부사항은 지도 공문에 붙임으로 발송한 “<첨부>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보완 사항” 참조

<첨부>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보완 사항

I. 안전결제

1. 안전결제 인증서 온라인 복사시 본인인증 강화

- 안전결제 인증서 온라인 복사시 발급(재발급)시와 동일하게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및 SMS, e-Mail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

예) 기존입력 정보 + 추가정보(SMS인증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 입력

- CVC값(카드후면에 있는 검증값)이 없는 신용카드는 인터넷 등에서 획득할 수 없는 정보 추가 입력

※ 특히, 추가 입력정보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타 인터넷사이트에서 습득 가능한 정보는 적용하지 말고 개인 정보 중 습득이 불가능한 정보를 추가 입력정보로 적용

2. 안전결제 해지 절차 마련

- 안전결제 인증서의 해지를 원하는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해지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해지 사실은 SMS, e-Mail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통보

※ 동 서비스 해지시 ISP 운영자(KVP)도 정보(개인키) 삭제

II. 안심 클릭

1. 안심클릭 '개인확인메시지' 및 비밀번호 변경

-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개인확인 메시지'가 안심클릭 결제용 비밀번호와 유사하거나 비밀번호를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등록한 고객에 대하여 반드시 '개인확인 메시지' 및 결제용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대 고객 홍보

2. 인터넷 결제시 본인인증 강화

- 안심클릭 결제용 비밀번호외 추가정보(SMS인증번호, 공인인증서, OTP, CVC값 등)를 입력하는 이중 인증체계 마련

※ 동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본인인증 강화수단을 마련시키지만 한시적으로 적용 가능

III. 공 통

1. 결제용 비밀번호 오류 횟수 초과 시 이용정지

- 안전결제 및 안심클릭 결제용 비밀번호 입력시 사전에 정한 일정 횟수 이상의 오류(오류횟수는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가 발생하면 사용을 정지하고 SMS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통보

2. 해킹에 주로 이용된 인터넷 주소 차단

- 동 사고에 이용된 인터넷 주소(별첨 1 참조)에서 요청되는 승인을 거절하도록 내부시스템에 즉시 반영

3. 카드번호 노출 최소화

- 홈페이지에서 카드거래내역 조회시 카드번호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조치

만약 카드번호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카드번호의 조합이 불가능하도록 노출되는 카드정보 통일

예) 1234-5678-****-****

※ 쇼핑몰, PG사에 동 내용을 통보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조치

- 카드전표 인자시 카드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고 카드번호의 조합이 불가능하도록 인자되는 카드번호 통일

예) 1234-5678-****-****

4. 정보 입력 오류 발생시 업무 제한

- 인터넷 결제용 인증서 재발급(온라인 복사 포함)/결제용 비밀번호 재설정(변경)시 입력하는 정보는 사전에 정한 일정 횟수 이상의 오류(오류횟수는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가 발생하면 재발급(온라인 복사)/비밀번호 재설정(변경)을 제한하고 SMS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통보

5. 주민등록번호는 인증강화를 위한 추가 입력 정보에서 제외

- 안전결제 발급(재발급),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록(변경)시 인증강

화를 위하여 추가 입력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타 인터넷사이트에서 습득 가능한 정보는 제외('05. 9월 우리원에서 마련한 '전자금융거래 보안종합대책' 보완)

6. 인터넷 결제시스템 발급 현황 정보제공

- 안전결제 발급(재발급, 온라인복사),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록(변경) 현황을 고객이 확인 가능하도록 온라인, 사용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최근 변경 현황 제공

7. 고객 홍보강화

- 고객이 가입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ID/패스워드와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용 ID/패스워드 또는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용 비밀번호와 동일한 경우 반드시 변경하도록 고객 홍보 강화

-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 내역 문자알림서비스(SMS*) 가입 적극 유도

* SMS(Short Message Service, 단문메시지서비스)

: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밀번호·카드번호 변경시, 거래승인시 등 관련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해주는 문자 서비스

- 우리원과 정보통신부가 '05. 12월 마련한 '전자금융 이용자 정보보호 수칙*'을 홈페이지, e-Mail 등을 통하여 고객 홍보 강화

* 세부 내용은 별첨 2 또는 우리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실→점사조사업무→정보기술(IT)) 참조

14. 금감원의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의 상담 내용별 건수 및 조치결과

- 금융감독원은 '02.7월부터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 신용카드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상담) 및 혐의업체의 관계기관 통보조치를 통하여 건전한 신용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행위

-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상담 및 통보현황 : 붙임 참조

(붙임)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상담현황

(단위 : 건)

기간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신용카드 할인(깡)	계
	거래거절 ¹⁾	부당대우 ²⁾		
'03년	1,008	1,086	557	2,651
'04년	1,073	1,085	81	2,239
'05년	1,559	1,282	52	2,893
'06.7월	1,010	689	15	1,714
총계	4,650	4,142	705	9,497

- 1) 거래거절 :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결제를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2) 부당대우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결제시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하는 등 신용카드회원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관계기관 통보현황

(단위 : 건)

관계기관		'03년	'04년	'05년	'06년 7월	계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국세청 통보) ¹⁾	거래거절	215	244	205	150 ²⁾	814
	부당대우	362	495	242	200 ³⁾	1,299
카드할인(깡) (경찰청 통보)		86	42	27	5	160
계		663	781	474	355	2,273

- 1) '05.12월부터 가맹점의 거래거절·부당대우 행위에 대하여는 여신금융협회에서 관계기관 통보 하도록 관련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06.1월말 이후 별도 통보를 생략
 2) 여신금융협회 통보건수 포함 (금융감독원 통보 : 31건, 여신금융협회 119건)
 3) 여신금융협회 통보건수 포함 (금융감독원 통보 : 64건, 여신금융협회 136건)

15. 금감원의 사금융 피해상담센터 상담 내용별 건수 및 조치결과

- ☐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설치('01.4월)·운영하는 한편 불법 혐의업체를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있음
-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상담 및 통보현황 : 붙임 참조

(붙임)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상담 및 수사기관 통보현황

(단위 : 건)

기 간	상 담								수사기관 통보
	고금리	불법적 채권추심	대부광고 ¹⁾	대부중개	기타부당 ²⁾	대부업 등록 등 문의	단순상담 ³⁾	계	
'03년	1,126	760	-	51	240	151	856	3,184	206
'04년	872	551	-	9	410	7	1,049	2,898	359
'05년	479	374	62	73	484	421	1,334	3,227	148
'06.7월	250	222	27	48	373	203	1,275	2,398	23
총계	2,727	1,907	89	181	1,507	782	4,514	11,707	736

1) 대부광고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05.8월부터 새로 분류

2) 기타부당 : 대출사기, 부채증명서 발급거부, 부당수수료 부과 등

3) 단순상담 : 압류·경매,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신용조회 등

16.대부업 관련

- 대부업체들의 신용정보 유출사건이후 조치내역 및 재발 방지대책
-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내역과 결과, 조치사항(최근 3년+ 올해 연도별)
- 지자체의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요청 내역(최근 3년+ 올해 연도별)
- 대부업체들의 고금리요구 강압적인 추심 등 불법행위 만연에 대한 제도적 근본대책

☐ 대부업체들의 신용정보 유출사건이후 조치내역 및 재발 방지대책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권 및 검사결과 조치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 우리 원은 향후 시·도지사의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요청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적정성, 불법 행위 여부 등을 중점점검할 예정임

☐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내역과 결과, 조치사항(최근 3년+ 올해 연도별)

- 최근 3년간 검사내역 및 통보내역 : 붙임 1 참조

□ 지자체의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요청 내역(최근 3년+ 올해 연도별)

- 2006년에 각 시·도지사는 16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였으며, 금감원은 요청대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단위 : 개수)

구 분	검사요구건수	검사실적	비 고
2003년	70	62	
2004년	202	33	
2005년	53	28	

□ 대부업체들의 고금리요구 강압적인 추심 등 불법행위 만연에 대한 제도적 근본대책

- 우리 원으로서는 향후 시·도지사의 대부업자 검사요청이 있는 경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제한의 준수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여부 등을 중점조사할 계획

* 법이 정한 이자율 외에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편법으로 부당하게 법이 정한 한도를 위반하는지 혹은 강압적 추심이 있는지 여부 등

(관련법규 : 불임)

(붙임)

대부업자 검사 실시 현황

1. 2003년도 : 21개사 62개 영업점

회 사 명		지 적 사 항
그랜드 캐피탈	본점	- 부당채권 추심행위 - 불공정약관 사용 - 대부업 변경등록 미 실시 - 영업장에 대부계약 주요내용 미 게시
	부천	- 없음
	수원	- 없음
베스트크레딧(본점)		-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
산와	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대전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수원	- 없음
	안양	- 없음
	성남	- 없음
	대구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중앙캐피탈(본점)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 영업장에 대부계약 주요내용 미 게시
파트너 크레딧	본점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창원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대전	- 불공정약관 사용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대구	- 없음
해피레이디	본점	- 없음
	대구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송내	- 없음
대호 크레딧	부산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진주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김해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청주	- 없음
	춘천	- 없음
	대전	- 없음
	대구	- 없음
	익산	- 없음
	전주	- 없음
	본점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수원	-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
	인천	-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

회 사 명		지 적 사 항
에이앤오 인터내셔널	창원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본점	- 부당채권 추심행위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대구	- 없음
	포항	- 없음
	대전	- 없음
	전주	- 없음
	성남	- 없음
	안양	- 없음
엠티엔인터내셔널(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여자 크레딧	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 대부업 변경등록 미실시
	대구	- 없음
에스캐피탈	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 대부업 변경등록 미실시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대구	- 없음
퍼스트머니	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 대부업 변경등록 미실시 - 보증인앞 대부계약서 미교부
	대구	- 없음
프로그램스	본점	- 부당채권 추심행위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대구달서	- 없음
	대전	- 없음
	대구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성남	- 없음
에이엔젤캐피탈(본점)		- 대부관련 광고표시 부적정
대세론(본점)		- 없음
엔젤 크레딧	본점	- 없음
	서울	- 없음
오렌지 소비자금융	본점	-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 - 불공정약관 사용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수원	-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
	안양	-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
원마이 인더스트리	본점	- 없음
	수원	- 없음
	역곡	- 없음
코알라코퍼레이션(본점)		- 없음
OK파이낸스(본점)		- 없음
센츄리서울(본점)		- 없음

2. 2004년도 : 27개사 33개 영업점

회 사 명		지 적 사 항
하나기업금융(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동양캐피탈(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기협기술금융(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그린씨엔에프(본점)		- 없음
현대기업금융(본점)		- 없음
씨앤씨캐피탈(본점)		- 없음
아세아파이낸스(본점)		- 없음
세흥크레디트(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 영업장에 대부계약 주요내용 미게시
티에스씨앤아이(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 영업장에 대부계약 주요내용 미게시 - 채무관련인 앞 대부계약서 미교부
미다스캐피탈(본점)		- 없음
부영파이낸스(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신안캐피탈(본점)		- 없음
요론닷컴(본점)		- 영업장에 대부계약 주요내용 미게시
명지캐피탈(본점)		- 없음
우성캐피탈(본점)		- 없음
동아캐피탈(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제일캐피탈그룹(본점)		- 영업장에 대부계약 주요내용 미게시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원마이더스인더스트리(수원)		- 없음
베스트크레디트(본점)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리드코프(대구)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비 - 대부업 변경등록 미실시
삼진아이앤씨(청주)		- 없음
에이앤오인터내셔널(본점)		- 없음
프로 그래스	강남	- 없음
	부평	- 없음
	서면	- 불공정약관 사용
파트너크레디트(덕천)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개인정보 요구

회 사 명		지 적 사 항
산와	강남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 채무관련인앞 대부계약서 미교부
	부평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 채무관련인앞 대부계약서 미교부
	덕천	- 불공정약관 사용 - 채무관련인앞 대부계약서 미교부
	서면	- 불공정약관 사용 - 채무관련인앞 대부계약서 미교부
	광주	- 채무관련인앞 대부계약서 미교부
원캐싱(본점)		- 불공정약관 사용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아팩스서울(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3. 2005년도 : 21개사 28개 영업점

회 사 명		지 적 사 항
바로크레디트(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 차주의 예금계좌정보 관리 부적정
베르넷크레디트(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 불공정약관의 사용
미래크레디트(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룰루크레디트(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머니라이프(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센추리서울(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유아이크레디트(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스타크레디트(본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위드캐피탈(본점)		- 없음
미래베스트(본점)		- 없음
동양파이낸셜(본점)		- 없음
오케이론코리아(본점)		- 없음
리드코프(광주)		- 없음
파트너크레디트(강남)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 차주의 예금계좌정보 관리 부적정
산와	노 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청량리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 채무관련인 이외의 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수 원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대 전	- 채무관련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퍼스트머니	본 점	- 채권양도담보 제공승낙서 작성 부적정
	신 촌	- 대부업 광고 부적정
해피레이디(본점)		- 없음
여자크레디트(본점)		- 없음
아네스트(본점)		- 없음
코알라코퍼레이션(본점)		- 없음
프로그레스	청량리	- 없음
	노 원	- 없음
	대 전	- 없음
	광 주	- 없음

(별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검사 등) ①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의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가 관할하는 영업소에 대한 검사(공동검사를 포함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당해 명령의 내용을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이자율의 제한) <개정 2005.5.31>①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5.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1>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며,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 (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8.31>

② 삭제 <2005.8.31>

③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66을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을 단리로 환산한다.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5.8.31>

1. 담보권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17. 제재업무에 대한 내규 혹은 업무방법서 혹은 기준 혹은
체크리스트

“붙임 참조”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제) ① 감독기구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제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28, 2004.3.5>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06.8.31.>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06.8.31.>

다.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업무를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6.8.31.>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개정 2006.8.31.>

가. 삭 제 <2006.8.31.>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06.8.31.>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营业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경우로서 위법·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위법·부당행위 중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5. 계약이전의 결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6.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금융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위법·부당내용을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기타 언론에 공표하거나 영업점에 게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기관경고

가.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6) 위법·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다. 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 (1) 당해 금융기관의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하 같다)의 100분의 2 (자기자본의 100분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가)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 (나)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이상 2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300억원
 - (다) 자기자본이 2조5천억원 이상인 경우 : 500억원
- (2) 손실(예상)금액이 (1)에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중대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라. 삭 제 <2004.12.30>

마. 삭 제 <2004.3.5>

8. 삭 제 <2004.3.5>

9. 기관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신설 2005.8.31.>

-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감위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 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개정 2004.3.5., 2005.8.31.>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기구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28, 2004.3.5>

1. 해임권고

-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

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들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폰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 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감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 신설 2005.8.31. >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감위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8.31. >

③ 금감위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감독기구설치법, 금융업관련법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2005.8.31. >

② 감독원장은 직원의 위법·부당사실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적의조치하도록 의뢰하거나 금감위에 이를 건의할 수 있다. < 신설 2004.3.5. >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감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 개정 2001.2.28 >

②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감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개정 2001.2.28 >

③ 삭 제 <2001.2.28>

④ 삭 제 <2001.2.28>

⑤ 삭 제 <2001.2.28>

제20조의2(확약서·양해각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취약점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의 개선을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심각한 취약점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이의 개선대책의 수립·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5]

제21조(기타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당해 금융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여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변상조치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업무처리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업무방법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2005.8.31. >

제22조(제재효과) ① 삭 제 <2003.9.13>

②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은 금융업관련법령 및 이에 근거하여 각 감독관련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임원선임 제한을 받는다.

③ 임직원이 2회 이상의 주의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신설 2005.8.31. >

제2절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제23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감면) 부실여신 발생 등의 책임과 관련하여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그 제재의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3.5>

1. 전반적인 금융·경제여건의 악화에서 비롯된 경우
2. 정부의 국가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된 경우
3. 여신취급시 충분한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변경에 의한 경우
5. 우수한 경영 등으로 경영실태의 종합평가등급이 전기대비 1등급이상 향상된 경우
6. 기타 대내외의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가중) ①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기관경고를 3회이상 받게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제재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04.3.5>

②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③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경고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문책경고로 가중할 수 있다.

④ 임원이 문책경고 또는 2회이상의 주의적경고 조치를 받고도 3년내에 다시 주의적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04.3.5>

⑤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 및 감면에 있어서는 제23조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는 각각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본다. <신설 2004.3.5>

제25조(직원제재의 가중 및 감면) ① 직원에 대하여 제재하는 경우에 위법·부당행위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직원에 대하여 제재하는 경우에는 공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①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제재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행위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4.12.30>

② 제①항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엄정하게 규명하여 임원(본부장, 집행간부 등 비등기임원과 동 임원이 참여하는 여신협의체의 위원이 되는 본점 부서장 포함) 위주로 제재한다. <신설 2004.12.30>

③ 금융기관의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유가증권 운용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임직원이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에는 이를 면책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2001.2.28)

제3절 제재의 병과조치 등

제29조(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금융업관련법상 벌칙 또는 과징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동시에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금감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권고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면직의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28>

② 감독원장은 기관경고를 받는 금융기관의 관련임원에 대하여 당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조치를 취할 것을 금감위에 건의하거나 경고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

제30조(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위법행위와 관련된 다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시의 병과 등) ① 금융업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동일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행위로 발생한 경우
2.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2.28>

제32조(변상시의 병과)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변상요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상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제4절 제재절차

제33조(심의회의 설치) ① 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개정 2006.8. .>

제34조(제재절차) 검사결과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조정 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감위에 제재를 건의하거나 감독원장이 조치한다.

제35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① 감독원장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를 하거나 금감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재의 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감독원장은 상당한 기간(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을 정하여 제재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의견청취 방법을 청문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4.3.5]

제35조의2(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사무위임) 금감위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금감위에 건의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는 감독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5]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제)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제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2.27>

1. 면직

-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신설 2005.8.26. >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제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적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적의결정하여 조치하도록 의뢰(이하 '조치의뢰사항'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4.2.27., 2005.8.26., 2006.8.31.>

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2.27>

1.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직원이 주행위자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8.31>
2.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대출·동일인대출한도초과행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임의매매·불공정거래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무자격모집위탁 등 고질적인 모집질서 위반행위 <개정 2006.8.31>
3. 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보고서 허위제출, 검사자료 제출거부 등 금융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감독·검사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부당사항 <개정 2006.8.31>
4. 소규모 금융기관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계 취약 등으로 자율적인 제제가 곤란하거나 기타 당해 검사실시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6조(직원 등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직원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변상 여부
5.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외적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47조(제재효과) ① 직원에 대한 제재의 효과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에 금융기관은 인사상의 징계 이외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급여상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관련내규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제재효과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내규를 조정·변경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2회 이상의 주의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05.8.26.>

제48조(징계기간의 산정) ① 제47조제1항의 제재효과에 의한 징계조치의 기간은 징계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승급은 징계일 이후의 첫 예정일로부터 기산하고 승격은 동 제재 조치 기간중 이를 불허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최저 승격소요기간의 계산은 당해 금융기관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급·직위별 최저 근속기간에 징계종류별 승격불허기간을 가산한다.

② 제재효과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효과의 발생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면직의 경우 : 즉시 효과 발생
2. 정직의 경우

가. 정직기간 : 즉시 효과 발생. 다만, 정직기간중인 경우에는 당해 정직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효과 발생

나. 신분상 및 급여상 제재 : 진행중인 제재효과와 병합

3. 감봉 및 견책의 경우 : 진행중인 제재효과와 병합

제49조(직원제재의 가중) ① 직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제재를 받은 후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종류별 승격·승급제한기간(이하 “제재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가중할 수 있다.

1. 정직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내에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직
 2.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내에 다시 감봉처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직
 3. 견책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내에 다시 견책처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봉
- ② 직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정직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제50조(직원제재의 감면) ①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제재를 양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4.30>

1. 위법·부당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
2. 위법·부당행위를 부서 또는 영업점에서 발견하여 이를 보고한 감독자
3. 감독기관의 인지 전에 위규사실을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자
4. 가벼운 과실로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자
5. 금융분쟁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자 <개정 2004.4.30>
6. 규정 제23조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재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정하는 “제재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제재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제재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금융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금감위위원장, 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양정을 감경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공적은 제외한다.

〈신설 2001.8.17〉

1. 제재대상 직원이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재 이전의 공적
2. 제재대상 직원이 소속 금융기관 입사전에 받은 공적

제50조의2(확약서·양해각서 운용) ① 감독·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확약서로, 중대한 사항은 양해각서로 조치한다.

② 확약서는 금융기관의 담당 임원 또는 대표자로부터 제출 받고 양해각서는 금융기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체결한다. 〈개정 2005.10.28〉

③ 감독원장은 확약서·양해각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재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2.27]

제50조의3(사후관리) 확약서 및 양해각서의 효력발생일자, 이행시한 및 이행상황 점검 주기는 각 확약서 및 양해각서에서 정한다. 이행상황 점검주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매분기 익월말까지 분기별 이행상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27]

제51조(기타 조치) 감독원장은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방법개선의 요구

금융기관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하여 그 처리기준, 절차·운영 등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삭 제 <2005.8.26.>

3. 삭 제 <2005.8.26.>

4. 관련기관앞 통보

금융관련법규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검사결과 관련자가 진술일 현재 퇴직한 경우로서 관련기관 등의 업무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절 제재조치의 운영

제52조(관련자의 구분)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2.27〉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제53조(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감독원장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위법행위와 관련된 다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2.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제재절차 및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제54조(검사결과 심사·조정) 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검사서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건의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검사국장, 지원장 또는 감독국장(이하 “제재실시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재실시부서장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내용 등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0.28〉

1. 지적사항 내용, 적용법규, 조치요구 구분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
2. 입증자료의 확보 여부
3. 검사서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건의서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

②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0.28〉

③ 제재실시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대상 지적사항은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기타사항은 소관업무담당 부원장의 재정절차를 거쳐 심사·조정결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5.10.28〉

④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기록·유지한다.
〈개정 2005.10.28〉

제55조(심의회의 구성) ① 규정 제33조제1항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개정 2005.10.28〉
2.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개정 2005.10.28〉
3.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이 지명하는 부원장보 1인 〈개정 2005.10.28〉

4.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금융전문가 등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 4인 <개정 2001.2.12, 2001.8.17, 2004.2.27>

②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유고시에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0.2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2.12>

제5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규정 제33조제2항 본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규정 제17조제9호의 기관주의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8.26.>

②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26.>

1.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요구사항
2. 규정 제21조제2항의 조치사항중 검사실시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매월 첫째 및 셋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시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2.12>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③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재실시부서장은 심의회 부의안을 작성하여 이를 심의회에 부의한다. 이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제재심의담당 부서에 동 심의회 부의안을 송부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부의안의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0.28>

④ 당해 금융기관의 장, 관련 임직원, 감사원, 기타 참고인(이하“참고인”이라 한다)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 위원장은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⑤ 심의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4.2.27>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자기가 속한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⑦ 위원은 제6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⑧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의안관리, 의사록 작성, 기타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10.28>

⑨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심의결과 보고 등) 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8>

②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제1항에 의한 감독원장앞 보고후 소관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8>

③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제2항에 의한 심의결과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8>

제59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회 개최전에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3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규정 제17조제9호의 기관주의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5.8.26.>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지정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검사실시부서장은 제재대상자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2.27]

제60조(청문)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35조제3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주재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청문을 주재한 제재실시부서장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1조(이의신청)** ① 규정 제37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 ③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관련 검사자료 등과 함께 검사총괄담당 부서장에게 이첩하고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의 이의신청 처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7, 개정 2006.8.31>
- ④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처리안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심사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및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제재관련자가 새로이 추가되는 등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재검사결과 조치안을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04.2.27, 2005.10.28, 2006.8.31> <단서신설 2004.4.30>
- ⑤ 제4항에 의한 심사·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심의회부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를 통해 심의회에 부의하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7, 2005.10.28>
- ⑥ 제재실시부서장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7, 2006. 8.31>
1. 삭 제 <2006.8. >
 2. 삭 제 <2006.8. >
- ⑦ 삭 제 <2006.8. >
- ⑧ 규정 제37조제5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하는 경우에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해당 제재실시부서장으로부터 검사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취하며, 제59조의 절차에 따라 제재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05.10.28, 2006. 8.31>

18. 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 및 이를 통한 내부고발자 보호 사례와 건수(최근 3년 연도별 + 올해)

-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 신고자 등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 및 소속회사는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2003년말 신설하였습니다.

제188조의6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등) ① 이 절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 및 소속회사는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 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실제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의 신분에 대하여 내부자 여부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있으며

- 제보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때에도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최근 3년 동안 감독당국이 제보자에 대하여 포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8월말
포상내역	포상건수	8	3	3	2
	내부자 제보건수	0	0	1	1

진 수 회 의 원

1. 1999년 이후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관련된
금감원 규정 변경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 1999년도

1. 과징금 부과근거 규정 마련 (3월)

⇒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개정

-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 마련 (§22의2 및 §22의3)
- ☐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등 불복절차 통지제도 마련 (§30의3) 등

2. 과징금 산정방법 및 절차 마련(6월)

⇒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개정

- ☐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22의2, 별표 1호)

- 과징금 산정절차

- o 부과예정액 : 위반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
- o 가중·감면 : 위반행위의 기간, 회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부과예정액의 50%범위내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면하여 산정
- o 과징금결정 : 부과예정 대상자의 현실적·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

- 부과예정액의 산정

- o 위반내용의 내용에 대하여는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
- o 위반행위의 정도에 대하여는 중요성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산정

◆ 2000년도

1. 감리업무과정에서 발견한 증권거래법등 위반혐의사항에 대한 조사병행 실시근거 마련(12월)

⇒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개정

- 감독원장이 감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증권거래법 또는 선물거래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한 조사병행 실시근거 마련 (§9④)

◆ 2001년도

1. 과징금 부과한도 확대(4월) 및 부과기준 개선(9월)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위반 등 공시의무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확대

⇒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개정

현 행

5억원 범위내

개 정

20억원 범위내

- 과징금 부과한도의 상향취지에 맞춰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의 질적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별표의 「과징금 부과기준」 전면개정

◆ 2002년도

1. 증선위의 조사권한 확충(2월)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증선위의 조사권한을 세무공무원의 조사권 수준으로 강화

- 압수·수색권, 영치권 및 현장조사권의 도입

⇒ 증권거래법 제206의3 개정

2. 증선위위원장의 조사업무 수행방법 마련(3월)

- 증선위에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이 부여되고, 금감위에 조사관련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증선위위원장 및 감독원장의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개정

3. 검찰이첩조치의 단순화(10월)

-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의뢰 조치는 폐지

⇒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개정

◆ 2003년도

1.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사항 개정(8월)

⇒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개정

□ 과징금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중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를 개정

-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개선, 법인의 대표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확대, 적용률 범위의 확대, 위반횟수·위반금액 등을 감안한 과징금의 차등 부과,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감경 등(별표 제3호)

◆ 2004년도

1.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사항 개정(5월)

⇒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개정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 개인에 대한 독립적인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과징금부과 적용률의 하향조정사유 추가 등(별표 제3호)

2.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법제화(5월)

⇒ 증권불공정거래행위신고및포상등에관한규정 제정

□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도입('04. 7. 1. 시행)됨에 따라 증권불공정거래행위신고및포상등에관한규정 제정

- 포상금 지급대상은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및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행위 등이며 (§5)
-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사건의 중요도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7)

◆ 2005년도

1.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사항 개정(7월)

⇒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개정

□ 법규위반정도에 상응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과징금 산정방식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일부 기준 미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

○ 과징금 산정방식의 합리성 제고

- 계량적·비계량적 위반행위 구분 및 고의·중과실 구분에 따른 기본부과율 차등을 폐지하고 위반행위 중요도 및 중요도 판단기준을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변호사, 변리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하는 등 유가증권신고서 위반관련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등 공개매수신고서·합병신고서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명확화

◆ 2006년도

1.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사항 개정(3월)

⇒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개정

-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한 행위가 2개 이상의 공시위반에 해당된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는 과징금부과 기준상 통칙을 명료화
 - 수시공시 위반사항이 동시에 “정기보고서 등의 재무제표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종의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토록 함
- 정기보고서 공시위반에 대한 법정부과한도액의 예외적용사항 명시
 -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한 행위가 수시공시를 위반하고, 동사항이 “정기보고서 등의 공시사항 기재위반 및 주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준금액에 100분의 10이 아닌 100분의 3으로 곱하도록 함

2.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개선 등(7월)

⇒ 증권불공정거래행위신고및포상등에관한규정 개정

□ 포상금 지급기준 대폭 상향 조정 등

- 사건의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지급한도)을 상향 조정*하고, 유형별 구분을 없앴으로서 등급분류를 단순화

* 5~2등급 기준 : 300만~3천만원 → 500만~4천만원

-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평가요소로 부적합한 과징금 대신에 위법 및 죄질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중대 위반행위의 수)를 도입하는 등 등급평가방식 개선

□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위반행위 혐의자를 오인하여 주변인물 등을 잘못 적시하더라도 신고내용에 따라 위반행위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 조사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형사 조치(고발·수사기관 통보)를 받는 경우 이외는 포상금 지급

2. 98년-현재까지 금감원에서 수집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원판례 일체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에 관한 판례를 여러 경로로 수집하여 이를 조사업무에 참고하고 있으며, 특히 대법원 종합법률사이트 (<http://glaw.scout.go.kr>)를 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유형별 사례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I. 미공개정보이용금지위반 판례

□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도491 판결

【판시사항】

- [1]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신임관계의 발생근거
- [2]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4] 일부 언론에 추측보도된 바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없는 이상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5]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

【참조조문】

-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형법 제357조 제1항/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4]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5]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호

【참조판례】

- [1] [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6866 판결/ [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 1095 판결(공1999하, 1546),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5195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공2003상, 950) / [2]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공1989, 205),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공1998하, 1921) / [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공1995하, 2676),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공2001상, 212) / [5]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2 판결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한일의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4. 1. 7. 선고 2003노1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배임수재죄에 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68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의 채택 증거에 의하여, 공소의 1주식회사의 (기금명 생략)기금 자문팀 차장으로서 위 기금의 투자대상회사에 관한 기업분석 및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 등을 담당하여 오던 피고인이 공소의 2주식회사의 상무이사 공소의 3으로부터 위 기금에서 인수한 공소의 2주식회사 발행의 전환사채 4구좌의 조기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520,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죄에 관하여

가.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같은 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소의 2주식회사와 공소의 4주식회사 사이의 인수 후 개발(Acquisition and Development) 추진사실이 비록 일부 언론에 추측 보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없는 이상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공소의 2주식회사의 임원인 공소의 3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전환사채를 공소의 5명의로 인수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서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거기에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위법한지 여부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호는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득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므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및 그 거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 매매이익을 의미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2005. 4. 15. 선고 2005도63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실현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 거래로 인한 이익, 아직 보유 중인 미공개정보 이용 대상 주식의 가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은 그와 동종 주식의 마지막 처분행위시를 기준으로, 주식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가액은 그 약정이행기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4. 24.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기금명 생략)기금으로부터 공소의 2주식회사 발행의 전환사채 1구좌를 공소의 5명의로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 1,095,779,918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01. 6. 중순경 공소의 2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임원인 공소의 3등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 전환사채 1구좌를 공소의 2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대신 위 회사의 주식 50만 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1. 6. 21. 위 회사의 주식 30만 주는 이전받았으나, 나머지 20만 주는 그 약정시기(2002. 5. 30.부터 2002. 6. 30.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청구한 날 이후 5일 이내) 이전에 이 사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적발됨으로써 이전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위 30만 주 중 16만 주를 2001. 6. 26.부터

2001. 7. 19.까지 사이에 743,361,720원에 매각하고 그에 관한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로 5,203,515원을 지출하여 그 차액 738,158,205원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나머지 14만 주 외에 2001. 7. 20. 이후 위 회사의 주식 3만 주를 추가로 매수하여 2002. 4. 26.까지 그 중 15만 주를 645,858,320원에 매각하고 그에 관한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로 4,521,005원을 지출하여 그 차액 641,337,315원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면, 위 2001. 7. 19.까지의 16만 주 매각으로 취득한 738,158,205원, 그 이후 매각한 15만 주에 추가로 매수한 3만 주가 모두 포함되어 위 30만 주 중 12만 주만 매각된 것으로 보아 위 매각으로 취득한 금액 중 12만 주에 해당하는 513,069,852원, 보유 중인 나머지 2만 주를 마지막 매각일인 2002. 4. 26.의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31,200,000원(2만주 × 1,560원), 아직 이전받지 못한 20만 주를 그 약정 이행기간 동안의 가장 낮은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190,000,000원(20만주 × 950원,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위 20만 주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범죄 종료 후에 받은 이익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익액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정은 아니다)의 합계액에 위 인수대금 1,095,779,918원을 공제한 376,648,139원이 되는 바(피고인은 공소의 3에게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 또한 이익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의 3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5,000만 원이 이 사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이익액에서 공제할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익액은 비록 원심이 산정한 608,850,396원 또는 공소장 기재 577,734,002원보다 작기는 하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억 5,000만 원은 위 이익액에 의하여 산정되는 정당한 형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 명백할 뿐더러 그 형의 양정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심의 이익액 산정과정에서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이 얻은 이익액을 위와 같이 특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에 비하여 낮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한 이상,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김영란(주심)

□ 대법원 2006.5.11. 선고 2003도4320 판결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정한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의 의미 및 미공개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3] A&D(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인수·합병)를 추진하는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전환사채의 거래에 앞서 그 인수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내부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만으로는 위 인수 회사 혹은 그 자산운영사에게 위 내부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위 전환사채 거래에 이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배임증제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5]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6]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이 규정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2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2]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아직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미공개정보이어야 하는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어떤 정보가 당해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시절차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거래의 당사자가 거래의 목적인 유가증권 관련 내부정보에 대하여 전해 들어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거래당사자인 법인의 담당 직원이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유가증권 관련 내부정보를 전해 들었음에도 이를 정식으로 법인의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거나 그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의 성사를 위한 부정한 청탁금을 받고서 법인에 대한 배임적 의사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위 내부정보의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A&D(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인수·합병)를 추진하는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전환사채의 거래에 앞서 그 인수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내부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만으로는 위 인수 회사 혹은 그 자산운영사에게 위 내부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위 전환사채 거래에 이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중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5]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6]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이는 별개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그 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가를 문제삼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한편 위 조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1]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88조의2 제2항 / [2]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 / [3]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2

항,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4]형법 제357조/ [5]형법 제30조/ [6]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공1994상, 1564),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공1995하, 267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공1995하, 2689) / [2]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공1995하, 2676),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456 판결/ [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공1996하, 3366),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5][6]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공2004상, 747) / [5]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공2002하, 189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공2005하, 1993) / [6]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공2001하, 178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공2002상, 22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공2002하, 2127),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공2004상, 192)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와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25. 선고 2002노97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2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대

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판시 각 사실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원심 공동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의 1 주식회사와 공소의 2 주식회사사이의 A&D(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인수·합병) 추진에 관한 미공개 내부정보(이하 '이 사건 내부정보'라고 한다)를 피고인 2에게 알려 주어 그로 하여금 공소의 1 주식회사발행의 유가증권인 이 사건 전환사채의 거래에 이를 이용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내부정보는 그 내용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 중에서 위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의 공모하여 이 사건 내부정보를 2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고 단지 위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사이의 위 내부정보에 관한 대화내용을 피고인 2가 엿들어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음을 전제로, 위 내부정보의 전달 여부 및 그에 대한 위 피고인의 범의 여부 등을 다투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의 전제사실과 달리 위 피고인의 적극적인 관여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아직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미공개정보이어야 하는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어떤 정보가 당해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시절차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등 참조), 다만, 거래의 당사자가 거래의 목적인 유가증권 관련 내부정보에 대하여 전해 들어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456 판결 참조), 거래당사자인 법인의 담당 직원이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유가증권 관련 내부정보를 전해 들었음에도 이를 정식으로 법인의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거나 그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의 성사를 위한 부정한 청탁금을 받고서 법인에 대한 배임적 의사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위 내부정보의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의 1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상무이사인 피고인 1은 공소의 1 주식회사와 공소의 2 주식회사사이의 이 사건 A&D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소의 1 주식회사가 2000. 4. 20.경 발행한 액면금 각 10억 원의 전환사채 4구좌 합계 40억 원 상당액을 인수한 공소의 3 주식회사의 자산운용사인 미국 소재 주식회사 스커드 캠퍼(이하 '스커드 캠퍼사'라고 한다)의 승인 문제 등이 대두되자 위 전환사채와 관련한 공소의 3 주식회사측 업무 담당직원 공소의 4에게 사례금조로 7억 원을 주는 대가로 공소의 1

주식회사가 스커드 캠퍼사로부터 위 전환사채 발행가액(이자 별도) 그대로 조기상환요청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도록 한 후 스커드 캠퍼사가 이를 이유로 전환권의 행사 없이 공소의 1 주식회사에게 전환사채의 상환을 요구하고 공소의 1 주식회사는 그 기회에 사실상 개인들로 하여금 이를 상환, 인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공소의 4와 합의하고, 이에 따라 공소의 4가 지시하는 대로 위 피고인이 공소의 1 주식회사의 주식 30,000주를 공소의 3 주식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장내매도하자 공소의 4가 공소의 1 주식회사의 약정위반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공소의 3 주식회사의 자산운용사인 스커드 캠퍼사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 위 피고인측이 위 전환사채를 발행가액 그대로 인수하여 판시와 같이 그 중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거액의 전매차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준 사실, 그 대가로 위 피고인은 위 전환사채 중 10억 원권 1구좌를 인수한 피고인 2가 제공한 현금 1억 7,50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약 5억 2,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대 자루에 담아 공소의 4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1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거래에 앞서 공소의 4에게 이 사건 내부정보를 미리 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거래의 당사자인 공소의 3 주식회사 혹은 그 자산운용사인 스커드 캠퍼사에게 위 내부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이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위 내부정보를 이 사건 전환사채 거래에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 일부 사실인정을 달리 한 잘못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 중에서 공소의 3 주식회사는 이 사건 내부정보와 상관없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상환 혹은 제3자 인수를 결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내부정보가 위 전환사채에 관한 거래의 요인이 되지 아니하여 내부자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기록상 위 주장의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피고인 1과 공소의 4가 상호 협의하에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공소의 3 주식회사측의 조기상환 요구를 유도함으로써 위 피고인측이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공소의 4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및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한 행위는 사회상규 및 신의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것처럼 위 피고인으로서 이 사건 A&D의 성사에 필요한 위 전환사채의 상환문제 해결을 위해 공소의 4의 금품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

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배임증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배임증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그 판시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내부정보를 수령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 피고인과 그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권00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이는 별개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그 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가를 문제삼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한편 위 조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판시 각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거래의 대상이 된 공소의 1 주식회사주식의 전체 발행 및 유통 주수, 위 피고인이 공소의 1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처분하기까지 4일간 실제 거래의 체결 없이 행한 총 1,000만 주 이상의 매수주문량과 그 액수, 약 30%에 이르는 시세관여율, 장중의 매수·매도주문량 및 계속적인 상한가 장세에 비추어 실제로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총 14회에 걸쳐 합계 8,944,306주를 상한가에 매수주문하였다가 그 직후 대부분의 매수주문에 대한 취소를 반복하는가 하면 마감시간 직전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1,312,945주를 상한가로 매수주문하는 등 사실상 대량의 허수매수주문과 증가관리를 통해 매수잔량 혹은 매수주문량의 변동을 심화시킨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시세조종에 의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판시사항】

[1]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위반 여부(소극)

[2]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경우,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호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이고,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그 규정조항에 의하여는 처벌되지 않는 취지라고 판단된다.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금지행위 중의 하나인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와의 의사 합치하에 그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당연히 예상되는바, 그와 같이 제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아니되는 제2차 정보수령자의 그와 같은 관여행위에 관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호/ [2]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2]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공1985, 580),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공1988, 928),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공2002상, 440)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15. 선고 99노89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형이자 중앙일보 기자인 제1심 제1심 공동피고인과 사이에 제1심 공동피고인이 취재 및 기사작성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저가로 매수한 후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1998. 8. 17. 제1심 공동피고인은 주식회사 신동방의 홍보이사 김00이 중앙일보사에 취재요청과 함께 모사전송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신동방에서 그 다음날 무세제 세탁장치를 개발하여 시연회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그 날 22:00쯤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 주식회사 신동방의 주식 34,280주를 매수하였다가 그 후 무세제 세탁장치 개발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주가가 급상승한 후인 그 달 20일부터 그 해 9. 8.까지 매수한 주식을 주당 15,450원 내지 21,000원에 매도하여 464,445,950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김00로부터 받고 주식회사 신동방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권거래법(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의 죄는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수령한 자'라는 신분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일종의 진정신분범이라고 할 것이지만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법 제18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신분이 없는 자라도 그러한 신분있는 자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법 제188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및 그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아래에서는 내부자라고 한다)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아래에서는 제1차 정보수령자라고 하고 그로부터 그 정보를 받은 자를 제2차 정보수령자라고 한다)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7조의2 제1호는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이 법 제188조의2 제1항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

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호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이고,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그 규정조항에 의하여는 처벌되지 않는 취지라고 판단된다.

이는 법에서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하는 것만을 금지할 경우 내부자가 그 금지를 회피하여 탈법적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미공개 내부정보는 정보의 성격상 전달과정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단순한 소문 수준의 정보가 되기 마련이어서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에 대한 규제대상을 적절한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도 있으므로, 그 규정조항은 내부자로부터 직접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는 통상적으로 내부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증권시장의 공정성 및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제1차 정보수령자가 내부자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하는 한편 그 처벌범위가 불명확하게 되거나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정보수령자의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행위를 그의 처벌범위에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봄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금지행위 중의 하나인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전달받는 제2차 정보수령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와의 의사 합치하에 그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당연히 예상되는바, 그와 같이 제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제2차 정보수령자의 그와 같은 관여행위에 관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후에 이용한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도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들의 취지가 이 사건에 참고될 것이다.

관련 조항의 취지가 위와 같으며,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금지행위로는 그 정보를 직접 이용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있으니 원심으로서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석명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이 제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막바로 이용한 행위에 피고인이 공동가담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제1심 공동피고인이 제1차로 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제2차로 받게 한 뒤 이용하게 한 행위에 공동가담하였다는 것인지를 밝힌 다음 구분된 그 공소사실에 대응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행위형태가 정확하게 석명, 심리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1차 정보수령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1차 정보수령과 별개의 기회에 제2차로 수령한 후 이용한 행위를 들어 피고인을 제1심 공동피고인과 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 공동정범의 증명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죄나 필요적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3097 판결

【판시사항】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의 개정으로 협회등록법인(장외등록법인)이 아닌 단순한 등록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가 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면서 등록법인이지만 아직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여 장외등록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식 등의 유가증권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장외등록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한 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의 발행이나 매매거래의 공정성 및 원활한 유통성의 확보나 투자자의 보호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내부자거래의 규제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208조 제6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영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8. 27. 선고 98노33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의 1 주식회사의 임원들로서 공소의 1 주식회사가 등록법인인 C회사로부터 의뢰받은 협회중개시장등록(장외시장등록) 및 전환사채에 대한 지급보증과 발행주선업무를 추진하던 중 C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1996. 11. 9. C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청약하여 배정받는 데 이용하였다.

2. 관련규정 및 개정내용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어 1997. 4.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만 한다) 제188조의2 [내부자거래의 금지]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1. 당해 법인의 임원·직원·대리인, (제2호, 제3호

는 생략), 4.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5.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직원 및 대리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내부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208조 제6호에 의하여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익이나 회피손실액의 3배가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어 1997. 4.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된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에서는 위 제188조의2의 제목 중 "내부자거래"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그리고 제1항 본문 중 "등록법인"을 "협회등록법인"으로 개정하여 내부자거래의 금지대상을 축소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벌칙으로 구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6호를 삭제하고 제207조의2를 신설하여 징역형의 상한을 10년으로 대폭 강화하였고, 한편 구 증권거래법 제3조는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발행인은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 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이하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3.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비상장법인, 4.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거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이하 제5호, 제6호 생략)"이라고 정한 후 그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을 "등록법인"이라고 규정하는 한편(제6조), 유가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은 장외거래로 분류한 후 그 구체적인 사항은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여(제194조) 그 위임을 받은 증권관리위원회에서는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등록법인 중에서도 한국증권업협회에 추가로 등록을 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한국증권업협회의 구성원인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위와 같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회사를 "장외등록법인"이라고 규정하였다가(위 규정 제2조 제3호, 제5호, 제3조 등 참조),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대체로 위 구 증권거래법 제3조, 제6조와 같은 등록법인에 관한 규정을 존치하면서(다만, 일부 자구가 수정되었다) 제2조 제15항을 신설하여 "이 법에서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72조의2에서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인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 제14항에서는 "이 법에서 "협회중개시장"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중개를 위하여 ... (중략) ...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장을 말한다."고 각 규정함으로써 종래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의되던 "장외시장"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서 그 명칭을 "협회중개시장"으로 부르게 되었고, 개정된 증권거래법 부칙에 제188조의2와 이에 대한 벌칙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경과규정이 없고 같은 부칙 제17조에 의하면 종전의 장외등록법인은 협회등록법인으로 보게 되었다.

3. 판 단

기록에 의하면 C회사가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증권거래법상의 등록법인이 된 것이 1996. 10. 23.이고, 다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함으로써 장외등록법인이 된 것은 1997. 3. 15.인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그 행위 당시

인 1996. 11. 9.에는 구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6호,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는 C회사와 같이 등록법인이지만 아직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여 장외등록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법률규정이 변경되었고, 그 변경된 취지는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식 등의 유가증권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장외등록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한 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매매거래의 공정성 및 원활한 유통성의 확보나 투자자의 보호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내부자거래의 규제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각 행위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의 취지

[2] 상장법인 등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를 은행이 부도처리하기 전에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 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사실을 아는 당해법인의 주요주주 등이 그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위반 여부(적극)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구성요건의 일부가 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자가 법인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및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소정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보아야 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장법인 등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은행이 부도처리하기 전에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도 당해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당해 법인의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정보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등이 그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하였다면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같은 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

[4]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에서는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구성요건의 일부가 된다.

【참조조문】

[1]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제188조의2 제1항,제2항/ [2]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제188조의2 제1항,제2항/ [3]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4]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제207조의2

【참조판례】

[1][3]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공1994상, 156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 467 판결(공1995하, 2676)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진웅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7. 선고 2000노36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H주강 주식회사(이하 '한국주강'이라고 한다)의 주요주주인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H주강이 발행한 어음 등의 부도처리가 불가피한 사실을 알고 위 공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H주강의 주식을 1998. 4. 16.에서 같은 달 23일까지 매도(위 거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진 것은 위 매매체결일로부터 각 3일째인 같은 달 18일에서 같은 달 25일까지이다)한 사실과 피고인의 위 주식매매가 끝난 다음날인 같은 달 24일 H주강이 최종부도처리되어 공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H주강이 발행한 어음 등의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이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국주강이 발행한 주식을 매각하였다면 이는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자가 법인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186조 제1항 및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소정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참조), 따라서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장법인 등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은행이 부도처리하기 전에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처리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도 당해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당해 법인의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정보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등이 그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하였다면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호 지급보증을 한 관련 회사들의 부도처리와 은행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H주강의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바로 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거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상장법인 등이 신고 또는 공시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 외에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 제186조 제1항의 각 호는 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은 미공개정보가 바로 법 제188조의2 소정의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를 들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위 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구성요건 사실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또는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법 제188조의2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참조), H주강 스스로가 부도사실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공개한 사실이 없는 이상 비록 경제신문 등에서 그 유사한 내용으로 추측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법 제207조의2 단서에서는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구성요건의

일부가 됨은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금 2천만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증권선물위원회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회피 손실액은 금 1,123,377,400원이다. 수사기록 16면), 비록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그러한 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그리고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증권거래법상 이용이 금지된 이용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II. 시세조종금지위반

□ 대법원 2006.4.14. 선고 2003도6759 판결

【판시사항】

[1]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이 비상장·비등록 유가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소정의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거래객체를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거나 거래장소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은 물론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이 정의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원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결과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97. 1. 13. 개정(법률 제5254호)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는 목적범 형식으로 바꾼 것인바, 그 문언의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문서 이용행위로 인하여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

[2]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61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3. 10. 22. 선고 2002노8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법’이라고 함) 제188조의4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소정의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거래객체를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거나 거래장소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은 물론 구 법 제2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이 정의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판결들에서 언급한 ‘증권시장’은 장외시장을 포함하여 널리 증권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지칭하는 것이고, 위 판결들이 구 법 제188조의4 제4항의 적용 범위가 다수 투자자의 경쟁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님은 그 판시 내용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바가 못 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구 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원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

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결과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97. 1. 13. 개정(법률 제5254호)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는 목적범 형식으로 바꾼 것인바, 그 문언의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문서 이용행위로 인하여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문서는 주식회사 대한투자신탁측에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전달되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경영 상태와 장래 사업 전망에 대한 주식회사 대한투자신탁측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문서 이용행위와 대한투자신탁측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구 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행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주심)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그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통정 및 가장매매행위, 고가매수주문 및 허위매수주문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한 경우의 죄수 (=포괄일죄)

[3]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방법

[4]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5]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에 정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 및 같은 항 제1호에 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

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외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그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통정 및 가장매매행위,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가매수주문 및 허수매수주문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한 경우, 위 각 행위는 모두 포괄하여 같은 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의 일죄를 구성한다.

[3]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5]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그 제1호 소정

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07조의2 제2호(현행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참조)형법 제30조/ [4]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1항/ [5]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공1999하, 2559),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공2005상, 347)/[2]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3]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공2002하, 1890)/[3][5]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공2004상, 747)/[4]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공2002상, 222)/[5]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공2001하, 1781)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2. 11. 선고 2003노55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

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그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통정 및 가장매매행위,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가매수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한 경우, 위 각 행위는 모두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이 사건 증권거래법위반 공소사실은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와 거래 주식수 등이 명시되어 있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거래의 주체였던 피고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거래내역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로 해당 거래일자와 거래 주식수 등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는 경찰에서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취신하여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취신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

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참조).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그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은 별다른 가격상승 요인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과 이 사건 주식의 시세조종을 공모한 뒤 그 기회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총수량과 발행량 및 유통량 대비 비율과 위 주식의 가격상승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거래에 투자한 금액과 이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식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의무위반에 관한 판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7192 판결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산정방법

[2]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총 이익액을 과다 산정하여 이를 벌금액의 양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덕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1. 5. 선고 2003노78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1. 7. 3. 주식 220만주를 공모하여 A 주식회사를 코스닥에 상장하고 난 후 주가가 하락하자 피고인이 차명한 증권회사의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A 주식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어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2001. 8. 23.부터 2002. 1. 7.까지 사이에 고가매수 혹은 가장매매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위 각 차명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이 사건 주식의 총 매수량은 4,002,793주, 총 매도량은 2,962,560주에 이른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다만, 원심판결의 별지 시세차익표 중 시세조종기간을 뜻하는 '2001. 7. 26. - 2002. 4. 9.'의 기재는 기록상 '2001. 8. 23. - 2002. 1. 7.'의 오키임이 분명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호는 같은 법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득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및 그 거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 매매이익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시세조종행위 개시 후 종료시점까지의 구체적 거래로 인한 이익 및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이던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2001. 8. 23.부터 2002. 1. 7.까지의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중 그 판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시세조종행위 종료시점까지 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이던 이 사건 주식 1,040,233주의 평가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판시 시세차익표의 '미매도주식 제외 총 시세차익란' 기재와 같이 총 이익액을 474,753,021원으로 산출한 다음 위와 같이 산출한 총 이익액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의 일부로 삼는다고 설시함으로써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이익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상고이유 중 위 미매도주식의 평가액을 감안하지 않고서 단순히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그 이익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위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시세조종행위 종료시점인 2002. 1. 7.경 이 사건 주식의 종가가 주당 5,500원(매수단가 5,742원보다 단가가 떨어져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였다. 수사기록 487면 참조)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총 이익액을 계산하면 판시 시세차익표의 '미매도주식의 종가 매도 기준 총 시세차익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2,119,741원 상당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주식 시세조종행위에 기한 벌금형의 상한으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가 되는 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3억 원의 형은 그 법정형의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이익액의 과다 산정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잘못 산정한 총 이익액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기초로 삼는다고 적시까지 하고 있는 이상 원심의 위 법리오해의 위법은 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판시사항】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특정 주식의 시세조종과정에서 단기간에 주가를 목표가격대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증권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량의 주식을 미수 매수한 경우, 위 미수대금 상당액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으로 인하여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피고인이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상고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4] 포괄일죄인 시세조종행위가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적용법률

[5] 포괄일죄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범행이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적용법률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특정 주식의 시세조종과정에서 단기간에 주가를 목표가격대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증권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량의 주식을 미수 매수한 경우, 위 미수대금 상당액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룰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포괄일죄인 시세조종행위가 증권거래법 개정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같은 법 제207조의2 제

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07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5] 증권거래법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된 주식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그 매수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평가한다면, 증권거래법 시행 이전에 시세조종행위가 시작되어 시행 이후까지 계속하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 이전에 매수하였으나 증권거래법 시행 당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증권거래법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한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이익까지 모두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익으로 산정하게 됨으로써, 이익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증권거래법의 적용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고, 따라서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된 주식 중 증권거래법 시행 이전에 매수 및 매도가 모두 이루어져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익(실현이익)은 물론 증권거래법 시행 이전에 매수하였으나 증권거래법 시행 당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이익(미실현이익)까지도 증권거래법 시행 이전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형법 제347조/ [2]형법 제347조/ [3]형사소송법 제397조/ [4]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5]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공1996하, 1959),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1376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공2005상, 155)/[3]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공2001상, 1175),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3062 판결/[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6, 1153),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935 판결(공1990, 826)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애포 담당변호사 신광옥 외 9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26. 선고 2004노1387, 12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해자 교보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13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시세조종행위를 통하여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주식의 시세를 계속해서 상승시켜 왔으므로, 겉으로 드러난 주식 시세만을 가지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실제로 A 주식의 종가는 2002. 2. 15.에는 880원, 3. 8.에는 1,025원, 4. 23.에는 1,510원, 7. 29.에는 4,300원, 9. 12.에는 5,330원, 9. 19.에는 6,000원, 9. 26.에는 6,840원, 9. 30.에는 7,770원, 이 사건 미수 거래 무렵인 2002. 10. 4.에는 9,200원으로 계속 상승하다가, 2002. 10. 7.에 하한가인 7,820원을 시작으로 계속하여 12 영업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 2002. 10. 22.에는 1,330원까지 떨어진 점, 피고인은 시세조종행위 종료시한인 2002. 9. 말에 다가오는데도 A 주식의 시세가 목표가격대인 8,000원에 미치지 못하자 단기간에 시세를 목표가격대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미수 거래가 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2. 9. 24.부터 같은 해 10. 9.까지 6개 증권사의 8개 점포에 있는 10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무려 215억 원 상당이나 미수 거래를 발생시킨 점, 이후 반대매매를 통하여 일부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2002. 10. 말 기준으로 이 사건 피해자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교보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피해금액을 포함하여 82억 원 정도의 미수금이 남아 있는 점, 미수 거래의 경우 주식 매매체결일 이후 두 번째 영업일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납입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재산은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이 전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교보증권으로부터 36억 6,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A 주식 450,630주를 매수할 당시 주식을 미수 매수하더라도 3일 이내에 이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교보증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박상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주식회사 부흥 및 A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박상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환송 전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증권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증권거래법 개정·시행 전후에 걸쳐 있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증권거래법 개정·시행 전과 후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개정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파기 하되, 증권거래법위반죄와 나머지 유죄 부분인 피해자 박상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실, 이에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증권거래법 개정·시행 전후로 구분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 박상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도 함께 유죄로 인정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형을 새로이 정한 사실이 명백하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룰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2003. 3. 28. 선고 2002도30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피해자 박상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환송판결에 의하여 그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2002. 2. 15.부터 2002. 10. 9.까지 A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으므로, 증권거래법이 개정·시행된 2002. 4. 27. 이후에 매도한 주식은 2002. 4. 27. 전의 시세조종행위뿐만 아니라, 2002. 4. 27. 이후의 시세조종행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가치가 상승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2002. 4. 27. 이후에 매도한 주식에 관한 한 시세조종이라는 범죄행위는 모두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적용시기에만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 아니라 2002. 4. 27. 시행된 개정 증권거래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2. 4. 27. 이후에 매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2002. 4. 27. 전에 매수를 하여 그 시세형성에 2002. 4. 27. 전의 시세조종행위가 일부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구법이 아닌 개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한 A에 대한 2002. 4. 26.까지의 시세차익은 10,140,755원, 2002. 4. 27.부터 같은 해 10. 9.까지의 시세차익은 150억 20,121,751원이라고 인정하여 A 주식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포괄하여 개정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법 제207조의2 단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개정법 제207조의2 제2항에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와 50억 원 이상인 때를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포괄일죄인 시세조종행위가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개정법 제207조의2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개정법 제207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구법 제207조의2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하고(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 1990. 2. 23. 선고 89도193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법 제207조의2 단서와 개정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매도금액에서 총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이익의 산정은 시세조종행위 개시 후 종료시점까지의 구체적 거래로 인한 이익 및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중이던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과 같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된 주식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그 매수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개정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평가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시세조종행위가 시작되어 시행 이후까지 계속하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 개정법 시행 이전에 매수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당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한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이익까지 모두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익으로 산정하게 됨으로써, 이익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개정법의 적용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고, 따라서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된 주식 중 개정법 시행 이전에 매수 및 매도가 모두 이루어져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익(실현이익)은 물론 개정법 시행 이전에 매수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당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이익(미실현이익)까지도 개정법 시행 이전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개정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A 주식의 평가이익을 산정하여 보지 않은 채, 개정법 시행 이후에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된 주식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그 매수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개정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평가하고 개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조치에는, 증권거래법상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A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은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죄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의 규정 취지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에 정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한 매매거래'의 의미

[3]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역외펀드 관련사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유로운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공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금지하되,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장에서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 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 소정의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그 이하 조항이 정하는 기간·가격 및 주체 등에 관한 엄격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2]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은 유가증권의 현재의 시장가격을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는 경우뿐 아니라, 행위자가 일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격을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는 경우에도 인정되고, 행위자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매매거래를 한 것이라면, 그 매매거래가 일정한 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매매거래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3]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

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 경영에 있어 경영상 판단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역외펀드 관련사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 [2]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 [3]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4]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8. 1. 8. 법률 제5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3]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공2004하, 1480)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23. 선고 2000노154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증권거래법위반 부분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대통령령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은 "법 제188조의4 제3항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은 일정한 기간 유가증권의 가격의 안정을 기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과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수요공급을 당해 유가증권의 상장 또는 협회 등록 후 일정기간 조성하는 것(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이하의 조항에서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로운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공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금지하되,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장에서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 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 소정의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그 이하 조항이 정하는 기간·가격 및 주체 등에 관한 엄격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은 유가증권의 현재의 시장가격을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는 경우뿐 아니라, 행위자가 일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격을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는 경우에도 인정되고, 행위자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매매거래를 한 것이라면, 그 매매거래가 일정한 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매매거래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인등과 공모하여 BIS 비율을 맞추려는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포항제철 주식회사(이하 '포항제철'이라 한다)의 주식 133,198,370주와 A화학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주식 3,778,920주를 높은 가격으로 자전거래시키기 위하여 1997. 12. 23. 전장 동시호가에서 포항제철의 주식 25만 주를 1주당 전일 종가보다 3,600원이 높은 50,600원에, A의 주식 10만 주를 1주당 전일 종가보다 1,200원 높은 18,100원에 각 매수주문을 내고, 주문가대로 매매거래를 성사시켜 그날 전장 시초가를 주문가대로 형성시킨 다음,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A의 주식을 그 가격으로 자전거래시키고, 같은 날 오후 동시호가에서 포항제철의 주식 19만 주를 위와 같은 가격인 50,600원에 매수주문을 내어 주문가대로 매매거래를 성사시켜 후장 시초가를 주문가대로 형성시킨 다음,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포항제철의 주식을 그 가격으로 자전거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자전거래시키기 위하여 시장조작에 의하여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매매거래를 하고 그 가격으로 자전거래를 하였다면, 그 매매거래 행위는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의 처벌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에 한한다고 해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과 그 시행령의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 경영에 있어 경영상 판단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주, 삼미특수강공업 주식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흥성산업,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가 각 발행한 사채를 지급보증하게 된 경위 등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역외펀드 거래의 특수성과 당시의 관행에 따라 역외펀드 관련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역외펀드 관련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당시의 기업회계기준 제2조에 의하면,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형식이나 외관 또는 법적 형태보다 실질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B증권이 엑셀펀드와 프라임코리아펀드라는 역외펀드를 설립하면서 역외펀드가 발행한 주식을 해외금융기관에 환매조건부로 매매하고 그 대금으로 주식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역외펀드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그 형식은 환매조건부매매이나 실질은 주식의 인수와 외화의 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증권이 운영하는 역외펀드의 하나인 엑셀펀드에서 발행한 변동금리부 사채를 인수한 해외금융기관에 원금 판시와 같은 이행계약을 작성, 교부한 것은 보증의 제공으로 우발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역외펀드 관련사항은 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B증권에서 설립·운영하는 위 역외펀드의 설립과정과 운영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역외펀드 관련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고 그것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인데, 다른 증권회사들이 역외펀드 관련사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증권감독원이 이 사건 이후에야 역외펀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역외펀드 관련사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증권 국제부에서 작성된 RP거래의 현황 및 향후 처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고 역외펀드 관련사항이 재무제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증권거래법위반 부분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가 규정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

법

[2] 시세조종행위를 위해 외부청약 과정에서 청약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약환불금 등의 비용은 주식매도 및 매수에 관련된 거래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에서 공제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4]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시세조종된 주식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대출받을 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6] 포괄일죄인 시세조종행위가 증권거래법 개정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적용법률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 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

[2] 시세조종행위를 위해 외부청약 과정에서 청약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약환불금 등의 비용은 주식매도 및 매수에 관련된 거래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에서 공제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4]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시세조종된 주식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대출받을 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6] 포괄일죄인 시세조종행위가 증권거래법 개정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같은 법 제207조의2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07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제2항/ [2]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3]형법 제30조/
[4]형법 제347조/ [5]형법 제347조/ [6]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참조판례】

[1][3]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공2004상, 192)/[1]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공2002하, 2159),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공2003하, 2404)/[3]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공2002하, 2127),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공2003상, 758),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공2004상, 946)/[4]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공1984, 858)/[6]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6, 1153),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935 판결(공1990, 826)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외 3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서정욱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2. 9. 선고 2003노3094, 2004노13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7조의2 제1항 단서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한 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7조의2 제2항에서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 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의 1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상호생략'인데, 2002. 9.경 상호가 바뀌었다.)가 2000. 2. 14. 부도 처리되고 같은 해 8. 21. 화의인가를 받은 사실, 공소의 1 주식회사는 그 후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2001. 10. 26.경 주식회사 크레디온(이하 '크레디온'이라 한다)과 사이에 크레디온이 공소의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산실사 결과 필요한 자금투입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180억 원보다 훨씬 많은 250억 원에 이르게 되자, 크레디온은 공소의 1 주식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중단한 채 이를 양도할 대상을 물색하였는데, 공소의 2와 피고인 1은 2001. 11.경 그 정보를 입수하고서 공소의 1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2002. 2. 22. 자본금 70억 원을 사채업자인 반00으로부터 빌려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공소의 3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크레디온과 협의과정을 거쳐 2002. 3. 20. 그 사업을 양수받은 사실, 그에 따라 공소의 1 주식회사는 자본감소, 액면분할 절차를 거쳐 2002. 4. 25. 보통주 45,454,550주(액면분할 후 기준, 이하 같다), 발행가 550원, 증자금액 250억 원, 유상증자일 2002. 6. 3., 신주권교부일 2002. 6. 24.로 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는데, 공소의 3 주식회사는 총 44,454,550주에 관하여 유상증자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3개월 및 1년 보호예수분을 제외한 2,172만 주를 교부받기로 하여 경영권(지분비율 94.19%)을 확보하게 되었고, 공소의 1 주식회사는 위 유상증자로 납입 받은 250억 원 등으로 화의채무 263억 원을 변제하여 2002. 8. 7. 관리 종목에서 해제되고 경영이 정상화된 사실, 한편, 피고인 1등은 위 유상증자일보다 훨씬 앞선 시점인 2002. 2.에서 5.경까지 사이에 이미 장외청약자인 김00 등에게 1년 보호예수분을 제외한 3,082만 주의 신주 중 2,002만 주를 주당 1,000원 내지 1,200원에 선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224억 원의 공소의 1 주식회사신주인수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장외청약 모집가와 신주인수가의 차이를 이용하여 1년 보호예수분을 제외하고도 1,080만 주를 발행차익으로 취득하였고, 나아가 투자자들에게 그 청약주식을 교부할 때가 되자 현금보관증을 건네주고 주권 중 일부(578만 주)만을 교부함으로써, 결국 위 발행차익에 해당하는 주식과 미교부 주식 합계 2,504만 주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을 한 사실, 또한, 2002. 2. 15.부터 2002. 4. 23.까지 및 2002. 5. 21.부터 2002. 10. 9.까지의 두 기간 중의 시세조종이 동일한 시세조종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각 기간의 시세조종행위가 인위적인 가격조

종을 통한 매매차익의 획득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전반기 시세조종에 동원되었던 계좌가 후반기 시세조종에도 계속 이용되었고, 전반기 중에 매수한 주식을 후반기 중에 매도하는 등 같은 주식의 매매가 두 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을 각인정한 다음, 피고인 1등은 처음부터 구조조정과 관련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 및 청약자 모집을 의미하는 '발행시장' 부분과 구조조정 완료 후 확보한 신주 및 이를 담보로 취득한 자금 등을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유통시장' 부분을 연계시켜 시세조종하기로 계획하였고, 그 전체적인 계획하에 구주 매집과 신주 발행 단계를 포함한 이 사건 시세조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주 발행이 주가조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시세조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발행시장을 통하여 입고된 주식의 평균 취득단가를 신주 발행가인 55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등이 공소외 1 주식회사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순이익을 15,020,121,751원으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에서 공제되는 비용이라 함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매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 주식매도 및 매수에 관련된 거래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1등이 시세조종행위를 위해 외부청약 과정에서 청약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약환불금 등의 비용은 주식매도 및 매수에 관련된 거래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에서 공제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명백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2로서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3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3이 피고인 1, 공소외 4등과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주가를 조작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3이 유통 부분에 대한 조작을 맡아 집중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고, 피고인 1등과 함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도 동시에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 3이 피해자 박00에게 직접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 전망과 유상증자 참여에 대하여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차주가 되어 달라고 기망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자금조달에 대하여 피고인 3과 피고인 1등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의 상통이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공동정범의 법리상 피고인 3역시 피고인 1등과 함께 사기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이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공소외 1 주식회사주식 420,000주는 당시 시가로 약 25억 원(주당 약 6,000원) 상당에 이르렀기는 하나, 위 주식의 당시 시가는 피고인 3등의 주식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 3이 2002. 9. 26. 하나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박00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은 이후 불과 2주 정도 만에 그 주가가 급격히 하락함으로써, 하나은행이 이를 매각하여 회수한 대금이 567,355,194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3은 시세조종된 주식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3이 위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을 당시에는 대출액의 약 250%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3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은행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하여 그 중 일부를 대출금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피해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3의 편취액수를 9억 8,000만 원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3으로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권거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사유를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권거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4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4의 이 사건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4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채증법칙 위배 및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4로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권거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권거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207조의2 단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2002. 4. 27.부터 시행된 법 제207조의2 제2항에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와 50억 원 이상인 때를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포괄일죄인 시세조종행위가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법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법 제207조의2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법 제207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구법 제207조의2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 1990. 2. 23. 선고 89도19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등이 공모하여 2002. 3. 28.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의 주식을 시세조종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 617,401,500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등이 공모하여 2002. 2. 15.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시세조종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 15,020,121,751원을 취득하였다고 각 인정한 다음, 각기 법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 등이 법 시행일인 2002. 4. 27. 이후에 주식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20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법 시행 이후에 피고인 등이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별도로 심리하여 보지 않은 채, 법 시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시세조종행위 종료시점 당시 피고인 등이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 전체를 기준으로 법 제207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주식회사 A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공소외 1 주식회사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각 죄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 같은 항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2]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4] 검사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법원의 심리방법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6]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 위반죄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검사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본문만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그 단서에 정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그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단서 규정상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2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기 위한 구성요건의 일부가 되는 것이어서, 검사가

같은 법 제207조의2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를 한 경우, 법원으로서의 먼저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점을 확정된 후,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고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성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 위반죄에 관한 공소사실 가운데 미공개정보를 언제 어떻게 매매거래에 이용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전혀 적시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이익액을 산정할 수 있는 거래가액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검사가 피고인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과 관련하여는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본문에 위반하는 행위로만 기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단서에 정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2]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3]형법 제30조/ [4]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5]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6]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7]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54조

【참조판례】

[1]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공2002상, 222)/[2]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공2001하, 1781),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공2002하, 2127),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공2004상, 192)/[3]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공1999상, 69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공2002하, 1890)/[5]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공1999하, 2559),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공2001상, 208),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공2001상, 1316),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194 판결(공2002하, 2648)/[7]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도2215 판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1. 5. 선고 2002노1253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2의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그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은 공소의 주식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상승시키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하였고, 이는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주식이 유망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여 그들을 주식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 후, 피고인 2가 고가

매수주문행위, 허위매수주문행위, 통정 및 가장매매행위 등을 통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내지 증거거래법 제188조의4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의 채증법칙위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등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1이 2001. 9.경부터 피고인 2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공동가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비록 피고인 1이 이 사건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주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7조의2는 "제188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2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기 위한 구성요건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를 한 경우, 법원으로서 먼저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점을 확정된 후,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고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정하여야 할 책임을 지적하여 둔다.

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자사주 취득과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부분

(1) 원심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2001. 9. 20.경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주가부양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같은 해 10. 말경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한달 뒤 정도에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어, 피고인 2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공소외 주식회사주식의 매매거래에 이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고인 1으로부터 공소외 주식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공소외 주식회사주식의 매매거래에 이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색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자사주 취득과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미공개정보의 이용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언제, 어떻게 매매거래에 이용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전혀 적시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해석적용을 잘못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 1에게 벌금형을 병과한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자사주 취득과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외에 무상증자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을 한 후, 이상의 행위들에 대하여 모두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5억 원의 벌금형을 병과하였다(원심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소정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금지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공동피고인 1, 원심공동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기 징역형과 2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병과하였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선택하였으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형과 2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병과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2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호는 "제18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2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기 위한 구성요건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불고불리의 원칙상 법원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부분에 관한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으면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1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이익액을 산정할 수 있는 거래가액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검사가 피고인 1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과 관련하여는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본문에 위반하는 행위로만 기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하여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 1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하여 5억 원의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도2215 판결 참조).

또 원심이 피고인 1에게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 이상을 병과하려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심리·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피고인 1이 이 사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얼마인지를 전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2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병과한 것도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위반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병과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2도6390 판결

【판시사항】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

【참조조문】

[1]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현행 제207조의2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공2002하, 2159),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공2004상, 192)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외 3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희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0. 30. 선고 2002노25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원풍의 주가 시세를 조종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이 원심 판시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협성농산의 주가 시세를 조종하였다고 인정하여 이를 모두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처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권거래법위반죄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7조의2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

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이익의 산정은 시세조종행위 개시 후 종료시점까지의 구체적 거래로 인한 이익 및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이던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시세조종행위 개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그 종료 시점 이후에도 계속 보유한 주식은 고려함이 없이, 기록상 확인되는 시세조종기간 동안의 총매수량과 총매도량의 일치수량에 평균매도단가와 평균매수단가의 차액을 곱한 금액에서 거래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조치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인들에게 오히려 유리하여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증권거래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3]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 방법

[4]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 규정 위반의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병과되는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소정 벌금형의 산정 방법

[5]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벌금 처단형의 상한이 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목적은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증가관여 등),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호는 같은 법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이후 개정된 현재의 증권거래법 규정은 위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따라 행위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5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 내지 제21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 규정 위반의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

에 대하여 병과되는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소정 벌금형은 그 법인이 대표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그 상한이 정하여진다고 보아야 한다.

[5]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이익의 산정은 시세조종행위 개시 후 종료시점까지의 구체적 거래로 인한 이익 및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이던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벌금형의 상한이 되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가 되는 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조조문】

[1]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2]형법 제30조/ [3]형법 제13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4]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호(현행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참조)제215조/ [5]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현행 제207조의2 제1항참조)

【참조판례】

[1]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공2001하, 178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공2002상, 22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공2002하, 2127)/[2][3]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공2002하, 212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공2003상, 758)/[2]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공2001상, 9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공2001하, 1802), 대법원 2002. 4. 10. 선고 2001도193 결정(공2002상, 129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공2002상, 1186)/[5]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공2002하, 2159)

【전 문】

【피고인】 이00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평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 17. 선고 99노113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이00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H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H증권'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이00이 같은 회사 상무이사이던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피고인 H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H전자 주식회사(이하 'H전자'라 한다) 발행의 전환사채 2,500억 원 상당 및 H증권의 상품계정 등에서 보유 중이던 H전자 주식 300만 주의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각 회사들과 같은 계열사인 H중공업 주식회사(이하 'H중공업'이라 한다)와 H상선 주식회사(이하 'H상선'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H전자의 주식 시세를 올리기로 마음먹고, 1998. 5. 26.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사이에 H증권에 개설된 H중공업과 H상선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증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시간대에 53회에 걸쳐 합계 1,425,680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내어 증가를 고가에 형성시키고, 1,023회에 걸쳐 합계 3,472,180주에 대하여 직전체결가 및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주문을 내어 장중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시세변동 거래행위를 하고, 567회에 걸쳐 합계 2,103,290주에 대하여 장중접속매매시 매매체결가능성이 없는 허위의 대량매수주문을 내어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고, 60회에 걸쳐 합계 302,070주에 대하여 시초가 형성을 위한 동시호가시간대만 공개되는 점을 이용하여 매매체결가능성이 없는 낮은 가격에 대량의 허위 매수주문을 내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는데(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목적은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00과 위 원심공동피고인에 의한 H전자 주식의 시세조종이 시작될 당시 H전자의 총발행 주식수는 56,000,316주이고, 위 주식은 당시 H그룹의 수장이던 정주영 및 그 일가, 그리고 나머지 H계열사들이 44,501,390주(79.47%), 기관투자자 등 법인 주주가 2,452,897주(4.38%), 일반 개인소액주주가 5,590,519주(9.98%), 기타 법인주주 2인이 3,445,510주(6.17%)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점, 당시 H전자 주식분포상황에서 보듯이 유통가능한 H전자 주식의 최대물량은 기관 및 개인소유 주식 8,043,416주(14.36%)였고, 실제로 가능한 유통물량은 이보다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이00과 H증권이 H중공업과 H상선과 함께 이 사건 H전자 주식매수에 동원하기로 한 자금의 규모는 2,200억 원으로서 H전자의 시세관여기간 전일(1998. 5. 25.)종가인 주가 14,800원으로 환산하면, 14,864,864주(단주 미만 버림)상당이 되고, 이는 위 최대 유통가능 주식물량의 1.84배에 이르는 물량인 점, 실제 H중공업과 H상선은 피고인 이00과 H증권을 통하여, 1차 주식매집기간인 1998. 5. 26.부터 같은 해 7. 2.까지는 총 5,199,770주(매수금액 1,169억 원 상당, 기간 중 거래량의 47.4% 매수, 일일분할매수 최대 149회, 일일거래량 중 최대 88.9% 매수)를 매수하여 주가를 최저 14,800원에서 최고 32,000원까지 상승시키고(상승률 116.2%), 1998. 7. 3.부터 11. 12.까지의 제2차 매집기간 중에는 총 3,743,480주(매수금액 965억 원 상당, 기간 중 주식거래량의 16.4% 매수, 일일분할매수 최대 135회, 일일거래량 중 최대 93.2% 매수)를 매수하여 주가를 최저 24,200원에서 최대 31,300원까지 상승시켜, 시세조종 기간 중 H중공업과 H상선의 주식매수를 위한 주문 규모는 14,048,500주, 금액으로는 3,361억 원, 그 거래 과정에서의 주가상승에 따라 실제 H중공업과 H상선이 사들인 H전자 주식의 규모는 8,943,250주, 금액으로는 2,134억 원 상당이 되는 점, 피고인 H증권은 위 시세조종행위가 시작될 당시 영업용순자본 비율의 제고를 통하여 회사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었던 점, 실제 위 시세조종행위 시작 당시 피고인 H증권이 자신의 자산으로서 보유중이던 H전자의 주식은 모두 640,500주였는데, 위 시세조종기간 중의 매매를 통하여 H전자의 주식수는 시세조종행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772,380주로 모두 131,880주가 늘었고, 동 기간 중의 위 H전자 주식의 매매거래로 인한 수익은 실현손실과 평가손익을 감안하여 5,859,626,530원에 이르는 점, 또한 위 시세조종행위 시작당시 피고인 H증권이 자신의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던 H전자의 전환사채 2,500억 원 상당도 시세조종행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H전자의 주가를 감안하면 9,037,416,000원의 평가이익이 있었고, 나중에 1998. 12. 28. 위 전환사채를 324,336,942,270원에 모두 H중공업과 H상선에 매각하면서

82,765,767,695원의 매각차익(피고인 H증권 자신의 분석에 의하면, 그 중 H전자의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부분은 17,939,281,756원이다)을 얻은 점, 기타 피고인 H증권은 자사의 상품 계정 및 역외펀드 등에서 H전자 주식의 거래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거둔 점, 피고인 H증권은 위와 같은 H전자의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으로 인하여 영업용 순자본의 비율이 상당 부분 개선된 점 등 제반 정황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피고인 이00 등에 의한 이 사건 H전자의 주식매수에 동원한 구체적 매수방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00에게는 위 증권거래법 소정의 유인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 이00의 시세조종의 범의와 유인 목적을 인정하고 피고인 이00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H전자의 주가상승 원인 및 주가조작의 동기에 관한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이00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이00 및 H증권에 의한 H전자 주식의 시세조종기간 중 및 그 다음해 초에 걸쳐 H그룹의 창업주인 정00 등 정씨일가, 그리고 H계열사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H전자 주식의 상당부분인 3,800만 주 이상을 고가에 처분한 사실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가사 이 점을 들어 피고인 이00이 상고이유 보충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H전자 주식의 시세조종의 주된 동기가 정씨 일가 및 H계열사들의 주식처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H증권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부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이00의 시세조종의 범의나 증권거래법상의 유인 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이00이 원심공동피고인에게 H전자의 주가를 높여가면서 매수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두 사람을 공범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 이00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H증권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제1심이 피고인 H증권에 대하여 벌금 70억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에 의한 벌금은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그 이익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며, 또 주식매도를 통한 현실적인 시세차익을 얻은 바가 없더라도 인위적인 주가상승 자체로 이미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동안 H증권이 보유하고 있었던 H전자 주식 300만 주가량이었고, 이 기간 동안 종합주가지수와 전기전자업종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 데도 H전자 주가는 최저 14,800원에서 최고 32,000원까지 상승하였으므로 H증권이 시세조종의 결과 얻은 주가상승이익만 하더라도 500억 원 이상(300만 주×주가상승액 17,200원)으로서, 제1심이 H증권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액은 법정 벌금형 범위 내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여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H전자 주식의 시세조종행위 당시 피고인 H증권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이00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목적과 시세조종의 범의가 인정되는 점 및 피고인 이00이 위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H전자의 주식시세를 조종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점에 대한 피고인 H증권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호는 같은 법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이후 개정된 현재의 증권거래법 규정은 위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따라 행위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5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 내지 제21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 규정 위반의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병과되는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소정 벌금형은 그 법인이 대표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그 상한이 정하여진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의 표현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인 H증권에 대한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 H증권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판단은 정당하다. 이 점에 대한 피고인 H증권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이익의 산정은 시세조종행위 개시 후 종료시점까지의 구체적 거래로 인한 이익 및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이던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리고 벌금형의 상한이 되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가 되는 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제1심은 피고인 H증권에 대한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 그 형의 상한이 되는 이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벌금형을 정하였고, 원심도, 시세조정기간 동안 H전자 주가가 최저 14,800원에서 최고 32,000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H증권이 상품계정 및 역외펀드 등에서 보유 중이던 H전자 주식 300만 주에 대한 주가상승 이익만 하더라도 500억 원 이상이라고 하여, 전혀 합리성이 없는 근거에 기초한 최소한의 이익액을 적시한 후 제1심판결과 같은 벌금형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H증권에 대하여 병과될 벌금액의 기준이 되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은 피고인 H증권이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위의 결과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전체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H증권이 얻은 이익은 H증권 자신이 자신의 자산으로서 보유 중이던 H전자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얻은 이익과 잔존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종료시점의 평가이익, 그리고 H증권이 자신의 자산으로서 보유 중이던 H전자 전환사채의 가치상승으로 인하여 얻은 평가이익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피고인 이00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H증권이 이 사건 H전자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피고인 H증권 자신이 이 사건 기록상 시인한 자료만을 기준으로 하여도 자산으로 보유 중이던 H전자 주식의 거래이익 및 시세조종행위의 종료시점에서의 잔존주식의 평가이익이 합계 금 5,859,626,530원이고, H전자의 전환사채 2,500억 원 상당의 평가이익이 금 9,037,416,000원으로서 위 이익의 합계가 금 14,897,042,530원에 이르므로 피고인 H증권에 대하여는 위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기록상 분명한 위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 금 14,897,042,530원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에서 피고인 H증권에 대하여 선고된 벌금 70억 원은 기록상 인정되는 위 이득액에 의하여 산정되는 정당한 형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

명백하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형의 양정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피고인 H증권이 얻은 이익 및 이로 인하여 정하여지는 벌금형의 범위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는 등 잘못을 하기는 하였지만, 증권거래법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정당한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H증권에 대하여 적정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H증권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소정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의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한 다음 그 사실을 공시하거나 기사화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그 판단 기준

[4]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제 대상인 거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5]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대상이 되는 "당해 정보를 받은 자(소위 정보수령자)"의 의미

【판결요지】

[1]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실제로 공시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의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한 다음 그 사실을 공시하거나 기사화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의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의 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법문 소정의 부당한 이득은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의 지위상승 등 무형적 이익 및 적극적 이득뿐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득,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의 이득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 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공제 대상인 거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대상이 되는 "당해 정보를 받은 자(소위 정보수령자)"란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자를 말한다.

【참조조문】

[1]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 [2]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4호, 제188조의4 제4항/ [3]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 / [4]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5]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참조판례】

[3]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공2001상, 578),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 1696 판결(공2002하, 210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053 판결/[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공2002하, 2159)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민경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 22. 선고 2002노517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식회사 화승강업(이하 '화승강업'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당시 주식시장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던 A&D(인수 후 개발) 및 정보통신관련 사업체의 주식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용하여, 마치 향후 위 회사를 정보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체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처럼 관련 호재성 재료를 허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인수한 주식을 처분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만한 능력은 물론 그러한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 7. 19.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위 회사의 사업목적에 '정보통신관련 등' 사업 내용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 부의하였고, 같은 해 8. 18. 위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됨으로써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각각 공시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같은 해 8. 19. 자 머니 투데이와 8. 20. 자 한국경제신문에 기사화 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화승강업이 A&D를 본격화하여 향후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처럼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시하거나 기사화하였다는 내용(이하 '공시내용'이라고 한다)은 "화승강업이 2000. 7. 19.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회사의 사업목적에 '정보통신관련 등' 사업 내용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 부의하였고, 같은 해 8. 18. 위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됨으로써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것을 들어 피고인이 화승강업을 통하여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만한 능력은 물론 그러한 의사가 없음에도 주가

하락중이던 화승강업 주식의 고가매도를 위하여 공시내용을 공시하고 기사화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실제로 정보통신관련 등 사업에 투자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화승강업이 공시내용과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의 사업목적에 '정보통신관련 등' 사업 내용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한편,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처음부터 정보통신관련 등 사업에 투자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공시를 한 후 실제로 정보통신관련 등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기사화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정보통신관련 등 사업에 투자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공시를 한 후 실제로 정보통신관련 등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권거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나. 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칙으로 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로서 같은 조항 제13호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의 하나로 같은 조항 제1호에서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동이 있을 때"를, 제7호에서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8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법인의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를 규정하고 그 (자)목에서 "최대주주, 주요주주.....계열회사가 변경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2000. 6. 17. 제출한 대량보유보고서에 기재된 판시 허위사실들은 화승강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으로서 화승강업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화승강업의 기업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로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칙으로 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

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의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의 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법문 소정의 부당한 이득은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의 지위 상승 등 무형적 이익 및 적극적 이득뿐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득,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의 이득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도60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취득한 주식을 조만간에 매도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주당 1,900원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취득하였던 주식을 2000. 8. 22. 및 같은 달 23. 그 중 1,068,000주를 주당 3,940원에, 392,000주를 주당 4,000원에 전부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남긴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매도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대량보유보고서에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타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이익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중 일부는 차입금인데도 대량보유보고서에 자기자금으로만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이 사건 주식 양수를 통하여 화승강업을 사실상 인수하고 화승강업의 경영권을 획득한 피고인이 자신의 재무구조가 실제보다 더 충실한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인수한 회사인 화승강업의 신인도 제고라는 무형적 이득과 함께 주가의 상승이라는 유형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이 화승강업을 인수하고 경영권을 획득하자마자 회사의 사업목적에 '정보통신관련 등' 사업 내용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하고 이를 공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화승강업의 인수자금 중 상당부분을 단기 차입금에 의존할 정도여서 별다른 자금 여력이 없는 피고인이 주식취득자금이 전부 자기자금인 것으로 공시하여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주가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허위의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를 법 제188조의4 제4항 소정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 또는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보고, 그 행위와 피고인이 얻은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금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권거래법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 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 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하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공제 대상인 거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1이 얻은 이익이 금 2,980,062,010원이라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 법리오해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참조), 관계 법령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벌금형 병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점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과 이 사건 주식 290만 주에 대한 매매 및 회사인수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은 화승강업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화승알앤에이(R&A)(이하 '화승'이라 한다)인 사실을 알 수 있고, 화승강업과 화승이 실질상 동일한 회사라거나 화승의 대표이사인 현00이 화승강업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며, 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대상이 되는 "당해 정보를 받은 자(소위 정보수령자)"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법 제18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승강업의 주요주주인 화승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해 정보인 "화승이 위 피고인에게 화승강업 주식 290만 주를 양도하여 화승강업의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정보는 화승이 그 소유의 주식을 위 피고인에게 처분함으로써 스스로 생산한 정보이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가 아니고, 위 피고인은 당해 정보를 화승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가 아니라 화승과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로서 화승과 공동으로 당해 정보를 생산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이 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또는 법 제188조의2 제1항 소정의 "당해 정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 중 위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있는 부분과 이유 없는 부분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2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판시사항】

[1]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2] 공소사실의 본문에 피고인이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소장에 첨부된 자료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검사 또한 이를 전제로 구형을 하고 있다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피고인을 처단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4]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가 그 규정상의 이익액을 산출해 낼 합리적인 해석 기준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고, 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

의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2] 공소장의 공소사실 본문에 피고인이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장의 본문의 내용과 일체가 되어 공소사실을 이루는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명시되어 있고 그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의 3배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또한 이를 전제로 하여 구형하고 있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시세조종 등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단서는 같은 법 제188조의4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

[4]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바,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의 규정상의 이익액을 산출해 낼 합리적 해석기준이 분명하여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지니는 것이어서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 제207조의2/ [2]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07조의2/ [4]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공1996상, 1649),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대

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공2002하, 2127)/[4]대법원 1998. 6. 18. 선고 97도 223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하, 1936),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309 판결(공1999하, 2379),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100),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공2002상, 122)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안용득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4. 4. 선고 200 1노377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 및 그와 관련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원심의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장유가증권인 영남제분 주식회사의 주식이나 삼영케블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회사 크린엔사이언스의 주식의 시세를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5항의 각 항 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의 제2항 제1호전단의 허위매수 주문행위와 같은 호 후단의 고가매수 주문행위 등을 반복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와같은 조의 제1항 제1호, 제2호의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시세조종 등 불

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되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참조),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범죄사실 각 항별로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88조의4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각 행위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으로 보여 각 항별로 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전부가 포괄하여 일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으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사실 제3항 내지 제5항의 각 죄가 있어 어차피 경합가중 되었어야 할 것인데다가,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처단형이 가중되는 것도 아니고, 기타 사유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되거나 그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없다.

3. 불고불리의 원칙 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고인2에 대한 공소장의 공소사실 본문에 같은 피고인이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공소장의 본문의 내용과 일체가 되어 공소사실을 이루는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에, 같은 피고인의 시세조종 등의 행위와 관련한 매도·매수·주식의 수, 거래회수, 그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명시되어 있고, 그 기재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의 3배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또한 같은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구형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같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보더라도 같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피고인이 시세조종 등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하여 같은 피고인을 처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소정의 "이익액"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단서는 법 제188조의4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참조).

한편,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될 법규인 위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의 규정상의 이익액을 산출해 낼 합리적 해석기준이 분명하여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지니는 것이어서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의 이익액의 계산이 불명확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방식에 따라 이익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한 시세차익을 구한 다음, 거기에 해당 주식에 대한 피고인2와 관련된 일별(日別) 거래량을 전체 거래량으로 나눈 값으로 구한 소위 시세조종 관여율을 곱하여 이익액을 산출한 잘못을 범하고 말았으니(기록상 거래비용이 얼마인지 심리되어 있지 않고 원심이 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거래비용을 고려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2에 대하여는 원심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1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타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합리적인 자금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4]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 방법

[5] 증권거래법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6]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그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 행위,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7]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의 대출에 있어 대출을 받는 자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써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2]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4]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주식매집을 통한 주가상승의 부분에 대하여 공모가 인정된다면 이를 위하여 한 구체적인 행위 중 시세변동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상황 오인·오판 목적의 통정매매 및 매매거래 유인목적의 거래상황 오인행위 부분도 모두 공모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증권거래법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6]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장유가증권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그 시세를 조종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목적과 범의하에,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의 통정매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직전가(전일 종가) 및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주문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주식시세를 상승시키는 매매거래,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여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주식에 대한 대량의 허위매수주문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면, 이는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의 각 항과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고, 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되어, 위 각 행위는 모두 포괄하여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의 일죄가 성립된다.

[7]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형법 제356조/ [2]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3]형법 제30조/ [4]형법 제13조,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5]형법 제30조,형사소송법 제307조,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제2항 / [6]형법 제37조,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2호,제2항 제1호,제207조의2 제2호/ [7]형법 제37조,형사소송법 제383조,제391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85 판결(공1991, 134),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공2002하, 1877),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2]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공2001하, 1781),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3]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공2001상, 91),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공2001하, 1802),대법원 2002. 4. 10.자 2001도193 결정(공2002상, 1295),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공2002상, 1186)/[4]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공1999상, 81),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6]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공1996상, 1649),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공2002하, 2159)/[7]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공2000하, 1700),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공2001상, 229)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조용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9. 5. 선고 2001노139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증권사 1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증권사 1이 그 발행주식의 27%를 소유하고 있는 종금사 2의 비상근이사로서 이사회 의장인공소외 1의 부재시의 대행자 겸 대출심사위원장이고, 증권사 1, 종금사 2등이 속한 외국 대기업 그룹이 처음 국내에 진출할 당시 유일한 한국인으로 그룹회장인 공소외 2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이미 진00의 부탁으로 증권사 1에서 위 진00의 계열사인 시그마창업투자주식회사로 1999. 10. 14. 80억 원을, 같은 해 12. 14. 200억 원을 각 콜론 형식으로 대출해 주었으나 이 사건 대출일까지도 위 대출금이 상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날 진00은 피고인과 종금사 2의 자금담당 이사공 소외 3을 자신의 집으로 차례로 불러 종금사 2에서 자신의 계열사로 대출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 종금사 2의 영업담당이사인 이영근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종금사 2에서 진00의 계열사인 H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H창투'라 한다)로 600억 원의 콜론 형식 대출이 성사되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위공소외 3이사 또한 위공소외 4이사에게 피고인이 큰 자금이 급히 필요한 업체가 있으니 대출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종금사 2의 대표이사인공소외 5은 위공소외 4이사와공소외 3이사로부터 H창투에 콜거래 600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대주주인증권사 1에서도 양해가 된 사항으로 생각하고 진00의 요청에 따라 H창투에 대한 신용조사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유가증권 목록만을 제공받고 대출한도를 초과한 600억 원을 대출해 주게 된 사실, 대출 직후 위공소외 4이 피고인에게 대출이 되었다는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그에게 자신이 잘 해결해서 다치지 않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종금사 2에서의 위치 및 종금사 2에 대한 영향력, 증권사 1과종금사 2과의 관계, 피고인의 대출을 전후한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종금사 2의 대출과 관련하여 정식 결재권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종금사 2의 임원이자 공소외 1부재시의 대출심사위원장이므로 이러한 대출이 규정을 무시한 무리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출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는커녕 H창투에 대출이 되도록 전화 통화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결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결재권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5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의 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 등 참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대출에 있어 대출을 받는 자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참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에 직접 관여한 점이 인정되는 외에 종금사 2이 H창투로부터의 자금회수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그 대출을 위한 사전 조사와 사후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대출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융기관 사이의 초단기대출인 콜자금 대출이라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나.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매매거래유인목적의 시세변동거래행위 부분에 관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증권사 1은 1954. 8. 30. 설립하여 1988. 8. 25. 상장 등록된 증권회사로서 자본금이 2000. 2. 7. 이전에는 73,670,075,000원(보통주 8,688,385주, 우선주 6,045,630주, 합계 14,734,015주)이고 2000. 2. 7. 감자 및 액면 분할하여 자본금이 66,113,038,000원(66,113,038주)이 되었으며 주요주주는 홍콩계 회사로서 공소의 2이 대표이사로 있는 외국회사와 진00이 대주주로 있는 엠씨아이코리아(MCI Korea)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케이오엘(KOL, Korea Online)이며 위 회사가증권사 1의 주식 69.95% 가량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1999. 10. 5.경 피고인은 홍콩에서 공소의 2의 부탁으로 진00에게 국제전화를 하여 공소의 2가증권사 1주식 1,000만 \$ 상당을 구입해 주면 두 달 이내에 원금에 연 15%의 금리를 가산하여 되사주겠다고 한다면서 지금 해외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그룹의 로드쇼 중이고 주가가 높아야 높은 가격에 편당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주가가 너무 낮아서 로드쇼를 하기도 힘들다라는 취지의 전화 통역을 한 사실, 이에 위 진00은 같은 해 10. 7.경부터 같은 해 11. 17.경 사이에 미화 1,000만 \$ 이상의증권사 1주식을 매집하면서 전일의 종가 또는 직전가보다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고 장중거래에서도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에 비하여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는 등 이 사건 고가 매수거래를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가로 형성시켰고 위 주식을 매입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자 위 진00은 위 그룹과 연락하여 그 중 80억 원 가량은 증권사 1으로부터 이를 대출 받는 형식으로 지원 받아 주식을 매수하기까지 한 사실, 당시 발행된 증권사 1전체 주식 약 860만 주 중 케이오엘(KOL)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69.95%와 증권금융에서 보유하고 있는 5%를 제외하면 시중에 유통 중인 주식은 약 25%에 불과하고 당시 1주당 가격을

14,900원으로 계산한다면 미화 1,000만 \$ 상당은 시중 유통물량의 약 절반 가량을 매입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인 사실, 실제로 위 진00의 매집으로 같은 해 10. 7.부터 같은 해 11. 17. 사이에증권사 1의 주가는 약 13,000원대에서 약 34,000원대까지 상승한 사실, 당시 위 그룹에서는 위 케이오엘(KOL)의 증자를 고려하고 있었고 공소의 2는 위 진00의 개입으로증권사 1의 주가가 계속하여 상한가를 기록하자 피고인에게 상당히 기분이 좋다는 말을 하기까지 한 사실, 1999. 11. 하순경 공소의 2이 국내에 들어와 피고인, 위 진00,공소의 3, 에이비엔암로아시아(ABN Amro Asia) 증권사의 회장인 로저 등 5인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개구리'라는 술집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공소의 2이 위 진00에게증권사 1주식을 매집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며 위 에이비엔암로아시아(ABN Amro Asia) 증권사에서증권사 1주식의 50%를 주당 50,000원에 사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위 지분 매각은 성사되지 못한 사실, 실제로 공소의 2의그룹은 1999. 10.경부터 미화 192,000,000\$을 목표로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40% 규모의 케이오엘(KOL) 사모유상증자를 추진 중에 있었고 2000. 3.부터 같은 해 4. 사이에 케이오엘(KOL) 주식 9,000,000주를 주당 미화 13\$(US \$13)에 사모 증자하는 데 성공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증권사 1의 자본금의 규모와 발행주식의 총수, 진00이 매집한 주식의 규모, 피고인이 진00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하게 한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증권사 1에서 차지하는 지위, 이 사건 거래의 동기와 태양, 그 주가의 추이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증권사 1의 대표이사로서 단순한 통역의 역할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소의 2및 진00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거래를 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거래는 증권사 1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상승시킴으로써증권사 1의 지분 매각 또는 유상증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변칙적 거래로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인위적인 조작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은 비록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일반투자자들을 오인시켜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증권사 1의 지분 매각 또는 유상증자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위증권사 1의 주식이 유망한 것처럼 오인시켜 그 주식의 매매거래를 유인하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던 이상 일반투자자들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매매거래의 유인목적과 시세변동 거래행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

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도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진00,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1999. 10.초 증권사 1주식 매집을 원하는 공소외 2의 의사를 피고인이 진00에게 전달하여, 진00이 1999. 10. 7.부터 1999. 11. 17.까지 8개 계좌를 통하여 증권사 1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과정에서,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1999. 10. 13.부터 1999. 11. 17.까지 제1심판결 별지 '통정매매내역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통정매수한 점(상장유가증권 통정매매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2호위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직전가(전일 종가) 및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주문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1999. 10. 7.부터 같은 해 11. 9.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고가주문내역서'기재와 같이 303회에 걸쳐 직전가(전일 종가) 및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등을 함으로써 그 시세를 상승시키는 매매거래한 점(상장유가증권 시세 상승시키는 매매거래의 점,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위반),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여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1999. 11. 1.부터 같은 달 9. 사이에 19회에 걸쳐 직전가 또는 전일종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량 허위매수주문하는 방법으로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한 점(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한 점,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위반) 중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장유가증권의 시세를 상승시키는 매매거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거래성황 오인·오판 목적의 통정매매 및 매매거래유인 목적의 거래성황오인행위 부분에 관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진00, 공소외 2사이에서 주식 1,000만 \$ 상당을 매입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한 것 외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오판하도록 통정매매를 하거나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도록 허위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세를 상승시키기로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위의 수법에 대하여까지 구체적으로 공모하였거나, 위 진00에게 시세조종행위의 방법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일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2. 4. 10.자 2001도193 결정,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참조).

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상 피고인과공소의 2, 진00의 공모내용은 "증권사 1의 주가상승을 위한 주식매집"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주식매집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모회사의 사모유상증자를 고가에 하기 위하여 자회사인증권사 1의 주가상승이 필요하였다는 점 외에도 해당증권사 1의 주식의 70%를 보유 중인 모회사 케이오엘(KOL)의 대주주임장에서 주가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얻자는 것도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공소의 2이 피고인을 통하여 진00에게 매집을 부탁한 주식물량은 원심의 사실인정에서도 나오는 바와 같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통중이던 증권사 1주식물량의 50%에 해당하는 대규모 물량으로서, 정상적인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 위와 같은 대규모 물량을 단순히 시장에서 매입만 하는 방법으로는 원하는 주식 물량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유통시장에서의증권사 1주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위공소의 2등이 원하는 가격대에서는 도저히 매입할 수 없게 되는 대규모 물량인 점, 따라서 기록상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진00로서는 검사가 기소한 바와 같은 통정매매와 허수주문 등의 방법을 고가매수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증권사 1의 주식을 유통시장에 매도하도록 하고, 다시 이를 매수한 후 일정한 고가에 다시 매도한 후 다시 이를 매수하는 등 일정한 기간에 걸쳐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증권사 1의 주식 물량을 비교적 저가에 확보하면서 아울러 주가의 상승도 가져오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의 경우 1991년 이후 증권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직접 주식의 매도와 매수를 담당하는 펀드매니저 등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증권사 1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권사 1주식의 매집을 진00과 더불어 공모할 당시 진00이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증권사 1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식매집을 할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진00,공소의 2의증권사 1주식매집의 공모과정과 그 이유, 진00의증권사 1주식의 매집과정, 일반적인 유가증권 유통시장에서의 시제조종수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진00 사이의증권사 1주식매집을 통한 주가상승이라는 부분에 대한 공모를 인정하는 이상, 진00이 이를 위하여 한 구체적인 행위 중 시세변동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 사건 거래상황 오인·오판 목적의 통정매매 및 매매거래 유인목적의 거래상황 오인행위 부분도 모두 위 공모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시세변동 거래행위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다.

3. 이 사건 증권거래법위반의 죄수와 파기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증권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정매수(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2호위반), 시세상승 매매거래(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위반), 거래성황 가장행위(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위반)를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시세상승 매매거래 행위에 대하여는 유죄, 나머지 각 행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후, 위 각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참조), 위에서 본 원심이 확정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00, 공소의 2등과 공모하여, 상장유가증권인증권사 1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그 시세를 조종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목적과 범의하에,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증권사 1주식의 통정매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직전가(전일 종가) 및 상대호가 대비 고가 매수주문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증권사 1의 주식시세를 상승시키는 매매거래,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여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증권사 1주식에 대한 대량의 허위매수주문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의 각 항과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되어(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참조),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모두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의 일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각 행위의 관계를 실제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소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죄수에 대한 범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당원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권거래법위반의 일부 행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로 판단된 범죄사실, 즉 시세변동 거래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도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종합금융

회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어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과 '부당한 이득'의 의미

[2] 업무상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로 행위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3]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타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합리적인 자금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4]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로 인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위반으로 인한 구 상호신용금고법위반의 점이 대항적 범죄인지의 여부(적극) 및 위 각 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공범 성립 여부(소극)

[5]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4소정의 '보유'의 의미

[6] 피고인이 형식적인 계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담보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4소정의 유가증권의 '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상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보고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7]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소정의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8]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9]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그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 행위,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

팔일죄)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의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의 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법문 소정의 부당한 이득은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의 지위상승 등 무형적 이익 및 적극적 이득 뿐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득,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의 이득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

[3] 금융기관인 회사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을 받는 자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4]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

별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에 관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위반에 관한 구 상호신용금고법위반의 점은 대출을 하는 자와 대출을 받는 자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립적 범죄로서, 일정한 경우 대출을 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그와 같은 대출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위 각 조문의 규정형식상 대출을 한 자만을 처벌하고, 따로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대출 받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대출행위에 대한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5] 증권거래법상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4호, 제5호를 포함한 같은 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장래 주식을 소유할 것이 예상되거나, 소유하지는 않지만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갖거나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를 '보유'로 규정한 것으로, 특히 위시행령 제10조의4중 제4호, 제5호에 관하여는 그 종국적인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보유'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종국적 행사 이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취득 자체를 '보유'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장래의 권리를 규정한 다른 각 호 즉 제2호, 제3호, 제6호의 규정과 비교하여서도 균형이 맞는 해석이라고 보여진다.

[6] 피고인이 대출금의 담보로 주식을 제공받으면서 주식의 명의개서는 하지 않았으나 주권을 교부받았고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피고인이 행사하며 대출금의 변제도 담보주식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거나 이를 처분하여 충당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고인은 형식적인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담보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4소정의 유가증권의 '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상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보고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7]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를, 제2호에서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통정매매에 의하여 거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의사로서, 그 목적의 내용을 인식함으로써 충분하고, 적극적 의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8]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

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9]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그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의 제1항 제1호, 제2호의 통정매매행위, 제2항 제1호전단의 허위매수주문행위, 같은 호 후단의 고가매수주문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고, 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위 각 행위는 모두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의 일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1]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2]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형법 제356조/ [4]형법 제30조, 제32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8조 제2항 제3호,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9조 제3항 제4호의 2/ [5]증권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200조의2 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4/ [6]증권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200조의2 제1항, 제210조 제5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4/ [7]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8]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9]형법 제37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 제207조의2 제2호

【참조판례】

[1]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공2001상, 578)/[2]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공1987, 91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공1996상, 620),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공1999하, 1546),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공2001상, 320),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공2001하, 2400)/[3]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85 판결(공1991, 134),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공2002하, 1877)/[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공1985, 580),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공1988, 928),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공2002상, 440)/[7]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공2002상, 222)/[8]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공2001하, 1781),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9]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공1996상, 1649),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

【전 문】

【피고인】 진00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장희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3. 26. 선고 200 1노3226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제1점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점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엠씨아이(MCI)코리아(이하 "MCI코리아"라 한다)가 2000. 4. 19. 아세아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아세아종금"이라 한다. 2000. 5. 27. 상호를 한스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스종금"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와 스위스민간은행컨소시엄(Switzerland Private Banks Consortium, 이하 "SPBC"라 한다) 사이에 SPBC가 아세아종금의 대주주인 대한방직 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 8,695,051주(전체 발행주식의 28.6%, 1주당 시가 1,200원 정도, 시가 104억 원 상당)를 미화 10\$에 매수하여 아세아종금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M&A를 중개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아세아종금의 감사이던 신인철 등과 합의하여 MCI코리아의 자회사인 이머징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이머징창투"라 한다) 명의로 아세아종금이 스타벤처컨설팅 주식회사(이하 "스타벤처컨설팅"이라 한다), 모던벤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모던벤처캐피탈"이라 한다) 등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620만 주(전체 발행주식의 20.5%, 시가 74억 원 상당)를 금 20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입대금 중 금 200억 원은 아세아종금의 자회사인 아세아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아세아파이낸스"라 한다)로부터 이머징창투 명의로 대출 받아 충당한 사실, SPBC와 MCI코리아는 같은 날 SPBC가 위와 같이 인수한 아세아종금 주식에 관한 모든 주주로서의 권리와 아세아종금에 대한 모든 경영권을 MCI코리아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경영관리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협약서에 따라 MCI코리아의 1인 주주인 피고인이 아세아종금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M&A 전에 신인철로부터 아세아종금의 재무상황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를 하였고, 또한 안진회계법인을 통하여 아

세아종금을 실사하여 아세아종금의 부실 정도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위 각 계약 당시 SPBC는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SPBC의 대표자로 M&A 계약에 참석하였던 외국인 이보(Ivo Bechtiger)가 M&A 계약 후 20일 후에 자본금이 5만 스위스프랑(한화 3,000만 원~4,000만 원)에 불과한 스위스 소재 소규모 무역회사인 "오리엔탈제이드"의 법인등기부상 상호를 "SPBC"로 변경하여 SPBC가 존재하게 된 사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위 계약 직후 아세아종금 임직원 및 MCI코리아의 황창연 상무 등으로 하여금 "스위스 은행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아세아종금의 대주주인 대한방직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스위스 은행 컨소시엄은 석달 안에 1차적으로 3,000만 \$을 들여와 아세아종금 증자에 이용하고 하반기에 5,000만 \$을 추가로 증자할 계획이다."라고 언론에 발표하게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하여 보도된 사실, 피고인은 2000. 5. 27. 아세아종금의 주주총회를 열어 상호를 한스종금으로 변경하고, 공식적으로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신인철이 한스종금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SPBC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는 이보도 참석하여, SPBC가 석달 내에 한스종금에 3,000만 \$을 증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SPBC가 미화 10\$에 매수한 아세아종금의 주식 860여만 주와 MCI코리아가 200억 원에 매수한 같은 주식 620만 주의 시가를 합하면 178억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은 피고인이 지급하였던 200억 원 중 신인철이 수수료 등으로 차지한 금원을 제외한 순수 주식대금인 180억 원과 거의 일치하고, 아세아종금의 인수인인 SPBC는 아세아종금의 경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모든 경영권을 장악하고 행사하였으며, 금융감독원에서 SPBC에게 아세아종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였으나 SPBC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MCI코리아가 경영권을 맡은 아세아종금에게 그 계획서 작성을 떠넘기었고, 증자금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그 자금을 SPBC로 송금하려 하였으며, M&A가 성공하여 아세아종금의 주가가 상승하면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막대한 주가 상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SPBC(회사의 명칭 자체가 스위스 민간 은행들의 컨소시엄으로 오해되게 되어 있다)는 아세아종금에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내세운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에 불과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아세아종금 주식 860여만 주와 620만 주를 모두 매수하여 아세아종금을 인수하였고 증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면서도, 위 주식들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SPBC가 아세아종금을 인수하였고, 3,000만 \$을 증자하기로 하였다고 사실과 달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

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의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참조),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의 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법문 소정의 부당한 이득은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의 지위상승 등 무형적 이익 및 적극적 이득뿐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득,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의 이득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계약을 주선한 직후 2000. 4. 하순경 아세아종금의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 경영의 MCI코리아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열린금고'라 한다)으로 하여금 아세아종금의 주식 15만 주를 취득하게 하여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을 피하였으며, 실제로 위 계약에 따른 증자계획의 발표 후 아세아종금의 주가는 2000. 4. 17. 1,200원에서 2000. 4. 21. 2,090원으로 급상승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가 사실상 인수한 아세아종금의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외국계 금융회사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아세아종금의 신인도를 높이려고 위와 같이 복잡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유포는 새로이 아세아종금의 경영권을 확보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주가의 상승이라는 유형적 이득 이외에 새로 인수한 회사의 신인도 제고라는 무형적 이득도 함께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범의가 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가사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주식 처분이 일정기간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소정의 부당한 이득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

나. 제2점 : 파킹료 23억 원 지급약정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점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한스종금(구 아세아종금)의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일 목적으로, 주식매매를 통하여 거래의 매매차익을 달성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00. 6. 말경 한스종금의 BIS 비율을 조작하면서, 한스종금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역할에 기여한 상대방 회사인 국두벤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국두벤처캐피탈'이라 한다)와 엔아이씨(NIC)코리아 주식회사에 파킹료로 2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른바 파킹을 하고 파킹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때 이미 한스종금에 대한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2)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

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고(대법원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등 참조),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스중금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작된 거래로써 회사의 수익을 가장하고, 그 BIS 비율을 조작하여 회사의 자본충실 정도를 왜곡한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이 모두 위법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법령과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도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가사 피고인에게 본인인 회사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한 행위를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등 참조), 이 점에서 피고인이 파킹료 2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때에 이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여 배임죄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또한, 위 파킹료 23억 원의 지급약정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피고인 등의 임무위배 행위가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없다.

다. 제3점 : 2000. 3. 13.자 리젠트중금 및 H창투의 각 대출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점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리젠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리젠트종합'이라 한다)가 재무 및 경영상태가 불량한 H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H창투'라 한다)에게 신용조사와 담보확보 등의 조치 없이 금 600억 원을 대출하고, H창투는 다시 그 600억 원을 적정한 담보의 확보 없이 계열회사인 이머징창투와 MCI코리아에 나누어 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H창투도 이머징창투와 MCI코리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엄연한 대출채권자라는 이유로 H창투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각 대출행위는 부실대출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2) 금융기관인 회사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을 받는 자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 4923 판결참조),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대출은 H창투가 위 각 대출에 있어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을 취득하는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 각 대출관계를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원심이 판시한 바대로 리젠트종합과 H창투가 각 자금회수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그 대출을 위한 사전 조사와 사후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대출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융기관 사이의 초단기 자금대출인 콜론대출이라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 없다.

라. 제4점 : 자기자본의 25/100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로 인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위반으로 인한 구 상호신용금고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1)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의 김00, 리젠트증권 주식회사(이하 '리젠트증권'이라 한다) 사장 고창곤, 리젠트종합 사장 홍주관 등과 공모하여, 종합금융회사는 동일 차주에 대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젠트종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인 230억 원을 초과하여 H창투에 신용 공여한 점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이하 '종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제3호, 제15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열린금고 대표이사 황00, 손00, 이사대우 이00, MCI코리아 전무 유00과 공모하여, 열린금고가 2000. 4. 6. 명의상 차주 황00에게 7억 원을 대출하여 주는 등 제1심판결의 별지 5 '불법대출내역' 기재와 같이 2000. 10. 31.까지 37회에 걸쳐 282억 5,000만 원을 출자자인 MCI코리아 등에게 차명 대출하여 동일인 여신한도 30억 5,5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점을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9조 제3항 제4호의2, 제12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2)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등 참조), 위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에 관한 종금법 위반의 점과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위반에 관한 구 상호신용금고법위반의 점은 대출을 하는 자와 대출을 받는 자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립적 범죄로서, 일정한 경우 대출을 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그와 같은 대출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위 각 조문의 규정형식상 대출을 한 자만을 처벌하고, 따로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대출 받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대출행위에 대한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각 대향적 범죄에 관하여 공범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과연 피고인이 위 각 대출에 있어 대출을 받은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중 리젠트종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는 법인인 H창투이고, 열린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는 형식상 그 명의를 황정옥 등 개인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MCI코리아라는 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H창투와 MCI코리아의 사실상 지배주주이고, MCI코리아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대출에 있어 피고인 개인이 대출을 받은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4)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종금법 위반(자기자본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 및 구 상호신용금고법 위반(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공범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그 조치에는 피고인의 그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한 취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향적 범죄에 있어 공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4점은 이유 없다.

마. 제5점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및시행령 제10조의4 소정 '보유'의 개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점

(1) 원심은,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5% 이상 소유자에게 1%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 및 변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0. 4. 19. 아세아종금 주식 620만 주를 이며정창투 명의로 매입하고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주식의 취득 당시 이머징창투가 모던벤처캐피탈과 스타벤처컨설팅에 200억 원을 대출하고, 그 담보로 위 주식 620만 주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이머징창투의 모던벤처캐피탈과 스타벤처컨설팅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대출일로부터 30일로 정하고, 대여금 채무의 변제는 대주가 담보 주식의 소유권을 대주에게 귀속시키거나 이를 처분하여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문언에 따르면, 마치 30일이 지나야 이머징창투가 그 주식의 소유권을 갖거나 처분권한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계약당사자인 아세아증권의 신00(모던벤처캐피탈과 스타벤처컨설팅)과 피고인(이머징창투)은 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한 것이므로(위 620만 주의 시가는 74억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모던벤처캐피탈과 스타벤처컨설팅이 200억 원을 변제하고 620만 주의 주식을 되찾아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위 계약서에 의한 가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머징창투는 2000. 4. 19.경 위 620만 주의 아세아증권 주식에 대하여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보고의무를 인정하고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200조의2 제1항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는 같은 법 제2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유'는 소유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4(소유에 준하는 보유)는 법 제21조 제1항에서 '소유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2.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 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3.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갖는 경우, 4. 주식 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5. 주식 등의 매매거래에 관한 유가증권옵션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6. 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를 각 열거하고 있다.

(3) 우선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2000. 4. 19.경 위 아세아증권 주식 620만 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증인 최00의 증언과 기타 원심채용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세아증권은 스타벤처컨설팅을 거쳐 아세아파이낸스에 200억 원을 대출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세아파이낸스는 다시 위 200억 원을 이머징창투에 대출하되 그 대여금의 변제는 아세아증권 주식 620만 주로서 대물변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아세아파이낸스와 이머징창투 사이의 채무변제특약서), 이머징창투는 모던벤처캐피탈과 스타벤처컨설팅에 위 200억 원에 4억 원을 더한 금 204억 원을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30일 후, 이자율 연 10%로 하여 대출하면서(이머징창투와 모던벤처캐피탈 사이의 123억 원 대출약정 및 이머징창투와 스타벤처컨설팅 사이의 81억 원 대출약정), 모던벤처캐피탈과 스타벤처컨설팅은 이머징창투에게 위 대여금 204억 원에 대한 담보로 아세아종금의 주식 620만 주(실제는 아세아종금 소유)를 제공하되, 담보주식의 주권은 교부하나 명의개서는 하지 않고, 담보주식에 기한 의결권 기타 일체의 권리는 대주(이머징창투)가 행사하며, 대여금 채무의 변제는 대주(이머징창투)가 담보 주식의 소유권을 대주에게 귀속시키거나 이를 처분하여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하고, 따로 차주에게 금전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이머징창투와 모던벤처캐피탈 사이의 123억 원 자금대여약정 및 이머징창투와 스타벤처컨설팅 사이의 81억 원 자금대여약정), 위 주식의 양도계약 당시 아세아종금의 주식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모던벤처캐피탈과 스타벤처컨설팅은 사실상 위 주식을 중국적으로 이머징창투측에 귀속시킨다는 의사였고, 단지 이머징창투는 아세아파이낸스측에 200억 원의 대출을 갚는 방법으로 주식으로의 대물변제 방법을 남겨둔다는 의사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사실상 피고인이 2000. 4. 19.경 계약시점에서 사실상 위 620만 주 주식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 피고인측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주권까지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이 이를 사실상 처분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원심의 판단에는 증권거래법상 보유의 개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나아가, 가사 계약서의 문언과 같이 피고인이 위 주식 620만 주에 대한 소유권을 2000. 4. 19.경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의 개념을 정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3호 소정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갖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증권거래법상의 보고의무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에는 보유의 개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은 상고이유로 피고인의 이머징창투가 2000. 4. 19.경 취득한 권리가, 주식 620만 주의 가격이 30일이 경과한 후 대여금 상당액인 204억 원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에 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매매예약의 완결권 내지는 유가증권옵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계약서의 문언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증권거래법상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4호, 제5호를 포함한 같은 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장래 주식을 소유할 것이 예상되거나, 소유하지는 않지만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갖거나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를 '보유'로 규정한 것으로, 특히 위 시행령 제10조의4 중 제4호, 제5호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중국적인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보유'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중국적 행사 이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취득 자체를 '보유'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장래의 권리를 규정한 다른 각 호 즉, 제2호, 제3호, 제6호의 규정과 비교하여서도 균형이 맞는 해석이라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00. 4. 19.경 위 시행령 제10조의4 제4호(매매예약완결권취득), 제5호(유가증권옵션취득)의 각 권리를 취득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역시 증권거래법상 '보유'의 개념에 해당하여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권거래법상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5점은 이유 없다.

바. 제6점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및 제2항 소정 '목적'과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점

(1) 원심은, 피고인이 리젠트증권 사장 고00, 회장 제임스 멜론(James Mellon) 등과 공모하여, 1999. 10.초 제임스 멜론으로부터 리젠트증권 주식 매집을 부탁받고, 1999. 10. 7.부터 1999. 11. 17.까지 8개 계좌를 통하여 리젠트증권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과정에서,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1999. 10. 13.부터 1999. 11. 17.까지 제1심판결 별지 1 '진00의 통정매매내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통정매매한 점(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위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직전가(전일 종가) 및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주문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1999. 10. 7.부터 같은 해 11. 9.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2 '진00의 고가매수내역' 기재와 같이 303회에 걸쳐 직전가(전일 종가) 및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등을 함으로써 그 시세를 상승시키는 매매거래를 한 점(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위반),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여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1999. 11. 1.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3 '진00의 허위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직전가 또는 전일 종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량 허위매수주문하는 방법으로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한 점(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위반)에 대하여 각 피고인의 목적과 범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를, 제2호에서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통정매매에 의하여 거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의사로서, 그 목적의 내용을 인식함으로써 충분하고, 적극적 의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참조).

(4)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00으로부터 제임스 멜론이 리젠트증권 주식의 매집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으면서 그 취지가 KOL 주식의 유상증자를 위하여 리젠트증권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이 매집을 의도한 미화 1,000만 \$ 상당의 리젠트증권 주식물량은 당시 발행된 리젠트증권 전체주식 약 860만 주 중 KOL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69.95%와 증권금융에서 보유하고 있는 5%를 제외한 시중에 유통 중인 주식 약 25% 중 절반 가량을 매입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시세조종을 위한 거래기간 중 실제로 리젠트증권 주식을 거래한 양은 총 2,788,160주(매수 : 1,641,020주, 매도 : 1,147,140주)로서, 이는 위 기간 중 총 거래량의 33.13%(매수) 및 23.16%(매도)에 달하는 사실, 실제로 피고인의 주식매집으로 1999. 10. 7.부터 같은 해 11. 17. 사이 리젠트증권의 주가는 약 13,000원대에서 약 34,000원대까지 상승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전반적인 거래상황과 이 사건 주가의 추이, 기타 증권시장의 상황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위 각 범죄행위의 목적과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권거래법에 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6점 역시 이유 없다.

(5) 죄수의 문제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범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참조).

원심이 확정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00, 제임스 멜론(James Mellon) 등과 공모하여, 상장유가증권인 리젠트증권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그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의 제1항 제1호, 제2호의 통정매매행위, 제2항 제1호 전단의 허위매수주문행위, 같은 호 후단의 고가매수주문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되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참조),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모두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소정 불공정거래 행위금지 위반의 일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죄수평가를 살펴보면, 원심은 위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적용법조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어 원심이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위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심이 위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죄수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경합범 처리에 있어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원심 판시 제3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정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는 원심의 위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한 죄수평가와는 무관하게 정하여진 것으로 원심의 위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한 죄수평가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상고이유보충서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도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등 참조).

사. 제7점 : 5억 원 대출부분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의 성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MCI코리아가 열린금고로부터 2000. 9. 15. 한정공영 명의로 5억 원을 현실로 대출 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인 2000. 9. 16. 서민아 명의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대출 받은 다음 날 바로 다른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분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의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아. 피고인이 이상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관련하여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그 사안이나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 : 2000. 5. 26.자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점

원심은, 2000. 5. 26. 한스중금이 H창투에게 35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하였다는 배임의 점에

관하여,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2000. 5. 중순경 SPBC의 실체에 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던 금융감독원에서 피고인에게 SPBC가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과 신00은 한스종금이 MCI코리아에 증자보증금용으로 돈을 대출하고 그 돈을 다시 MCI코리아로부터 예치 받아 마치 MCI코리아가 증자보증금을 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한스종금은 2000. 5. 26. H창투에게 350억 원을 대출하고, 동시에 H창투는 그 중 330억 원을 MCI코리아에 재대출하고, 동시에 MCI코리아는 위 330억 원을 한스종금에 다시 예치하고, H창투는 나머지 20억 원을 한스종금에 다시 예치하였는데, 위 대출과 예금은 실제 자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한스종금의 자금은 대출과 동시에 예금으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한스종금에 어떠한 손해도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에게 부실대출로 인하여 한스종금에게 손해를 끼치고, H창투에 이익을 준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하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한스종금에 손해를 끼치고 H창투에 이익을 얻게 하였든가 또는 그러한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점 : 2000. 7. 12.자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점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2000. 6. 말경 피고인의 BIS 비율 조작이 실패로 돌아가고, 330억 원 정도의 증자로는 한스종금의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나자, 피고인과 신인철은 증자보증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신인철이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2000. 7. 12.경 증자보증금과 대출금을 상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상계로 인하여 한스종금은 MCI코리아에 대한 증자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고, H창투는 한스종금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 것일 뿐, H창투에 3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생겼거나 한스종금에 동액 상당의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33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발행하여 MCI코리아에 교부하고, H창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보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 받아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상고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

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판시사항】

[1]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같은 항 제1호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매수주문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매수의사 없이 하는 일련의 허수주문행위가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소정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범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4] 주식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수주문을 내어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여러 종목의 유가증권에 관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경우, 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5]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

【판결요지】

[1]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아니한 매수청약 또는 매수주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유가증

권의 가격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제3자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성질을 가지는 이상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단지 매수주문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매수 의사 없이 하는 허수매수주문도본조 제2항 제1호가 금지하는 이른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유형에 속한다.

[3]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4] 주식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수주문을 내어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여러 종목의 유가증권에 관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경우, 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5]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 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1]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2]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3]형법 제37조/ [4]형법 제37조,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제207조의2 제2호/ [5]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참조판례】

[1]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공2001하, 1781)/[3]대법원1987. 5. 26. 선고 86도1648 판결(공1987, 1104),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466 판결(공1990, 1636),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공1993하, 3126),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76 판결(공1996상, 650),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공1996상, 1649)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2. 27. 선고 2001노103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관련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 2282 판결참조). 따라서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아니한 매수청약 또는 매수주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유가증권의 가격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제3자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성질을 가지는 이상 여기에 해당하고, 단지 매수주문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매수의사 없이 하는 허수매수주문도 본조 제2항 제1호가 금지하는 이른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식매매거래는 매입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실제 매수의사가 없이 대량의 허수매수주문을 내어 매수잔량을 증가시키거나 매수잔량의 변동을 심화시켜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매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후 허수매수주문을 취소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거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거래를 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등 참조).

원심이 확정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을 매입한 다음 그 매입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차액에 따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2000. 8. 1.경부터 2001. 2. 1.경까지 사이에 실제 매수의사가 없는 대량의 허수매수주문을 내어 매수잔량을 증가시키거나 매수잔량의 변동을 심화시켜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매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허수매수주문을 취소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7,542회에 걸쳐 168개 종목에 관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포괄하여 법 제207조의 2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소정의 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죄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합범 내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07조의2단서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한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 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주식 매매거래의 총 매도금액은 합계 금 24,879,623,980원이고 총 매수금액은 금 24,702,867,360원으로서 거래비용을 감안하지 아니한 시세차익은 합계 금 176,756,620원이지만, 여기에서 거래비용(매수수료(0.028%), 매도수수료(0.028%), 증권거래세(0.3%)) 합계 금 88,521,970원을 공제하면 순매매차익은 합계 금 88,234,65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을 금 176,756,620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

여 이익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법 제207조의2단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00원의 형은 법정형의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이익액의 과다 산정이 벌금액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판시사항】

[1]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식 매집 행위가 속칭 작전행위로서 주식 매매거래의 유인 목적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식 매집 행위가 속칭 작전행위로서 주식 매매거래의 유인 목적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5. 19. 선고 99노22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 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농약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체로서 1997년 1월 당시의 자본금이 약 35억 원으로 매출액 약 407억 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발행주식의 총수도 약 70만 주로서 적은 편일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거래량도 많지 않았으며 그 주가가 2만 원 대에 머물렀던 사실, 1997년 4월 증권시장에서 소외 회사의 인수합병(M&A)에 관한 소문이 나돌면서 그 주가가 크게 오르고 거래량도 급증하였으며, 피고인은 대학동창인 공소외 1로부터 소외 회사의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어 그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니 이를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1997년 4월 하순 소외 회사의 주식 1만 주를 6억 7,500만 원(=1만 주×주당 67,000원 내지 68,000원)에 매입하였는데 그 대금 가운데 2억 7천만 원은 자신이 조달하였으나 그 나머지 약 4억 원은 신용매수로서 증권회사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하고 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주가가 4만 원 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담보부족의 우려가 있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주가가 1997년 5월 폭락하기 시작하여 1997년 6월 초에는 4만 원 대에 이르렀고 그 주가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부족을 걱정하여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비슷한 처지의 공소외 2와 함께 공소외 1에게 항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이 그 보유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인수합병의 정보를

퍼뜨리며 그 주식의 매입을 권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1997년 7월 초 순 공소의 2의 소개로 알게 된 공소의 증권회사압구정지점의 영업담당 과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소외 회사의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하며 그 주식의 매입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여 그로 하여금 그 고객인 원심 공동피고인 2의 예탁금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1997. 6. 4.부터 1997. 9. 30.까지 사이에 대우증권 삼풍지점 등에 본인과 직원 등의 명의로 개설된 7개의 계좌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전·후장의 각 시가(始價) 결정을 위한 거래에서부터 전일의 종가(終價) 또는 직전가(直前價)보다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고, 장중거래(場中去來)에서도 직전가(直前價) 또는 상대호가(相對呼價)에 비하여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며, 종가(終價) 결정을 위한 거래에서도 직전가보다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는 등으로 51회에 걸쳐 합계 11,430주의 매매거래(이하 '이 사건 매매거래'라 한다)를 하여 그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가로 형성시켰고, 그 무렵 공소의 2도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66회에 걸쳐 합계 18,720주의 매매거래를 하였으며, 원심 공동피고인 1과 원심 공동피고인 2 또한 1997. 7. 21.부터 1997. 9. 18.까지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 사이에서 16회에 걸쳐 19,230주를 고가로 가장매매함과 아울러 37회에 걸쳐 21,150주를 직전가 내지 상대호가보다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는 등에 의한 매매거래를 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의 주가가 1997년 6월 중순의 43,000원에서 1997년 9월 중순에는 115,000원으로 급등하였다가 그 이후 급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소외 회사의 자본금의 규모와 발행주식의 총수, 피고인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경위, 이 사건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 그 주가의 추이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매매거래는 소외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상승시킴으로써 종전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고 담보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변칙적 거래(속칭 '작전'행위)로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인위적인 조작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은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주식이 유망한 것처럼 오인시켜 그 주식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식매매거래의 유인목적과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분식결산의 방법으로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그 회

사의 재무에 관하여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 등을 증권거래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고, 불확실한 사업전망을 마치 확정되었거나 곧 착수할 것처럼 공표하면서 그 내용을 신문보도나 유인물을 통하여 홍보하여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자신이 지배하는 주식을 매도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그에 앞서 미리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매도에 대비하였다가 주식을 매도한 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율을 유지한 경우,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의 여부 및 부당한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분식결산의 방법으로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그 회사의 재무에 관하여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 등을 증권거래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고, 불확실한 사업전망을 마치 확정되었거나 곧 착수할 것처럼 공표하면서 그 내용을 신문보도나 유인물을 통하여 홍보하여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자신이 지배하는 주식을 매도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그에 앞서 미리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매도에 대비하였다가 주식을 매도한 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율을 유지한 경우,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2]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9. 20. 선고 2000노63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1996 사업연도 및 1997 상반기 결산결과 재무제표상의 흑자는 분식에 의해 이루어진 허위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는 공소사실 2의 나. 다항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범죄사실에 이를 적시하고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위 법조 위반의 범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회계팀장인 공소외인으로부터 1996 사업연도, 1997 전반기, 1997 사업연도의 각 결산결과를 보고받고 공소외인에게 흑자결산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적자규모를 줄이도록 지시하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각 사업연도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공소외 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상의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에 위와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의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의 회사의 전환사채를 낮은 가격으로 인수한 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하도록 한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한편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공소의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율을 유지하기로 마음 먹고, 사실은 공소의 회사가 유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소의 회사부천공장 부지 약 7만 평과 그 인근 14만평 합계 21만여평이 유통단지 지정 및 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도 확정된 바 없고 위 부지가 유통단지로 지정받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회사의 임원으로 하여금 1997. 2. 28.자 한국경제신문에 마치 경기도에서 1997년말 쯤 위 부지를 유통단지로 지정할 것이고, 2000년말 쯤 완공될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보도되게 하고, 1997. 5. 22. 서울경제신문에 공소의 회사가 유통단지를 개발하여 내년 하반기에 본격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허위 보도되게 하고, 1997. 4. 3. 롯데호텔에서 증권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회사설명회를 개최하면서 1998년 상반기까지는 유통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표하고, 1997. 10. 1. 회사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같은 취지로 발표하고, 또한 1996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및 1997 상반기의 결산결과가 재무제표상 흑자로 나타난 것은 분식결산에 의하여 이루어진 허위의 것임에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1997. 3. 5.자 매일경제신문에 4년만에 흑자가 발생된 것처럼 보도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7. 3. 14. 증권거래소 공시망에 같은 내용으로 허위 공시하고, 1997. 4. 3. 위 회사설명회에서 유인물에 같은 내용으로 허위 기재하여 발표하고, 1997. 8. 8.자 서울경제신문에 1997 상반기의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3배나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7. 8. 9.자 한국경제신문에 같은 취지로 보도되게 하고, 1997. 10. 1. 위 회사설명회에서 유인물에 같은 내용으로 허위 기재하여 발표하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표시를 한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1997. 2. 28.부터 같은 해 10월 1일 사이에 주가를 최저 금 7,100원에서 최고 금 22,400원까지 상승시키고, 1997. 7. 2.부터 같은 해 11월 22일 사이에 공소의 회사주식 1,495,999주를 매도하여 약 12,70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분식결산의 방법으로 작성된 허위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공소의 회사의 재무에 관하여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 등을 증권거래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고, 또 회사의 유통단지 건설사업 등 불확실한 사업전망을 마치 그러한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곧 공사에 착수할 것처럼 공표하고 그 내용을 신문보도나 회사설명회 등에서의 유인물을 통하여 다시 홍보하여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피고인이 지배하는 주식을 매도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유포 등에 앞서 미리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

법으로 주식의 매도에 대비하였다가 주식을 매도한 후에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피고인의 지분율을 유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가증권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설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필요한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득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사기적 거래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각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의나 위 법조 소정의 증권거래법위반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같은 항 소정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피고인에게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은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가 아닌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로 인한 거래량 또는 가격의 변화가 자유로운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것인 양 타인을 오도하여 현실적인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하는 위장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요구되는 '매매 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나 제3항이 요구하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 그 밖에 '

시세조종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 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목적은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피고인에게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2]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공2001하, 1781)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6. 13. 선고 2000노34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증권거래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1997년 초경 총 주식수가 480만 주(납입자본금 240억 원)에 불과하고 관리대상 종목인 삼익주택 주식회사의 주가가 주당 1,000원 이하이고 일평균거래량이 10,000주 이하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제3자 인수가 이루어지면 주당 7,000원 이상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매수세력을 섭외하기로 하고, 공소외1 증권서초지점 주식투자상담사이던 피고인 2에게 매수자 소개를 부탁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들의 관리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하기로 결의하고,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1) 1997. 6. 11.경공소외1 증권서초지점에서피고인 1이 관리하던 그의 처 공소외 2명의의 계좌에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주당 1,390원으로 10만 주의 매도주문을 내고피고인 2가 관리하던, 공소외 1 증권서초지점 박종철의 처 조영애 명의의 계좌로 주당 1,400원에 3만 주, 서울증권 명동지점 박00 명의의 계좌로 주당 1,400원에 7만 주의 각 매수주문을 하도록 사전에 통정한 후, 위 회사 주식이 관리종목이어서 1일 2회 동시호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주문 마감시간인 15:00 직전인 14:58경 매도 주문을 내어 매매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피고인 1은 통정 매도행위, 피고인 2는 통정 매수행위를 하고,

(2) 같은 달 13일경피고인 1이피해자 1에게 위 회사 주식을 매수토록 권유하여피고인 2가 관리하게 된 동부증권 강남지점피해자 1의 계좌에서 주당 1,460원에 10만 주의 매수 주문을 내고피고인 2가 관리하던 공소외1 증권서초지점피고인 1명의의 계좌로 주당 1,430원에 90,960주의 매도 주문을 내기로 사전에 통정한 후 위 항과 같이 주문 제한시간 직전인 14:57 경 매도주문을 내어 매매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피고인 1은 통정 매도행위, 피고인 2는 통정매수행위를 하고,

(3) 같은 해 8월 14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가 관리하던 공소외 1 증권서초지점 박종철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 1 서00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52,000주의 매수주문을 내고피고인 1이 관리하던 피고인 1명의의 선경증권 신사지점과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2명의의 공소외 1 증권서초지점 및 선경증권 신사지점에서 총 169,760주의 매도주문을 내기로 통정한 후 위와 같이 주문마감시간 직전인 11:28경 매도주문을 내어 매매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피고인 1은 통정 매도행위, 피고인 2는 통정매수행위를 하고,

(4) 같은 해 6월 21일 선경증권 신사지점에서 피고인 1소유인 동인의 처 공소외 2명의 계좌로 10만 주의 매도주문을 내고, 피고인 1소유로서 공소외 1 증권서초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1 서00 명의의 계좌로 77,000주 및 피고인 1소유로서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3 서00 명의로 개설된 장은증권 서초지점 계좌로 약 23,000주의 매수주문을 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각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정 매도·매수행위를 하고 가장된 매매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서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위 각 거래에 관하여 매수세력을 섭외하여 삼익주택 주식을 10만 주 이상 대량매매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최소한으로 억제시켜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위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상수급의 원칙에 의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시켜 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증권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원심은 우선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의 직접적인 동기는, 1997. 6. 11.자 및 같은 달 13.자 통정매매의 경우 피고인 1이 삼익주택의 공소와 호종일에 의한 인수를 확신하고 그 주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1997. 8. 14.자 통정매매는 위와 같은 목적 및 주식의 과다보유로 인한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이며, 같은 해 6월 21일 가장 매매거래는 타인에게 대여해 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매매거래의 회수도 모두 4회에 불과하고 거래량도 많으며 기간도 부정기적이어서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최소한으로 억제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매매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각 매매의 가격도 당시의 삼익주택의 주가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로 인하여 주가가 변동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반투자자인 피고인 1과 투자상담사인 피고인 22인만이 공모하여 오전·오후 각 1회씩만 거래가 되고 현금이 100% 있어야만 주문이 가능한 관리종목의 시세를 조종한다는 것은 통상의 시세조종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이며, 증권감독원도 위 주식거래에 관하여 시세조종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매매거래의 동기 및 태양, 거래의 합리성, 거래로 인한 주가에의 영향, 전후 상황, 공모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인 피고인 2의 진술은 추측을 진술한 것이거나 일관성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 1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1이 입고한 삼익주택 주식 50만 주를 매도하지 않기로 피고인들이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 당시 피고인들에게 삼익주택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은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가 아닌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로 인한 거래량 또는 가격의 변화가 자유로운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것인 양 타인을 오도하여 현실적인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하는 위장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요구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나 제3항이 요구하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 그 밖에 '시세조종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 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증가관여 등),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삼익주택의 총주식수는 480만 주에 불과하고 관리대상종목으로서 주가는 1996년 초에 주당 1,800원 가량이었으나 이후 계속 하락하여 1997년 4월경 및 5월 초순경에는 주당 800원 내지 1,000원 사이에서 등락하였고, 일평균 거래량은 10,000주 가량이었던 사실, 피고인 1은 1997년 1월경 삼익주택의 전 사장으로서 대주주인 공소의 이종록으로부터 삼익주택 주식 495,000주를 제공받은 후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공소의 호00이 1997년 3월 내지 4월경부터 삼익주택의 인수를 추진하자 서로 다른 증권회사에 수개의 증권거래계좌를 실명 또는 차명으로 개설,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통정 및 가장매매 이전에도 같은 해 4월 2일에 10,000주, 4월 3일에 17,840주, 4월 9일에 23,050주, 5월 19일에 36,000주, 5월 23일에 20,720주 등 일평균거래량을 넘는 삼익주택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집한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친구로서 공소의 1. 증권서초지점의 투자상담사이던 피고인 2 및 같은 지점 차장이던 공소의 강00철에게 위 호00에 의한 삼익주택 인수 추진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 2 및 강성철은 피고인 1의 정보를 믿고서 자신이 관리하던 일반투자자들에게 삼익주택 주식을 매수하여 자신이 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매도하지 말 것을 권유하여 그 고객들이 삼익주택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대량 매수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함께 그가 주식계좌를 관리하여 주던 공소의 박종철에게 삼익주택의 제3자 인수 추진사실을 말하면서 그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위 박종철이 삼익주택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피고인 2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1997. 6. 11.경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매도하는 삼익주택의 주식 10만 주를 매수한 사실, 공소사실 (1)항 기재의 통정매매를 한 다음날인 1997. 6. 12. 피고인 1이 약 10여 년간 자신의 차량 세차를 위하여 단골로 이용하던 카센타의 업주인 공소의 피해자 1에게 신문의 주식시세표를 보이면서 그 전날 통정매매로 거래되었던 삼익주택 주식 10만 주를 삼익주택에 대한 관리총책임자인 제일은행 전무가 샀다고 속이면서 피고인 1이 삼익주택 회장을 잘 아는데 틀림없이 제3자에게 인수되니 삼익주택 주식 10만 주를 사도록 권유하면서 피고인 2를 소개시켜 주었고 위 피고인 2도 삼익주택이 제3자에게 곧 인수되어 주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하면서 그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 1이 삼익주택 주식을 사겠다고 하자 피고인 2가 같은 달 13일경 동부증권 강남지점에 위 피해자 1의 계좌를 개설하고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매도하는 삼익주택 주식을 위 피해자 1의 계좌에서 매수한 사실, 피고인 1이 정상적인 거래방법으로 10만 주의 매도주문을 내었을 경우 이 많은 물량을 전부 매도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주가가 상당한 정도 하락하였을 것임에도, 공소사실 (1), (2)항 기재의 통정매매로써 위 박종철 및 피해자 1에게 주당 1,400원 및 1,430원에 삼익주택 주식 10만 주씩을 원활하게 매각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 1은 1997. 6. 18. 위와 같이 공소의 박종철, 피해자 1에게 삼익주택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담보로 서울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소의 1 증권 서초지점에 피고인 1 서00 명의의 계좌를, 장은증권 서초지점에 공소의 3(피고인 2의 처) 서신금 명의의 계좌를 각 개설한 후 위 담보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원

으로 삼익주택의 주식을 위피고인 1서울상호신용금고 계좌에서 같은 해 8월 중순까지 약 25만 주를, 위공소와 3서울상호신용금고 계좌에서 같은 해 9일까지 약 9만 주를 계속 매수함으로써 1997년 9월경까지 전체 주식 중 9% 내지 15.08%에 해당하는 431,860주 내지 723,960주를 보유하게 되었던 사실, 한편피고인 1은 1997년 8월 초순경피고인 2와 함께 다시 공소와 박종칠에게 삼익주택의 주식 10만 주를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박종칠은 매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피고인 1이 매수원금 및 그에 대한 연 14%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득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50:50으로 분배하는 수익보장약정을 조건으로 위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이 요청한 위 10만 주를 포함하여 14만 주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 2에게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공소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매도하는 삼익주택 주식을 공소와 1 증권서초지점의 박종칠 계좌 및 피고인 1서울상호신용금고 계좌에서 매수한 사실, 삼익주택의 주가가 같은 해 5월 12일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30일에는 주당 금 1,68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하락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공소사실 (1), (2)항의 통정매매가 이루어졌고, 이어 공소사실 (4)항의 가장매매가 있는 후 다시 주가가 상승하여 1997. 6. 30.에는 주당 금 1,900원에 이르렀으며, 이후 주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며 거래량도 미미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공소사실 (3)항의 통정매매를 계기로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여 같은 해 9월초에는 주당 2,000원을 넘게 되고 같은 해 10월초에는 3,700원 이상이 된 사실, 호종일이 1997년 9월 중순경피고인 1에게 삼익주택의 인수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 1은 오히려 삼익주택의 제3자 인수가 임박한 것처럼 말하면서 피고인 2와의 당초 약정과 달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몰래 처분하기 시작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 1이 보유한 삼익주택의 주식은 1997. 8. 29. 717,710주(종가 1,900원)이었다가 9월 27일에는 618,570주(종가 3,900원), 10월 9일에 477,920주(종가 3,550원), 10월 13일에 329,460주(종가 4,430원), 10월 27일에 279,460주(종가 2,350원)가 되었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엄청난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삼익주택의 자본금 규모와 그 발행주식의 총수, 피고인 1이 삼익주택의 주식을 매수한 경위, 이 사건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 피고인 1의 주식보유량과 그 변동, 그의 시장관여 정도, 그 주가의 추이,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피고인들이 서로 다른 증권회사에 수개의 차명계좌를 개설, 운영하면서 매수 및 매도 주문을 분산시킨 점이나 이 사건 통정 및 가장매매에 있어 피고인들은 폐장시각으로부터 불과 수분 전에 매도 및 매수 주문을 내는 이른바 종가관여의 방법을 구사한 점, 이 사건 통정매매에서의 가격은 증권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결정될 수 있는 주가보다 상당한 정도로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의 직접 동기가 원심 판시와 같이 주식의 추가매수 또는 금원 대여를 위한 자금의 확보 등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은 그와 함께 그러한 수법으로 주식을 주가의 폭락 없이 매도하여 그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한편, 일반투자자들에 대하여 삼익주택의 주식거래가 증권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하여 빈번하고 대량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 같이 잘못 알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삼익주택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목

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소정의 위법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7년 9월 말경 호00에 의한 삼익주택의 인수가 사실상 무산되어 삼익주택의 주가가 결국은 하락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익주택의 주식을 몰래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인 2, 공소외 강00 및 피해자 1에게 삼익주택의 제3자 인수가 임박한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고, 이를 믿은 위피고인 2, 강성철이 관리하던 일반투자자 및 주위 사람들이 삼익주택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자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익주택 주식을 몰래 매도한 사실, 피고인 1은 피해자 1 및 그의 매형인 피해자 2에게 여유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들에게도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피해자 1에게 "삼익주택의 제3자 인수가 거의 다 되었다. 이제 주식이 가격이 1-2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라고 제3자 인수가 곧 성사되고 뒤이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1이 이를 피해자 2에게 전달하면서 같이 삼익주택의 주식을 매수하자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 2가 위와 같이 삼익주택을 매집하고 있던 피고인 2를 만나 삼익주택의 제3자 인수 및 그에 따른 주가의 급등가능성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1과 함께 피고인 2에게 주식 매수를 일임하여 같은 피고인 이피고인 1과 통정하여 피고인 1이 매도하는 주식을 매수하여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매도과정, 피고인 1의 피해자 1 및 그의 친지들에 대한 주식 매각의사, 피고인 1의 주식이 곧바로 피해자 1, 피해자 2에게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은 피해자 2가 피해자 1 및 피고인 2의 권유에 이끌려 자신이 매각하려 하는 주식을 매수하도록 할 의사를 지니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 1이나 피해자 2가 호종일에 의한 삼익주택의 인수가 사실상 무산된 사정을 사전에 알았다더라면 그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주식 매수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와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은 각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나,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에서 만일 무죄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게 되는 경우에는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만이 아니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051 판결

【판시사항】

[1] 알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소정의 통정매매의 구성요건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시장조작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지 알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제3자가 알선행위의 당사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때에는 그 전달행위는 위 알선수재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로서, 당해 행위자에게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는 불법목적이 있어야 하는 반면, 이러한 시장조작행위라고 하더라도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8조의4 제3항에 의하여 기간·가격 및 주체 등에 관한 엄격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때 그 증권회사는 안전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신고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는 그에 따른 공시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조조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07조의2 제2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8, 제83조의9, 제83조의10, 제83조의11, 제83조의12, 제83조의13, 제83조의14

【참조판례】

[1]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공1998상, 475)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석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20. 선고 98노141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0일을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지 알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제3자가 알선행위의 당사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때에는 그 전달행위는 위 알선수재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나, 라, 바, 아.항 기재 각 사실에 관하여 제1심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이 다른 공범자와 주가조작을 위한 통정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사례금을 받기로 모의하고 알선의뢰자로부터 받은 사례금을 다른 공범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을 위 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알선수재죄에 대한 법리오인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증권거래법상 통정매매의 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88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로서, 당해 행위자에게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는 불법목적이 있어야 하는 반면, 이러한 시장조작행위라고 하더라도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8조의4 제3항에 의하여 기간·가격 및 주체 등에 관한 엄격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때 그 증권회사는 안전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신고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는 그에 따른 공식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장조성이나 안정조작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레이디가구의 주식을 주가의 폭락 없이 매도 또는 매수할 수 있도록 거래 당사자들과 미리 통정하여 동 주식을 다량으로 매매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으며 그 행위시에 위와 같은 불법목적을 가졌던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주식거래는 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사전신고를 거쳐 대량매매를 성립시키는 소위 자전매매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의 판시 통정매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증권거래법에 관한 법리오인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를 하였고 원심이 제1심의 양정이 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위 피고인으로서의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가 없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의 점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III. 손해배상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69614 판결

【판시사항】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의 시세조종행위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투자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정상주가)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그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조작주가)와의 차액 상당(만약,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에는 조작주가와 그 매도주가의 차액 상당)을 손해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정상주가의 산정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여 그 영향을 받은 기간(사건기간) 중의 주가동향과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을 비교한 다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시세조종행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사건기간 이전이나 이후의 일정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사건기간 중의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금융경제학적 방식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제188조의5 제1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강재구 외 5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4인)

【피고,상고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9. 선고 2002나3343, 33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이익치의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이익치가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박철재 상무와 공모하여 그 판시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의 손해액 산정방식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투자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이하 '정상주가'라 한다)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그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이하 '조작주가'라 한다)와의 차액 상당(만약,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에는 조작주가와 그 매도주가의 차액 상당)을 손해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정상주가의 산정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여 그 영향을 받은 기간(이하 '사건기간'이라 한다) 중의 주가동향과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을 비교한 다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시세조종행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사건기간 이전이나 이후의 일정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사건기간 중의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금융경제학적 방식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손해액 산정방식을 채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시세조종행위가 처음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전후 모순되고 이 점은 원심의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즉, 원심판결 이유 제1의 다. (4)항에서는 피고들의 시세조종행위가 처음 일어난 시점을 1998. 4. 4.로 보면서도(원심판결 12면), 제2의 나. (2)항에서는 이를 같은 달 9.로 본 감정인 함상문, 김우찬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용하였다(원심판결 18면). 만약 시세조종행위의 개시시점이 같은 달 9.이 아니라 같은 달 4.이라면 원심 판시의 추정기간의 종기가 달라져 회귀방정식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정상주가의 산정을 위한 기초값이라 할 수 있는 사건기간 직전일의 주가 또한 달라져 결과적으로 정상주가 나아가 배상할 손해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기록에 첨부된 형사판결문에는 최초 시세조종행위일을 알아볼 수 있는 별지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데, 감정인 함상문, 김우찬은 별지를 제외한 형사판결문을 기초자료로 제출받은 상태에서 같은 달 9.을 최초 시세조종행위일로 속단한 다음 이를 기초로 감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경제학적 분석의 기초가 되는 최초 시세조종행위일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이유모순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차 명 진 의 원

1. 휴면예금 관련 자료

- 정부의 입장
-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가동 실적

□ 그간 재경위 금융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휴면예금 입법화 여부에 대해 국회-정부-업계간 충분히 논의한 바 있음

○ 논의 결과, 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론도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휴면예금의 적극적 반환을 추진한 이후,

○ 추후 입법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음

□ 그에 따라, 올해 초 은행연합회·생·손보협회 공동으로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06.4.27)하여 휴면예금을 적극적으로 반환 중임

○ 입법화 또는 자율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와 협의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 카드 관련 자료

- 2000년부터 현재까지 카드 발급(연도별) 및 연체율 현황

☐ 발급카드수 현황

(단위 : 천매)

	'03말	'04말	'05말	'06.6말
카드수	43,848	37,289	43,593	48,585

주) 6개 전업카드사 기준

☐ 신용카드사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단위 : %)

	'04말	'05말	'06.6말
카드수	18.2	10.1	8.0

주1) 현행기준인 1개월 이상 기준 대환대출 포함(상환능력개선채권 제외)
연체율은 '04년부터 편제

주2) 관리자산 기준(6개 전업카드사)

3. 2000년에서 현재까지 펀드 등록 현황

(단위 : 개)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9.20
모펀드	157	5	5	25	3	26	101
자펀드	28,91	2,116	2,441	6,165	4,797	6,063	6,312

※ 연도별 신규펀드 설정 현황임

4.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단속 현황

- 연도별 자료 요약(2002년에서 현재까지)

- 2002년 ~ 2006년 6월말까지 금융감독원이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에 대해 조사하여 적발한 연도별 건수는 다음과 같음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협 의 유 형 별	시세조종	131	102	103	106	39
	미공개정보이용	25	27	40	59	14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27	-	1	-	2
	대량소유주식 변동보고	29	41	42	65	21
	단기매매차익취득	24	27	37	29	7
	기 타	18	1	3	-	2
	무협의	36	16	21	18	13
계		290	214	247	277	98
조 치 유 형 별	검찰고발	46	56	60	73	45
	검찰통보	114	77	106	113	25
	수사의뢰	6	-	-		
	과징금	17	-	3	3	-
	단기매매차익반환	25	33	51	56	8
	문책 등	46	32	6	14	7
	무협의	36	16	21	18	13

5. 신탁중앙회 현황, 문제점, 대응방안

□ '05년말 현재 중앙회 총 임직원은 385명 (임원 21명, 직원 364명)

○ 조직 : 5부, 2실, 1원, 12개 지역본부

○ 지배구조 :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 집행임원 3명(중앙회장, 신용·공제 대표, 감독·검사 이사)이 상근

□ '05년말 현재 신탁중앙회는 조합의 자금을 예치받아 운용하는
신용사업에서 **5,623억원의 누적결손금을 보유**

○ 중앙회의 누적결손금은 舊 연합회의 이월손실, 유가증권
운용손실 및 기타 부실대출 등에 주로 기인

- '97년 이전 舊 연합회 이월손실 : △1,076억원

- 유가증권 등 자산운용 손실(결손금 기회비용 포함) : △1,599억원

- IMF위기 이후 단위신탁 대출 부실화, 미수금 등 무수익성
자산 기회비용 등 : △2,948억원

□ 감독당국은 그동안 신탁중앙회의 손실은 기본적으로 경영
실패에 기인한 것이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함께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신탁측의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

<경영개선명령 주요내용>

- 상환준비금에 대한 금리인하(6.5% → 2.5%)
- 신용예탁금 지급이자율을 여타 유사 상호금융기관 평균 수신금리 이하로 인하
- 부동산 매각, 출자금 증액 유도 등

○ 그러나 누적 결손금 과다에 따른 기회비용 및 수익구조 취약 등으로 자구노력에 의한 부실해소에는 한계

□ 중앙회의 누적결손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 시장 상황 악화시 중앙회 부실문제가 시장 전체리스크로 확대될 우려

○ 또한, 결손금 규모 확대로 신협측의 영업기반 약화시 주고객층인 서민,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서민금융 위축이 우려

□ 위와 같은 시장혼란 위험 등을 감안하여 신협측의 자구노력으로 해소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예산처, 재경부)와 협의중

*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 10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지원액은 3년에 걸쳐 최대 3,000억원으로 하되 신협측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협측의 자구노력 성과를 보아 탄력적·단계적으로 지원

○ 정부 재정지원을 위해 신협측의 추가 자구계획을 요구

<신협측의 자구계획 주요 내용>

○ 상환준비금 지급금리 추가 인하

- 상환준비금 이자율을 추가 인하*(2.5% → 2.0%)하여 신용예탁금 회계의 결손 해소를 지원

* '01.8.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상환준비금 지급금리를 6.5%→2.5% 인하

□ 신용예탁금에 대해 실적배당제 도입·시행

- 신용예탁금에 대해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여 결손금 확대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중앙회는 수수료 수입 확보

* 중앙회는 실적배당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외부용역중

□ 단위조합의 중앙회 회비납부액 인상 및 중앙회 인력·조직 재조정 등 경영혁신 추진 등

6. 저축은행

- 현황. 문제점. 정부대응책

□ 외환위기 이후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퇴출, 합병 및 계약이전 등의 방법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 저축은행 수는 '99.6.말 204개에서 '06.6.말 현재 110개로 76개 (46.1%) 감소

□ 그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

○ 업계 평균 BIS비율은 '99.6.말 6.95%에서 '06.6.말 9.0%로 상승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9.6.말 30.0%에서 '06.6.말 10.7%로 19.3%p 감소

○ 당기순이익의 경우 '99.6.말 결산결과 △16,318억원에서 '06.6.말 결산결과 6,043억원으로 증가

- 총자산이익률(ROA)도 △5.4%에서 1.6%로 크게 증가

□ 그러나, 소매금융시장의 경쟁심화 등 어려운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높은 연체율이 시현되고 있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 저축은행의 건전성제고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감독 노력이 필요한 상황

□ 향후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 부실·금융사고 예방 및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7. 보험사기 관련 자료

-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추이(유형별)
- 향후 정부의 대응책

□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추이(유형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고 의 보험사고	486	11,298	1,271	10,649	2,203	32,277	2,231	29,849	1,047	13,972
보험사고 가 공	302	3,638	619	8,019	849	15,894	3,686	29,337	1,500	11,186
피해과장 (과다청구)	410	3,773	884	10,462	2,789	29,254	4,742	41,186	2,787	26,461
보험계약 조 작	818	2,824	1,156	4,872	1,449	12,294	2,018	18,285	1,201	8,412
운 전 자 바꿔치기	2,637	11,363	3,091	13,593	5,029	20,432	6,240	28,224	3,429	21,510
사고차량 바꿔치기	559	2,983	737	3,674	979	5,080	1,256	6,344	748	2,917
기 타	545	5,253	1,557	9,336	3,215	13,808	3,434	26,973	1,481	13,097
총 계	5,757	41,132	9,315	60,605	16,513	129,039	23,607	180,198	12,193	97,555

□ 향후 정부의 대응책

-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사기혐의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발하여 '04.1월부터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 병·의원의 보험사기 개입행위, 차량정비업체의 수리비 부당 청구행위 및 손해율 취약지역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보험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 보험사기 조사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일선 모집조직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아울러 국민들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및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 및 생·손보험회내에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최고 1억원 범위내에서 적발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2006.5월~6월 기간동안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내의 “보험금 누수방지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효율적인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보험사기 정의 및 조사근거의 명확화,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자료요청권 신설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중
- “보험범죄 수사지원팀” 운영을 통한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조 활성화와 보험조사협의회 확대·개편을 통해 공보험과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전담조직 기능 활성화 및 보험계약 인수심사 강화 등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대응능력 제고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성능 개선 등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기능 강화
- 불필요한 입원을 조장하는 과대한 입원비 특약 등 보험사기 유발상품의 개발 자제 유도, 보험사기의 폐해 및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실시, 보험사기 조사 워크숍 개최 및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보험사기 방지교육 활성화

천 정 배 의 원

1. 생보사 상장과 관련

- 1) 그동안의 경과와 추진현황
- 2) 생보사 상장에 대한 금감위의 입장
- 3)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과거와 같이 금감위 산하가 아닌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된 이유
- 4) 금감위, 금감원,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생보사 상장과 관련 연구용역 발주한 현황(시기, 대상, 용역과제 등)
- 5)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
- 6)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7)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중도에 취소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이유

- 자료 : 별 첨

1) 그동안의 경과와 추진현황

시 기	내 용
'89. 4월	교보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90. 2월	삼성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90. 8월	재무부,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제정
'90.12월	재무부, 기업공개 보류 결정
'99. 8월	금융연구원 및 보험학회는 각각 생보사 상장관련 1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99. 9월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99.12월	금융연구원 및 보험학회, 각각 2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00.12월	생명보험회사 상장논의 유보
'03.6월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03.10월	생명보험회사 상장논의 유보
'06.2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06.7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공청회 개최(06.7.13일)

2) 생보사 상장에 대한 금감위의 입장

- ☐ 지난 2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각계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자문위원회는 현행법 체제, 국제기준, 외국사례 및 국제적 모형분석에 의거 생보사 성격 및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등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기본입장을 마련

※ 상장자문위원회는 계약자배당의 적정성과 관련, 국제적 모형분석 결과에 대하여 세계적인 계리법인에 검증을 의뢰한 상태

-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 각계에서 제시한 다양한 주장의 타당성을 정밀 검토중

□ 상장자문위원회는 공청회(안)을 토대로 외국계리법인의 검증결과 및 각계의견 등을 감안, 생보사 상장(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토대로 거래소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면, 정부는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3)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과거와 같이 금감위 산하가 아닌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된 이유

□ 지난 1월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체제에 적합하면서도 객관적·합리적 방식에 의거 생보사 상장을 추진키로 결정

□ 즉 생보사 상장을 위해서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 당사자인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공익을 대표하는 중립적 전문가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 상장자문위원회가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생보사 상장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 이를 토대로 증권선물거래소가 규정개정(안)을 수립·제출하면 정부는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

4) ~ 7) 생보사 상장관련 용역관련

- ☐ 2006년 증권선물거래소에 설치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외국계 유수 계리법인에 국제적 통계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생보사의 계약자 배당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맞춤형 전문경영컨설팅 서비스 관련

- (1) 도입배경
- (2) 제도 개요 및 경과
- (3) 도입 성과
- (4) 한계 및 보완책

(1) 도입 배경

□ 금융회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기대 변화

- 급격한 금융환경변화 속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모든 업무활동을 적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집중
- 아울러, 금융회사들은 감독당국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 변화를 기대

⇒ 감독당국으로서는 검사 수요자가 원하는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가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

□ 감독·검사업무의 패러다임 전환

- 금융혁신과 IT기술 발달 등으로 금융산업의 겸업화·국제화 등이 급진전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

- 그러나 감독·검사의 수요증가폭에 따른 검사인력 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진감독당국과 같이 리스크가 큰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RBS, Risk Based Supervision)이 요청

⇒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리스크 양과 리스크 관리수준을 평가·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취약점에 대하여 지도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적(consultative)”인 검사로의 전환을 추진

(2) 제도 개요 및 경과

- 경영컨설팅 청구제도는 기존의 위규사항 적발위주의 검사업무에서 한발 나아가 금융회사가 취약·문제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전문검사역을 투입하여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수요자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금융회사의 다양한 문제점 진단 등에 있어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감독당국의 전문인력이 심층적인 분석과 의견 교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

<추진 경과>

- 2005년도 : 경영컨설팅 청구제도 기본방안 마련, 수요조사 등 경영컨설팅 도입을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
- 2006년도 : 컨설팅 대상회사 확정, 컨설팅 청구제도의 세부운영방안 마련, 컨설팅 담당자 교육실시 등 컨설팅제도의 기본틀을 갖춘 후 8개사에 대한 컨설팅 시범 실시(06.8월말 현재 4개사에 대해 컨설팅 완료)

(3) 도입 성과

☐ 금융회사의 니즈에 부합하는 검사서비스 제공

-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감독당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확산

- 감독당국을 '규제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외부의 시각을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

☐ 검사업무의 전문성 제고

- 검사인력의 전문성이 up-grade 되어 향후 감독·검사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새로운 감독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감독제도나 규범 도입에 따른 비용 경감

(4) 한계 및 보완책

- ☐ 경영컨설팅 청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감원 검사역의 컨설팅 수행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바, 컨설팅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

- 경영컨설팅 업무매뉴얼 작성 : 컨설팅 절차 및 기법, 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best practice 제시함으로써 경영컨설팅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질적 수준 제고

- 경영컨설팅 담당자 연수 강화 : 검사직원 연수시 컨설팅 방법론 등을 연수(외부 전문연수기관 파견 병행)

2006년 중 경영컨설팅 실시 현황

금융회사	컨설팅 부문	컨설팅 (예정)시기
A은행	-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시스템 개선 방안	6월~8월
B생명	- 리스크관리조직 및 관리시스템의 적정성	6월~8월
C생명	-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및 리스크 검사지원 시스템 구축	6월~8월
D신협	- 내부통제 및 사고예방대책 - 내부회계관리제도	6월~7월
E증권	- 자체양정 기준 수립, 고객관련 사고·분 쟁 발생시 Contingency Plan - 신상품 검사 포인트 및 상시모니터링의 효율 적 업무 방법 -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 관련조직의 이상 적 업무분장/처리	9월~10월
F저축은행	- 내부통제 및 사고예방대책 - 내부회계관리제도	4/4분기
G신협	- 내부통제 및 사고예방대책 - 내부회계관리제도	3/4분기
H신협	- 내부통제 및 사고예방대책	3/4분기

3. 현재 추진중인 금융회사대상 검사만족도 조사관련

- (1) 추진배경
- (2) 설문지 내용
- (3) 설문조사 결과
- (4)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보완이나 개선을 했는지 여부

(1) 추진배경

- ☐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관련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검사업무를 개선하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 99.1월부터 실시

(2) 설문지 내용 및 설문조사결과

- ☐ 설문조사는 검사원의 청렴성 관련사항, 검사의 유용성·공정성 및 검사방향 등 6개 부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 ☐ 06.1~6월중 설문조사결과 전반적인 검사만족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 금품·향응요구 등 부조리사례가 없는 등 검사원의 청렴성은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주된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 검사자료 중복제출,
 - 검사기간이 결산기와 중복되어 업무부담,
 - 종합검사 축소 및 사전예고를 통한 부문별 검사활성화 요망 등이 제기되었음

(3)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보완이나 개선을 했는지 여부

-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에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

<제도 및 관행 개선노력 예시>

□ 검사매뉴얼 전면개편('05.8월)

- 검사의 일관성 유지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검사매뉴얼 개편 (책자발간 총11권)
 -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기준을 구체화하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점검기준을 보완
- 검사매뉴얼을 대외공개함으로써 금융회사 자체감사에도 활용
- 검사매뉴얼에 대한 상시 보완 관리체제 운영
 - 업종별 매뉴얼 전담자를 지정하여 검사환경 변화내용을 반영

□ RM매뉴얼 발간('05.8월)

- RM들의 상시감시업무 수행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RM매뉴얼을 발간
- RM업무 가이드라인(guideline)을 포함한 RM업무의 모범규준 (best practice) 마련

□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 상시감시 결과 나타난 취약요인에 대해 서면 및 부문검사를 적극 활용하여 수검부담이 큰 종합검사는 단계적으로 축소
- 사전 요구자료의 중복 징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사부문·비슷한 시기의 현장검사는 사전에 통합 조정
-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른 현장 검사 차별화 확대

□ 검사업무의 질적수준 및 검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컨설팅중심 검사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역점

- 경영컨설팅 청구제도 적극 활용
- 파생상품, 자산운용, IT부문에 대한 연수 강화
- 초임검사역에 대한 검사실무에 대한 연수 확대
 - 확인서 및 서류 징구요령 등 검사실무 미숙으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불필요하게 증대되는 것을 방지

□ 금융회사의 자체감사기능 강화 등을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 상반기 관리자과정('06. 5.29~7.14) 실시
- 하반기 실무자과정('06. 9.12~12.15) 실시예정

□ 연수 및 워크숍 토론 등을 통해 검사역들에게 환기

- RM팀장 워크숍 및 RM팀원 워크숍에 토론주제로 채택하여 해결 방안 논의('06.1월, 8월)

4. 금감원의 정책고객(정책대상자) 관련, 정책고객집단 분류

☐ 정책고객집단 분류 현황

고객분류	정책고객 분류 내용
공통고객	주로 정계, 언론계, 법조계, 각종 위원회 등 사회여론 주도층으로 구성
은행감독	주로 은행의 임직원으로 구성
비은행감독	주로 종금, 리스,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임직원으로 구성
신용감독	주로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임직원으로 구성
증권감독	주로 증권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
자산운용감독	주로 투신운용사,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으로 구성
공시감독	주로 기업의 공시담당자들로 구성
보험감독	주로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
회계감독	주로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 구성
불공정거래조사	주로 증권회사 시장감시팀 직원 등으로 구성
소비자보호	주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NGO 등으로 구성
해외동향	주로 외국인(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

5. 최근 3년간 금감위(원)에서 수행한 ‘고객만족도 평가’ 개요 및 결과

□ 민원만족도 조사 개요

- 금융감독원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민원업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반기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
- 금융감독원에서 접수·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접근용이성, 신청용이성, 신속정확성, 형평성 등을 조사하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조사 기관((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

□ 최근 3년간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

서류민원 부문별 민원만족도

(단위 : 점)

조사 부문	2004년 상반기	2004년 하반기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접근용이성	57.8	58.6	62.4	68.2	64.7
신청용이성	59.7	61.0	65.2	66.2	63.4
신속정확성	48.4	48.8	52.1	58.5	53.1
대응환류성	44.4	43.3	48.0	51.9	45.1
형 평 성	49.7	48.4	48.6	53.1	52.7
서류민원 만족도	51.4	48.8	51.8	56.8	55.4

인터넷민원 설문항목별 민원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설문내용	2004년 상반기	2004년 하반기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민원 제기 단계	민원담당자 접근용이성	55.3	61.0	63.6	68.2	65.7
	홈페이지 민원 관련 정보 적정성	44.9	47.6	49.9	51.7	54.6
	민원신청의 용이성	60.8	64.4	64.6	69.7	69.0
민원 처리 단계	처리기간 통보 및 준수 여부	47.2	53.5	58.7	61.5	63.1
	전체민원처리기간의 적정성	46.3	50.3	55.2	57.7	58.0
	민원처리과정 정보제공	45.2	50.9	53.2	54.6	56.9
	불편사항에 대한 수용태도	42.9	48.0	49.6	52.9	51.6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41.1	41.9	48.1	48.0	49.1
	처리결과의 합리성·공평성	43.2	41.5	48.8	49.4	49.3
인터넷민원 만족도		48.3	50.0	54.6	57.1	56.7

종합만족도

(단위 : 점)

기간	2004년 상반기	2004년 하반기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종합만족도	49.1	50.5	53.9	57.0	56.4